

1950년대 한국 신문의 제도화와 남성적 재공간화 과정

2006년

서강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장 은 미

1950년대 한국 신문의 제도화와 남성적 재공간화 과정

지도교수 김 균

이 논문을 문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7월

서강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장 은 미

논 문 인 준 서

장은미의 문학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7년 7월 일

주심 원 용 진 ②인

부심 김 은 실 ②인

부심 박 용 규 ②인

부심 유 선 영 ②인

부심 김 균 ②인

차 례

제 1 장. 서론	1
1. 문제제기	1
2. 연구의 틀	7
1)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7
2) 연구목적 및 논문의 구성	10
3. 이론적 논의	15
1) 역사연구에 있어 젠더의 중요성	15
2) 자유주의와 유교적 가부장성의 충돌	22
4. 선행연구 검토	34
 제 2 장. 1950년대와 한국 신문	 39
1. 한국 신문의 남성적 재공간화의 시대적 조건들	39
1) 과대성장한 권위주의 국가, 정치사회의 미성숙	39
2) 자본의 규정력 미흡, 신문 기업의 적자 경영	50
3) 군사화된 사회: 미국과 냉전체제	62
2. 변화하는 신문 환경	65
1) 언론계 교육원조와 친미 엘리트의 형성	66
2) 새로운 기운들	74

제 3 장. 지사적 신문 : 유교적 남성성 86

1. 가부장적 공적 주체 88
 - 1) 공기로서의 신문 88
 - 2) 지사적 신문 경영 94
2. 가부장적 국가의 지사적 주체 98
 - 1) 지사주의: 전투적 남성성의 발현 98
 - 2) '기자정신': 유교적 남성성의 구성 102
3. 논객으로서의 정치적 주체 107
 - 1) 신문의 정치성을 통한 남성화 전략 107
 - 2) '정치적 선정주의': 영웅적 남성의 출현 111

제 4 장. 서구화를 통한 선진화 : 근대적 남성성 120

1. “직업주의(professionalism)”의 실현: 시민적 공적 주체 120
 - 1) 개인의 자율성 보호와 신문윤리의 등장 121
 - 2) 서구식 기사 스타일과 신문개혁 128
2. 중립적 관찰자: 근대 지식인 주체 131
 - 1) 사실보도 제일주의: 중계자적 위치를 통한 남성적 연대 131
 - 2) 뉴스객관성: '엄정중립'의 당파성 137
3. 언론자유: 민주주의 실현의 정치적 주체 148
 - 1) 언론자유와 남성적 구현: 근대적 남성성 148
 - 2) 소극적 언론자유: 위축된 근대 남성적 주체로서의 신문 159

제 5 장. 한국 신문의 젠더성 : 남성적 재공간화 164

1. 제도적 실천의 미흡: 기자공채제도 및 견습기자 교육의 남성 중심성 166
2. 출입처 기자단: 배타적 위계성의 남성적 공간 177
3. 기자와 술문화: 우애(fraternity) 동맹 188
4. 1950년대 한국 신문의 젠더성 193

제 6 장. 결 론 197

1. 연구의 요약 197
2. 연구의 한계 및 제언 199

< 참고문헌 > 201

<표 차례>

- 표 1-1. 인터뷰 대상자 목록 9
- 표 2-1. 신문관계 법률의 제정 41
- 표 2-3. 신문사의 정·폐간 42
- 표 2-2. 언론인에 대한 제제 건수 42
- 표 2-4. 대통령의 담화를 통한 한계설정 43
- 표 2-5. 신문배포 방해, 신문구독 방해, 신문사에 대한 테러 44
- 표 2-6. 1957년 현재 5대 일간지 현황 53
- 표 2-7. 1950년대 10대 중앙일간신문기업의 소유주 특성 54
- 표 2-8. 미국무성 주관 시찰 훈련계획 선발 신문기자명단 68

<그림 차례>

- 그림 1-1. 여성사적 관점에서 본 1950년대 한국 신문 12
- 그림 1-2. 연구모형 14
- 그림 5-1. 분석결과 196

Abstract

The Institutionalization of Korean Newspapers and Its Male Genderedness in the 1950s

Jang, Eun-mi
Dept. of Mass Communi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Sogang University
Seoul, Korea

This study focuses the male-centric and patriarchal representation of women in the Korean press during the nineteen-fifties. Although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based on feminism, their primary concern has been limited to looking at the content of the press which is the end outcome resulting from journalistic activities. Considering the persistent criticism on the content does not seem to change the male-centric view on women in the press, this study now turns attention to the origin of the male-centric representation which may reside in the press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The recognition of this problem has led this study to survey previous feminism-oriented studies about the press. Although a few existing studies examined the male-centric mechanism immanent in the press organizations, they have tended to neglect to look at the historical formation of male-centrism in the press; that is, how the male-centric identity and mechanism have been constructed in the historical contexts.

In this sense, this study attempted to explore the process that the South Korean press had obtained the male-centric identity, specifically in the nineteen-fifties. During this period, the South Korean press had been newly systematized and

institutionalized in accordance with the global changes occurred in the Korean society. Nevertheless, there has been comparatively less consideration on this period than on other periods, such as the eras of Japan's colonial rule, the U.S military administration, and the former President Park, Chung-hee government. Although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press was actually Americanization, Korean journalists voluntarily accepted the change because they believe that it would help the Korean press to emerge from backwardness and enter upon a modern phase. Since the nineteen-fifties was a historical sphere where traditional costumes and new practices dynamically collided, conflicted and negotiated, it deserves more attention.

The aid from the U.S. in the nineteen-fifties was also given to the newspaperdom: American government selected the Korean young elite journalists who were qualified with modern educational background and English language ability, and provided them with the chances to inspect the newspaperdom in the United States and to take training in it. The U. S. Information Service offered the training program to the Korean journalists as a part of 'the exchange education policy.' Ironically, however, it was in fact the strategy for persuading Korean public opinion leaders to join the amicable standpoint on the United States. With the young elite journalists trained in the U.S. in the fifties as the central figures, the Korean newspaperdom was newly institutionalized. Their efforts accomplished some changes such as the emergence of new media organizations, the systematization of the press ethics, the alteration of report style, and the advent of professionalism. They also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fairness and objectivity of reporting news.

On the other hand, this study found that there were two competing discourses among Korean journalists in the nineteen fifties. One was the dominant discourse which emphasized the values of morality and patriotism and the other was a rising discourse which demanded the advancement of the press by adopting new values and practices from a group of developed countries. Although these two discourses

seemingly oppose each other, this study using the perspective of gender history revealed that both of them contributed substantially to shaping the male-dominant structure of the press. In addition to the commonality between them, there was a difference in how they represent the ideal type of a man. While the discourse emphasizing the moral and patriotic press created a Confucian male-dominant space, the discourse advocating the westernized and modernized press produced the modernized male-oriented space.

The Confucian masculinity, which was shown in the moral and patriotic press, tended to accentuate justice, prestige and dignity as high-priority journalistic values. It equated the journalists who lost these values with a man of virtue who lost his integrity. What was called 'the journalist spirit' went so far as to argue that newspaper companies should accept even a deficit operation in order to stand against social injustice and unjust dictatorship. This kind of discourse interpellated the press as a patriarchal and patriotic subject, and endowed Confucian and male identity to it. The patriotism also constructed the newspaper as a political subject, which resulted in Confucian male-centric journalism in South Korea.

As a consequence, in the latter half of the fifties, young elite journalists who experience westernized education criticized political sensationalism and attempted to reform the traditional and old-fashioned press systems. They established professional ethics, suggested the concrete plans to strengthen professionalism, settled the general principles, and proposed new styles of news reporting. More importantly, they went forth into a political subject to actualize democracy by raising their voice for the freedom of the press in the background of American liberal democracy. In these contexts, objectivism, impartiality and fairness of journalism were promoted as a public strategy to actualize democracy. However, this progression is focused on the male journalists, which resulted in adjustment of the press to male-dominant sphere. The process of making male-dominant sphere in the Korean press in the nineteen-fifties systematically excluded female experience and femininity.

국 문 초 록

본 논문은, 한국 언론의 남성 중심성을 비판하며 많은 여성주의 언론학 연구들이 언론이 생산해내는 콘텐츠에 주목하여 매체 비평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언론을 통해 드러나는 여성들은 여전히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 재현 속에 머물러 있음에 주목했다. 그렇다면 문제는 가시적 결과물인 텍스트 이전의, 그러한 텍스트 생산의 기반이 되는 조직이나 제도의 남성 중심성을 의심해 봐야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언론학 연구에서 여성주의 작업들에 주목하게 했는데, 다양한 데이터와 인터뷰 등을 통해 언론 조직의 남성중심성의 기제들을 밝혀 놓은 몇몇의 연구들이 눈에 띄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부분은 그러한 언론 조직의 남성 중심적 정체성이나 기제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다시 말해 역사적 형성 과정의 많은 부분이 생략된 채로 남성 중심성을 증명하는데 집중한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연구자는 한국 언론의 남성 중심적 정체성의 역사적 형성 과정에 주목하게 되었고 이를 1950년대의 신문을 통해 조망하고자 하였다.

한편 연구자가 분석 시기로 잡은 1950년대는 한국 언론사에 있어서, 일제시기, 미군정기, 박정희 집권 시기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고 있지 못하지만, 한국전쟁 후 미국의 다양한 방식의 원조 아래, 한국 사회가 새롭게 재편되는 과정에서 언론 또한 새로운 제도화를 적극적으로 펼쳤던 시기였다. 이러한 제도화 과정은 전적으로 미국식 제도화 과정이었지만 당시 신문인들은 이를 통해 신문의 후진성을 극복하고 현대적 면모를 갖추 수 있다고 믿었기에 이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따라서 1950년대는 새로운 것과 기존의 것이 충돌하고 갈등하고 협상하는 역동적 공간이기에 결코 소홀하게 취급할 수 없는 시기라 할 수 있다.

50년대 중반 미국의 대미원조는 한국의 신문계에도 여지없이 드러나, 근대적 학력을 갖추고 영어에 능숙한 젊은 엘리트 기자들을 선발하여 미국 신문계를 시

잘하고 연수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언론인 연수는 미공보원의 '교환교육정책'의 일환으로 이는 한국의 여론지도자층을 미국에 우호적인 진영으로 포섭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미국무성 초청 언론인 연수에 참가한 젊은 엘리트 기자들을 중심으로 50년대 중·후반 한국 신문계는 새로운 제도화의 길을 걷게 되는데, 이는 새로운 언론관련 조직들의 출현과 언론 윤리의 정립, 기사 스타일의 변화, 프로페셔널리즘의 등장, 신문의 공정성 및 객관성 요구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구자는 신문에 대한 사회적 담론들을 분석한 결과, 50년대 신문에 대한 지배적인 담론은 '지사적 신문'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50년대 중후반에 등장한 신문에 대한 새로운 요구들은 부상하는 담론으로서 이는 '신문의 선진화'로 압축될 수 있다. 50년대 한국 신문의 지배적 담론과 부상하는 담론은 얼핏 보기엔 서로 대척점에 존재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연구자의 접근 방법인 젠더사(gender history)를 통해 볼 때, 이는 한국 신문의 남성적 공간화라는 공통성을 갖고 있다. 물론 지배적 담론이었던 '지사적 신문' 속에서 드러나는 남성성과 부상하는 담론이 만들어 낸 '서구적으로 근대화된 신문' 속에서 드러나는 남성성은 그 역사적 조건 속에서 내용적 차별성을 지닌다. '지사적 신문'은 유교적 남성성을 지향하고 있었으며, '서구적으로 근대화된 신문'은 근대적 남성성을 지향하고 있었다.

'지사적 신문'이 드러내는 유교적 남성성은 명분과 위신과 품격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기개와 품격을 잃은 당시의 기자들을 '지조잃은 선비'에 비유하는 것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또한 당시의 소위 '기자정신'은, 사회 불의에 맞서고 국가 권력에 항거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적자 경영은 감수해야한다는 지사적 신문 경영을 주장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논의들은 당시 신문을 가부장적 국가의 지사적 주체로 호명하면서 유교적이며 남성적인 정체성을 부여하고 있었다. 또한 가부장적 국가 권력에 저항하고 사회 정화를 지도하는 신문의 지사성은 당시 신문을 정치적 주체로 구성해내면서, 신문인에게 논객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유교적 남성화 전략으로 이어졌다.

한편 50년대 중·후반은 신문의 '정치적 선정주의'를 비판하고 신문 내부의 시스템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개혁하고자 하는 일련의 움직임들이 근대적 학력을 갖춘 젊은 엘리트 신문인들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이들은 직업윤리를 확립하고 신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조직과 강령을 만들고 신문 기사 스타일의 새로운 양식들을 제안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의 범람 속에서 언론 자유에 대한 목소리를 높임으로써, 민주주의 실현의 정치적 주체로 나설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주체 형성 과정들은 '사실보도 제일주의' 및 엄정 중립의 공정성, 민주주의 실현의 공적 기제로서 언론 자유를 내세우지만, 이것들이 근대적 학력과 지식 체계를 갖춘 남성들의 경험에 기반함으로써, 당시 신문이라는 매체를, 근대 지식인 남성들의 형제애에 기반한 동맹관계의 장소로 위치지우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적인 경험 및 여성성은 체계적으로 배제됨으로써 50년대 한국 신문은 남성적 공간화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 1 장. 서론

1. 문제제기

한국 사회에서 ‘한국 언론이 가부장적이다 혹은 남성중심적이다’라고 얘기하면 누구라도 이의를 제기하기보다는 공감의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이에 대한 증명작업들은 현실의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제시된 바 있다(김경희, 1998, 2002; 박소라·전경란, 2003; 한국언론재단, 2003). 그래서 언론 조직의 성차별적 구조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닌 모두들 알아버리고 승인한 지식이 돼 버렸다. 또한 90년대 이후 문화가 학문적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일단의 여성주의자¹⁾들은 여성주의 문화정치학을 기치로 ‘재현’에 관한 논의에 집중했다. 재현에 집중한 이러한 논의들은 ‘여성이미지’연구²⁾를 넘어서서 여성이라는 범주가 미디어의 재현을 통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를 드러내면서, ‘재현 기호로서의 여성’을 학문적 논제로 가지고 왔다. 따라서 여성주의 관점에서 미디어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새롭다기보다는 익숙한 이야기가 돼 버려, ‘또 페미니즘이야?’는 식의 반응을 유발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연구자는 한국 언론학 연구에서의 여성주의 작업이 일정정도 다원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과 동시에 한국 언론의 남성 중심성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 한국 언론의 가부장성 혹은 남성중심성을 얘기할 때, 그 때의 가부장성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담고 있는지와 그러한 남성 중심성의 결과가 어떠한 역사적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는가를 드러내

1) 신문의 젠더화 과정을 보고자 하는 본 논문에서 여성주의라 함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겪게 되는 불평등과 억압이 존재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치적 활동이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인식론에서부터 정책제안에 이르기까지 연구단계 어느 수준에서라도 반영되어 있는 논의를 말한다(김혜순, 1997, 395쪽).

2) 여성들의 이미지가 미디어에서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가 하는, 재현의 내용에 집중한 연구를 말한다.

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작업이 아직 활발하지 않은데, 이미 승인된 지식으로 언론의 가부장성을 위치시키는 것은 여성주의적 입장에서 볼 때, 가부장적 언설의 위험을 안고 있다. 왜냐하면 언론의 가부장성을 역사화하고자 하는 이런 노력들을 차단하고 배제시키기 때문이다. 이제는 한국 언론학 연구에 있어, 언론의 남성중심성을 증명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그때의 남성중심성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가시화시켜 그 내부의 젠더구조를 설명해 내야 할 때라고 본다.

역사연구의 중요성을 공감하는 연구자에게 ‘한결같은 가부장성’은 많은 의문을 남긴다. 현재의 한국 언론의 구조가 가부장적이라면 조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의식 차원에까지 이러한 가부장성은 포진해있을 것이며, 나아가 이러한 가부장적 정체성의 형성과정은 분명 역사적 맥락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하게 제기될 수 있는 질문은 ‘현재 한국 언론의 가부장적 성격은 어떤 역사적 조건 속에서 구축된 것일까?’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의 주된 관심은 ‘만약 언론사 조직이 남성중심적 혹은 가부장적이라면 이러한 조직 정체성은 어떤 역사적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는가’를 규명하는 것이다.

한편, 신문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는 작업의 가장 우선적인 목적은 사회현상이 신문의 제반 현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그리고 인간의 생활양식 혹은 사고방식이 신문의 역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변화를 보여 왔는가를 보고자 함일 것이다. 이때, 특정시대를 설명하고 그려내는 역사라는 것이 하나의 단일한 역사로서가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복수의 역사들로 존재하는 것임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동일한 시간과 공간이 그 역사적 시공간을 살아낸 주체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다르게 서술될 수 있음은 자명한 일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한국의 저널리즘 역사를 논의해온 방식들을 살펴보면, 주로 정치사적 기준에 따라 신문현상의 변화과정을 배치하거나 신문현상을 주된 기준으로 삼아 시대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 서³⁾, 기존의 언론사 연구는 특정 인물이나 매체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어 다각적

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경향이 있었다(이상길, 2005). 특히나 한국 신문의 역사적 형성 과정에 있어 젠더가 어떤 방식으로 개입되어 있는지를 여성주의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는 논의들은 드물다.

1980년대 서구 역사학자들에게 화두가 되었던 ‘새로운’ 역사학은 이전의 ‘오래된’ 역사서술이 주도해온 “변화에 대한 일관된 과학적 설명을 만들어 내려는 시도”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정치사나 경제사 중심에서 벗어나 ‘문화’에 초점을 맞추는 특징을 갖는다. 이처럼 새롭게 등장한 역사학은 기존의 사회과학을 지향하는 역사가들이 문서보관소를 ‘사실’의 보고로 여기는 것을 비판하고, 역사학자들이 단일 원인 추구를 포기하고 상황들 간의 상호 관련된 과정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역사가들은 보편적이며 일반적인 인과성을 추구하지 말고 의미 있는 설명을 해 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주장들은 역사를 하나의 상징으로, 하나의 텍스트로 인식하려는 신문화적 경향으로 이어지고 있다(Burke, 1992, pp.1~23). 이처럼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여는 신문화사적 접근이 우리의 언론사 연구에 등장한 것은 1990년대부터이며, 일단의 연구자들이 수행한 연구 작업들은 한국의 언론학회 내에 ‘역사화된 문화연구’라는 흐름을 형성하였다(김균, 2000; 김영찬, 2002; 마동훈, 2004; 이경숙, 1999; 이상길, 2001; 이윤진, 2002; 임종수, 2004; 유선영, 1993, 1995, 2002, 2003, 2004, 2005). 한편, 신문화사적 경향에서도 여성주의 관점을 견지하고 있는 여성사가들은 ‘젠더’를 하나의 유용한 역사적 범주로 다룰 것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하지만 유선영의 연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구 작업들에는 역사화 과정을 다루지만 젠더의 시각이 부재하다. 즉, 여성주의 역사학자들의 문제제기가 한국 저널리즘 역사 연구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거나 실현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3) 이러한 방식들은 그 내용에 있어 별반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이것은 한국의 신문이 정치현상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변화해 온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김민환은 해석하고 있다(김민환, 1982, 6~11쪽).

여성주의 관점에서 미디어를 연구하는 경향은 90년대 후반 들어 양적, 질적 팽창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전체 미디어연구와 비교해 볼 때 그 영역은 아직 초기단계라 할 수 있으며(최선열, 1998), 더군다나 여성주의 관점에서 한국 저널리즘의 역사를 연구한 것은 유선영의 연구가 유일하다. 특히나 저널리즘이 한국 사회구조를 지탱하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젠더가 어떤 방식으로 개입되고 그러한 제도화과정을 통해 젠더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등장하고 있지 않다. 즉, 저널리즘이 젠더를 구성하고 젠더가 저널리즘을 구성하는 맥락적이고 구체적인 방식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저널리즘 역사에 대한 지식을 조직화하고 인식하는데 있어 젠더가 가지는 중요성을 제기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연구자는 한국 저널리즘을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해보고자 한다. 한국 신문의 역사를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살펴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가? 이를 가장 명료하고 간단하게 말한다면, 한국 신문의 역사 형성과정을 분석함에 있어 젠더라는 범주를 도입하는 것이다. 곧 사회가 저널리즘의 본성과 실천에 가치를 부여하는 방식이 젠더화 되어 있음을 문제제기 하는 것이다. 스콧은 역사분석에 있어 하나의 유용한 범주인 젠더가 지금까지 남성 중심적 주류 역사학에서 채택되지 않았음을 문제제기 하면서, 젠더라는 범주를 역사분석에 도입하였을 때의 유용성을 제시한다. 그 유용성이란 바로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배제된 여성들의 목소리를 복원시킬 뿐만 아니라, 왜 여성들의 목소리가 배제되었는지에 대한 역사학의 정치성을 드러나게 해준다는 점이다.

한편, 연구자의 연구대상인 신문은 구한말 이후 근대 신문의 탄생과 더불어 한국 사회의 주도적 매체로 등장하면서 사회적 논쟁의 주요 토픽이 되어 왔다. 신문을 둘러싼 일련의 사회적 논쟁은 신문이라는 매체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이 라기보다는 격변기에 있던 한국 사회 자체에 관한 논의와 맞물린 측면이 강하다.

특히나 1950년대는 역사적으로 볼 때 격변기이며 전환기였다.

해방정국 이후의 극심한 좌·우 이데올로기 갈등은 결국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케 하였고 한국전쟁이라는 피를 부르는 학살극으로 50년대를 시작하게 하였다. 그리고 전쟁으로 시작한 50년대는 전쟁 이후의 혼란된 사회를 안정시키고 새로운 국가건설을 위해 세계 냉전체제의 구도 속에서 미국의 대대적인 원조를 받아들였으며, 이를 통해 한국 자본주의가 고도로 축적하는 원점이 된 시기이며 동시에 미국을 비롯한 전후 자본주의 부흥의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시기였다(정성진, 2000, 102쪽). 또한 이 과정에서 서구식 자유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숭미주의가 사회에 만연하였으며, 전쟁의 폐허 위에서 굶주림에서 벗어나 출세하고자 하는 욕망이 일류대학에 대한 교육열로 처음으로 드러난 시기였다. 이러한 숭미주의와 학벌주의는 전쟁경험을 통해 더욱 확고해진 반공주의와 결합하여 이후 한국 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이데올로기로 작용하였다(강준만, 2004). 그러므로 이러한 격변기이면서 전환기였던 1950년대에 신문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추적하는 것은 한국 신문의 역사, 곧 한국 신문의 역사적 형성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신문이 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제도적 요소로서 사회적 맥락과 동떨어져 진공상태에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상기한다면, 신문이 자신의 꼴을 갖추어 가는 과정, 즉 신문의 역사는 -그것이 지닌 상대적 자율성과 독자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국가건설이라는 한국 사회의 역동적이고 주도적인 변화 흐름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국가건설의 과제가 주어지고 근대국민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주체형성이 요구되던 50년대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신문은 어떤 방식으로 표상되고 있는지를 질문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한편, 1950년대는 한국 신문의 역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비록 형식적이었지만 국가라는 정치적 제도 속에서 전후 사회적·경제적 안정화를 위해 원조경제를 통해 산업화의 초석이 마련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언론 또한 언론자본이 본격적으로 육성되기 위한 전초로서 상업적 자본이 육성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50년대는 중요성을 가진다(최영석, 1989). 그리고 전쟁을 통해 세계 냉전 체계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미국은 우리에게 절대적 존재로 자리 잡았으며 이 과정에서 언론 또한 미국식 저널리즘을 당시 신문의 후진성을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받아들여 서구화와 선진화를 등치시키며 한국 언론의 위상을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사회적 제도(institution)로서 확고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언론사에 있어서 1950년대에 관한 연구는 이러한 역사적 중요성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다. 김영희는 1990년부터 2004년까지의 주요 학술지 커뮤니케이션사 관련 논문들을 분석했는데, 전체 158편의 논문 중 1950년대에 관한 연구는 5편 뿐이었다. 제1공화국 시기는 미군점령기 이후의 커뮤니케이션구조가 정착되었고,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그 이후의 개인적·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성격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이시기에 대한 연구가 좀 더 활발해질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김영희, 2005).

이상의 논의에서 볼 때, 1950년대는 한국 사회의 역사적 특수성과 신문의 제도화라는 조건이 동시에 작동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신문을 둘러싼 새로운 논의들이 출현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새롭게 등장한 신문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50년대 한국 사회의 구체적인 역사적 조건 속에서 신문에 대한 특정 담론을 형성하고 이러한 담론 형성과정에서 신문과 신문인에 대한 사회적 정체성이 구축되었으리라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젠더라는 분석 범주를 가지고 50년대 한국 신문에 대한 사회적 담론 형성의 구체적 맥락과 조건을 추적하면서, 신문의 젠더화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조망해 내고 한국 신문의 가부장성의 성격을 역사화하고자 한다.

2. 연구의 틀

1)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① 연구문제

본 논문은 1950년대 한국 신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당시 사회가 신문의 역할 및 지위에 대해 어떻게 의미부여 했으며, 이를 통해 신문은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하였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젠더는 어떻게 작동되고 있었는가를 드러내면서 50년대 한국 신문의 젠더화를 추적하고자 한다. 젠더적 측면에서 한국 신문의 정체성이 어떻게 구축되었는가를 보는 것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즉 '신문이 1950년대 국민국가의 건설, 미국화의 환경으로 진입하게 되면서 어떤 위치를 취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위치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논리와 자원을 동원하는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배제되고 타자화되는 것들이 어떻게 젠더와 관련성을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석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이상의 문제제기를 통해 다음과 같이 연구자의 연구문제를 도출할 수 있다.

연구문제 1: 1950년대의 한국 사회의 역사적 조건은 무엇이며 이는 당시 신문과 어떤 관련성을 지니는가?

- 1) 1950년대 한국 사회와 신문을 주목하게 하는 역사적 조건은 무엇인가? 당시의 역사적 조건은 신문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 2) 1950년대 한국 신문을 주목하게 하는 새로운 변화는 무엇이며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2: 1950년대 초·중반 한국 사회에 새로운 기운인 자유(민주)주의적 이념과 기존의 지배이념인 유교적 가부장성은 저널리즘 영역에서 어떻게 경합하고 있는가? 이는 구체적으로 신문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으며, 이의 형성과정은 어떠한가?

- 1) 1950년대 초·중반의 신문에 대한 사회적 논의들을 통해 형성되는 지배적 담론은 무엇인가?
- 2) 1)을 통해 구성되는 신문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 3) 이 과정에서 젠더는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연구문제 3: 1950년대 중·후반, 한국 사회에 새로운 기운인 자유(민주)주의적 이념과 기존의 지배이념인 유교적 가부장성은 저널리즘 영역에서 어떻게 경합하고 있는가? 이는 구체적으로 신문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으며, 이의 형성과정은 어떠한가?

- 1) 1950년대 중·후반을 통해 새롭게 부상하는 한국 신문에 관한 논의는 무엇이며 이는 한국 신문의 역사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으로 가시화되는가?
- 2) 1)을 통해 신문은 어떤 정체성으로 구성되는가?
- 3) 이 과정에서 젠더는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연구문제 4: 1950년대 신문에 대한 지배적 논의와 새롭게 부상하는 논의들은 어떻게 충돌 및 협상하는가?

- 1) 1950년대 신문에 관한 지배적 담론과 부상하는 담론의 협상 결과는 실제 신문에서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가?
- 2)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신문의 젠더성은 무엇인가?

② 연구방법

1950년대 한국 신문에 대한 사회적 논의들을 젠더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당시 신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파악하는 데는 문헌 연구를 사용하고자 한다. 문헌 연구는 당시 신문과 잡지 등을 1차 자료로 해서 진행될 것이며, 당시 신문의 시대적 상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는 연감 및 신문의 사사, 각종 회고록 등도 이용하고자 한다. 50년대 신문으로는 동아, 경향, 조선, 한국을, 잡지로는 <신천지>, <자유세계>, <신태양>, <새벽>, <사상계> 등을 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구체적인 분석 목록은 참고문헌에 밝혀두도록 하겠다. 또한 50년대의 시대적 상황과 당시 신문이 처해있던 상황에 대한 보충자료들로서 그 이후 쓰여진 언론사, 전기 등의 2차 자료들도 이용하고자 한다.

한편, 본 논문은 1950년대와 1960년대 활동한 신문인을 찾아 직접 인터뷰를 하고 인터뷰에 대한 연구자의 해석을 당시 신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파악하는데 첨가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당시 여기자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중요하게 대두되지 않는 상황에서 신문사 조직에서 여기자의 실제 생활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하며, 동시에 한국 사회와 신문이 처해있던 구체적인 역사적 맥락을 좀 더 생생하고 풍부하게 파악하고자 한다. 아래는 인터뷰 대상 목록이다.

<표 1-1> 인터뷰 대상자 목록

인터뷰 대상자	인터뷰 날짜	특 정	인터뷰 장소
박○○ (男)	2005. 5.	1955년 제1차 미국무성초청언론연수 참가자	서초구 서초동 자택
장○○ (女)	2005. 5.	1963년 한국일보 공채기자 인터뷰 현재까지 신문사 근무	집무실
이○○ (男)	2005. 10.	1954년 조선일보 공채기자	대한언론인회 사무실
고○○ (女)	2005. 10.	1958년 한국일보 공채기자	KBS 로비

2) 연구목적 및 논문의 구성

① 연구목적

연구자는 1950년대의 한국 신문에 대한 사회적 논의들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신문이 어떠한 정체성을 구축하였는지를 드러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 신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이고 고정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사회적 구성물임을 밝히고, 그러한 정체성 형성의 구체적인 맥락과 조건들을 추적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언론이라는 특정한 사회적 제도가 전체 사회 구조와 어떤 관련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획득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들을 연구자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오던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여성사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한국 신문의 정체성이 역사적으로 형성되는 과정에서 젠더가 어떤 방식으로 개입되어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한국 신문의 가부장적 성격을 밝혀내는 것이다. 요컨대 이러한 일련의 작업은 일차적으로 한국 신문의 정체성이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과정을 누구의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가에 관한 비판적 문제제기이며, 동시에 여성주의적 역사연구방법을 한국 언론사 연구에 도입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젠더가 저널리즘 역사분석의 유용한 범주임을 부각시켜 기존 언론사 연구의 이론적, 방법론적 지평을 넓히고자 한다.

역사서술이 과거의 문제를 이해하고 미래의 문제에 대처하는 길잡이 역할을 수행하며 도움을 주기 위한 작업이라 한다면, 여성주의 입장에서 과거 사실의 단순한 나열인 편년체적 서술은 역사연구로서 아무런 의미도 가지지 못한다. 다시 말해 여성을 억압해온 지난 역사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교정하는 데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것이다. 의미 있는 역사서술이란 그것을 통해 여성들의 비가시성을 드러내거나 성이 권력관계를 상징하는 중요한 방식임을 밝혀낼 수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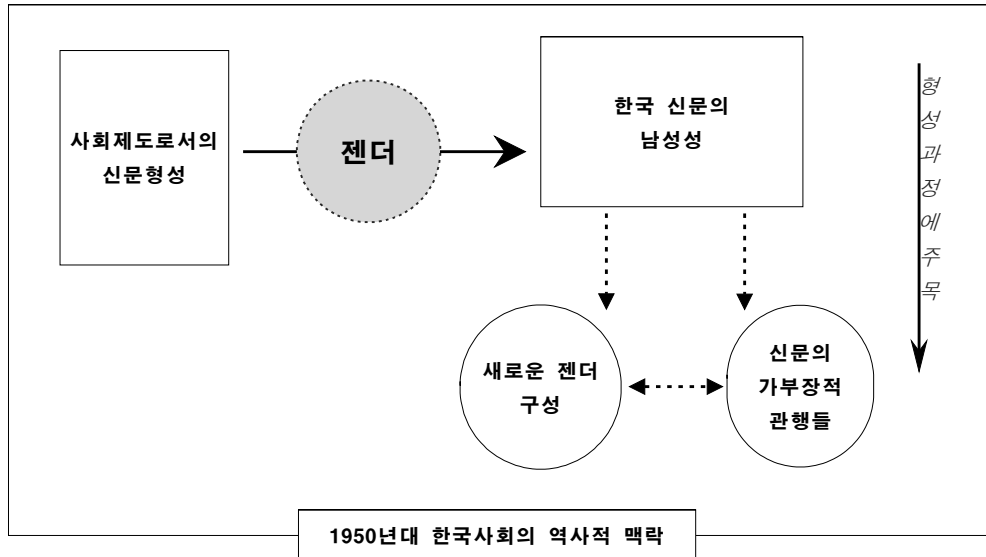
이런 점에서 볼 때, 한국 사회에서 신문이 하나의 사회제도로써 자신의 위치를 구축해 가는 과정에 젠더가 어떤 식으로 관련되어 있는지를 밝히고, 저널리즘 역사에 대한 지식을 조직화하고 인식하는데 있어 젠더가 가지는 중요성을 제기하는 작업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본다.

한국 사회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라 할 때, 이러한 가부장성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획득되는가? 이 지점에서 제도로서의 신문은 전체 한국 사회의 가부장성을 획득하는 과정에 어떻게 관련되는가? 그리고 이를 통해 역사적으로 새롭게 구성되는 젠더는 무엇인가? 만약 그것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어떤 역사적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며, 그 과정에서 신문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가? 연구자는 이러한 질문들을 논문을 진행시키면서 하나씩 차근차근히 풀어내고자 한다.

만약 언론이라는 것이 전체 사회의 중요한 하부구조로 기능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한국 신문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가부장성을 구축해 왔는가를 추적하는 작업은 한국사회의 가부장성을 역사화하는 동시에 사회의 주요 제도가 젠더구성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를 밝히는 의미 있는 작업이 되리라고 본다.

아래 그림은 젠더적 관점에서 한국 신문을 문제화하는 연구자의 시각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다.

<그림 1-1> 여성사적 관점에서 본 1950년대 한국 신문



②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앞서 서술한 문제제기와 이를 통해 도출한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서론으로서 본 논문을 왜 시작하게 되었는가를 밝히는 문제제기와 이를 통해 어떠한 연구문제를 상정하게 되었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연구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한 연구방법과 이 논문을 통해 궁극적으로 연구자가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지를 연구목적에서 밝히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연구의 틀로써 본 논문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이론적 논의를 통해 본 연구의 이론적 근거들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기존 문헌연구 검토를 통해 본 논문의 연구문제를 명확히 하고자한다.

다음으로 제2장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시기인 1950년대가 어떠한 역사적 조건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이것이 한국 신문의 시대적 조건과 어떻게 조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연구자가 왜 50년대를 연구 시기로 설정하였는가에 대한 근거들을 밝히고, 신문의 역사에 있어서 50년대가 가지는 의미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제3장은 1950년대 초·중반에 걸친 한국 신문에 대한 사회적 논의 속에서 지배적 담론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이의 형성과정을 추적하면서 이러한 담론에서 젠더가 어떻게 개입되어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3장은 당시 신문에 대한 사회적 논의들이 신문을 어떤 주체로 구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체성 형성의 젠더화 과정을 분석하는 부분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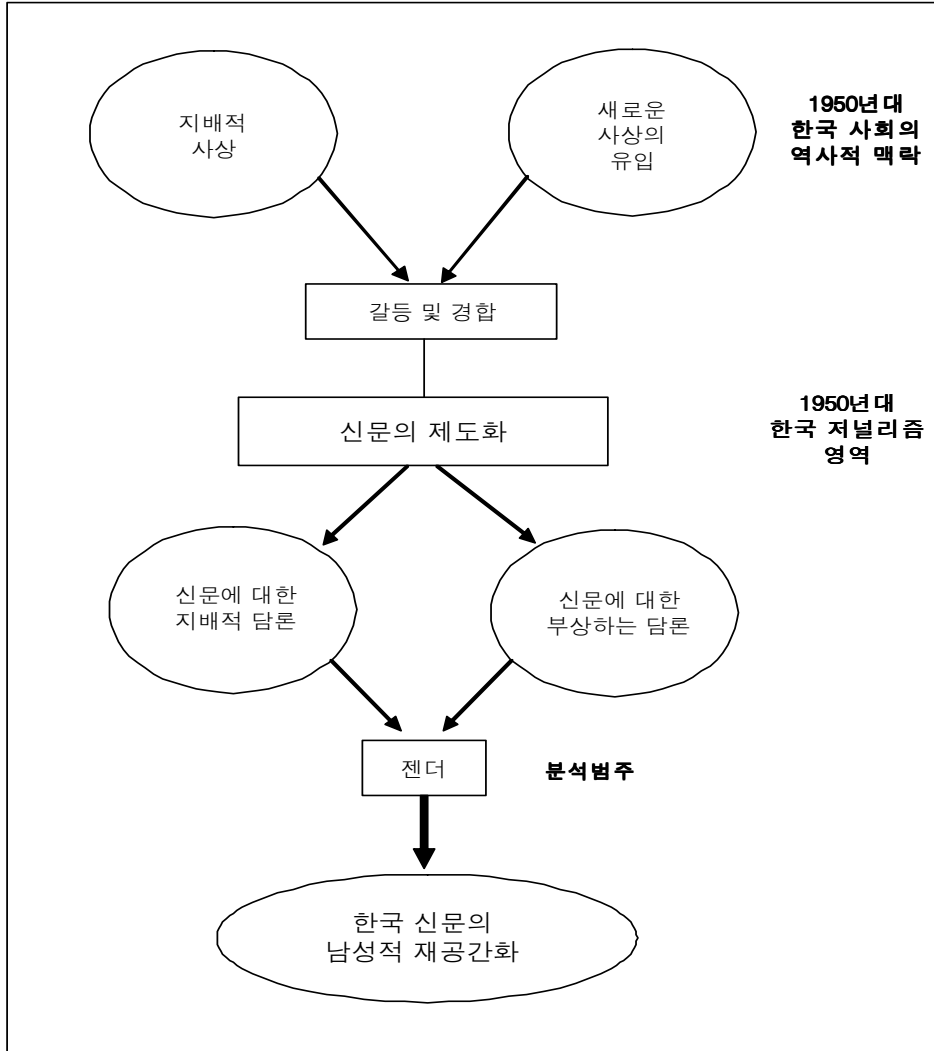
제4장은 1950년대 중·후반을 통해 새롭게 부상하는 한국 신문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담론 형성과정에서 드러나는 젠더 정치학을 분석하고자 한다. 4장 또한 3장과 동일한 구성으로, 당시 신문에 대한 새로운 요구들이 신문의 성격을 어떤 방식으로 구성해 나갔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50년대 신문에 대한 새로운 요구들이 왜 신문을 여전히 남성적 영역이라고 설명하는 토대가 되었는지를 분석하면서 부상하는 담론의 젠더성을 드러내고자 한다.

제5장은 50년대 한국 신문에 대한 지배적 담론과 새롭게 부상하는 담론의 협상 결과가 실제 신문의 직업의식이나 관행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추적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 신문의 남성적 공간화가 실제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살펴보면서 신문의 젠더성을 찾아내고자 한다.

제6장은 본 논문의 결론으로서, 연구결과의 요약 및 본 논문의 의의를 간략하게 제시하고 본 논문의 한계를 점검하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연구자의 연구문제 및 이의 분석과정을 공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1-2> 연구모형



3. 이론적 논의

1) 역사연구에 있어 젠더의 중요성(gender history)

역사연구에 있어 젠더의 중요성은 여성사 연구자들로부터 제기되었다. 러너(Gerda Lerner)는 서구 여성사의 발전과정을 네 단계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보충기(compensatory stage)로 보편적 역사서술에서 이전에 누락된 여성들을 확인, 유명한 여성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활동을 낱낱이 기록해 놓은 것을 말한다. 두 번째는 공헌기(contribution stage)로 남성지배적 사회에서 여성들의 활약을 평가하여, 여성들의 관점에서 역사상 중요한 이슈나 주제 등과 관련된 운동에 대해 기록해 놓은 단계이다.⁴⁾ 세 번째 단계는 전환기(transition stage)로 이미 연구된 여성들의 공헌을 전통적인 해석을 벗어나 재해석하고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역사적 범주들을 다양화하는 재작업으로 대략 1970년대와 80년대 중반까지 많은 여성사가들의 연구들을 말한다.⁵⁾ 네 번째 단계는 남, 녀의 경험을 동시

4) 미국의 예를 들자면, 여성 참정권, 노예제 폐지, 진보적인 개혁기간 중의 ‘헐 하우스 운동(시카고의 가난한 이민 지역에 설립한 사회 복지 기관)’이나 미국의 산업발전 기간 중의 로웰 지역의 공장 여성들의 활동 등을 들 수 있다. 공헌사적인 서술에서는 주로 여성들의 참정권 운동, 노동운동, 또한 도덕개혁 운동들이 미국 전체의 도덕 개혁운동이나 노동운동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를 분석하였다. 또한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의 억압에 대해 여성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저항하였는지에 대한 공헌도 분석하였다(이창신, 1999, 65쪽).

5) 정현백은 보충기와 공헌기는 역사학의 빈 공간을 여성에게 더 많이 할애할 것을 요구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음을 설명하면서 진정한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여성사를 연구하기 시작한 시기는 세 번째 단계라고 보고 있다(정현백, 1996, 8쪽). 이남희는 여성사를 women's history, feminist history, gender history로 구분하고 있는데, women's history는 여성을 특별히 고려한 종류의 역사적 서술이 거의 없다시피한 상태에서 여성의 시각으로 역사를 재해석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여성을 일단 역사서술의 주제로 삼는 것 자체도 중요한 여성사적 시도라고 하면서 여성사의 범위에 포함시킨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여성과 관련된 주제를 다룬다고 해서 반드시 여성에 대한 인습적 시각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역으로 꼭 여성해방사상에 공감하는 이만 여성사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여성사 중에서 여성억압의 역사에 대한 인식이나 여성해방에 대한 전망이 없이 쓰여진 것들을 비판하고 그들과 구별하기 위해 feminist history란 명칭을 쓰는 이들이 생겼다. 그리고 gender history는 이전까지의 여성사가 본의 아니게 여성만을 분리해서 다룬다는 인상을 주는 것을 문제제기하면서 성 역할 구분이 역사 속에서 작용하는 다양한 국면을 남녀를 함께 포함해서 다루겠다는 의도를 강조하면서 등장한

에 역사화하는 통합기(synthesis stage)로 1980년대 중반기 이후로 젠더(gender)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역사분석에 새로운 틀을 갖게 되는 시기를 말한다(Beasley, 2001, p.210).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에 걸쳐 서구 여성사 연구에 있어 주요 특징은 기존의 여성사 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역사학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과거의 여성사 연구가 주로 위대한 여성들에 대한 단편적인 연구 내지는 계층이나 인종간의 차이를 둔 여성들의 경험을 연구해 왔다면, 이제는 여성사 연구에 있어 사회화된 성을 의미하는 젠더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여성사자들은 생물학적 성을 지칭하는 성이라는 용어 대신에 사회, 문화적으로 형성된 성을 나타내는 젠더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역사분석의 기본 틀로 삼았다. 생물학적 성에 기초한 여성사 연구는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구조를 포함한 사회적 영역에 걸친 권력구조 연구를 통해서만이 통찰력 있는 여성사를 연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이창신, 1999, 70쪽).

이 시기에 여성사 연구 방법에 관한 많은 연구를 한 조안 스콧은 여성사의 이론화를 주장했다. 그녀는 그동안의 여성사 연구가 너무 세부적인 주제를 바탕으로 한 개별적인 연구에 치중해 왔음을 지적하면서 여성들의 다양한 삶과 지속되어온 불평등한 삶을 설명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각의 정립을 주장한다. 먼저 그녀는 역사학 내에서의 사회사의 발전은 몇 가지 측면에서 여성사 연구를 지원했음을 인정하면서⁶⁾ 동시에 여성주의 역사가들과 충돌한 지점을 제시한다. 사회사는 한편으로는 역사 서술의 주체들을 구체화하고 다양화함으로써 단일보편 주체의 불가능성을 제시하고 여성에 대한 연구공간을 확보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개념이다(이남희, 1994, 211~212쪽).

- 6) 첫째, 역사적 현상을 계량화하고 일상의 미시적인 것들을 사용하는 방법과 학제간 연구를 통한 방법론의 차용을 제공했으며 둘째, 가족관계, 출산 그리고 섹슈얼리티를 역사적 현상으로 개념화했으며 셋째, 역사를 인간경험의 다양한 국면에서 이해되는 거시적 사회과정으로 정의하면서 정치사(백인 남성의 역사)적 역사 서술에 도전할 수 있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정치사로부터 배제된 평범한 집단들에 대한 관심을 정당화했다(Scott, 1988, p.21).

인간 행위성을 경제력의 한 기능으로 축소하고, 젠더를 그것의 여러 부산물들 중의 하나로 만들었다. 여성들은 자원을 동원하고, 근대화되거나 착취당하고, 권력을 다투거나 혹은 정치로부터 배제되는 집단들 중 하나일 뿐이었다. 여성적 장점과 관계중심성에 대한 여성주의자들의 문제제기는 경제적이고 행동주의적인 접근 즉 사회사에서 주변화 되거나 묻혀버리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여성사와 사회사 양자는 여성을 역사적 주체로 확립하지만, 궁극적인 합의들에서 서로 다른 입장 상의 차이를 보였다. 사회사는 젠더 차이가 (경제적) 설명 틀 안에서 설명될 수 있다고 본다. 이들에게 젠더는 그 자체로 연구를 요구하는 이슈가 아니다. 반면에 여성사는 젠더가 여성과 남성의 다른 역사들을 설명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여성사가들은 젠더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관해 이론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한계를 보인다. 때문에 이들의 이야기들이 여성들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지나치게 분리주의적 입장으로 읽혀질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스콧은 젠더를 이론화할 것을 제기하고 있다(Scott, 1988, pp.21~22).

한편 역사학 바깥에의 일련의 변화도 젠더를 분석범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이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등장으로 인해 거대한 인식론적 동요가 일어났던 시기와 맥을 같이 한다⁷⁾. 이러한 인식론적 동요는 대략 세 가지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첫째, 과학적 패러다임에서 문학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둘째, 사실들의 투명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모든 현실은 해석되는 것이거나 구성되는 것이라는 주장, 셋째, '인간'은 자기 운명의 합리적, 이성적인 지배자라는 관념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정체성의 고정성과 안정성에 대한 비판 등을 들 수 있다. 이 논쟁에 의해 열려진 공간에서, 페미니스트들은 젠더를 분석적 범주로서 정교화 할 수 있는 이론적, 정치적 협력자들을 만나게 되었다.

7) 물론 그 이전부터 페미니스트들은 남녀간의 불평등이 지속되는 현상을 설명하는데 있어 기존 이론들의 부적합성을 제기하면서 젠더를 '계급'처럼 기존의 이론군 속에 편입시키려고 노력했지만, 20세기 초반까지 발표된 주요 사회이론군 속에 젠더는 존재하지 않았다.

스콧은 이러한 후기구조주의의 논의들을 역사학에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지금까지 역사학에서 제기했던 질문방식과 작업방식의 일부를 수정할 것을 제안하며 새로운 역사학을 제시한다(Scott, 1988, p.41). 그녀가 제시하는 새로운 역사학은 사회과학을 지향하는 역사가들이 문서보관소를 ‘사실’의 보고로 여기는 것을 지양하고, 역사 연구에 있어 단일기원을 찾는데 몰두하기보다는 상황들 간의 상호 관련된 과정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정작 역사적 사실들이 왜 일어났는가를 밝히기 위하여 그것이 어떻게 발생하였는가를 좀 더 자주 질문해야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역사가는 사회 조직은 물론 개인 주체도 다뤄야만 하며, 이 둘의 상호 관계의 특성을 정교화해야 한다. 이 양자는 어떻게 젠더가 작동하는지, 어떻게 변화가 발생하는지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역사가는 사회적 권력이 통일적이고, 일관되게 집권화 되어있다는 개념에서 벗어나 푸코의 권력 개념처럼 불평등한 관계가 성좌처럼 흩어져 있는 것, 그리고 사회적인 ‘힘의 장(fields of force)’ 안에서 담론적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스콧은 인간의 그러한 권력관계를 표현하는 우선적인 방식이 젠더라고 보았으며, 따라서 젠더는 역사학에서 유용한 하나의 범주로 등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입장에서 스콧은 역사학에서 젠더를 분석범주로 이론화하고자 기존 페미니스트들의 젠더 개념을 재검토한다. 우선, 젠더라는 용어는 생물학적인 성차를 의미하는 sex 대신에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 성을 의미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써, 성이나 성차에 전제되어 있는 생물학적 결정론을 거부하고, 여성성이라는 규범적 정의에 대해 관계성이라는 국면을 강조하고자 했다. 문화적 구성물로서 젠더를 주장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의 정체성이 전적으로 사회에 의해 산출되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젠더가 생물학적인 성을 가진 신체에 부과된 사회적 범주임을 제시하는 것이다. 젠더에 관한 이러한 정의는 여자, 어린이, 가족, 젠더 이데올로기 등의 주제와 연결된다. 그러나 젠더의 이 용법은 구조적으로나 이데

올로기적으로나 양성간의 관계와 관련이 있는 영역만을 지시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보면, 전쟁이나 외교나 정치는 이러한 양성관계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젠더는 이것들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 정치와 권력의 문제에 관심이 있는 역사가의 생각과는 계속 무관한 채로 남아있게 된다. 그 결과 젠더의 이 같은 용법은 양성관계란 사회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서 그러한 사회관계가 지금 있는 바와 같은 모습으로 구축되어 왔는지, 혹은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에 관해서는 아무 것도 말하지 않는다(Scott, 1988, pp.32~33).

이런 비판적 인식 속에서 스콧은 젠더를 성차에 기반 한 사회관계의 구성요소로 정의내리며, 권력관계를 나타내는 하나의 주요한 방식으로 본다(Scott, 1988, pp.42~50). 사회관계의 구성요소로서 젠더는 네 가지 하위 요소들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들 하위 요소들은 완전히 분리된 요소들이기 보다는 상호관련성을 맺고 있다. 그 하위 요소들로는 첫째,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는 문화적 상징들⁸⁾, 둘째, 그 상징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이런 상징들이 가지는 은유적 가능성을 제한하고 가두어 버리는 규범적 개념들⁹⁾, 셋째, 젠더의 적용을 친족 체계에만 한정해 온 것을 넘어서서 정치학의 개념을 도입하여 사회 제도들과 조직에 대한 논의들로 확장¹⁰⁾, 넷째, 성별화된 의식이 구성되는 방식인

8) 예를 들면, 서양의 그리스도교 전통에 있어 이브와 마리아는 여성의 상징으로, 더 나아가 빛과 어둠, 정화와 오염, 순수와 타락의 상징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역사가는 어떤 상징적 표상들이 어떤 문맥에서 어떻게 인용되는지를 질문해야 한다고 스콧은 지적한다(Scott, 1988, p. 43)

9) 이런 개념들은 종교적, 교육적, 과학적, 법적, 정치적 교의 속에 표현되고, 전형적으로 고정된 이항대립의 모습을 취해서, 남성과 여성, 남성성과 여성성의 범주로 명확히 고정된다. 빅토리아시대의 가정성 이데올로기는 사실상 그것에 대해 언제나 크게 의견이 나누어지는 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완벽하게 이루어진 뒤에 곧바로 그것에 대한 반응이 일어난 것처럼 다루는 것은 이런 식 역사의 한 예이다. 새로운 역사의 주안점은 고정성의 관념을 해체하고, 특정 논쟁이나 억압의 본질이 어떻게 이항 대립적인 젠더 표상에다 초시간성을 부여하는지를 발견하는 일이다.

10) 젠더는 친족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성에 의해 분리된 노동시장은 젠더구축 과정의 일부이다), 교육(남자학교, 여자학교, 남녀공학의 제도도 같은 과정이다), 정치형태(남자 보통 선거도 젠더구축 과정의 일부이다) 등을 포함한 더욱 넓은 시야가 필요하다. 젠더는 친족 관계를 통해서도 구축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경제나 정치 형태를 통해서 구축되기도 하며, 적어도

주체성(subjective identity)이 그것이다.

이러한 하위요소들의 복합적인 상관적 관계물로서 정의됨에 따라 젠더는 섹슈얼리티와 상관없는 사회적 관계들과 현상들에 대한 증거로 소환되거나 그것들의 정당화를 위한 증거로 소환되게 되며, 이에 따라 권력은 젠더 내에서 그리고 젠더에 의해 절합되는 것으로서 포착 가능해 진다. 요컨대 젠더는 권력관계를 나타내는 하나의 주요한 방식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젠더는 의미를 해독하고 인간 상호작용의 다양한 형태들 사이의 복잡한 관련을 이해하기 위한 길을 제공하게 되는 셈이다. 젠더 개념이 사회관계를 정당화하고 구성하는 방식을 보면, 젠더와 사회의 상호적인 성격과, 정치가 젠더를 구성하고 젠더가 정치를 구성하는 맥락상의 특수한 방식들을 통찰할 수 있다.

이처럼 젠더를 기본적으로 권력과 착종된 지식으로 이해하는 스콧은, 문제는 바로 특정 시대 특정 사회의 여성 범주에 정착된 규정이며 성적 차이에 대하여 그 사회가 만들어 놓은 의미와 의미작용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런 의미생산의 장이 되었던 정치경제 사회문화적 맥락을 읽음으로써 그 사회에서 젠더가 여성(됨)과 남성(됨)이 무엇을 의미하였는가를 역사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될 때, 젠더 역사는 더 이상 우리에게 알려진 젠더를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만 의미를 가지는 젠더를 통해 역사를 읽는 하나의 역사이론이자 방법론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다. 지식과 사회조직의 역사적 구성물로서의 젠더에 주목함으로써, 젠더는 자명한 정체성의 범주가 아니라 바로 그것을 통해 역사와 사회현실을 느낄 수 있는 ‘유용한’ 분석범주로 재정립된다(양현아, 2000, 70 쪽).

만약 우리가 남성 대 여성의 대립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불확실한 것으로, 문맥에 따라서 정의되고 되풀이되어 재구축되는 것으로서 다룬다면,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해 젠더를 끌어대는 선언이나 논쟁에

우리 사회에서 그것들은 현재 거의 친족 관계와 무관하게 작동하고 있다.

서 무엇이 쟁점이 되는지, 더 나아가 젠더가 어떻게 인용되고 고쳐 쓰여지는지를 끊임없이 질문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한국 신문이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젠더가 객관보도의 정착을 정당화 했다면, 사회제도로서의 신문은 젠더를 그들의 전제나 조직 속에 어떻게 반영해왔는가를 질문할 수 있다.

신문을 남녀관계의 조직이자 남녀를 규정하는 지식생산의 지점으로 규정하고 젠더가 성적 차이에 관한 담론적 실행의 효과라고 할 때, 한 사회에서 성적 차이에 대한 지식이 유통되는 공간으로서의 신문을 조명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한국 저널리즘 영역에서 작동하지만 잘 언어화 되지 않는 젠더질서를 가시화시키는 것으로 연결될 것이다. 결국 이러한 작업은 신문이 제도화해가는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한국사회에서 계속 변신해가는 가부장제의 헤게모니적 질서를 추적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가부장적 권력이 역사적 상황에서 그 수준을 어떻게 달리하는가를 역사화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작업이 '여성'과 '남성'의 의미가 주요한 사회적 제도들을 구성하는 데 어떠한 도움을 주었는가를 밝혀내는 작업이라 해서 그것이 자연적인 범주로 후퇴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또한 여성간에 존재하는 많은 중요한 차이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본 연구에 있어서는 신문이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남성성을 어떻게 이용, 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여성성으로 대표되는 대문자 여성이 여성간의 차이보다 좀 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여성주의적 역사는 여성에 의해 수행된 위대한 업적들을 열거하는 것을 넘어서서 종종 침묵되고 은폐되지만 실재하고 대부분의 사회조직을 규정하는 힘을 가진 젠더의 작동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때, 이러한 입장에서 연구자는 한국 신문이 젠더와 결합하여 어떤 식의 자기 위상을 갖게 되는지, 또 그러한 과정은 한국 사회의 특수한 역사적 맥락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추적하고자 한다. 이러한 여성사적 작업을 통해 기존 언론사를 논의하던 방식에 비판적으로

개입하여 언론사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2) 자유주의와 유교적 가부장성의 충돌

1950년대는 전쟁 후의 갈등과 혼란, 가난 등이 자리잡고 있었지만, 이에 못지않게 새로운 기운들도 넘쳐나고 있었다. 이러한 새로운 기운들의 중심에는 미국이 자리잡고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전후 복구의 과정에서 '원조'라는 이름으로 미국은 우리의 일상 및 의식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개인, 평등, 민주주의, 자유, 평등, 해방, 근대화' 등의 용어가 난무했던 50년대는 어쩌면 그래서 '혼동과 무질서'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러한 측면들은 50년대가 낡은 것과 새로운 것의 대립을 통해 무척이나 역동적인 공간이었음을 반증하고 있기도 하다.

인간의 의식세계와 마찬가지로, 한 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는 하나의 통일된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 지배 이데올로기는 체계적이고 일관된 모습을 띠기보다는 모순의 복합체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가부장적 자본주의 사회의 경우 계급관계를 은폐하기 위해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이데올로기를 필요로 하나, 동시에 그 이데올로기는 사회적 불평등을 드러내고, 정의와 평등에 대한 인식을 촉진시키는데 기여한다. 다시 말해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자본주의적 관계를 재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한편, 그와 공존하는 자유 민주주의 이데올로기는 가부장적 관계를 전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조건 아래에서 긴장관계에 있는 이데올로기들 가운데 특정 이데올로기가 더 지배적이 되는가가 중요한 질문으로 제기된다(조순경, 1998, 169쪽).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개인을 전제로 한 이념과 그것을 부정하는 문화 사이의 모순된 결합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는가를 질문할 수 있다.

연구자는 이와 같은 논의를 기반으로 50년대를 문제화하고자 한다. 예적 질

서와 공동체적 삶에 기반한 유교적 가부장제 아래에서 개인의 정치적 자유와 평등, 경제적 민주주의를 내세운 자유민주주의는 어떻게 충돌하고 협상하게 되는가? 1950년대는 해방과 미군정기 이후 한국전쟁과 분단이라는 역사적 경험 속에서, 독립적이며 새로운 강력한 국민국가를 열망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절대적 영향 아래 자유민주주의라는 서구적 가치, 미국식 자본주의, 개인의 자율성이 중요한 이념으로 등장하였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시 한국사회의 유교적 가부장성과 충돌하여, 공동체적 지향의 규범들이나 가치들이 와해되거나 변형, 기존의 가부장성이 전도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구조적 차원의 논의들을 저널리즘 영역으로 끌어내려 50년대 한국 신문에도 동일한 방식의 질문을 던져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50년대의 이러한 시대적 조건을 고려해 볼 때, 당시 한국 신문이 가지고 있었던 가부장적 특성들이 뒤틀릴 가능성을 상상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 신문의 가부장성은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주장되고 증명되고 있는 만큼, 결과적으로는 전도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자의 문제의식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왜 50년대의 새로운 기운들은 한국 신문의 가부장성을 전도시키지 못했는가? 50년대 신문에 대한 새로운 요구들은 기존의 지배적 담론과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50년대의 어떤 요인들이 이를 저지했는가? 이러한 질문 속에서 연구자는 50년대를 문제화하고, 신문에 대한 사회적 논의들을 통해 그 구체적인 진행과정을 젠더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1950년대 한국에 도입된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의 성격 및 당시 한국사회의 유교적 가부장성의 특징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서구에서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봉건적 신분질서 및 절대권력에 대한 정치·사회적 저항이념으로 출현하였다. 다시 말해, 자유주의는 특정한 시기 서구 사회의 구체적인 역사적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일련의 제안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때 자유주의는 어떤 추상적인 가치들의 고정된 체계라기보다 특정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현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끊임

없이 변화하는 이념 운동이라 할 수 있다.

자유주의에 대한 이같은 인식에 기반할 때, 한국에서의 자유주의 역시 한국의 역사적, 정치·사회적 맥락과 분리되어 이해될 수 없는 것이 된다. 1950년대 한국에서의 자유주의는 헌법에 제도화된 공식 지배이념으로 존재했다. 당시의 자유주의는,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저항이념으로서 출현하여 점차 대다수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지지와 호응을 얻고 마침내 공식 지배이념의 자리를 획득하는, 이념의 장기간에 걸친 내재적 발전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미국이라는 외부적 힘의 영향 하에 위로부터 일거에 제도화되었다. 게다가 근대국가 형성 당시 한국이 처한 역사적·정치 사회적 상황은 공식 지배이념으로서 자유주의를 채택함에 있어 그 내재적 가치보다 외재적 가치가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게 했다. 따라서 공식 지배이념으로 제도화된 자유주의는 다분히 명목적인 것이었을 뿐 현실을 규정하는 준거적 신념체계 혹은 원리로 즉시 작용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성과 관용에 대한 강조를 제외한 나머지 자유주의의 고유한 가치 즉, 개인의 자율성과 존엄성에 대한 가정,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정치사회 구성의 기본 원칙으로 간주하는 입장 등은 당시 한국 사회에서도 보편적인 호소력을 지니는 것으로 인정된다(문지영, 2002, 4~5쪽). 이같은 논의는 당시 신문의 과도한 정치성을,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기제로 언론을 위치시킴으로써 언론자유에 대한 요구를 정당화했던 논의에서도 엿볼 수 있다.

한편, 평등한 시민들의 일반의지에 의해 통치되는 공동체를 이상으로 삼는 자유주의 정치철학은 시민성 개념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시민은 누가 되는가? 자유주의 시민성 개념은 모든 성인을 포함시키는 보편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근대의 평등의 원리는 특정 신분의 사람들에게만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 적용되는 보편적 원리이다. 그래서 시민에게 필요한 경제력의 문제는 이제 사적으로 소유한 노예나 아내에 떠맡겨 버림으로써 해결될 수 없다. 그들 역시 보편적 시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시민의 정치적

활동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력은 이제 사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기 보다는 공적인 문제가 된다. 이처럼 근대에서는 시민이라는 개념과 가장이라는 개념 사이에 내적인 연관성이 없다. 과거와는 달리 근대에서는 정치연합체를 구성하는 기본단위는 가정이 아니라 개인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정을 대표하는 가장이 공적인 영역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각자는 자기 자신을 대표하여 누구나 공적인 영역에 참여할 수 있다. 공적인 공간은 이제 가장들의 공간이 아니라 모든 개인들의 공간이 되는 것이다(허라금, 1996, 338~339쪽). 따라서 근대 자유주의 정치이념이 50년대 한국 사회에 들어오게 되는 과정에서 시민성 개념이 제대로 작동되었다면, 당시 유교적 가부장성이 강했던 사회에서 여성들이 공적 영역으로 진출하기 위한 새로운 이념적 토대로 작용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한편, 근대 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은 각각이 개인의 존엄성을 갖는 동등한 권리를 갖는 자유로운 존재라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한다. 따라서 이런 평등한 존재들로 구성되는 국가 공동체 안에서는 이들에 대한 통치권력의 행사에 대한, 과거와는 다른 방식의 정당화가 필요하다. 비록 국가권력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시민에게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자유주의의 공적 세계와 사적 세계의 경계의 구분이 나오게 된다. 그런데 근대 자유주의 공사구분은 공간적인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개인의 삶에 있어서 국가의 권력의 개입 또는 강제가 정당화되는 부분과 정당화되지 않는 부분간의 구분이 근대적 공사구분의 핵심이다. 때문에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간의 구분은 무엇이 개인적인 것이고 무엇이 공동체에 관련되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 의존한다. 무엇을 개인에게 위임할 수 있고 위임해야 하며, 무엇을 공동체에 위임하며 해야 하는가? 어디가 사적 관할권의 끝이고 어디가 공적 관할권이 시작되는 곳인가? 등등의 문제가 공사구분에 걸친 쟁점의 중심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자유주의의 공사개념에서 그것이 가정 안에서 일어난 일인가 밖에서

일어났는가는 더 이상 중요한 개념적 기준이 되지 않는다.

통치권력의 합법적 정당성을 평등한 시민들이 합의한 계약에서 찾는 자유주의에서 공과 사의 구분은 시민들이 합의한 계약 내용에 따라 통치되어야 할 부분과 그런 통치권력이 개입할 수 없는 영역간의 차이라 할 수 있다. 왜 이처럼 자유주의 사상에서 개인의 사적 영역이 절대적 가치를 갖게 되는가? 그 이유는 자유주의가 평등의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라는 점에서 찾아진다. 공동체의 모든 개개인은 동일한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것이 이들의 기본 전제가 된다. 만인 평등성의 기초는 모든 인간이 자율적 존재라는 믿음이다. 모든 이는 자기 자신의 삶이 추구할 목표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최선의 행위를 선택할 능력이 있다는 점에서 자율적 존재라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주의 정치사상가들이 추구했던 이상적인 정치공동체의 기본조건은 그 공동체가 그 구성원들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된다. 어떤 다른 가치들도, 예컨대, 물질적 부나 쾌락과 같이 인간이라면 자신의 삶을 사는데 누구나 추구하게 되는 중요한 삶의 가치들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위해 자율성을 희생시키는 것을 정당화시키지 못한다. 자유주의 정치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로 개개인의 자율성이며 이런 자율성의 발휘를 통한 개개인의 자아실현인 것이다.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사적 권리란 바로 이 자아실현의 권리에 다름 아니다.

정치 공동체의 성원을 피부색, 성별, 계급 등의 차이를 넘어서서, 최소한 분별능력에 기초한 공동성에 기반하여 보편화시켰다는 것, 각 개개인을 절대적 가치를 갖는 존엄한 존재로 이해함으로서 인간의 평등성을 인식했다는 것은 여성에게 성차별적 위계질서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공적인 영역에서의 여성해방운동이 근대에 등장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자유주의의 시민성 개념에 기반한 공사구분은 전통적인 그것에 비해 여성의 관점에서 볼 때 진일보한 것임에 틀림없는 것이다(허라금, 1996, 340쪽). 왜냐하면 공적으로 문제들을 제기하고 해결을 위한 정책

들을 마련하는 공적 활동에 여성이라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을 자유주의 시민성 개념은 정당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단의 페미니스트들은 근대 정치 사상가들의 논의 안에서 그리고 역사적 현실의 차원에서 자유주의 제도 하에서 가부장적 질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가부장적 권력관계에 의한 지배가 왜 잘못된 것인가를 날카롭게 비판했던 로크가 가정과 정치적 세계의 차이를 내세우면서 가정에서의 가부장적 질서를 옹호하는 것이라고는, 루소가 여성을 남성 시민을 위해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해야할 것을 정당화하는 것 등등은 다 그 좋은 예들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시민성 개념은 사실상 보편적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공화주의적 개념으로 회귀해버리고 만 것이다(허라금, 1996). 특히 남성적 동질성 및 보편성의 세계로 표상되는 공적인 세계가 여성의 차이를 사적인 것으로 추방하는, 이른바 ‘공적’, ‘사적’ 간의 분리 위에 차이를 배제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근대 자유주의의 계약론적 모델은 성중립적인 성격의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남성의 전통적 역할에 따른 특정한 경험과 그것을 반영한 특정 개념체계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결론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바로 이런 자유주의의 성별화된 공적 개념의 성격 때문에 자유주의 공사 구분이 그 이념적 보편성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적 질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할 수 있는 것이다(Young, 1987). 따라서 자유주의 계약론에서 개념화된 시민성은 남성적 시민성으로 “언제든 무장하고 전쟁에 나가 피 흘릴 수 있는” 남성의 이미지로 구현되어 있으며, 이에 비해 여성의 시민성은 공화주의의 시민을 길러내는 일을 통해 수행되는 것으로 봄으로써 여전히 가부장적 공사구분에 기초한 시민성 개념을 표현하고 있다. 근대 시민의 권리는 전쟁에서 무장하고 피흘릴 수 있는 남성의 역할을 통해 정의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역사에서 시민성이 남성들에 의해 남성적 덕목들로 개념화됨으로서, 여성은 시민적 자질이 부족한 자로서 공적 영역에서 배제되고, 사회는 경쟁적이고 타자지배적인 힘이 중심

이 되는 보이지 않는 전쟁상태가 되어왔다는 것이다. 또한 페이트만은 정치적 근대성은 그 기원에서부터 가부장제를 전제하며, 시민적 계약은 여성의 성에 접근할 수 있는 남성의 권리에 기초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따라서 전통적 가부장제가 근대사회에 잔존하는 것이 아니라 근대 사회 자체가 가부장적으로 조직되어 있음을 그녀는 밝히고 있다. 계약이론에서 아버지의 권리는 부정되었지만, 남성의 권리는 부정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현대적 가부장제의 기초는 보호하고 온정을 베푸는 아버지의 권리가 아니라 여성의 몸과 성에 접근하는 남성의 권리인 것이다. 근대 사회 계약은 아버지가 정치적으로 패배한 이후에 일어나며 그것은 근대적인 형제적 가부장제를 만든다(Pateman, 1988/2001, 16-19쪽).

하지만 앞서 논의에서 밝혔듯이 50년대 한국에서의 자유주의의 보편적 가치는 그것이 전개되는 특정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혁신, 변형, 때로는 굴절되면서 구체적인 형태로 구현되기 때문에, 서구적 논의를 그대로 한국의 50년대에 적용시킬 수는 없다. 그리고 당시 한국은 유교적 영향이 강하게 작동하던 공간이었기 때문에, 이것과 자유주의의 새로운 가치와 이념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헌법에 제도화된 공식이념으로 자리잡은 당시의 자유주의는 첫째,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 및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해 개인의 자유가 조정될 것으로 규정하고, 둘째 사유재산권이나 시장의 절대성보다 분배정의나 복지를 강조했으며, 셋째 그에 따라 국가에 상당한 정도의 권한을 부여했다. 요컨대 법으로 제도화된 당시의 자유주의는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민주주의의 결합을 지향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유주의의 초기 제도화에 끼친 미군정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헌법의 자유주의가 미국식 자유주의와 구별되게 갖는 특성으로, 이는 제도 형성자로서의 미국의 영향이라기보다, 북한 공산정권과 대치 상태에서 국가형성을 완수해야했던 당시 국내 정세 및 그에 반응하고 대처하는 정치세력들의 갈등과 타협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문지영, 2002, 7쪽).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기자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내세우거나 신문 경영의 효율성을 지향하는 미국식 자유주의 저널리즘 이념이 새롭게 등장했지만 그것이 지배적 담론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사회적 공기를 내세우면서 여전히 지사적 신문이 당시의 지배적 이념으로 담론화될 수밖에 없었던 1950년대를 상상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 기자들의 조직인 <한국신문편집인협회>가 생겨나고, 기자들의 직업윤리를 강조하는 윤리강령이 채택되고, 미국 언론인 연수의 경험을 가진 젊은 신문기자들의 친목 집단인 <관훈클럽>이 탄생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언론자유를 강하게 요구했던 점 등은 50년대 한국 사회의 새로운 기운인 미국식 자유주의의 영향들이 언론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한국 사회는 역사적으로 볼 때, 유교문화의 가부장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50년대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공사영역에서 차지하는 지위사이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사회의 지배적 이념으로 자리잡고 있었던 유교적 가부장성에 좀 더 천착해야 할 것이다.

유교적 가부장제의 특징은 성별 권력관계의 억압성을 은폐시키는 기제가 유교 문화 내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주로 예(禮)의 장치를 통해 이루어진다. 유교 윤리를 구성하는 기본 개념 중의 하나인 예(禮)의 본질은 상하, 존비의 등급관계를 구별하는데 있다. 위계적으로 등급화된 사회가 가장 정의로운 사회이며, 귀천, 존비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그에 따라 자신의 직분과 자리를 엄격히 지키는 것을 공평함이라고 하는 것이다. 오류에서 얘기하는 상호 호혜, 쌍무적인 개인들간의 관계는 차별적인 등급관계라는 커다란 틀 안에서, 그리고 그 틀을 보다 효율적으로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도 있다. 여기서 가까운 사람을 친히 여기고, 존귀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종법관계는 인도주의를 연상케 하는 인(仁)의 외피로 위계적 권력관계를 은폐시키고 있는 것이다 (조순경, 1998, 184~185쪽).

예적 질서는 신분질서, 위계적 가부장적 질서 그리고 그에 기반한 성별 억압

체계의 문제를 희석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다. 미국에서 성차별이 인종차별 문제와 맞물려 인식됨으로써 성별 위계구조에 대한 의식을 더욱 첨예화해 왔던 것임에 반해, 우리사회의 경우 성별 위계구조는 연령, 신분에 따른 위계구조와 맞물려 성적 억압체계를 모호하게 하거나 그에 대해 둔감하게 하는데 기여해 왔다. 서구사회에서 인종차별이 악으로 인식되는 것임에 반해, 유교 문화 내의 성, 연령별 위계구조는 충, 효, 부덕 또는 장유유서라는 도덕, 선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와 같이 예적 질서에 기반한 유교적 가부장제에는 남성의 여성 억압체계를 은폐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인 장치가 내재해 있다 할 수 있다.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우리사회에서의 성별 분업구조의 형성은 신분제적 질서를 합리화하는 기제로서 유교 원리의 실천과정과 맞물려 형성되어 왔다. 특히 주자학적 성리학은 성별에 따른 직분 및 역할 분리를 불변의 천리로 규정함으로써 성차의 생물학적 결정론과 유사한 성차 이데올로기를 생산해 왔다. 즉 역사적으로 구성된 남성과 여성의 기질, 역할, 그리고 위계적 지위는 초역사성을 띤 불변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존재론적 차원에서 여성과 남성은 이미 동류가 아니다. 이러한 위계적 성적 구별과 그에 기반한 성별 분업은 천지의 조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유교적 가부장제는 전쟁 이후 50년대 중반 여성의 사회적 노동이 새롭게 요구되던 시점에도 여지없이 발휘되어 여성은 일하면서도 가정에 더더욱 헌신해야 하는 새로운 현모양처상을 제시받으면서 이중적 노동부담을 안게 되었다. 이러한 논의에 비쳐 본다면, 당시 신문의 여기자들은 공채제도 및 추천에 의해 신문이라는 공적 영역에 진출하지만 성별 분업화된 공간 속에서, 이성과 합리의 공간으로서 공적 영역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사적 영역의 지배적 이데올로기가 내재된 공적 영역을 경험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내훈>에서는 유교적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이 지켜야 할 책임을 여성적 덕, 여성적 말, 여성적 외양, 여성적 일 등의 네 가지로 말하고 있다(Han &

Ling, 1998; 김현미, 2001, 48쪽에서 재인용).

여성적 덕이라 함은 국가에 복종하고 남녀유별과 성역할 분리를 지킴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기능적 차별화에 기여하는 것이며, 여성적 일은 경제에 헌신하는 것을 말한다. <내훈>에서 아내의 역할은 남편이 남성답게 일을 처리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 암탉이 울면 혼동이 와서 안 된다. 그래서 유교적 아내와 딸의 의무는 시부모를 섬기고, 남편에 복종하고 자식들을 돌봐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교적 가부장제에 기인한 미디어 조직 구조에 있어서의 성별역할분리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문제제기 되어왔다. 미디어 조직에서의 역할 구조의 성별화현상은 수평적 분리와 수직적 분리와 나뉘어지는데 수직적 분리는 '승진의 최상한선(glass ceiling)'으로, 수평적 분리는 취재부서는 남성기자, 내근부서는 여성기자가 담당하는 것으로 드러나거나 정치부나 사회부는 주로 남성기자가 배치되고, 생활부 또는 문화부는 주로 여성기자가 배치되는 경향으로 나타난다(박소라·전경란, 2003, 198쪽).

여성적 언행이라 함은 무엇보다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나대지 않으면서 말을 삼가고 겸손을 유지하는 것이다. 유교적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은 말하지 않는 존재가 '좋은 여성, 바람직한 여성'이 되는 것이다. 당시 한국의 신문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인정하는 나섬의 공간이었다. 그렇게 때문에 이 공간은 더욱 더 여성에게 어울리지 않는 공간으로 설정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당시 신문에서의 여성의 배제를 이해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에서 본다면 유교적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유교 남녀의 성별분업과 남존여비에 기초하여 각각 올바른 행위규범을 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교적 가부장성이 여성과 남성이 기본적으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자유주의의 주장과 어떻게 경합하고 있으며 이는 저널리즘의 영역에서 어

떻게 발휘되고 있는지를 질문해야 한다.

위계질서가 뚜렷한 유교적 신분사회 안에서 정의(justice)는 그 질서에 따라서 각자가 분수에 맞는 대접, 자신에게 합당한 몫을 갖는 것이 된다. 유교 전통 안에서 정명론은 이름에 걸맞는 역할과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그 사람의 권리 또한 정해지게 된다. 예적 질서에 따라 분별화된 인간들은 이렇게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서로 다른 도덕 규범을 따름으로써(군주의 예와 신하의 예는 다르며 남자의 도덕과 여자의 도덕 또한 다르다) 조화롭고 같지는 않은(和而不同) 인간들의 질서를 만들어 낸다. 이러한 사회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로운 사회와는 다르지만 차등적인 질서 내에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나름대로의 공정성을 기하려는 장치로써 힘을 행사하는 자들에게 높은 도덕적 능력을 요구하였으며, 각 사회성원들에게 권리주장보다는 책임수행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사회 내에서 정의나 공정성은 강하게 온정주의적, 시혜적 성격을 띠게 된다. 이러한 온정주의는 또한 그 시혜를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고마움의 마음에서 깊이 우러나오는 정성으로 시혜자를 보살피고 섬길 것을 요구한다. 예는 언제나 주고 받는 것이지 일방적 규칙 준수가 아니다.

유교전통에서는 내가 타자와 맺는 관계는 균질적인 것이 아니며 상호적 관계가 아니다(아버지의 예와 자식의 예는 다르며 군주와 신하의 관계 또한 쌍무적 관계가 아니다). 타자는 단순히 무분별적 타자가 아니라 언제나 우연적 인간 관계 안에서 규정된 경험적, 질적으로 분별적인 타자이다. 타자에 대한 자기주장은 관계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권리주장은 대개의 경우 특권에의 주장의 성격을 띤다(아버지의 권리, 아들의 권리, 남성의 권리, 장자의 권리 등에서처럼). 여성의 책임에 대응하는 여성의 권리가 가능한 경우 그것은(본처 혹은 정처의 권리, 어머니의 권리, 시어머니의 권리) 모두 특권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한편, 유가사상에서는 사를 앞세우지 않고 공을 우선시하는 것이 미덕으로 꼽힌다. 여기에서 사는 개인, 그리고 개인의 이익을 의미한다. 공익과 반대되는

사익은 어떤 점에서 이분법적 대답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서 일컬어지는 사는 개인주의에 바탕을 둔 개인과는 구별된다. 유가의 개인은 인간관계의 맥락을 떠난 추상적이고 원자적인 개인이 아니라 부자관계, 군신관계, 붕우관계를 갖고 있는 개인이다. 이러한 관계에 대해 두가지 특징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는 이것이 남자들간의 관계라는 점이며, 둘째는 부자 및 군신의 관계에서 보여지듯이 위계적 관계라는 점이다. 이 남성들간의 관계는 어떤 조건에서 공적인 관계로 승격될 수 있다. 공과 사 역시 위계적 관계에 있으며 이 위계관계는 도덕과 규범을 통해 강조된다(장필화, 1996, 325쪽).

50년 한국 사회는 공동체주의적 윤리를 표방하는 유교적 색채 짙었다. 그래서 이 안에서 개인적 권리는 설 자리가 없다. 화목한 공동체 건립에 있어서 요청되는 것은 정의의 준수와 권리의 존중과 같은 최소한의 도덕원칙인데 유교 윤리 안에서 이의 실현은 어려웠다. 정의의 준수는 기본적 평등권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는 분리의 원리, 즉 모든 인간은 남이 대신할 수 없는 자신의 고유한 영역을 갖는 분별적 존재임을 배워나가야 하는데 이것이 유교윤리와 충돌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남녀유별’을 강조해왔던 유교질서 안에서 여성 삶의 맥락이나 남녀 사이에 친밀감을 키울 수 있는 맥락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여성이 남성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가족관계나 성적 배우자로서의 관계 외에는 거의 없다. 남성들이 주도하는 사회 안에서 이러한 친친의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정치, 경제적 권리를 지닌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유교 사회 안에서 친친의 윤리는 사실상 평등권을 담보해주는 실질로 작용하였기 때문에, 여성의 상대적으로 좁은 삶의 맥락 안에서 여성의 평등권은 아주 제한적으로만 성립할 뿐이기 때문이다(김혜숙, 1999a, 61~75쪽).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막고 사회적 성공을 막는 것은 남성들 사이에 굳건하게 짜여져 있는 관계의 그물망이다. 남녀유별은 우리 사회 안에 남

성문화와 여성문화 사이의 구분을 선명하게 하였고, 노동시장은 남성에게 의해 일종의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구분된 남녀문화는 여성이 남성과 관계 맺는 방식을 (사적 영역으로만) 제한하게 되고 이에 따라 여성은 사회 안에서 심한 성차별을 경험하게 된다. 만일 평등권이 개인이 한 인격체로서 갖는 값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확보되는 상대적인 것이라면 우리 사회 안에서 여성이 권리를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어떤 남성들과 관계를 갖는 것인가의 문제가 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살펴볼 때, 1950년대는 유교적 가부장성과 이와 갈등하는 서구식 자유민주주의의 새로운 가치들이 함께 공존하는 시기였음을 알 수 있다. 연구자는 이러한 충돌이 당시 저널리즘 영역에서는 어떻게 발휘되고 있었으며, 기존의 이념과 새로운 것의 경합이 신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었는지를 젠더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4. 선행연구 검토

본 논문에서 연구자는 여성사¹¹⁾적 관점에서 저널리즘 역사를 새롭게 보고자 한다. 언론사 연구에 있어 여성사적 관점을 수용한 연구가 국내는 미진하므로 먼저 여성주의적 관점을 언론학 연구를 도입한 연구들로부터 그 과정을 그려보고자 한다.

김혜순은 1996년도에 국내 언론학계에서 처음으로 페미니스트 기획의 역사와 현황을 서술하면서 해외와 국내 인접학문에 비교해 볼 때, 언론학 분야에서

11) 여성사를 어떻게 개념규정을 할 것인가는 논의가 필요한 지점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차후에 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가장 단순하게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역사를 보는 연구방법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여성 연구자의 비율은 매우 저조하며, 페미니스트 연구 또한 그리 활성화되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있다(김혜순, 1997, 395~433쪽).

그녀는 언론학에서 진행되는 페미니스트 기획을 첫째, 대상과 주제로서 여성 관련이 단순히 첨가되는 여성첨가단계, 둘째, 여성적 경험과 영역을 부각시키면서 기성 학문을 연장 보완하는 페미니스트 경험단계, 셋째, 페미니스트 입장과 이론으로 기성 학문을 재구성하는 단계로 분류하여 언론학 연구 문헌들을 살펴보고 있다. 하지만 김혜순의 분석 연구물 목록 중¹²⁾에서 여성사적 관점에서 연구한 문헌은 전체 117건 중에서, 세 편¹³⁾에 불과하다. 이후 최선열은 김혜순의 연구를 이어받아 1996년부터 1999년 12월 사이에 발행된 문헌들 중에서 페미니스트 언론연구 논문 75편을 분석했는데, 그 중 여성사 관련 연구는 네 편¹⁴⁾이다.

한편, 원용진은 여성주의 관점에서 대중문화를 연구한 논문들을 살펴보면서, 역사적인 접근을 새로운 반성을 통해 나타난 연구라 이름 붙였다(원용진, 1993, 17~67쪽). 그는 자유주의, 급진주의, 전통적 마르크스주의 범주 안에서 여성과 대중문화에 관한 논의들을 ‘단순했던 연구들’이라 칭하면서 이들 논의가 가진 공통적인 결함¹⁵⁾을 반성하고 새롭게 나타난 여성주의 대중문화연구 중의 하나를 문

12) 페미니스트 언론연구가 최초로 등장한 1978년부터 1996년 4월 말까지 출판된 연구물

13) 김경희(1986), “여성 언론인의 역사,” <또 하나의 문화>, 제2호, 127~147., 김혜순(1993), “경기변동과 독점화진전에 따른 여성잡지 내용분석: 1970-1990년의 여성중앙분석,” <한국언론학보>, 통권 29호, 145~171., 한국여성연구소(1989), <사회변동에 따른 매스미디어의 여성관 연구: 1978년과 1988년의 매스미디어를 중심으로>.

14) 이우경(1996), “한국영화에 나타난 여성의 성역할 변화 연구: 해방이후 흥행작을 중심으로”, 고려대 언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노영희(1997), “한국 최초의 여기자, 최은희의 혁신적 삶에 대한 고찰: 실천적 자세와 여성사연구를 중심으로,” <비교문학>, 22, 193~212., 박용규(1997), “일제하 여기자의 직업의식과 언론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통권 41호 여름, 5~40., 유선영(1999), “객관주의의 사악한 시선: 남근중심주의,” <언론과 사회>, 25호, 7~54.

15) 이들 논의들은 여성 해방이 마치 여성들만의 해방인 것처럼 논의하는 본질주의, 모든 여성들을 한 범주 안에 묶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보편주의 성향, 여성의 모습을 생물학적이거나 어린 시절의 경험으로 환원시켜 생각해보는 소급적인 모습, 여성의 문제를 반드시 계급의 문제를 통해서 관찰하려는 환원주의적 경향 등으로 인해 차세대로 여성주의자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원용진, 1993, 42쪽).

회사 혹은 사회사로 대변되는 역사적인 접근으로 보고 있다.

여성들의 대중문화 수용에 관한 문화사적 접근은 역사를 통해 여성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지배적인 구조 속에서 어떻게 그들의 위치를 위해 협상해 왔는가 이해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소위 기존의 남성 중심사관으로 인해 소외되었던 여성들의 목소리를 역사에 다시 등장시킨다는 의미에서 의의가 있다(원용진, 1993, 56쪽). 원용진의 논의는 대중문화 연구에 있어 여성사적 관점을 수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선도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한편, 국외 문헌에서도 저널리즘 역사를 연구함에 있어 여성주의적 관점의 중요성을 제안하는 몇몇 연구들이 있다. 코버트(Covert)는 여성 삶의 경험에 비추어 역사적 시간을 재고할 것을 제안하면서 이러한 여성 삶의 경험을 저널리즘 역사를 연구하는데 적용할 것을 제시한다(Covert, 1981). 또한 더빈(Dervin)은 여성주의 인식론의 핵심적 요소인 연구자와 연구대상간의 관계 및 책임에 대해 성찰적 자세를 수용하여 이를 커뮤니케이션 역사 연구에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Dervin, 1987), 스타이너(Steiner)는 저널리즘 윤리를 재평가하는데 있어서의 여성주의 이론의 유용성을 제시하고 있다(Steiner, 1989).

키치(Kitch)는 미국 여성 저널리스트들을 통해 저널리즘 역사연구에 있어 객관성에 대한 수사학들을 여성주의 관점에서 비판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객관적” 뉴스의 본질 및 내용에 대해 그것이 누구의 목소리인가를 문제제기하면서 여성 저널리스트들은 저널리즘의 객관성이 여성들의 삶을 생략하고 있으며 따라서 저널리즘 실행준칙들과 여성저널리스트들의 작업 간에는 오랜 긴장의 역사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키치는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객관성 논쟁을 불러일으킨 여성주의자들의 작업에 기대 저널리즘 객관성을 비판하며 객관성의 목표를 재구성해야함을 주장하고 있다(Kitch, 1999).

한편 비즐리(Beasley)는 미국 저널리즘에서 여성의 경험을 다루는 최근의 작업들을¹⁶⁾ 통해, 남성적인 저널리즘 수행 모델에 맞춤으로써 전문성을 획득한 여

성들의 노력을 서술하는 현재의 서술방식에 대한 대안을 찾고자 한다. 그녀는 여성의 관점을 포함하는 저널리즘에 대한 재정의의 추구하면서, 저널리즘에 대한 새로운 사료로서, 여성저널리스트의 조직, 구술사에 기록된 여성 개인의 경험, 자서전, 가족 얘기가 중심이 되는 사회사(family-oriented social history)를 이용할 것을 주장한다(Beasley, 2001).

국내에서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신문의 역사를 연구하였거나, 여성사적 관점에서 신문을 연구한 작업들은 언론사 연구 영역에서 그다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몇몇의 연구들은 주목할 만하다.

먼저 김경희는 뉴스생산과정에서 여성을 배제시키는 기제를 밝혀내어 언론사 조직에서의 여기자의 소외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자본주의적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기자들은 사회로부터의 배제뿐만 아니라 뉴스조직에서도 ‘남성적 유대관계’, ‘사적영역 뉴스의 평가 절하’, ‘여기자 불신문화’, ‘여기자에 대한 정형화’ 등을 통해 배제되고 있음을 밝혀내고 있다(김경희, 1998). 연구자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만약 언론사 조직이 이렇게 남성 중심적이라면 이는 어떤 역사적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는가를 질문하고자 한다.

박용규는 일제하 여기자들의 언론활동과 미 군정기의 여성신문을 당시 여성운동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고 있다(박용규, 1997, 2002). 이러한 작업은 여성과 언론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 시각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여성과 미디어에 대한 언론사적 관심 및 여성들의 언론활동을 역사화함으로써 여성들을 역사의 당당한 주체로 복원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여성미디어의 역사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다는 한 언론사 연구에서 박용규의 작업은 여

16) 비즐리는 여성과 저널리즘을 연구하는 최근의 새로운 경향(family-oriented study)들을 다음의 세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전문적인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것도 고려한 여성들의 가족관계를 포함시키는 자서전 작업, 둘째, 젠더라인에 의한 저널리스트 네트워킹을 탐구하는 여성 저널리스트 연합에 대한 제도사 연구. 셋째, 여성 저널리스트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자신이 활동했던 시대적 맥락에 대한 그들 스스로의 규정을 귀를 기울이는 사회사(Beasley, 2001, p.208)

성사적 시각에서 본다면 보충사 및 공헌사적 연구로 이후 많은 후속 작업들의 밑거름이 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박용규의 연구는 기존 언론사 연구에서 미진했던 여성언론인과 여성미디어에 관한 이슈를 제기한 점이 주목된다. 연구자는 이러한 논의를 더 확장하여, 언론사 연구에서 여성관련 이슈를 끼워 넣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기존의 연구 관점 자체를 젠더사(gender history)적 시각에서 새롭게 봐야할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유선영은 두 편의 논문을 통해 한국 신문의 지배적 가치이자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객관주의가 어떠한 역사적 과정 속에서 구성되어왔는지를 추적하여 객관주의가 도구적 형식주의에 경도되어 있음을 비판하고(유선영, 1995), 이후 여성주의 입장에서 객관주의의 전제, 원칙, 보도기법들이 여성의 성과 육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도분야에서 어떻게 무의식적 남근성을 구체화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면서 객관주의의 시선이 남근중심주의에 기반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유선영, 1999). 유선영의 연구는 여성사적 관점에서 볼 때 기존 언론사에 관한 논의들이 포괄적인 여성사(women's history) 범주에서 논의되었던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명확한 여성주의 인식 하에 쓰여진(feminist history), 언론사를 여성주의 입장에서 새롭게 재구성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연구자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한국 신문의 역사가 형성되는데 있어 젠더가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는가를 드러냄으로써, 한국 신문의 남성 중심적 성격의 역사적 형성 과정을 추적하고자 한다.

제 2 장. 1950년대와 한국 신문

본 장에서는 연구시기인 1950년대의 구체적인 역사적 조건들을 추적하면서 그것이 당시 한국 신문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추적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사회구조적 수준의 역사적 조건들이 연구자의 관심영역인 저널리즘이라는 사회제도적 수준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작업이라 볼 수 있다. 1950년대가 한국 저널리즘이 새롭게 제도화되는 시점이었음을 인정한다면, 사회의 주요한 제도 중의 하나로 자신의 위치를 잡아가는 저널리즘 영역은 당시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사회구조적 조건 하에서 그 구체적 작업을 형성해 나갔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한국 신문의 성격을 규정한 1950년대의 구조적 조건들을 논의하면서 50년대라는 시대적 조건들에 저널리즘이 어떻게 조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1950년대가 한국 신문이 새롭게 제도화되는 시기임을 당시의 신문의 변화하는 환경과 새로운 출현하는 조직들을 통해서 논의하고 그러한 제도화의 요구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한국 신문의 남성적 재공간화의 역사적 조건들

1) 과대성장한 권위주의 국가, 신문의 과잉 정치화

① 신문에 대한 국가권력의 개입방식

한국사회에서는 자본가계급의 지배구조를 바탕으로 정치엘리트계층이 형성된 것이 아니라, 거꾸로 미군정과 동맹한 정치엘리트계층이 먼저 형성된 후 자본

주의적 생산관계를 조직할 자본가계급이 형성되었다(최장집, 1985, 34쪽; 김해식, 1994, 64쪽에서 재인용). 미국의 후원 하에 보수우익계 이승만 세력은 식민지 관료 엘리트와 결탁하여 국가기구를 장악하였는데, 국가기구의 물질적 기반이 된 것은 미국의 원조와 식민지 귀속재산이었다. 국가가 원조물자 및 대충자금을 관리하게 됨으로써 민간생산부문은 국가기구에 예속될 수밖에 없었고, 헤게모니의 창출은 자본가계급이 아닌 국가였다(임현진·백운선, 1987, 229~230쪽; 김해식, 1994, 64쪽에서 재인용). 이 시기 국가권력은 물질적 기반 이외에도 막강한 경찰 조직과 관료기구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었다.

헤게모니 창출자로서의 국가가 내세운 이데올로기는 반공이었다. 반공 이데올로기는 한국전쟁 이후의 분단 상황에서 국민의 일체감을 조성시키고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수렴하는 강력한 정치적 무기가 되었고, 자의적인 권력의 남용을 뒷받침하는 지배 이데올로기로 작용하였다. 반공이 최우선적 정치목표로 설정됨에 따라, 좌파는 물론이고 중간파 및 온건한 혁신세력까지도 정치활동이 용납되지 않았으며, 보수세력 간에 정권장악을 위한 갈등이 나타나게 되었다. 자유당과 민주당의 대립은 반공을 정치이념으로 삼는 보수세력 내부의 갈등이었던 것이다(최영석, 1989, 101~102쪽). 결국 당시 정치권력과 신문은 작은 것에 갈등을 보이면서도 분단체제의 정착이라는 큰 것에 공조하여 분단구조를 고착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이른바 야당지 역시 기본적으로 반공이데올로기에 기초한 보수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당시의 물질 토대의 제한성 때문에 신문사는 신문용지나 시설의 구입에서 국가가 관리하는 원조자금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야당지라 하더라도 ‘체제내적 비판지’ 또는 ‘반공지’라고 하는 테두리 내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김해식, 1994, 64쪽). 따라서 국가권력은 지속적으로 신문이 다룰 수 있는 내용에 한계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물론 신문의 정책면에 반영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당지 혹

은 여당적 지(기본상으로 여당을 지지하지만 가끔가다가 비판조 혹은 공정조를 가미하여야만 독자들의 호감을 사며 부수를 늘일 수 있는 것이고, 또 기대하던 원조가 시원치 않을 때 시위삼아 약간 중립적 논조를 떨 수 있는 신문)인 경우에는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당당히 중립지로서 공정을 표방하는 경우에는 고민 내지는 모순이 있을 수 있다. 언론인으로서의 양식과 독자들의 반응을 생각하여 가끔 여당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도를 지나치거나 한계를 넘어서서는 안되겠기 때문’이다. 때로는 여당을 지지하는 기사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어떤 중립지든 간혹 독자들로 하여금 어금니에 무엇이 끼인 듯한 감상을 줄 수도 있다. 모 일간지는 용자교섭을 순조롭게 추진시키기 위하여 편집진용을 교체시켰다가, 용자가 제대로 안되는 것을 보고 다시 날카로운 논조로 돌아감으로써 독자들을 당혹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박동운, 1960, 56쪽).

신문기업에 대한 국가권력의 개입방식은 신문관계 법률의 제정, 신문사의 정·폐간, 언론인에 대한 제재조치, 신문배포 방해, 신문사에 대한 테러, 신문구독 방해, 대통령의 담화를 통한 한계설정 등으로 매우 다양하였다(최영석, 1989, 100~101쪽). 아래는 국가권력의 개입방식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표로 정리한 것이다. 이 시기 국가권력은 경제적으로 산업화의 기틀이 마련되지 못한 시점에서 신문에 작용하는 가장 큰 외부적 통제 기제였음을 알 수 있다.

<표 2-1 > 신문관계 법률의 제정

시 기	법 안 명	경 과
1954. 12.	출판물에 관한 임시조치 법안	국무회의에서 통과 입법화 실패
1956. 11.	국정보호 임시조치 법안	입법화 실패
1958. 1.	민의원의원선거법안 참의원의원선거법안	1958. 1. 1 국회에서 통과 1958. 1. 25 공포 1960. 6. 23. 폐지
1958. 12.	국가보안법개정안	1958. 12. 24 국회에서 변칙통과

1958. 12. 26 공포
1960. 6. 10. 전문개정

출처: “1950년대 한국신문의 구조적 성격에 관한 연구”, 최영석, 1988,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65쪽

<표 2-2 > 언론인에 대한 제제 건수

연 도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계
구 속		4		13	3	3	23
연행, 소환	4	2	1	9	4	2	22
폭 행	1		3		4	2	10
기 타*				4		7	11
계	5	6	4	26	11	14	66

출처: <동아일보사사> 권 2, 1978; <문화경향사사>, 1976; <서울신문사십년사>, 1985; <조선일보60년사>, 1980; <한국일보 20년>, 1974; <한국신문발행인협회보>; 최준, <한국신문사>; <한국신문편집인협회보 30년사>, 1987, * 기타로 분류된 제제는 수배, 기소, 불구속 송치이다. “1950년대 한국신문의 구조적 성격에 관한 연구”, 최영석, 1988,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80쪽에서 재인용

<표 2-3 > 신문사의 정·폐간

신문명	시행일	이유	처분내용	적용법규
군산일보	1954. 11. 23	남북통일총선거 관련기사로	무기정간	공보부령 제 1 호
	1955. 1. 23		속간	
민중일보	1954. 12. 6	지속능력 없음	폐간	공보부령 제 1 호
경기일보	1954. 12. 16	”	”	”
대동신문	1954. 12. 16	”	”	”
동아일보	1955. 3. 17	대통령을 ‘괴뢰고위층’으로 오식	무기정간	군정법령 제 88호
	1955. 4. 18		속간	
전라신문	1955. 8. 16	지속능력 없음	폐간	공보부령 제 1 호
전주일보	1955. 8. 16	”	”	”
전주신보	1955. 8. 16	”	”	”

한국일일신문	1956. 3. 22	불명	”	”
강릉일보	1957. 7. 19	지속능력 없음	”	”
경향신문	1959. 4. 30	2월 4일자 ‘여적’ 등 5개 이유로	폐간	군정법령 제 88호
	1959. 6. 26	법원이 폐간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자 다시 무기정간시킴	무기정간	”

출처: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연감> 1968, 592쪽, “1950년대 한국신문의 구조적 성격에 관한 연구”, 최영석, 1988,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72쪽에서 재인용

<표 2-4 > 대통령의 담화를 통한 한계설정

날 짜	제 목	내 용
1954. 10. 14	이승만 담화 ‘신문을 정비하고 한글을 전용하자’	“내가 이왕에도 이것을 설명한 바 있지만 서울 인구에 비교하면 2내지 3종의 상당한 신문이 있어야 그 신문을 사보는 사람의 수요가 상당하여 신문이 계속 발전될 수 있으니, 각 신문계에서 주장하여 모든 신문 주권자가 함께 모여 자기들이 몇 신문만 두고 나머지는 정지하거나 또는 합칠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면 정당한 순조로 될 것이고 만일 그렇지 않으면 민간의 모든 지도자가 모여서 협의하여 자기들끼리 작성하며 몇몇 신문만을 지정하고 지지할 수 있고 또 더 공평히 하려면 시내 시외에 모든 사람에게 투표를 받아 종합하여 제일 많이 투표받은 신문을 공포하고 그 외에는 모든 민중에게 권고하여 이 몇 가지 외에는 다른 신문을 잡지 못하게 되어야 나라가 정당하고 민중이 볼 신문이 되고 각국이 중요시할 언론이 될 수 있는 것이다.”
1954. 10. 20	이승만 담화 ‘권위있고 지지받는 신문이 되라’	“그러므로 타국에서는 신문을 하는 사람들이 그 도시에 인구가 얼마나 되는 것을 알아 그 비례로 신문 수를 작성하여 그 비례에 상당할 만큼 수요가 되어야 신문이 수입으로써 신문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신문내는 사람들은 이런 원칙은 생각지도 않고 그저 각기 신문 하나씩을 박아내면 언론이 되는 것으로 치고 있어서 종이와 먹과 시간은 물론 경비를 많이 허비하여 내는 것이나.....”
1956. 9. 17	이승만 기자회견	“기자들 조심해! 특히 경향, 동아의 기자들 말이야! 경향이나 동아에 대해서는 다 내 복안이 있어. 나중에 원망하지 말어. 그래 언제 인심이 정부에서 이사되었단 말이야. 증거를 대. 구체적으로 있는 얘기 없는 얘기 써대니 그것은 공산당 방식이야”

출처: “1950년대 한국신문의 구조적 성격에 관한 연구”, 최영석, 1988,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90-92쪽을 참고하여 재구성

<표 2- 5> 신문배포 방해, 신문구독 방해, 신문사에 대한 테러

구 분	일 자	내 용	결 과
신 문 배 포 방 해	1955. 9. 6	동아일보 독자투고란 “조류”에 ‘노조는 중간착취기관’이라는 내용	대한노총 소속 철도노조간부와 경전노조 간부들이 신문의 지방발송 방해
	1956. 4.	제 3대 정부통령선거 관련 내용	· 자유민보: 아산, 진주 방면으로 발송 도중 경찰에 의해 반송 · 동아일보, 조선일보: 발송도중 차내에서 절취
	1958. 5.	제 4대 민의원선거 ‘예천지구 참관인 피습 개표 공표 속에 진행’ 기사	경향신문 예천행 조간 묶음 행방불명
신 문 구 독 방 해	1956. 4.	신문 구독 방해 내용	· 합천: 경찰이 동아일보 구독자 조사 · 경남의 일부 면: 면장, 지서장 등이 야당지를 보지 말 것을 강요. 공문을 통해 정부기관지 구독할 것을 권유 · 충남 서산: 동아일보, 경향신문, 중도 일보 각 지국의 독자 명부 및 업무서류 도난
	1957. 3.	신문 구독 방해 내용	· 전남 함평경찰서 관하: 경향신문 독자 명단 제출 요구 · 7월 제주경찰서 관하: 야당지만 보면 주목받는다면 신문구독 방해
신문사에 대한 테러	1955. 9. 14	대구매일신문 ‘학도를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 사설	주필 최석채 구속 신문사 습격, 인쇄기재와 통신시설 파괴 지방 발송 준비중이던 신문물치 탈취

출처: “1950년대 한국신문의 구조적 성격에 관한 연구”, 최영석, 1988,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86-89쪽을 참고하여 재구성

이상과 같은 언론에 대한 국가의 개입방식을 통해 1950년대 이승만 통치의
시기는 국가권력이 과도하게 영향을 발휘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전후 복구의
과정에서 미국의 후원을 등에 업고 반공이데올로기를 지배 이데올로기로 내세우
면서 경찰조직과 관료조직을 장악함으로써 헤게모니 창출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가권력이 가장 강력한 헤게모니 창출자가 되다보니, 여타의 부문들은
국가기구에 예속될 수밖에 없었고 당시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시대를 지
배하는 새로운 사상으로 등장하지만 이는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정치사회는 여전히 미성숙한 상태로 있었다. 그래서 1950년대 이승만 통치의 시기는 권위주의와 민주주의의 두 특징 사이를 줄다리기한 시기였다. 따라서 제도와 지향, 가치로서의 민주주의와 관행과 문화, 현실로서의 권위주의 사이의 구조적 불일치와 충돌이 항상적 긴장을 불러일으킨 시기가 50년대의 특징이었다.

한배호는 로버트 레빈의 권위주의 정치체제의 특징을 인용하면서 50년대 한국사회의 정치적 유산이 권위주의적 정치문화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한배호, 1981, 132~134쪽). 따라서 해방 이후 미군정기를 거쳐 서구 정치제도를 이식해 왔지만 그러한 제도의 '제도화' 과정이 의도와는 판판의 결과를 초래했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승만의 고집으로 채택되었던 미국식 대통령책임제는 그 본질을 완전히 상실한 변종으로 발달해버렸는데, 첫째 대통령의 우월성이 확립되어 국회의 입법권마저도 대통령에 의해서 굽혀질 수 있었으며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국회가 대통령에 종속된 형태였다. 이와 같이 국회를 종속케 하는데 대통령은 의석의 다수를 차지했던 자유당을 수중에 넣고 있었으며 그런 의미에서 이승만을 중심으로 그 주위의 국회의원 사이에는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가 성립했으며, 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정당이 아니라 도당(徒黨)적 성격이 강했다. 이러한 성격은 당시 신문이 이승만을 '국부'로 칭하는 데서도 엿볼 수 있었다.

둘째 당시 한국 사회 여러 제도의 비민주적 성격으로 인해 선거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루어질 수 없었고 '지도'되었던 측면을 들 수 있다.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농민의 경우 문맹자가 압도적인데서 투표용지의 의미(즉 그것이 가지고 있는 힘)를 이해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러한 농민층은 선거 시 선동과 대중조작의 초점이 되었다. 이러한 변질된 대통령체제는 이승만의 독재화를 초래하였고 실질적인 의미에서 1인 정치가 출현하였다. 수차에 걸쳐 있었던 정치파동이 한결같이 국회 내의 여당의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는 양상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렇듯 전쟁 이후 미국의 원조를 등에 업은 정부는 이승만을 정점으로 하는

국가관료, 자유당 정치계급, 자본가와의 정치적 지배연합을 형성하여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시민사회의 조직화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였다. 당시 미국의 원조와 강압적 물리력은 과대 성장된 권위주의 국가를 유지하는 비용의 하나였고, 종속계급에게는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지형을 매우 어렵게 만들어 정치사회의 저발전을 초래하였으며(박명림, 1998, 101쪽), 이러한 시대적 조건 속에 당시 신문은 정치권력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신문의 과잉 정치화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당시 신문에 대한 사회적 논의들은 신문이 이러한 권위주의 국가 권력에 강력하게 저항하면서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지사적 신문이 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지사적 신문을 지배적으로 담론화하면서 당시 신문은 지사적 주체로서 스스로의 위치를 설정하고, 사실보도를 통해 정보와 뉴스를 전달하는 신문의 역할보다는 정치 논평을 통해 품격과 위신을 지키는 논객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공적 영역을 심판하는 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② <경향신문> 폐간사건

1959년 4월 30일 정부의 <경향신문> 폐간 조치는 언론사에 있어서도 일대 사건이었지만, 정치적 측면에서도 자유당 정권의 몰락을 예고한 사건이라 볼 수 있다. 또한 경향의 폐간 사건을 통해 50년대 국가의 언론 통제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났는지와 이에 대처한 신문계의 저항을 통해 당시 정부와 언론과의 관계를 집약적으로 통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당시 <경향신문>은 20만부를 발행하는 발행부수 2위의 신문이었다¹⁷⁾. 이승만 대통령은 1959년 새해를 맞이하자 <시카고 데일리 뉴스>의 기자와의 회견을 통해 4대 대통령 선거에 다시 출마할 뜻을 밝혔다. 그는 이어 국내 기자단과 만

17) 당시 <동아일보>는 35만부, <한국일보> 16만부, <조선일보> 10만부 정도로 추정된다.

난 자리에서도 재출마의 뜻을 밝혔다. 정부는 1월 31일 공보실장에 새로 전성천을 임명하고, 2월 3일에는 <서울신문> 사장으로 자유당 강경파 의원인 손도심을 임명하였다. 이 무렵 <경향신문>은 그 어느 신문보다도 앞장서 이승만 정권을 비난 공격하였다¹⁸⁾. 특히 경향은 가톨릭계 신문으로서 천주교도인 장면 부통령을 지지했으며, 장 부통령이 경찰 조종을 받은 청년에 의해 저격을 당한 진상이 밝혀지자, 이승만 정권의 부정부패를 더욱 날카롭게 공격하였다(오소백, 1968, 258쪽). 따라서 이승만 정권에 있어서 <경향신문>은 편치 않은 존재였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이러던 중 <경향신문>은 몇 건의 기사 내용으로 문제가 되었다. 첫째는 1959년 1월 11일자 '정부와 여당의 지리멸렬상'이란 사실과 둘째는 2월 3일자 여적(餘滴)란의 '다수의 횡포'라는 칼럼, 셋째는 '사단장이 기름 팔아먹고'라는 사회면 기사, 넷째는 이대통령의 기자회견 기사 중의 오보, 다섯째는 '간첩 하모(河某)를 체포' 등인데 이 다섯 가지 기사를 문제삼아 이승만 정권은 1959년 4월 30일 <경향신문>을 폐간시켰다.

정부는 폐간 명령을 내리면서 “공산당의 흉계를 분쇄하기 위하여” 또는 “국가의 안전과 보다 올바른 언론계의 발전을 위하여”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당시 폐간 이유뿐만 아니라 이를 적용한 법률도 사회적으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적용 법률은 미군정이 당시 남로당계의 신문을 탄압하기 위해 특별히 제정한 '미군정 법령 88호'였다. 독립된 대한민국의 정부에서 반공지이자 가톨릭계 신문인 <경향신문>을 폐간시키는 근거로 그 법령을 이용했다는 것은 당시 자유당 정권의 정략적 보복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송건호, 1990, 119쪽)¹⁹⁾.

18) 한 조사에 의하면, 당시 4대 신문인 동아, 경향, 조선, 한국일보의 사실 내용의 압도적 다수가 정부에 대한 반대, 비난, 부정으로 일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가운데서도 경향의 경우 91개 사실문 가운데 62개(68.1%)가 반대내용이요, 28개(30.8%)가 희망·기대 또는 회피를 내용으로 한 이른바 중립적 입장을 취한 것이요, 단 1건만이 찬의를 표시한 내용의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 통계가 단적으로 보여주듯이 확실히 자유당 정부에 대해서 가장 도전적이지요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는 신문이 경향이었음을 알 수 있다(최준, 1965, 107쪽).

<경향신문>은 정부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판단 아래 정부측을 상대로 발행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냈다. 6월 26일 서울고법 특별1부 재판장 홍일원은 <경향신문>에 승소 결정을 내렸고, 자유당 정권은 홍일원의 동생과 처가 식구 등 친인척들이 운영하던 회사와 공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사찰을 함으로써 보복 행위라 비난받았다.

정부는 <경향신문> 승소 결정이 내려진 지 불과 몇 시간 뒤인 오후 6시 예정에 없던 국무회의를 긴급 소집해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발행허가 취소처분을 철회하는 대신 동 신문의 발행을 무기정지 처분한다”는 대응책을 발표했다. <경향신문>은 이에 불복하여 또 한차례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냈으나 이는 다른 재판부에 배당돼 '이유없다'며 기각됐다. 결국 <경향신문>은 '폐간 57일, 하루 발행, 정간'으로 이어지는 우여곡절 끝에 1년 만인 60년 4월 26일, 4·19가 나고 이 승만이 해야한 다음 날 신문을 복간했다(박내용, 1993. 10. 6, 강준만, 2004, 250쪽에서 재인용).

정부의 <경향신문> 폐간 조치에 대해 5월 8일 염상섭, 김팔봉 마해송, 정비석, 박두진 등 33인이 연명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폐간 조치의 철회를 요구하였다. 또 6월 9일, <편협>은 임시총회를 열고 미군정 법령 88호의 폐지와 <경향신문> 폐간의 취소를 위해 연판운동을 벌일 것을 결의하였다. 이와 같은 각계의 반대운동에 대해 <서울신문>은 경향의 폐간은 '자유의 포기가 아니라 자유의 옹호'라고 정부의 폐간 조치를 지지하였고 <편협>의 연판장운동을 협회가 사적 이용물이 되었다고 비난하였다. 하지만 동아, 한국, 조선은 연일 사설을 통해 정부의 폐간 조치가 언론 자유를 말살하고자 하는 치명적인 언론 탄압임을 주장하였

19) 당시 이승만의 나이가 84세에 달하고 있고 대통령의 유고시는 부통령이 그 뒤를 계승기로 되어 있었으므로 1960년 봄에 실시될 제4대 정부통령 선거에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기봉을 부통령으로 당선시켜야 하였기 때문이다. 195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당은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여 대통령의 유고시 부통령이 그 자리를 계승한다는 헌법 조문을 삭제하는 개헌을 하고자 하였으나 그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1960년 정부통령 선거에서 이기봉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고자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자유당 정권이 <경향신문>을 폐간시킨 것도 1960년 봄 선거에서 장면을 낙선시키고자 하는 일종의 준비공작이었다(송건호, 1990, 119쪽).

다. 그리하여 6월 13일에는 ‘언론자유수호운동국민대회’가 열려 정부의 처사를 규탄하고 미군정 법령 88호 무효를 주장하였다(송건호, 1990, 120~121쪽).

<경향신문> 폐간 사건이 시사하듯이, 당시 신문들은 정당지의 성격이 매우 강했다. 이는 신문의 인적 구성에서도 드러나는데, 문제의 ‘여적(餘滴)’ 칼럼을 쓴 주요한만 하더라도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이자 민주당 선전부장이면서 <경향신문> 논설위원을 겸하고 있었다. 그는 장면이 이끄는 민주당 신파의 핵심 멤버 중 한명이기도 하였다. 장면도 <경향신문>의 고문을 맡았는데 당시는 이러한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상우는 이승만 정권 치하의 신문들이 정론성을 전면에 내세울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첫째, 상업주의의 출발이 일천했기 때문, 둘째, 한국 신문의 정론성이 뿌리깊은 전통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 셋째, 권력이 이미 국민으로부터 유리되어 대중의 관심과 기호가 반정부에 있었다는 점을 들면서, 이 무렵 신문의 강한 정론성은 그대로 독자에 영합할 수 있었고 이것은 또다른 의미에서의 상업성과 일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한다(김해식, 1994, 74에서 재인용). 이는 곧 당시 신문의 판매부수가 도시중심으로 한정되어 있었고, 당시 자본주의 성장이 미천하여 신문의 광고수입 비중이 미미했다는 지적과도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당시 한국 신문계에 있어 ‘잘 팔리는 신문’이 되기 위해서는 ‘야당정신’에 입각하여 정부를 신랄하게 공격해야만 했고, 폐간의 빌미를 제공한 <경향신문>의 정부비판성 글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경향신문> 폐간사건은 ‘언론자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이와 함께 국가권력의 언론 통제를 가시적으로 드러냄으로써 결국 이승만 정권의 몰락을 가져오는 시발점이 되었다. 당시 한국 신문이 자유당 정치계급들과 끊임없이 갈등한 것은 이러한 당시 시대상황과 맞닿아 있다. 1950년대 최초로 미국무성 초청 언론연수를 다녀온 젊은 신문인 집단은 미국 사회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몸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에 강하게

이끌렸으며, 무엇보다 이를 당시 신문의 후진성을 극복하고 새롭게 시스템을 개혁하는 제도화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인권이나 사생활, 명예 훼손 등이 중요하게 제기되었으며 무엇보다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토대로서 언론 자유를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2) 자본의 규정력 미흡, 신문 기업의 적자 경영

해방 후 한국은 구미에서 민주주의적인 정치제도와 함께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도입했으나 이를 제대로 시행해 보지도 못한 채 분단 상황을 맞게 되었다. 분단은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자연자원, 시장, 노동력이 분할됨으로써 생산력이 크게 위축되었다. 나아가 분단 상황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생산력이 크게 축소·정체됨으로써 내부의 경제적 위기를 외부에 의존하게 되었다.

전쟁으로 인해 국민경제가 완전히 파괴된 후, 전후 한국 사회 복구 작업은 막대한 원조에 힘입어 추진되었지만, 생산의 성장을 위한 내부적 조건이 극히 취약한 상황 속에서 자본의 본원적 축적이 외부자본과 원조와 같은 외부로부터의 충당에 의존해, 비자립적 경제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장하진, 1985, 230~231쪽).

50년대 한국 자본주의의 성격은 한국전쟁을 통해 많은 생산시설이 파괴되어 생산활동이 매우 위축된 것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에 막대한 경제원조를 제공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선진 자본주의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의 재편과정에서 당면한 시장문제의 곤란을 극복하려는 노력 가운데 하나였다. 미국의 대한경제원조는 미국의 전체 원조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것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매우 큰 것이었다. 즉 1950년대 한국경제는 미국의 막대한 경제원조에 의해 공업화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자본을 축적하였다.

미국의 경제원조는 소비재 및 원자재 중심으로 제공되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의 공업은 소비재공업 중심의 파행적인 구조를 갖게 되었다. 즉 50년대 한국의 공업화는 한국 자본주의의 확대재생산을 가능케 하는 기계제 대공업을 전산업범위에 걸쳐 확립시키는 과정이 되지 못하였고, 삼백산업이라 불리는 제당, 제분, 섬유공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김대환, 1981).

이 시기에 원조를 관리한 것은 국가였으며, 원조물자의 판매를 통해 형성된 대충자금은 한국정부의 재정수입으로 들어가 국방비 및 경제부흥비로 사용되기도 하고 산업은행 등의 용자기금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국가가 원조물자의 분배와 대충자금의 용자를 관리하였으므로 국가권력과 유착된 자들만이 자본을 축적할 수 있었다. 따라서 1950년대 한국 자본주의는 관료독점자본제의 특징을 갖는다. 국가권력과 유착을 통하여 형성된 50년대의 독점자본은 부분적으로는 산업자본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원조물자의 가공판매, 인플레이 하에서의 금리차, 특혜 등 이윤의 대부분을 유통과정에서 형성하고 있었다.

1955년 당시 노동자 계급은 경제활동인구의 10%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며, 농민이 대다수를 점하고 있었다. 노동자계급의 성장이 미약하였으므로, 노동자본간의 대립은 이 시기에 있어 첨예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연구자의 관심시기인 1950년대 한국 신문기업의 물질적 토대 또한 당시 한국 자본주의의 위와 같은 특성들을 노정하고 있었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신문기업의 소유주 가운데 상당수는 국가에 의한 원조자금의 특혜용자로 자본을 축적한 자들이었으며, 이들 신문기업들은 신문용지의 구입비용과 윤전기 등 시설 구입비용을 원조자금에 의존하고 있었다. 또한 이 시기 한국사회의 자본축적은 생산과정에서의 잉여가치를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지기 보다는 유통부문에서의 이윤획득에 기초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상업자본적 성격을 지닌 자본이 신문기업의 주요한 광고주를 이루고 있었다. 이 시기 노동력의 착취에 기초하여 확대재생

산을 수행하는 산업자본의 형성은 상대적으로 미약했고, 이들이 광고주로서 신문 기업과 맺고 있는 관계는 느슨한 것이었으므로, 이 시기 한국 신문기업에 대한 산업자본의 규정력은 약하였다(최영석, 1988, 61~63쪽).

1950년대 한국 신문의 발전정도를 기술적인 면, 시설 면, 보급상태 등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전히 초창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당시 신문의 성립을 사회구조와 생산기술 그리고 교통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살펴봤을 때, 한국 신문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특히 생산기술의 후진성 및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과학의 발달이 미비하고 신문을 구매할 수 있는 경제력의 배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민전반의 교육수준 또한 여전히 낮은 상태이며 신문의 반포를 용이케 할 수 있는 교통시설 등 제반여건이 허락되지 않았다. 물론 당시 한국은 민주사회의 건설에 기초가 되는 여론의 표현기관으로서 많은 신문의 발간이 요청되었으나 이러한 정치적 여건만으로는 신문이 순조롭게 성장할 수 없었다.

광복 후 한국 사회에 국민교육은 놀랄 만큼 보급되었으나 그들이 아직 신문을 구매하는 경제권을 장악하지는 못하였고 여전히 빈농이 인구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었으며 신문은 대체로 도시 중심을 면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 하나 신문의 판매부수와 광고량의 감소와 증대는 신문의 존립과 발전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는데, 광복 후 한국전쟁 등으로 파멸된 경제상태는 신문의 성장발전을 결정적으로 저지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신문이 독립된 자유로운 신문으로 국민의 대변자로서 임무를 다할 수 있는 것은 경제적 자립이 전제될 때 가능한 것인데, 당시 한국의 신문계는 신문의 발행부수를 확장하는 것 보다 현상유지가 오히려 어려운 곤경에 놓여있었다(곽복산, 1959, 106~108쪽).

50년대 한국 신문 기업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1950년대 한국사회에서 발행되었던 일간신문의 수는 약 40여개로 커다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었다. 이것은 정부가 1952년 이래 일간신문의 신규발행을 억제해왔기 때문이었다. 이 가운데 서울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은 16개로 전

체 일간신문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당시 신문의 발행부수는 숫자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알기는 어렵지만 공식적으로 한국 신문의 총 발행부수는 110만 내지 120만으로 개산되고 있다. 이것은 인구 1000명당 53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숫자는 미국에서의 256부 영국에서의 609부와 비교된다. 총 부수의 약 반수는 서울의 5개지와 부산의 2개지 등 비교적 발전되어있는 대도시 신문이 차지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이 7대 신문²⁰⁾은 상호 경쟁이 치열했다(<신문연구>, 1961, 92쪽²¹⁾).

1957년 8월 현재 서울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16개 가운데 3개는 외국어 신문이고 3개는 경제신문이었다. 외국어 신문으로는 영자신문인 <코리아 타임스>와 <코리안 리퍼브릭>, 중국어 신문인 <중화시보>가 있었고 경제신문으로는 <산업경제신문>, <상공일보>, <한국경제신문>이 있었다. 나머지 10개의 일간신문은 <경향신문>, <국도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연합신문>, <자유신문>, <조선일보>, <평화신문>, <한국일보> 등 이었다(<편집보>, 1957.8.13, 3면).

<표 2-6> 1957년 현재 5대 일간지 현황

5대일간지	창간년월 및 창간인	발행인	편집책임자	발행부수	발행형태
동아일보	1920년 4월 김성수 창간	국태일	고재욱	30만부	석간
경향신문	1946년 10월 6일 양기섭 신부 창간	한창우	오종식	12만 ~ 15만부	조,석간
한국일보	1954년 6월 9일 장기영 창간	장기영	임창수	8만 ~ 10만부	조간
조선일보	1920년 3월 5일	방일영	홍종인	8만 ~ 10만부	조,석간

20) 경향신문, 동아일보, 한국일보, 조선일보, 서울신문, 부산일보, 국제신문

21) 한국신문편집인협회가 유엔에 보낸 보고서전문 “4·19전의 한국 언론(1954-1960)”

예종석 창간					
서울신문	1945년 1월 23일 오세창 창간 (1938년 1월 20일 전신 매일신보 창간)	김형근 (전 내무부장관)	고재경	6만 5천 ~ 8만 5천부	석간
출처: <편협보>, 1957. 10. 29, 2면					

50년대 중앙일간신문기업의 형태, 소유주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2-7> 1950년대 10대 중앙일간신문기업의 소유주 특성

중앙일간지	중앙일간신문기업의 소유주 특성
경향신문	- 천주교 서울교구유지재단이 설립, 경영. - 소유주는 천주교 신자로, 경향신문의 고문이던 민주장 신파의 지도자 장면을 지지하는 배경이 됨.
동아일보	- 1955년까지 소유주였던 김성수는 일제말기에 부일협력단체의 일원으로 활약. - 해방 이후 미군정의 행정고문으로 발탁, 행정고문회의 위원장을 지냄. - 부일협력자, 지주, 온건파 민족주의자 등 보수우파 진영의 결집체로 조직된 한국민주당 창당의 중심인물로 활약. - 이후, 한국민주당 당수, 반탁독립투쟁위원회 부위원장, 제2대 부통령 등을 지냄. - 김성수 사후 1995년 9월에 민주당 창당, 김성수는 민주당 구파의 뿌리를 형성시킨 인물임. - 이러한 김성수의 정치적 성향은 동아일보가 민주당 구파를 지지하는 논조를 띄게 되는 배경이 됨.
조선일보	- 한국전쟁 중 납북된 방응모는 일제시대에 광산 경영으로 돈을 벌었고, 1933년 <조선일보>를 인수. - 방응모는 일제시대 여러 부일협력단체에 소속되어 활동, 해방 이후 한때 김구를 지도자로 하는 한국독립당의 재정부장을 맡기도 하였음.
한국일보	- 소유주인 장기영은 1948년 한국은행 조사부장과 부총재를 역임. - 1952년 납북된 조선일보의 방응모 사장을 대신하여 조선일보 사장에 취임하였고, 1954년 6월 한국일보를 창간.
서울신문	- 서울신문 주식 중 48.4% 정부소유의 귀속재산이었음. - 미 군정기간에 좌익을 옹호하는 논조를 펴며 따라 1949년 5월 3일 군정법령88호에 의거 발행정지처분, 차후 복간됨과 동시에 사실상 정부의 기관지가 됨. - 서울신문사 주주총회와 간부선출은 공보처의 직접적 지배를 받았음. - 52년 4월부터 서울신문사의 취체역은 공보처장이 역임, 서울신문사의 사장은 이승만의 측근인사들 가운데서 선출됨.
국도신문	- 사장 김장성은 자유당의 핵심당원으로 자유당 중앙당부 외무차장, 재정부차장, 총무부차장, 선전부차장 등을 역임. - 이러한 정치적 성향은 국도신문에 반영되어, 국도신문은 사시를 '자유당 여당지 역할 및 반공투쟁지'로 내걸고 신문을 발행하게 됨.

세계일보	- 사장 공진환은 해방 전 만몽주식회사, 개성주조주식회사를 운영, 한국전쟁 기간 중에 농림부장관을 지냄.
연합신문사 / 자유신문사 / 평화신문사	- <연합신문사> 사장 김성곤, <자유신문사> 사장 백남일, <평화신문사> 사장 홍찬 모두 이승만 정권으로부터 원조자금을 특혜배정 받아 기업을 성장시킨 기업가(김성곤은 금성방직, 고려화재보험, 동양통신탄 소유, 백남일은 태창방직, 태창물산 소유, 홍찬은 수도극장 소유). - 이 시기 한국경제는 미국원조에 의존도가 매우 높았으며, 1950년대 재벌 형성은 원조자금의 특혜적 배정과 특혜금융 등을 통해 이뤄졌다. 이런 사회적 배경 하에서 이들은 원조자금의 배정에 대한 대가로 자유당에 정치자금을 상납한 바 있고, 김성곤은 1958년 제4대 민의원선거에 자유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
출처: “1950년대 한국신문의 구조적 성격에 관한 연구”, 최영석, 1988,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52~55쪽 내용의 재구성	

이 시기 신문계는 신문의 발행부수를 확장하는 것 보다 현상유지가 오히려 어려운 곤경에 놓여있었다. 당시 신문기업이 수지균형을 유지하려면 적어도 5,6만부는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 전에 도달되는 신문이 불과 6,7개 신문을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곽복산, 1959, 108쪽).

통신사는 54년에 16개의 통신사에서 55년에는 1개사가 줄었으며 그 후 14개사가 존속했다. 그 중 4개 통신사²²⁾는 외국통신사와 계약을 맺고 보도 논평 및 특집기사 그리고 사진 등을 전국의 신문사에게 제공하고 있었다.

당시의 일간지는 대부분 자본의 제약과 경비의 부족으로 독자적인 취재망을 갖고 있지 못했다. 해외에 통신망을 가지고 있는 신문은 하나도 없었고 외국통신사가 외신을 독점제공하고 있었다. 그래서 외국통신사와 이중계약을 할 정도로 외신제공을 둘러싼 경쟁이 매우 심각했다. 외신은 물론 내신까지 통신기사를 이용하던 경향은 한국전쟁을 전후하는 시기까지 계속되어 이 시기를 흔히 “통신 전성시대”라고까지 했다. 특히 내신의 경우 통신사가 제공하는 다소 빈약했음에도 불구하고, 50년대까지는 신문사의 자체 취재역량 부족으로 인해 통신사가 제공하는 기사를 많이 전재했다(박용규, 2000, 159~164쪽). 하지만 국내통신망도 겨우 대도시시간에만 포진되어 있어 기사내용이 신문이 아니라 구문이 되는 수가 많

22) 합동통신=AP, INS, AFP, 동양통신=UP, 세계통신=로이터, 동화통신=AP(역자주= 및 AFP)

았다. 예정기사가 성행했고 실지답사를 하지 않는 탁상기사가 많은 것도 주로 통
신망을 독자적으로 갖고 있지 못하는 데서 기인했다. 따라서 당시는 오신, 오보
의 게재가 일상적인 다반사가 되어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신상초, 1955, 118쪽).

이 시기 중앙일간신문기업의 자본규모와 종업원 수를 통해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가를 파악할 수 있다. 1955년에 신설된 제조업의 평균 자본금액수가 약
1,350만원인데, 당시 신문기업의 대부분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자본규모를 지니
고 있었다. 이로부터 50년대 중앙일간신문기업의 자본규모가 대기업의 수준까지
는 미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최영석, 1988, 32~33쪽).

한편, 중앙일간신문기업 종업원 수를 살펴보면, 경향신문과 서울신문이 200
인 이상의 종업원 수를 가지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종업원 수 200인이 이 시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구분하는 기준이 되었으므로(김영모, 1981, 258쪽), 경향신
문과 서울신문은 종업원 수에 있어서 대기업의 수준에 올라 있었다고 할 수 있
다. 종업원 수 150인 이상을 소유하고 있던 동아일보, 조선일보, 평화신문, 한국
일보도 1956년 기준 종업원 수 150인 이상의 사업체수의 비율이 3.3%였던 것에
비추어본다면(보건사회부, 1959, 424~425쪽), 비교적 큰 규모를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신문용지와 인쇄시설 부문에 있어서, 50년대는 신문용지가 매우 부족한 실정
이었고, 신문용지의 부족은 신문기업의 생산 활동에 중대한 장애요인이었다. 50
년대 말까지 신문용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제지공장은 <고려제지주식
회사> 하나뿐이었다. 1956년도 신문용지소비량 가운데 국산 용지소비량이 차지
하는 비율이 30%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70%는 외국산 용지의 수입으로 충당하였
다.

1955년 정부는 이러한 신문용지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고려제지>, <삼풍제
지>, <대한제지>에 원조자금을 배정하였다. 원조자금의 투입으로 신문용지의 생
산능력이 증가함으로써, 1959년 신문용지소비량 가운데 국산용지 소비량이 차지

하는 비율이 66%로 증가하였다(최영석, 1988, 34~35쪽).

외국산 신문용지의 수입에는 ICA(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자금이 배정되었다. 58년 현재 국내 일간신문의 월간 용지소용량은 약 1300톤으로서 수입을 요하는 용지량이 약 900톤으로 추산되어왔는데 57년 이전까지 배정된 자금은 2, 3개사를 제외하고는 실수요자가 아닌 중간상인과 고리업체자에게 할당되었다. 그런데 57년 후반부터는 신문용지구매자금의 할당을 신문발행인협회가 담당하게 됨으로써 실수요자인 신문사가 직접 외국산신문용지를 구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종전의 절반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편집보> 1958. 8. 13, 1면). 이 시기 각 신문사의 용지구입비는 신문생산비용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최영석, 1988, 36쪽).

각 신문사의 인쇄시설은 신문의 발행가능부수를 좌우하는데, 이 시기 중앙일간지들은 자체 인쇄시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경향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가 인쇄능력이 앞섰다. 고속도 윤전기는 16면을 발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고, 반고속도윤전기는 8면을 발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다. 동아일보는 1959년에 시간당 인쇄능력 10만부의 독일제 알버트 윤전기를 증설하였는데, 이는 ICA 원조자금 8만 5천 달러를 배정받아 구입한 것이었다(최영석, 1988, 36~38쪽).

신문의 증면은 광고수입의 증대와 신문기업의 확장을 의미한다. 각 신문기업의 증면시기에는 차이가 있으나, 이 시기 신문의 증면은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1955년 1월에 각 신문들은 2면에서 4면으로 증면되었고(곽복산, 1955, 46쪽), 1958년 후반에는 6면으로 증면되었고 59년 전반기에 이르러 조석간 8면을 발행하였다. 하지만 1959년 당년도 겨우 수개 신문사에 의해 조석간제가 실시되었고 몇몇 신문에 의해 8면제가 강행되었으나 경향각지에 산재한 대부분의 신문은 4면제도 현상유지가 극히 곤란한 형편에 처해 있었다. 또한 발행부수에 있어서도 흑이 한두 신문이 10만내지 30만부를 호칭하고 있으나 여타의 신문들은 대

부분이 2,3만부의 유지조차 어려운 실정에 있었다(곽복산, 1959, 107쪽).

한편 1950년대 신문기업의 전체 수입 가운데 광고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30% 정도였다. 다시 말해, 이 시기의 신문사는 신문판매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리고 50년대 신문광고 지면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영화광고와 약품 광고였다(약 60% 이상). 이 시기 산업자본으로 분류할 수 있는 항목은 국산의약품, 주류, 식료품, 화장품, 의류섬유품, 가정기구 등인데 이들 자본에 의한 광고게재량은 30%에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50년대의 신문기업에 대한 자본의 규정력은 미약하였다고 할 수 있다.

50년대의 신문은 사기업적 속성이 보이고 상업화의 현상도 부분적으로 나타나지만 시설규모나 수입구조면에서 자본주의적 기업으로서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 이 시기에 나타난 기업적 속성이 60년대로 넘어가면서 정부의 물량적 특혜조치로 그 물질 기반을 확보하게 되고, 경제의 자본주의적 발전의 진전에 따라 광고수입도 증가하게 되어 비로소 자본주의적 기업으로서 정착하게 된다(커뮤니케이션발전연구회, 1987, 40~41쪽).

신문에 대한 자본의 규정력이 미흡하다는 것은 당시 신문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기업적 인식이 부족했다는 것을 말한다. 당시 논의들 중에서 한국 신문계가 산업적 측면에서 아직 성숙하지 못한 단계에 있음을 지적하는 논의들이 눈에 띈다. 당시 중앙과 지방 일간지를 통틀어 볼 때, 30여개의 일간지가 발행되고 있는데 그 중 신문경영만으로서 겨우 독립재산을 세워나가는 신문이란 불과 3~4개밖에 되지 않았으며 30여종의 일간지의 발행부수 도합이 불과 50여만 밖에 되지 못한다는 사실은 당시 한국 신문계가 '기업집중 자본집중 이전의 후진성'을 뚜렷이 내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신상초, 1955, 117쪽). 이 당시의 신문경영은 '정치 놀음의 한낱 수단'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다반사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찌널리즘의 입장으로 보아서는 완전히 사도'였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여 사회적 우려의 대상이 되었다.

당시는 또한 신문의 영리주의를 옳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건전한 영리주의’와 ‘엄격한 독립재산제’를 채택하여 신문자본의 축적과 그 독립적 주체성을 확립해주고 나아가서는 한국의 저널리즘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자각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지 못했다.

한편, 당시 한국사회에서 신문과 신문기자가 너무 많다는 시비가 있었지만, 이것은 숫자상의 과다를 지적하기보다는 신문의 질적 빈약에 논란의 초점이 있었다. 이러한 질적 저하는 당시의 신문업자들이 신문계가 공존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공동보조를 취해 신문의 공동이익을 옹호하고 신문의 사회윤리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단합을 꾀했다기보다는 개별적으로 혼자서만 존립한다는 생각이 강한 데서 기인했다(곽복산, 1955, 46~47쪽)²³⁾.

당시 신문의 질적 저하에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 것이 신문경영에 일차적인 뜻을 두지 않고 있는 기업주들이 적자경영에 허덕이면서도 신문사나 통신사를 계속해서 운영함으로써 생기는 기자치우문제였다.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지 못하는 당시 신문사나 통신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신문사간 이직율이 높았다. 특히 신문사나 통신사의 편집국장 또는 주필급의 자리이동이 빈번하여 신문지면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편집에서의 통일된 명령계통이 무너져 신문논조의 변화가 발생했다. 무정견한 기업주들이 편집국장이나 주필 한사람의 목을 자르는 것을 예사로 삼았다. 그리고 일선기자는 기사취재의 국장 명령보다 사장의 상용(商用), 혹은 개인의 이권 활동에 보조적인 이용가치로 그 명맥이 유지되고 있어, 신문기자들이 신문사나 통신사의 기업주를 위해서 움직이는 심부름꾼 역할을 했다. 이러한 현상이 중첩되어 신문의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자 신문계의 후진성이라는 이름으로 학자들의 비판의 표적이 되었다(곽복산, 1955; 최준, 1955; 신상초, 1955).

23) 곽복산은 당시 ‘신문협회’와 같은 신문업자들의 조직이 구성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이에 대한 사례로 들었는데, 이후 이러한 취지의 신문발행인협회, 신문편집인협회 등의 조직이 생겼다

이러한 논의들의 이면에는 당시 기자의 품격 즉 기자도를 훼손하는 기자들이 등장했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언론계 내부의 목소리가 드러났다는 것이다. 특히 기자품격이 저하되는 이유를 당시 언론계 내부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들고 있다. 하나는 단시일에 너무 많은 기자들이 배출되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부업적으로 신문경영에 뛰어들어 기업주들이 신문을 하나의 방편으로 이용하면서 구체적인 생산도 없이 최소한의 적자경영을 처음부터 자인하고 빈약한 신문을 이끌고 있는 것을 자랑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그래서 권위있는 강력한 신문의 출현을 위해서는 오히려 치열한 자유경쟁체제에 맡겨주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최준, 1955).

이 시기 중앙일간신문기업의 기자들의 보수는 한국일보가 평기자에게 월 1만5천환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1958년 조선일보는 기자에게 월 4만 5천환 내지 6만환을 지급하고 있었다. 1958년 제조업 상용노동자의 월평균급여액은 2만4천1백환으로, 이 시기 중앙일간 신문기업의 기자들은 일반 노동자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당시 한국 신문의 모든 기자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기자처우를 개선하라는 요구들이 심심찮게 나왔다. 60년 4월 현재 서울의 신문기자들이 받고 있는 월 평균 봉급액은 편집국장과 상임논설위원이 대체로 최고 15만환에서 최하 7만환정도이며 평기자의 경우에는 8만환에서 4만환까지라고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한국은행의 조사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거주 봉급생활자의 월 평균 생계비가 약 9만환이었기 때문에 대다수의 기자가 신문사에서 받는 봉급만을 가지고서는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웠다는 계산이다(박동운, 1960, 57쪽).

1950년대의 도시, 특히 서울에는 근대화에 기여할 인적 자원과 부, 권력의 기형적인 집중이 두드러졌다. 정치권력과 경제적 자원의 집중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사회문화적 자원들의 도시집중이 두드러졌다. 가장 중요한 점은 지식인들의 도시집결과 농촌의 지식인 공동화(空洞化)현상이었다.

신문과 방송도 대부분 도시민에 의해 향유되었는데, 특히 1950년대 후반에 등장한 TV는 전적으로 도시만의 현상이었다. 1950년대에는 도시를 중심으로 교육의 대중화와 함께 라디오방송과 신문의 대중적 영향력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이 같은 사회적 기제들을 통해 반공주의와 근대화 열망이 더욱 빠르고 광범위하게 전파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신문보급률은 1950년대에 연평균 18.1%의 매우 높은 성장속도를 유지했지만, 도시와 농촌간의 지역별 편차 또한 매우 컸다²⁴⁾. 보급률의 성장과 함께 1955년경부터 신문이 오늘날의 크기로 1일 4면씩 발행되고, 1956년부터는 <조선일보> 등 일부 중앙 일간지들이 조석간제를 실시하는 등 신문이 제공하는 정보의 양과 속도가 급증함으로써 신문의 영향력 역시 크게 증가했다. 당시의 신문은 정치세력과의 연계가 강했기 때문에 신문에 따라 정치적 성향이 뚜렷하게 구분되었던 것이 특징인데, 1955년의 경우 당시 ‘야당지’로 분류되는 <경향신문> 10만부와 <동아일보> 17만부를 비롯해서, ‘중립비판지’로 구분되는 <조선일보>와 <한국일보> 등이 ‘여당지’나 ‘친여지’로 분류되던 신문들을 제치고 최고의 발행부수를 기록하고 있었다(유선영·김창남, 1995, 14쪽). 말하자면 당시 신문의 성장과 대중적 소비를 도시의 비판적 지식인과 젊은 층이 주도하고 있었던 것이고, 바꾸어 말하면 도시에서 고등교육 인구의 빠른 성장 덕분에 신문의 빠른 성장이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강인철, 1999, 266~267쪽).

당시 신문은 그 수도 적지 않거니와 여론을 형성하고 지도하는 사회적인 역할로 보아서 민주적인 발전을 꾀하는 한국사회에서 하나의 세력권을 형성하고 있었다(곽복산, 1959, 106쪽). 40년대 후반부터 50년대까지의 시기가 언론사에서 갖는 특성 중의 하나는 정파적 언론을 지향하는 가운데 언론의 과학화, 상업화, 직업주의의 관행들이 일군의 서구 저널리즘을 관찰, 경험한 관련 인사들에 의해

24) 1961년 현재 1천명당 평균보급율은 전국이 29.6부, 서울이 255.5부, 지방은 7.3부였다. 신문 보급율이 매년 성장했다는 수치를 감안해본다면 50년대 중후반의 수치는 이보다 낮았으며 그 격차도 더 컸을거라 추정할 수 있다.

구성되고 있었다는 점이다(유선영, 1995, 111쪽).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을 중심으로 신문의 적자 경영을 탈피하고 효율적 경영을 위해서 “직업주의”를 내세우면서 신문을 서구적으로 개혁하고자 하는 새로운 움직임들 또한 당시 한국 사회의 자본의 규정력이 미흡했고 신문산업 또한 기업으로서의 성격이 약했던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다.

3) 군사화된 사회 : 미국과 냉전체제

1950년대 중반 한국 사회의 초국적 권력구조는 미국과 냉전체제이다. 미국과 냉전체제는 당시 한국 사회에 반공국가의 구축과 자유민주주의의 이식이라는 상한과 하한의 범위를 설정했다. 즉 반공국가여야 하되 민주주의 체제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과제를 실현해야 하는 역사적 공간에 한국 사회가 놓이게 된 것이다.

식민통치, 점령, 분단과 함께 한국전쟁은 전후 195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한국 민주주의의 실험의 ‘출발의 제약조건’을 형성해주었다. 여기서 출발의 제약조건(confining condition)이란 정치적·사회경제적·이념적 수준은 물론 초국적 수준까지 포함하여 특정체제의 출발 시 존재하는 특별한 조건을 말한다. 점령과 분단, 미국의 압도적 영향, 분단국가라는 조건에서 운용되는 민주체제로서의 출발 등은 국가의 출발과 함께 주어진 유산이었다. 여기에 추가된 조건으로서 한국전쟁의 경험은 무엇보다도 한국정치와 사회, 이데올로기의 보수화의 계기로서 주어졌다. 공산침략으로 인한 엄청난 죽음, 피해, 두려움을 기초로 한국전쟁은 한국사회의 권위주의화와 보수화를 결정적으로 촉진시켰다(박명림, 1998, 75쪽).

그러나 민주주의 문제와 관련하여 전쟁의 영향은 양가적이었다. 한편으로는 군대와 경찰 등 국가기구의 팽창, 반공주의의 확산을 촉발했으며, 또다른 한편으

로는 분단질서의 고착에 따른 안정화, 사회의 균등화, 격심한 유동성의 증가, 평등의식의 향상 등을 불러 일으켰다.

한국전쟁의 종전으로 인해 한반도의 휴전체제는 세계 냉전체제의 하위질서로서의 국제적 보장을 더욱 확실하게 받게 되었다. 남한과 북한의 분할계선은 가장 크게는 미소 수준에서 자본주의 진영 대 사회주의 진영의 분할계선으로 담보되었고, 작게는 중국과 일본의 동아시아 수준에서 보장받았다. 한국군 역시 전후 남한 국가의 방어력의 성격을 지님과 동시에 동아시아 지역에서 자본주의 질서를 유지시켜 주는 진영방어부대의 성격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분단질서의 상대적 안정은 휴전선의 장벽을 높임으로써 각각의 독자적 발전추구 노력과 내부의 정치갈등, 노선투쟁의 공간을 확장시켜 주었다. 상대의 침략위협과 분단질서의 불안정성은 모든 내부 갈등을 전쟁의 위협을 활용하여 억압하는 기제로 작동시킬 수 있었으나 분단의 안정화로 인해 전쟁위협이 줄어들자 내부의 사회발전에 관심과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체제선택’을 둘러싼 갈등이 종식되자 ‘체제운용’을 둘러싼 갈등은 점점 치열해져갔던 것이다. 즉 외부와의 갈등이 내적 단결을 촉진시키는데 비해 그것의 상대적 안정은 내적 경쟁을 격화시켰다(박명림, 1998, 76~77쪽).

해방 후 핵심 지배엘리트의 대중이 친미파였고 미국의 영향력이 남한 현대사의 전개에 거의 결정적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해방 후 남한 현대사가 반드시 미국의 대한정책과 공작에 의거하여 한 치의 벗어남도 없이 일사천리로 전개된 것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는 미국의 구상이 관철되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구상은 정치·군사·경제·사회·문화 등의 부분에서 다양한 수준의 기제를 통해 관철되었다. 더구나 해방 후는 일제의 직접 통치와 같은 구식민지시대와는 달리 미국의 구도는 간접적인 방식을 통해 이루어졌다. 따라서 친미파의 형성은 미국의 대한정책 실현에 관건이 되었기 때문에 미국은 이에 주력했다.

친미적 상황의 조성은 강제로 또 전쟁에서 편을 들어주는 것만으로 또 굶주린 배를 채워준다고 충분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가장 효율적인 방식은 엘리트들을 친미화하여 정치적·이데올로기적으로 친미-반공체제를 확고히 구축하고 나아가 그 체계가 미국식 문화의 확산을 통해 유지될 수 있고, 국가다운 국가로 존립할 수 있는 물질적 토대 즉 경제적 성장을 이루는 것이었다. 5·16 이전 시기가 친미-반공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이었다면, 5·16 이후 시기는 그 물질적 토대를 구축하는 과정이었다(임대식, 1998, 130쪽).

여론을 주도하고 영향력을 가진 친미 지배 엘리트들은 미제, 미국적인 것이 바로 선진적이고 모방할 만한 것으로 인식되도록 오리엔테이션 받았고 또 대중들에게 그러한 인식을 심었다. 즉, 이들은 미국적인 것을 절대선으로 인식시키는 전도사로서 존재했다. 다양한 부문의 엘리트들이 있는데 미국은 교육·학술부문과 군부 엘리트들을 대상으로 가장 조직적인 친미화 작업을 수행했다. 전자는 교육원조, 도미유학, 장학금 지급, 후자는 군부 엘리트들을 위한 군사영어학교 창설, 도미유학을 통해 이루어졌다(임대식, 1998, 131쪽).

미국의 이러한 대한정책은 1950년대 남한이 미국에게 있어 반공투쟁의 전진기지이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자본주의 경제와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성공적인 진열장이었기 때문에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아시아에서의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대립 속에서 반공기지로서의 위상 및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위계적 질서 속에서 주변부 국가로서의 위상, 이 이중적 존재와 의미가 당시 한국에 대한 초국적 권력관계 조건을 규정한 핵심적 내용이었다(박명립, 1998, 88쪽).

1950년대 미국의 역할은 당시 권위주의의 등장과 유지에만 기여한 것은 아니었다. 급진혁명과 공산주의의 공격의 명분을 제거하려는 목적에서라도 미국의 범위는 민주주의의 성장에도 일정한 역할을 해야만 했다. 미국은 한편으로 공산주의에 맞서 체제를 유지하는 한 어떤 체제도 수용하려 함으로써 권위주의 통치

의 조건을 보장해주는 ‘권위주의의 보장자’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질서의 유지와 인권보장을 촉구하는 압력을 끊임없이 행사하는 ‘민주주의의 후원자’였던 것이다. 따라서 상한을 넘는 공산주의의 추구하고 하한을 넘는 독재와 파시스트 체제의 추구는 가능하지 않았다. 하지만 역사가 증명했듯이 민주주의의 하한은 도전가능 했지만 반공의 상한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본질적 한계였다(박명림, 1998, 95쪽).

이같은 시대적 조건은 당시 한국 신문의 이데올로기 지형에도 영향을 미쳐, 이승만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야당지도 ‘체제내적 비판지’ 또는 ‘반공지’라고 하는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었다. 따라서 당시 신문은 여당지건 야당지건 반공주의라는 공통의 이념을 숙지하고, 정치 영역과의 공모·갈등의 관계를 통해 공적 영역의 핵심적 주체로 나설 수 있었으며, 이는 신문의 정치성을 더욱 부추기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리하여 당시 신문들은 1인 독재를 자행하던 이승만 정권에 대한 신랄한 논평들을 쏟아 내면서, 논객으로서의 지사적 면모를 신문의 지배적 역할로 위치지울 수 있었다. 또한 미국을 통해 들어온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우산 아래, 언론자유를 요구하는 정당성을 마련했으며, 미국식 저널리즘 체계로 새롭게 제도화하고자 하는 요구들을 신문의 선진화로 호명하면서 당시 부당하는 담론으로 형성할 수 있었다.

2. 변화하는 신문 환경

전쟁으로 시작한 1950년대는 그 시대를 살았던 많은 이들에게 격동의 시대로 기억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원조에 전적으로 의존한 전후 복구 과정은 정치, 경제, 사회, 이념, 정신의 면에서 나름의 독특한 색깔을 갖게 만들었다. 이러한 과정은 신문 또한 예외가 될 수 없었다. 아니 어쩌면 미국의 원조 세례를 가장

전폭적으로 받은 제도 중의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

50년대 신문은 휴전 이후 언론계 교육 원조를 시작으로 하여 이전의 신문과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제도화의 길을 모색한다. 이는 상업주의를 표방한 신문의 창간으로, 새로운 언론 조직의 출현으로, 그리고 신문계 내부의 제도적 개혁으로 이어지다 <경향신문> 폐간 사건을 통해 언론자유 논쟁의 정점을 이루었다.

1950년대의 이러한 역사적 공간은 전통적 가부장적 권위주의와 미국식 자유민주주의가 제안하는 근대성(새로움)이 끊임없이 갈등·충돌하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전쟁 후 50년대 언론사적 의미에서 중요하게 대두된 신문계의 새로운 움직임들과 사건들을 추적하고 이것이 50년대의 시대적 상황과 어떤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연구자가 왜 50년대를 연구시기로 잡았는가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미국의 원조와 지원을 배경으로 지배권력과 그에 추수하는 지식인들이 보였던 서구편향은 상대적으로 당시 한국 사회에 비판적이었던 언론인들의 경우에도 우세하게 나타났다. 언론인들은 사회적 혼란과 부정부패, 가치관의 몰락과 도덕적 해이 등의 유력한 원인이 미국이라는 외재적 변수에 기인하는 바가 오히려 클 수 있다는 가능성을 탐색하는 대신에 오히려 미국화가 저널리즘의 개혁이라는 설명방식을 택했다.

1) 언론계 교육원조와 친미 엘리트의 형성

① 미국무성 초청 언론인 연수

기자재교육 프로그램²⁵⁾은 크게 국내와 국외로 나뉘어 살펴볼 수 있는데, 50

25)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도되었던 현역기자에 대한 재교육 활동은 1953년 공보처의 보조를 얻은 서울신문학원의 '신문기자 아카데미 강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강좌는 정부의 보조가 지속되지 못하여 두 번 열리고 중단되어(최종수, 1977, 223쪽) 60년대 초반까지 현역 기자들이 국내

년대 후반의 기자재교육 과정은 미국무성 초청의 해외연수가 유일했다²⁶⁾. 50년대 해외에서의 연구나 유학의 기회를 가진 언론인의 수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한국 언론계의 현대화와 자질향상에 이바지한 점에서 따진다면 꽤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말할 수 있다.

미국무성 초청 언론인 연수 프로그램은 미국 정부가 전후 전세계 자본주의 국가들의 젊은 신문 기자들에게 전문 교육을 시키면서 미국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초청 기간은 6개월간이며, 이 중 수주일은 미국 내 대학의 신문학과에서 신문학에 대한 강의와 세미나에 참가케 하고, 그 후 한두 곳의 신문사에서 실무훈련을 거친 다음 미국 각지를 시찰하게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955년에 수명의 젊은 기자들이 참가한 것으로 시작하여 1965년에 이 계획이 끝날 때까지 65명이 혜택을 받았다.

미국 연수를 받던 50년대 중반은 해외여행이 어려웠던 시절이었다. 한국전쟁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던 시기였으므로 유학이나 연수의 기회는 아주 드물었다. 그러므로 미국정부의 지원을 받는 연수 프로그램에 선발되는 것은 커다란 혜택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선진화된 언론을 접할 수 있는 기회였다.

한 사회의 문화는 어떤 중핵적인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여러 계기에 따라 또한 항상 변동한다. 한국 사회의 문화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50년대 외래문화와의 접촉으로 한국 사회의 문화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대미교육교환은 아마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처럼 근대화과정 중에 있던 사회들은 혁명적·정치적·사회적 지도자가 외국 유학생이었던 사례가 많았다. 교육교환은 자연적으로 또는 우연적으로 진행되는 문화이식이 아니라, 목적적이고

에서 재교육을 받을 기회는 없었다.

26) 해외에서의 재교육의 참가 기회를 크게 나누면, 해외정부나 민간단체들에 의한 초청과 국내단체의 재정지원에 의한 유학이라는 두 갈래의 길이 있다. 그 중에서도 외국으로서는 미국이, 국내 단체로서는 성곡재단이 압도적으로 기여했다(최중수, 1977, 231쪽). 하지만 성곡재단은 1965년에 설립되었다.

의도적인 문화이식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의 지식이건, 기술이건, 제도건, 이념이건 그야말로 알고, 배우고 수입하고 섭취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 문화이식의 과정이다. 이런 점에서 교환교육은 문화변용 과정의 첨단부라 할 수 있는데(정범모, 1967, 110쪽), 미국무성 초청 언론인 연수도 이러한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이 미국무성 계획이 한국 언론계에 준 충격은 심대했을 뿐 아니라 즉각적인 것이기도 했다. 맨 처음에 참가했던 박권상, 조세형, 진철수 등의 수명은 미국에서 돌아오자마자 1956년에 <관훈클럽>을 발족시켰던 것이다. ‘신문의 날’ 제정이나 우리나라의 각종 언론단체의 창립에 <관훈클럽>의 힘이 컸으며, 우리 언론계에 새로운 지식과 이론을 소개 전파한 『신문연구』가 <관훈클럽>의 기관지라는 사실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다. 대체로 1955년까지 일본 언론의 구습과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한국 언론이 미국식 스타일로 옮겨가게 된 것은 이때부터이다(최종수, 1977, 232쪽).

아래는 미국무성이 주관하는 신문기자의 시찰·훈련계획(US State Department's International Educational Exchange Program)에 선발되었던 신문기자 명단이다.

<표 2-8> 미국무성 주관 시찰 훈련계획 선발 신문기자명단

시찰 회차	선발된 신문기자명단
제 1차 (노스웨스턴 대학)	1955년 9월(11명) : 노희엽(세계일보) 진철수(AP) 김보성(로이타통신) 박중희(방송국) 박권상(합동통신) 강문수(공보실) 김인호(세계일보) 엄기성(서울신문) 김창중(대구일보) 박봉윤(국제신문=부산) 조세형(합동통신)
제 2차 (미조리 대학)	1957년 1월(7명) : 박경목(합동통신) 곽효석(코리아 타임스) 김자동(조선일보) 김종규(한국일보) 이시호(로이타통신) 이규현(코리아 리퍼브릭) 김정교(민주신보=부산)

1957년 9월 9일, 11일 (10명)	
제 3차 (노스웨스턴 대학)	: 최동현(ISN통신) 정인량(세계일보) 정연권(한국일보) 김용구(코리아 타임스) 이정석(조선일보) 이승보(동양통신) 이웅희(평화신문) 송균용(세계일보) 이희창(코리아 리퍼블릭) 이경성(평화신문)
1958년 9월 (7명)	
제 4차 (노스웨스턴 대학)	: 이방훈(서울신문) 홍순일(코리아 타임스) 김상현(동화통신) 김성진(동양통신) 박명찬(세계일보) 김용(코리아 리퍼블릭) (1명은 미상)

출처: 제 1차와 제 2차 참가자 명단은 <편협보>, 1호, 1면, 제 3차 참가자 명단은 <편협보>, 2호, 1면, 제 4차 참가자는 관훈클럽, 1997, 31쪽을 참고하였음.

미국 연수 후, 2차 연수자들과의 좌담회에서 연수자들은 미국 신문계의 특성으로 신문사의 주 수입원이 광고료이며 보도에 있어 인권문제에 신중을 기하느라 철저한 확인보도가 방침인 것에 놀랐다고 전하고 있다. 당시 한국은 아직 인권침해라는 개념이 뿌리내리지 못했던 시절이었다. 또한 신문기자의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는 생활보장은 기본이고 신용과 존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이는 당시 우리 사회의 신문기자에 대한 사회적 처우와 대조적임을 우회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기자들은 길드를 만들어 경영주들이 이를 두려워하고 꺼려하지만 결국은 다른 신문사와 보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비슷한 대우를 받게 됨을 제시하고 있다.

당시 미국의 신문사는 경영주와 기자간의 뚜렷한 구분이 있었지만 한국 신문계는 경영주와 기자 간에 대립전선을 형성하기보다는 상호협조의 관계가 강했기 때문에 기자들이 길드조직에 대해 새롭게 눈을 뜨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이들이 미국 신문 연수에서 가장 눈여겨 본 것은 이론과 실체가 융합된 미국 대학의 신문교육이었다(<편협보>, 1957. 8. 13, 8면). 당시 한국에서는 신문에 대한 체계적인 대학 교육이 시작되는 단계여서²⁷⁾ 이들의 미국에서의 두달 간의 실습은

27) 대학에서의 신문학강좌는 49년 1학기부터 시작되었지만 정규 신문학과가 설치되어 독립된

이후 신문에 대한 다양한 논의에서 그 경험과 인식이 녹아나고 있다.

이들이 주축이 되어 발간한 『회지』는 해방 이후 한국 최초의 신문에 관한 언론전문지로, 『회지』에 실린 글들은 주로 이들 젊은 기자들이 미국무성 초청으로 갔다 온 6개월의 연수 경험들에 기반한 것이었다. 이시호의 ‘독자를 위한 신문기사’, ‘스타일 북’, 박경목의 ‘보도준칙’ 조세형의 ‘취재권 문제’, 김종규의 ‘신문사의 조사부 운영’, 박권상의 ‘미국의 신문교육’ 등이 그러한 예들이다.

② 주한 미공보원(USIS)의 활동과 지향

미소분할점령 이후 사회·문화적 측면의 영향력을 확대해 왔던 미국은 한국 전쟁을 계기로 남한 국가의 존립과 재건 자체를 사실상 좌우하면서 문화적 영역에서 영향력을 높일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의 제도와 가치를 남한 사회에 소개하며, 문화를 매개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임무를 담당했던 조직이 ‘주한 미공보원(United States Information Service, Korea/USIS Korea)’이다. 주한 미공보원(이하 미공보원)의 연원이 미군정기 민정공보국(Office of Civil Information/OCI)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공식적 문화공보 활동은 이미 미군정기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방송시설과 같은 사회적 소통을 위한 물적 시설 복구를 원조하는 한편 대중과 직접 소통을 위한 통로를 확대했다. 전후 남한 국가재건을 지원하며 전개되었던 미공보원의 문화관련 활동은 미국 이해의 관철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따라서 미공보원의 임무는 대한민국의 존립 조건이 미국의 동북아 전략 목적을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최선임을 여론주도층과 대중들에게 납득시키는 것이었다(허은, 2003, 228~229쪽).

1953년 이후 미국 정부 내 대외문화, 공보활동 업무는 국무부와 ‘미해외공보

학과로서 교육이 시작된 것은 54년 홍익대학과 57년의 중앙대학에서 신문학과가 창설된 이후부터이다.

처(United States Information Agency/USIA)가 분담했다. 국무부가 '교육교환계획'을, 해외공보처는 미국의 '참 모습'과 미국 대외정책을 선전하는 역할을 맡았다. 국무부가 교육교환 계획을 매개로 해외에 친미적 인맥을 형성하는 책임을 졌다면, 해외공보처는 미국 대외정책선전과 문화를 홍보하기 위한 관련물을 제작·배포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했다. 해외공보처는 산하에 영화, 출판, 정보, 방송을 담당하는 각 국들을 두고 현지 미공보원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공했다. 현지 미공보원은 해외공보처의 직속 기구로서, 사안에 따라 국무부의 지침을 받으며 양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다.

미공보처의 활동은 타국의 자유를 위협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국의 미래와 국가조직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독립국가에 지향하는 평화스러운 세계 공동사회의 실현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해외에서 행해지는 건설적인 공적 지원활동을 촉진해야 하며, 미국이 이러한 목표를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또한 능동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가임을 증명하여야 하고, 미국의 목적과 정책을 왜곡하거나 좌절시키려는 적대적 기도를 폭로하고 저지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활동은 타 국민 및 그들의 정부기구의 활동과 조화를 이루면서 수행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나아가 미국의 정책에 대한 동조적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는 모든 미국의 생활과 문화면을 강조하는 것이었다(정일준, 2003, 24~25쪽).

그런데 미공보원의 여러 가지 활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교환계획'이었는데,²⁸⁾ 전후에 미공보원이 주요 목표대상으로 선정한 집단은 '여론형성자(opinion molder)', 군인, 농민 등이었다. 여기서 여론형성자는 입법, 사법, 행정부의 주요 관료, 언론계, 전문지식인 등으로 정치, 문화적 입장 등을 주도하는 인물

28) 이 계획에 의해서 한국인에게 미국에서 시찰하고 연구하도록 보조금이 지급되었고 또 미국인 교수와 기타 전문가들이 한국에 방문하였다. 해외로 가는 이 계획은 이에 대한 전체 책임을 지는 국무성을 위하여 미공보원이 관리하였다. 한국인 피지급자는 법률, 정부, 교육, 의학, 신문 및 제 학문적 분야의 지도자들로 되어 있었으며, 약 390명의 한국인이 이 계획 하에 미국을 방문하였다. 그리고 매년 약 6명의 미국인 전문가들이 한국에 왔다(헨리·F·아놀드, 1959, 80쪽)

들을 지칭한다. ‘여론형성자’들에 대한 통로 확보를 위해 활용했던 대표적인 수단의 하나가 ‘교육교환계획’이었다.

교환계획의 일차적인 목적은 미국이 달성한 문명을 연수자가 몸소 체험하도록 하여 미국의 ‘역동성, 결단력, 힘’을 깨닫도록 하는데 있었다. 이를 통해 미국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미국의 국가안보와 위상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도록 맞추어졌다. 그러므로 교육교환계획을 통한 미국연수의 목적은 미국을 과시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연수대상자가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진영의 질서와 체제 정당성을 자연스럽게 수용하도록 하는데 있었던 것이다(허은, 2003, 232쪽).

전체적으로 1950년대 공보원이 주관한 교육교환계획의 규모는 당시 경제나 군사 분야에서 진행되었던 그것에 비해 적은 편이었다. 그러나 산업기술, 군사기술과 같은 특정분야에 맞추어진 교환계획과 달리 사회여론을 주조하고 국가 제도를 수립, 운영하는 집단에 대한 교환계획이 지니는 의미나 중요성은 큰 것이었다.

따라서 미공보원의 교류계획은 전략집단을 중심으로 하여 노동, 언론, 문화 예술, 교육, 의료 분야까지 확대했는데, 그 중에서도 주목했던 대상이 언론계였다. 언론계는 국가기구의 운영자는 아니지만 여론을 주도하는 집단들이기 때문에 미공보원의 활동, 특히 대외정책 선전 분야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단이었다. 따라서 공보원은 이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었다. 미공보원은 교환계획을 마친 언론인과 이들이 주도하는 <관훈클럽>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자원으로 활용했다.

언론을 주목했던 다른 이유는 신문매체가 미공보원이 대중에게 문화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보조수단이었기 때문이다. 1950년대 중반 미공보원은 한국 언론을 ‘대중을 위해서는 글을 쓰지 않는 조직’들로 보았기에, 자신들의 의사가 대중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매체로 언론계를 개편하는 것을 중요 과제로 여겼다(허은, 2003, 239~242쪽).

한편, 미공보원은 문화의 교류를 위해 서울의 본부 그리고 서울, 대구, 광주, 부산 등 네 곳의 지부 및 산하에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문화행사를 벌였다. 문화전파의 기초 작업으로 영어의 확산이 강조되었다. 1950년대 중후반 지배 집단에게 영어는 미국이라는 권력의 중심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었고, 일반 대중에게는 미국 사회에 대한 지적 욕구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영어학습 열기는 높아만 갔다. 그리고 미공보원은 영어교육프로그램을 주요 집단에게 접근할 수 있는 수단으로까지 발전시키고자 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바탕으로 영어교육은 미공보원의 가장 효율적인 '문화도구'가 되었다.

미공보원은 국가제도 운영자를 포함한 공공영역 종사자들(언론계, 교육계, 크게는 향후 지도자가 될 학생들까지)과는 되도록이면 인적관계를 직접 맺고 유지할 수 있는 계획들을 활용했다. 반면 대다수 일반 대중에게는 문화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기획영화, 보도영화, 농민잡지, 전시회 등을 이용하여 문화전파를 확대했다(허은, 2003, 244~246쪽).

냉전체제에서 미국 문화외교의 목적은 대상자가 미국의 힘과 능력, 즉 문명적 성취를 직접 느낄 수 있게 하여, 자유진영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자연스럽게 수용하도록 하는데 있었다. 미공보원은 남한 국가의 공적 영역을 주도하는 이들을 선정하여 교육교환계획을 통해 이들과 관계를 만들고 연수를 마친 뒤에도 관계를 지속시켜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힘썼다. 또한 한국 사회 내부적으로는 영어의 확산을 통해 미국식 생활방식과 문화를 전파하여 한미간 이해의 일치를 내면화하도록 유도하였다.

해방 이후 미국은 한국민들에게 '해방자'적 이미지를 가지고 나타난 지배적인 외재적 권력이었다. 그러나 반공주의를 배경으로 이러한 외재적 권력은 내재화된 친미적 세계관으로 혹은 주류적 패러다임으로 변모해갔다.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으로서의 미국이 한국에 대한 패권적 국가로 등장한 것은 1945년이지만, 한국전쟁 이후 집중적이고도 다양한 방식의 원조를 통해 50년대 한국사회에

미국적 패러다임과 시각은 거부할 수 없는 하나의 지배적 기운으로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국가 혹은 공공차원의 원조가 우회적이라면 민간원조는 훨씬 직접적이었으므로 친미파의 형성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원조이다. 50년대 당시 대표적인 민간원조 단체는 <한미재단>과 <아세아재단>이었다.

<아세아재단>은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한 미국 각계 인사들의 기부금으로 1953년 설립되었고 1954년 7월에 한국지부가 설치되어 1963년경까지 한국에 사업비로 2백만 달러 정도를 지출하였다. <아세아재단>은 교육, 영어교육, 사법 및 행정, 과학기술, 사회과학연구, 노동교육, 청년 및 학생활동, 매스컴, 국제문제, 문화 등의 영역을 원조했는데 <한미재단>과 함께 대표적인 미국의 민간 원조기관이었다²⁹⁾(아세아재단, 1964, 3쪽).

<아세아재단>의 매스컴 관련 원조는 주로 신문계와 출판계에 주어졌다. 먼저 니만장학금 제도는 한국 신문인들로 하여금 이 사업에 참여케 하여 하바드 대학교에서 전공분야를 연구케 하는 제도였다. 또한 <아세아재단>은 한국일보사 내의 최병우기념도서관에 서적을 기증하였으며, 한국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에 다 용지를 수입하여 양서 출판을 권장하였다. 한편 재단은 <한국신문편집인협회>가 주최한 신문 주간 행사를 후원하기도 했는데(아세아재단, 1964, 15쪽), 이러한 지원방식이 결국 미국식 저널리즘을 한국의 언론계에 확고하게 인식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29) 재단의 목적은 첫째, 미국의 민간원조를 평화·독립·개인의 자유 및 사회발전의 달성에 종사하는 아시아 지역의 개인 및 단체에게 제공하는 데 있으며, 둘째, 아시아 재단과 비슷한 목적과 이념을 가진 아시아·미국 및 세계의 원조단체 간에 상호 존경과 이해에 기초를 둔 협조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며 강화하고, 셋째, 미국의 개인 및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미국인들의 아시아·국민 역사·문화·기타 장점에 관한 이해를 증진코자 함에 있었다.

2) 새로운 기운들

① <한국일보>의 탄생

1950년대 한국 신문계는 앞서 논의에서 살펴보았듯이, 자본주의 사회의 시장 경제 이데올로기를 전달하는 기구로서의 성격을 뚜렷하게 갖기보다는 당시 정치 사회에 주도적으로 개입하고자하는 지향 속에서 정론지적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따라서 상업주의를 표방한 <한국일보>의 창간은 당시 위와 같은 한국의 경제사정을 고려해 볼 때 의외일 수 있다. 또한 당시 신문계도 전반적으로 정론지적 편향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확고한 물질 기반을 획득하지 못한 상태여서 자본주의적 신문기업의 출현을 예고하기에는 무리였다³⁰⁾. 하지만 어쨌든 상업주의를 표방한 <한국일보>의 창간(1954. 6. 9)은 이후 신문계가 상업주의와 기업화라는 새로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됨을 예고하는, 시대적 변화의 전조였음은 분명하다.

한국 신문이 기업화하는 전기는 <한국일보>의 창간이 그 첫 번째이고, 그 두 번째가 1965년 9월 22일 <중앙일보>의 등장이라 볼 수 있다. 신문의 기업화라 함은 무엇보다 마케팅에서 말하는 수동적 판매단계를 벗어나 능동적 판매단계에 진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이 <한국일보> 창간호 사설이다.

“단기 4287년 6월 9일로 그 첫 출발을 하는 <한국일보>는 ‘신문은 누구도

30) 한편 1950년대에 신문 상업화의 토양을 마련한 사회·정치적 조건으로 한국전쟁에 따른 좌악지의 소멸과 우익지의 안정된 시장확보, 자유당 정권을 둘러싼 신문들의 경쟁적 정론 양산, 미국의 전후복구용 유무상 원조에 따른 경제성장, 광고량의 점진적 증대와 독자의 신문 구매력 향상 등을 꼽기도 한다(한국언론연구원, 1991, 74쪽).

이용할 수 없다’는 철칙의 사시를 만천하에 선언한다.....그 정책과 행위를 논평할 뿐 개인공격은 있을 수 없다. 타협도 있을 수 없다. 또한 우리는 세력과 탐욕에 동요되지 않는 반석같은 그 기업적 자활로써 이루어진다는 신념을 새롭게 하고자 한다. 우리는 근대 경제학이론을 신봉하고 새로운 자유경제 사회의 옹호를 자각하면서 리얼리즘에 입각한 상업신문의 길을 개척하여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진실하다고 확인한 사실만을 보도함으로써 시대와 호흡을 같이하는 독자의 귀와 입과 눈이 될 명량한 신문 본도(本道)를 가고자 한다.....”(한국일보사, 2004, 97쪽)

위의 창간호 사설에서도 드러나듯이 <한국일보>는 기업적 자활을 중요하게 표방하고 있다. 이는 당시 동아, 경향, 조선과 같은 정론적 기성 신문과는 차별적으로 젊고 독립적인 신문으로서, 동시에 혁신적인 신문으로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신문기업으로서 한번 성장해 보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는 당시의 신문이 정치적 외부세력에 좌우되는 현실을 타파하고 신문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상업주의에 입각한 합리적인 경영을 통해 기존의 신문 관행과는 다른 제작노선을 내걸고 출발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안병찬, 1999, 154쪽). 당시 많은 신문들이 상업주의를 표방하기는커녕 오히려 겉으로는 그걸 경멸하는 척하면서 뒷구멍으로 온갖 비리를 저지르거나 비리에 타협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볼 때 공식적으로 상업주의를 표방하면서 시장기능에 의해 살아가겠다고 천명한 건 눈여겨볼 일이다.

<한국일보>의 사주는 은행가 출신으로서 2년 동안 <조선일보> 사장을 지냈던 장기영이었다. 그는 52년 4월 <조선일보> 사장에 취임하여 탁월한 경영 능력을 발휘하여 그가 <조선일보>를 맡은 후 1년 동안 발행부수는 350% 늘어났고, 지대수입은 640%, 광고 수입은 518%가 늘어났다. 그러나 그의 개성이 강한 운영 방식과 독자적인 영향력 구축이 방씨 일가와 갈등을 빚어 중도 퇴임한 후, 당시 경영난을 겪고 있던 <태양일보>를 인수해 <한국일보>를 창간하였다(정진석, 1985, 438쪽).

<한국일보>는 이후 견습기자 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기자공채를 제도화 시키는데 앞장섰으며, 이로 인해 '기자사관학교'라 불리우기도 했다. 또한 여성에게도 똑같이 공개채용의 문호를 열어 여성 기사를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발탁하는 인사 정책을 폈다. 당시 '잘 팔리는 신문'을 만들기 위해, 독자들의 이해와 요구에 민감했던 <한국일보> 경영진들은 여성기자의 필요성 및 가치를 발빠르게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초창기엔 합격자가 없었다가 1958년의 제7기생에서 비로소 여성 견습기자가 1명 나왔다.

한편, 상업주의 신문의 취지에 맞게 광고를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그 수입을 늘리기 위해 애를 쓴 최초의 시도 또한 <한국일보>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56년 4월 1일 <한국일보>는 한국 신문 최초로 광고상담소를 설치, 운영하였다. 그리고 58년 12월 8일 1면에 5단으로 '광고윤리강령 및 게재기준'을 제안하는 사고를 실었다. 또한 58년 12월 14일자 사고를 통해 명함 광고를 포함한 신년 축하 광고를 없앤다고 발표하는 등 신문광고업계의 낙후된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애를 썼다(안병찬, 1999, 322~323쪽).

이상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50년대 중반의 <한국일보>의 창간은 당시 정당지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으면서 신문의 체제개선에 미온적이었던 신문계에 새 기운을 불어넣으면서 신문의 기업적 요소를 강하게 제기하였던 측면이 컸다. 이러한 신문 경영의 측면은 적자운영에서 탈피하여 이윤을 산출하는 기업으로서의 신문이미지와 합리적 인사제도 및 광고의 적극적 유치 그리고 독자들의 요구에 귀기울이는 신문의 모습을 만들어내는데 자극을 주면서, 당시 미국식 언론으로 신문이 새롭게 제도화를 추진하는데 촉진제적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② <관훈클럽>

한국 신문에서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기자에 대한 인식과 권익보호를 위해 전문직 단체를 조직하려는 노력의 첫 단계 결실은 1957년 1월 11일 발족한 <관훈클럽>이었다. 당시 한국사회의 신문연구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열의와 신문인간의 교통이 활발해지기를 바라면서 서울 관훈동에서 클럽을 태동시켰다³¹⁾. 그러나 <관훈클럽>의 태동은 1956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미국무성 초청으로 일리노이주 에반스톤시의 노스웨스턴대학에 가있던 젊은 기자 6명³²⁾이 모여 ‘돌아가서 젊은 신문인간의 반(半)친목, 반(半)연구의 클럽을 만들어 한국 신문계의 장래에 이바지해보자’고 결의한 것이었다. 그해 3월, 귀국한 이들은 최병우 등 4, 5명의 기자와 힘을 합하여 클럽추진 시험기간을 약 6개월로 잡고 한 달에 두 번(첫째, 셋째 금요일)씩 모임을 가졌다. 그리하여 클럽이 발족하기까지 9개월 동안 18회의 모임을 가졌고 그 때마다 회원이 ‘신문문장’, ‘구독법’, ‘선거보고’ 등의 제목으로 연구발표를 하였으며 오종식, 홍종인, 맥나이트(미공보원) 등을 초대하여 강론을 듣기도 하는 등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신문기자들의 연구모임을 이어갔다.

그런데 <관훈클럽>이 1956년 4월 30일 첫 모임을 가졌을 때 설정한 회원자격 기준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외국어를 해독하여 선진문물을 흡수함으로써 연구에 참여하고, 둘째, 젊은 기자층만으로 구성하여 친목이 될 수 있고, 셋째, 신문을 평생업으로 삼고 나갈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겠다는 것이었다(관훈클럽, 1997). 당시 외국어라 함은 일본어가 아닌 영어를 지칭하는 것으로, 근대적 학력을 갖추고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젊은 엘리트 기자들만을

31) 이곳은 발기 회원이었던 박권상, 김인호, 정인량의 하숙집이었는데 당시 클럽발족에 참여한 이는 이들 3인 외에 홍성원, 박중희, 최병우, 김용구, 조세형, 진철수, 이규현, 이정석, 이경성, 이시호, 김보성, 노희엽, 임방현, 이광균, 문병규 등이었다

32) 노희엽, 김인호, 박권상, 조세형, 박중희, 진철수

회원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관훈클럽>을 중심으로 한 이들의 활동이 기존의 구시대적 언론관행들을 타파할 뿐만 아니라 당시 일본식 교육에 익숙한 중견 언론인들과 자신들을 차별화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클럽 발족 후 반년간의 월례회 내용을 보면 초빙 연사는 광복산(‘신문일반에 관하여’), 최준(‘독립신문전후의 역사’), 부완혁(‘명예훼손문제’), 심연섭(‘외신번역 문제’), 장기영(‘신문경영’) 등이었고, 회원의 연구발표와 토론으로는 ‘서명기사문제’, ‘과학용어’, ‘신문편집’ 등의 문제가 다루어졌다(<신문연구>, 1959, 89~90쪽). 이와 같은 내용들은 당시 이들의 활동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해 준다. 이들은 미국식 상업주의 언론을 신문의 선진화 모델로 삼고, 일본식 관행에 익숙해 있던 신문의 시스템들을 하나씩 문제제기하면서 개혁하고자 한 것이다. 다시 말해 미국식 신문 시스템으로 제도화하는 작업을 통해 당시 한국 신문의 후진성을 탈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클럽은 발족하자마자 신문주간창설의 계기가 되었던 <독립신문> 창간 61주년 기념사업에 언론계 선배를 도와 심부름하기로 임시총회에서 정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당시 독립신문 창간 기념식이 처음 논의된 것도 <관훈클럽>의 모임이었으며, 편협에서 채택한 신문윤리강령의 초안은 클럽회원들이 작성했다.

한편 <관훈클럽>은 발족 초기부터 연구회지의 발간을 서둘렀는데³³⁾, 발간된 <회지> 창간호 권두언에는 기자들의 ‘친목과 연구, 자질향상’을 위한 클럽의 창설이 “직업주의(professionalism)”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지표명이 나타나 있다.

“신문인은 그의 사명에 투철하면서 모든 진실을 두려움 없이 보도·비판하고 공정과 정확에 철저한 신조로 살아야 할 것이며 신문은 많은 점에서 더욱 연구검토되어 점차 시정·향상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33) 경비난과 원고모집의 어려움 속에서 약 6개월 이상을 끌어오다가 1957년 8월 22일 <회지> 제 1호를 발간하였다. 회원들의 논문 5편이 실린 창간호는 40페이지의 프린트물이었다.

나라 젊은 신문인이 자주 교통하고 상친하여 서로 단합하여 직업영역 안에서 자유를 지키고 또 스스로의 권익을 수호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의 모든 분자는 각자의 직업영역에서 가장 충실하고 가장 자유로워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회지〉, 1957, 2쪽).

<관훈클럽>의 이러한 "직업주의"의 이념은 최초의 언론인 직업단체인 편협결성의 산파역에서부터 신문윤리강령 제정, 신문의 날 제정, 한국 신문 최초의 연구지인 <신문연구>의 발간, 기사스타일북 작성, 관훈토론회 개최, 신영기금 후원에 의한 언론인 연수 등을 실현시켰다.

<관훈클럽>이 창립되던 50년대에는 기자의 전문성보다는 부정부패와 싸우는 저항정신이 신문계를 지배하는 풍조였다. 이는 한말에서 일제치하를 거치면서 이어 내려온 언론의 정신사적인 전통이기도 했다. 그러나 제작관행은 아직 일본의 잔재를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한 상태였다. 지사적 언론인의 기질만으로는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현상과 국제 정세에 적응할 신문을 만들기 어려운 시점이었다. 당시 신문은 자유당 정부와 갈등관계에 있으면서 자체적으로는 책임의식을 갖추고 질적 수준 향상을 기해야 할 과제를 짊어지고 있었다. 정치사회적으로는 한국전쟁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못했던 상황에서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었고, 언론 내부의 문제로는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에 우선 가치를 두는 현대적 저널리즘의 원칙과 윤리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서울과 지방을 막론하고 사이비 기자의 폐해도 적지 않았다(관훈클럽, 1997, 15~16쪽).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미국무성 초청으로 미국의 신문에 대한 실무와 이론을 접한 일련의 젊은 기자들은 ‘문화적 충격³⁴⁾’ 속에서 한국 사회의 지사적 정신과 더불어 신문 자체의 현대적 제도화를 추구하였다. 이는 이들이 이후 발간하는 연구지의 논문 제목들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다.

34) 박권상은 인터뷰에서 “전쟁의 폐허 위에서 가난과 궁핍으로 점철된 한국 사회와는 완전 별천지의 세계가 미국이었으며, 미국의 신문 제작 시스템은 당시 한국의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였기 때문에 그 문화적 충격은 실로 엄청났다”고 밝히고 있다.

그 당시 한국사회의 신문에 대한 논의들은 많았지만 대부분 추상적 수준에 머물렀고, 신문 내부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저널리즘의 질적 향상을 꾀한 논의는 드물었다. 물론 <관훈클럽>의 회원들을 중심으로 한 일단의 저널리즘 질적 향상 운동은 저널리즘의 현대화를 추구하였지만 이는 단적으로 미국식 저널리즘의 추구였다.

이들의 활동은 “전문직업주의(professionalism)”로 가시화되었다. 하지만 이들의 “직업주의”는 표면적으로는 서구와 같은 전문 직업의식을 도입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그 직업의식이란 것이 서구적인 직업적 소명의식과 같은 것은 아니었다. 서구적인 직업적 기반이 약하기도 했지만 그것을 구축하는 데는 늘 전통적인 신문의 역할과의 갈등이 존재했다. 그래서 <관훈클럽>이 밝힌 직업의식이란 것도 한국 사회에서의 전통적인 신문의 역할인 지사적 신문에 기반한 신문인의 사명 같은 것을 전제하고 있었다³⁵⁾(이종숙, 2004, 114쪽). 따라서 당시 이들이 내세운 서구식 직업의식은 그것들을 충실히 지켜냄으로써 지사적 신문이라는 전통적 신문관과 충돌을 일으키기보다는 오히려 지사적 신문의 자기기반을 강화하는 정당화 기제로서 흡수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관훈클럽>이 주도한 여러 가지 운동들은 당시 신문을 서구적인 시스템으로 새롭게 제도화하는 역할을 하였지만 동시에 한국 사회에서 전통적 신문인의 역할과 권위를 더욱 확고히 하는 방향으로 이어졌다.

35) 따라서 이러한 사실은 앞서 밝힌 <회지> 창간호 권두언에도 잘 나타나 있다. “진실과 의를 내세우고 거짓과 사악을 물리쳐 자유와 평화의 복지 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오늘의 혼돈된 사회에서 신문이 짊어진 사명이 무겁고 귀함을 우리는 알고 있다. 세계사조는 숨가쁘게 흐르고 현실의 과업은 겹겹이 절박해오는 이 때 어찌 언론만이 수구하여 주저앉아 있겠는가. 자성과 개신으로 취약과 편협과 횡포를 박차고 새 사조를 호흡하여 능히 세대의 앞장을 서야 할 것이다. 우리 젊은 신문인들은 이 나라 신문의 긴 전통을 귀히 여기며 자랑삼고자 한다. 항상 정의와 약자의 편에 서서 강압과 싸워 온 그 줄기찬 의기며 오늘의 문화적 터전을 이룩한 발자취는 우리가 자랑삼고 이어받고 또 후대에 넘기는데 부끄러울 것이 없다”(〈회지〉, 1957, 1쪽).

③ <한국신문편집인협회>

<한국신문편집인협회>(이후 편협)는 1957년 4월 7일에 창립되었다. 이는 그 해 1월 11일에 뜻있는 젊은 언론인 18명이 모여서 결성한 <관훈클럽>에서부터 편협의 창립이 싹 트기 시작하였다. 그해 2월초에 당시 <코리아 타임스> 편집국장이요 <관훈클럽>의 대표이던 최병우가 몇몇 선배 신문인들과 <독립신문> 창간 61주년기념행사와 더불어 '신문주간' 창설을 논의하였다. 그래서 그해 3월 상순에 전국일간신문·통신사의 주필, 편집국장, 논설위원 등 약 60명의 '신문주간' 준비위원회³⁶⁾를 구성하고 그 주최단체로서 편협을 결성하기로 하여 그해 4월 7일에 편협창립총회를 열었다(이관구, 1971, 20쪽).

편협은 협회규약³⁷⁾과 '신문윤리강령'을 채택하고 이날부터 1주일 동안을 '신문주간'으로 정하고 다음날 4월 8일에 <독립신문> 61주년 기념식과 제1회 신문주간대회를 개최하였다(<편협보>, 1957. 8. 13, 2면). 편협은 신문주간창설, '신문의 날' 제정, 신문윤리강령의 제정, 신문윤리실천요강의 작성 이외에도 <편집인협회보>를 만들고, 신문윤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당시 신문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편협의 결성은 한국 언론계 종사자들에게 언론인 단체의 조직적 결성에 대

36) 준비위에서의 다음의 안건을 작성하였다

① 4월 7일에 <독립신문> 창간기념식을 거행할 것, ② 신문주간을 설립할 것, ③ '프레스 코오드'를 작성하여 기념식에서 채택할 것, ④ <독립신문> 전후의 한국언론계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중심으로 하는 강연회를 개최할 것, ⑤ 신문주간설정과 <독립신문> 창간을 기념하는 기념출판을 할 것, ⑥ 신문전시회를 개최할 것, ⑦ 독립신문사 자리에 표석을 세울 것, ⑧ 순직신문인추모사업을 추진할 것, ⑨ 배설씨 묘비명을 복원할 것 등

37) ① 신문인들의 중대한 사명과 조국의 민주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민주주의적 창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에 협동한다.

② 신문인들의 품위를 향상하고 그 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통된 문제를 연구하고 상호 전문분야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다.

③ 신문, 통신의 공동이익을 위한 노력에서 국내 언론계의 분산된 힘을 합일시키는 모든 사업을 방조한다.

④ 전국 편집인들 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한다(한국신문편집인협회, 1967: 8).

한 필요성을 제기하여 이후 한국일간신문발행인협회(57. 6. 27 창립)와 한국통신협회(57. 7. 11 창립)가 잇달아 발족하였다. 이러한 언론 조직의 결성이 1950년대 중반에 본격화된 것은 언론사에 있어서도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이러한 언론인 단체의 조직화는 이후 신문의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밑바탕이 되었으며 한국 신문이 공적 영역의 수호자로서 특권적 위치를 획득하는 과정에 있어 정당성 담론을 지속적으로 생산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편협을 통해 당시 언론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조되었던 담론들이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게 요구된다.

50년대 편협의 초기 활동은 <독립신문>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신문윤리강령'을 실천하는 일에 매진하였다³⁸⁾. 따라서 초창기 편협의 활동은 국가권력과 갈등 속에서 언론인의 자질향상보다는 민주언론 달성을 위한 언론의 권익 옹호에 주력, 대정부투쟁에 앞장섰다고 볼 수 있다. 50년대를 기자의 시대, 60년대를 편집인의 시대라고 이름 붙이는 것도 당시 편협을 통한 여러 가지 활동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편협의 50년대 활동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악법반대투쟁, 둘째, 필화사건의 처리, 셋째, 신문인 폭행사건의 처리 등이 그것이다. 첫째, 악법반대투쟁은 57년 12월 자유당이 성안한 '선거법 개정안'에 삽입된 '언론제한조항'에 반대하는 삭제 운동, 58년 11월에 성안된 '국가보안법개정안'에 '언론규제조항'을 삽입한 것에 대한 삭제운동(세칭 24파동), 59년 4월 30일, 자유당 정부의 경향신문폐간조치에 반대하는 경향신문폐간 취소 연판장 운동과 경향신문폐기 조치의 법적 근거인 미군정법령 제88호와 제55호의 폐기 청원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것에서 드러난다.

38) 이는 창립일을 <독립신문> 창간일에 맞춘 것에서도 나타나지만 초대 회장 이관구의 독립신문 61주년 기념식에서 행한 개회사에서 '독립신문의 정신을 본받아 민주언론의 창달을 기하자'고 한 데서도 드러난다. 또한 당시의 상황을 독립신문이 창간된 61년 전과 비교해 볼 때 민주언론의 궁극적 목표를 성취하지 못한 것에 있어서는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고 평가하는데서 이승만 정권 하의 시대적 상황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편협보>, 1957. 8. 13, 2면).

둘째, 필화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편협은 58년 8월 <사상계>의 함석헌³⁹⁾씨와 동아일보사 최원각 기자⁴⁰⁾ 구속에 대해 관계기관에 항의문을 제출했다(한국신문편집인협회, 1967, 42~45쪽). 그리고 61년 군사혁명 직후 실시된 보도관제에 저촉되어 민국일보사 이혜복, 대한일보사 김경한, 부두현 기자 구속사건에 일간신문발행인협회, 통신협회와 편협의 공동명의로 최고회의 및 관계당국에 진정하는 한편 편협 대표단이 관계당국을 방문하고 석방을 요청하여 각각 7월과 8월에 구속이 해제되었다.

셋째, 신문인 폭행사건의 처리는 60년 2월 13일 서울시내 영등포구청 앞에서 정·부통령 선거 입후보 관계를 취재하던 기자가 경찰관이 방관하는 가운데 괴한들로부터 폭행을 당한데 대하여 14일 성명을 발표함과 아울러 대표단이 내무부장관과 치안국장을 방문하여 항의하였다. 또한 60년 3월 19일, 3·15 마산 발포사건과 취재기자 구타사건에 대하여 항의성명을 발표하였으며 그해 12월 세창박장로교도에 의한 동아일보 피습사건에 중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폭력은 민주주의의 적’이며 이와 끝까지 싸우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당시 편협의 활동방식은 결의문 또는 성명서 발표, 국회 대표와의 회담, 대통령 면담 요청, 대통령에게 보내는 건의 백서의 제출, 공개토론회 개최, 언론인 대회 개최(전국 또는 지방), 언론인의 연판장 운동, 탄원서의 국회 제출 등이었다(한국신문편집인협회, 1967, 35~48쪽).

편협은 창립 당시 신문윤리강령을 채택하여 신문인의 자율적 실천으로서 신문의 윤리를 바로 잡고 신문인의 권위를 굳게 지키고자 했다. 윤리강령은 자유, 책임, 보도의 한계, 평론의 태도, 독립성, 정확·성실, 공정, 관용, 품격 등의 9개 항목으로 되어 있다. 신문윤리강령이라 함은 신문의 윤리를 바로잡고 신문인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지켜야 할 지침서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는데 특이한

39) “생각하는 사람이 산다”라는 논문으로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

40) “두개사단해체준비”라는 기사가 이적행위혐의에 걸려 취재기자 구속

것은 윤리강령의 첫 번째 항목이 자유라는 점이다. 윤리강령에서 '신문은 보도 및 평론의 완전한 자유를 갖는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에는 일반법의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신문의 자유를 제한 또는 간섭하는 법률은 있을 수 없다'라고 되어있다.

당시 신문윤리강령을 채택한 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신문윤리강령의 채택은 언론 외부로부터의 탄압과 타율적 규제 가능성에 대한 언론인 스스로의 자율적 보호 기제를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권이나 행정력에 의한 필요 이상의 제약이나 규제 등 정치 권력의 비리에 대한 저항의 의미라는 것이다.

둘째, 채택된 신문윤리강령은 편협을 모체로 하여 작성된 것이나 초안은 주로 천관우를 중심으로 한 미국무성 초청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현역 젊은 기자들의 친목단체인 관훈클럽이 맡았다는 점과, 초안 작성에 기초가 된 자료가 1950년 몬테비데오에서 열린 유엔 보도자유 소위원회에서 기초하여 발표된 바 있는 국제신문윤리강령(초안)과 전미국신문편집인 협회의 윤리강령, 미국 신문기자 '길드'의 행동 강령, 그리고 미주리대학에서 연구 발표한 바 있는 신문윤리강령 등이었다는 점은 미국식 전문직업주의가 당시 신문인들 사이에 깊이 반영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이다(강명구, 1993, 73~74쪽).

제 3 장. 지사적 신문 : 유교적 남성성

지금까지 50년대 한국 신문사에서 중요한 사건들과 새로운 기운들이 당시 사회와 어떤 관련성을 맺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신문이라고 하는 것이 한 사회의 중요한 제도로 기능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당시 신문의 새로운 변화들은 그 시대적 조건과 무관하지 않음을 전제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선 논의들은 연구자가 왜 50년대를 연구시기로 잡았는가, 그 근거에 대한 역사적 맥락들을 추적한 작업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제 3장과 제 4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이러한 역사적 조건 속에서 펼쳐진 신문에 대한 사회적 논의들을 살펴보려고 한다.

한 사회 안에서 뉴스의 생산과 분배를 담당하는 기자를 지사 혹은 사회의 목탁이라고 부른다. 지사와 사회의 목탁이라는 표현에는 사회가 혼탁하고 위기에 처했을 때 용기있게 권력을 비판함으로써 경종을 울린다는 기대가 담겨져 있다. 언론 노조 운동이 활성화된 이후 언론 노동자로서의 기자라는 표현에는 언론 기업에 고용된 지식생산 노동자로서, 집단의 이해와 동시에 집단의 존재조건을 넘어서서 보편적인 노동과정의 인간화와 민주화를 요구하리라는 희망이 담겨져 있다. 이와 함께 불편부당, 가치중립, 객관보도라는 취재보도의 원칙들은 기자들이 현실에 개입하는 참여자가 아니라 중립적 관찰자이기를 기대한다. 지사, 사회의 목탁, 언론 노동자, 중립적 관찰자 등의 표현들은 이처럼 각기 다른 역사적 경험, 사회적 기대와 이념적 지향을 반영하고 있다(강명구, 1993, 8쪽).

그렇다면 1950년대 신문과 기자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어떠하였는가? 50년대 중후반은 기존의 일본식 신문관행과 새롭게 등장한 미국식 저널리즘이 충돌하면서 서로 절합되어 가는 과정이었다. 일본식 취재관행 및 보도관행이 유지되는 가운데 미국무성 초청 언론연수를 다녀온 젊은 엘리트 기자들을 중심으로 한국 신문을 서구적이고 좀 더 전문적인 체계로 제도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분출

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자와 일본식 문장을 쓰면서 일본식 취재관행에 익숙한 중견 기자들이나 정규 대학교육을 마친 영어를 잘하는 젊은 기자들이나 모두 지식적 신문인이 되고자 하는 열망은 어느 때보다 강렬하였다. 이는 한국의 1950년대가 일제 식민지와 미군정, 그리고 전쟁을 거친 후 분단의 상황에서 새로운 국가 건설의 과제가 주어졌을 뿐 아니라 외부로부터 일방적으로 주어진 형식적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신문의 역할이 지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맥락 속에서 50년대 신문(인)에 대한 지배적인 사회적 요구가 무엇이었는지를 찾아내고 그러한 논의가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었는지를 추적하고자 한다.

한편, 페미니즘이 발달하고 커뮤니케이션학에서 비판적 관점이 도입되면서 신문에 대한 여러 사회적·정치적 힘 특히 젠더의 영향력에 대한 우리의 감수성은 확실히 증가한 반면, 이들 힘이 신문의 주요 개념형성에 끼친 실제적 영향 및 그 구체적인 과정에 대한 우리의 여성주의적 이해는 그에 비례하지 못한 듯하다. 그래서 연구자는 본 장에서 당시 신문(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젠더적 변수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도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젠더화(gendering)의 과정을 드러내고자 한다. 젠더화란 통상적으로 보편적 가치라고 간주되던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젠더분리에 의해 그 의미가 구성되는지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자유, 객관성, 공정성 등의 의미는 통상적으로 보편적 가치라고 이해된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이 형성된 역사와 개념들에 의해 만들어진 정치 구조를 분석하면서 여성주의자들은 이 개념들이 보편적인 규정이 아니라, 젠더 분리에 기초한 역사적 개념임을 비판적으로 분석해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분석과정을 통해 성별 이데올로기(젠더)가 신문의 사회적·정치적·지적·제도화 과정에서 중요한 조정 역할을 한 매개자였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왜냐하면 신문의 제도화 과정에서 구체화된 특정한 가치체계가 형성될 때,

성별의 은유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에 주의하지 않고서는 한국 신문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연구자가 논문에서 밝혀내고 드러내고자 하는 문제점은 신문 내에서의 여성의 상대적 부재가 아니다. 즉 단순히 여성 부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기자들이 남자였고 계속해서 남자지만, 신문 인구의 구성 그 자체가 신문에 남성성을 귀속시키는 점을 설명하지 못한다. 신문 인구가 현재까지 압도적으로 남성 인구라는 사실은 신문에 남성성을 귀속시킨 원인이라기보다 결과이다. 따라서 연구자의 의도는 신문과 남성성과의 연상작용이 어떤 역사적 과정 속에서 형성되었는가를 당시 신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드러내고 싶은 것이다.

1. 가부장적 공적 주체

1) 공기(公器)로서의 신문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의 한국 신문이 나아갈 길을 몇 가지로 추린 글에서 당시 신문계의 상황을 우회적으로 읽을 수 있다. 당시 신문의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공급과잉이었다. 수지도 잘 맞지 않는 신문을 양면(1면: 정치면, 2면: 사회면)으로 발행하면서 활자크기가 너무 작고, 기사 자체를 한문 음만 국문자로 써서 일반인들이 신문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없게 만들었다. 그래서 발행부수가 늘지 않는 신문을 더더욱 특수층으로 한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창의성 있고 독자를 이끌어가는 기사보다는 외신을 그대로 번역만해서 실는가하면 적극적인 취재활동을 통해 기사를 발굴하기보다는 그날그날의 지면만 메우는데 급급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었다(이건혁, 1950, 41쪽).

전쟁과 함께 1950년대를 맞이한 당시 신문인들은 전쟁을 겪으면서 신문의 위기를 실감하게 되었다. 특히 전쟁으로 인한 부동심리의 작용은 신문을 더욱 더 자극적이며 관능적인 면으로 치우치게 했다. 이러한 전쟁심리에 덧붙여 국내의 파벌적인 정당들은 신문을 정치적으로만 해석하려 할 뿐 아니라 정치의 도구로 인식하여 신문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었다. 게다가 신흥사업주들은 자신들 상업의 전위대로 신문사를 경영하면서 신문도를 지키고 있지 않아 당시 한국 신문계는 ‘극히 화약지대를 아무 소방장치 없이 좌충우돌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꼴’로 신문의 위기를 진단하고 있었다(김기영⁴¹⁾, 1952, 123쪽).

당시 경영수지도 맞지 않는 신문사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 ‘신문사태’라 불릴 정도였다. 이러한 신문 과다현상으로 인해 신문의 권위가 확립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이비 기자들이 출현하여 신문기자의 품격도 저하되고 신문의 경영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신문정비론이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했다(최준, 1955).

“사실 일국의 원수의 말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신문인 자신들이 먼저 이점에 머리를 앓고 있었다. 솔직히 말하여 수십 년의 언론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 신문인들도 오늘의 신문이 너무나 많음을 개탄하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들도 어느 정도의 신문이 자연 정리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왜냐하면 신문사태로 말미암아 빚어 나오는 수다한 폐해가 하나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최준⁴²⁾, 1955, 122쪽)”.

이때의 신문정비론은 정치적 도구로 전락한 명목뿐인 신문사를 수적으로 정리하고, 조야한 수준의 지면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인다. 그리고 신문정비의 궁극적 목표는 신문의 권위를 재확립시키고 기자의 저하된 품격을 원상회복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시 신문인들은 자신들의 권위와 품격은 어디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을까? 다음의 논의는 이러한 질문에 답을 주고 있다.

41) 당시 경향신문 사회부장

42) 당시 서울신문학원 강사

“언론은 신념이다. 권력과 금력과 폭력에 아부하거나 굴하지 않고 그 신념의 실천에 매진하는데 언론이 무관의 제왕을 자랑할 수 있는 스스로의 위신과 권위를 보지한다 할 것이다(김홍수⁴³⁾, 1952, 104쪽)”.

당시 기자들은 ‘권력과 금력과 폭력에 굴하지 않는’ 자세가 스스로 당당할 수 있는 근거라 믿었고, 이러한 당당함이 언론의 권위와 품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언론은 신념’이 될 수 있었고, 기자는 ‘국민의 양심의 대리’로서 이러한 신념을 실천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었다(우승규⁴⁴⁾, 1952, 182쪽). 그리고 이러한 신념의 실천으로써 세론을 창조하고 여론을 반영시키는 사회적 공기로서의 신문의 역할이 최고의 임무로 주어지는 것이었다. 때문에 이름만 내건 허울뿐인 우후죽순의 신문사는 권력과 금력과 폭력 앞에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신념에 치명적이었으며, 공기로서의 신문의 역할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언론이 사회의 공기로서 그 사회의 목탁이 되고, 엄정중립의 자세를 금과옥조로 내세우지만 이러한 신념이 곧바로 실천으로 이어지는데는 여러 가지 사회적·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제약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기도 했다(김홍수, 1952, 104쪽). 이는 당시 사회의 공기를 자처하는 언론과 정치와의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언론의 자기모순을 깨닫는 과정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아래의 글에서는 이러한 인식이 보다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신문이 사회의 공기성을 어느 정도 충실하게 견지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그 신문을 운영하고 제작하는 구성체의 교양도와 엄정한 자기 비판적인 자각여하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임은 논할 여지가 없다. 신문은 또한 사회의 목탁이라고 하는 만큼 대중의 복리, 대중이 지향하는 옳은 길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이와 상시되는 주관적인 세계관에 자유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문은 정의만이 생명이요 공정만이 사명인 것이다. 불의를 지

43) 당시 중앙일보 주필

44) 54년 당시 동아일보 논설위원

원조장하고 편협을 일삼는 신문이 있다면 그것은 사회의 목탁으로서의 임무를 다하기 전에 이미 그에 몇 배되는 사회악을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폭군 불량아적 존재가치밖에는 남지 않을 것이다. 과연 우리나라의 신문의 실태는 여하한 사회적 위치에 놓여있는 것인가 정치와 경제와 사회 그리고 광의적인 문화적 각도에서 이것을 더듬어볼 때 우리나라의 신문은 아직 사회의 목탁적인 자기 본 사명을 다하고 자타가 인정할 만한 자신을 지닌 것에 회소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한경수⁴⁵⁾, 1956, 62쪽).

위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의 공기로서 신문이 지녀야하는 최대조건은 ‘정의와 공정’이다. 따라서 신문인은 불의에 맞서 정의를 지켜내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편협함을 경계하며 공정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신문의 ‘정의와 공정’은 결국 신문인으로 하여금 권력과 금력 및 폭력에 굴하지 않는 당당함을 요구했으며 이것이 바로 당시 신문인들이 지켜내야 하는 품격과 위신이었다.

당시 혼탁한 사회 분위기는 신문으로 하여금 사회적 공기(公器)로서의 역할을 강조하였는데(김기영, 1952; 김홍수, 1952; 조병옥, 1952; 한경수, 1952), 이러한 논의들은 전후 복구의 과정에서 경제적·정치적 혼란과 마주한 신문의 사회적 위치 설정이 어떻게 행해졌는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여전히 전근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사회적 목탁으로서 ‘민심’을 헤아리고, 사회의 공기성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으로 신문인들은 자신들의 ‘품격과 위신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신문은 당시 격동의 공간에서 공적 주체로 자신을 정체화하면서 한국 사회의 주요 공적 영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자 하였다. 이는 이후 신문의 정치성으로 발현되며 50년대 후반에서는 이러한 신문의 과잉정치성이 한국 신문의 후진성 극복을 위한 주요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사회적 목탁이라는 대명사로 공기로서의 언론의 임무를 강조한 논의들은 뒤집어 생각한다면 당시 새로운 국민국가 수립을 통한 공적 영역이 민주적인 방식

45) 당시 비평신문 사장

으로 제대로 형성되고 있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특히 이승만 정권이 대한민국 제1공화국으로 출범하여 민주정치를 표방하고 나섰지만 실질적으로는 독재·독선의 정치가 만연하여 사회적으로 정치 비판이 핵심적 사안으로 떠올랐다.

“언론은 사회의 거울과 목탁으로서 교육과 아울러 민주주의의 2대 지주의 하나이다. 국가는 사회통제의 기관으로서 언론을 통하여 알리워지는 사회 각 면의 신욕구 신문제를 이해파악하고 그 대책을 강구 실시하여야 한다. 생리상 고장을 풀려면 의사는 반드시 환자의 자기질병에 관한 연혁 급 증상에 관한 설명에 의거하여서만 적절한 진단처방을 하는 것처럼 국가는 언론을 통하여 집적된 사회 각 면의 사상에 의거하여 정치, 경제, 사회에 관한 신정책을 수립하는 외에 다른 비책이 없는 것이다. 국가가 주관적 독선적으로 사회의 병폐를 제거하는 방책은 의사가 만병통치의 약이 있는 것처럼 환자를 처리하는 것과 같은 술법으로서 이는 결국, 사회의 제 문제를 시정하지 못하고 그 사회와 그 국가를 해하는 독선 독재정치가 되고 말 것이다”(조병옥⁴⁶⁾, 1952, 12쪽).

따라서 당시 사회의 목탁으로 광범위하게 요구되었던 신문의 사회적 역할은 구체적으로는 ‘정의의 대변자’로, 사회의 불의와 악에 항거하는 사회 정화, 사회 교화의 선구자의 역할이 부여되었다.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신문의 역할에 대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논의들을 통해 공적 주체로서의 신문의 역할은 그러한 활동이 궁극적으로 사회선을 달성한다는 논의를 통해 정당성을 갖게 되었다(김기영, 1952, 123쪽).

이러한 신문의 사회의 목탁, 공기로서의 역할은 무엇보다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권세와 금력에 저항하면서, 공적 영역의 ‘감시자’로서의 신문인을 요구

46) 당시 이승만 정부에서 내무장관을 맡았다. 하지만 이후 이승만과 결별하고 1955년 사사오입개헌과동 이후 야당 통합운동을 통해 민주당을 발족하고 구파의 핵심 인물이 되었다. 조병옥은 한때 (1932년) 조선일보를 살리기 위해 경영권을 인수해 전무 겸 영업국장을 8개월간 맡기도 하였다.

하였다. 부정을 옹호하고 약자를 억압하는 불의에 항거하는 적극적 행위를 통해, 당시 신문인은 공적 주체로서, 국가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을 자연스럽게 할당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공적 주체로서의 신문의 역할은 국가권력에 대한 적극적 감시자로서, 신문의 ‘야당 정신’을 사회적 공기를 실현하는 선결 조건으로 내세웠으며, 이는 신문과 정부와의 관계를 적대적으로 설정하여, ‘억압에 대한 항거’, ‘부정과의 싸움’ 등의 용어로 대표되는 군사주의를 은연 중 표방하고 있다. 이는 전쟁을 경험한 당시의 군사화된 사회의 일면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결국 공적 주체로서의 신문이 자기 역할을 달성하는 것은 군사주의로 연결되는 강한 남성성으로 구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의의 편 억압부강에 대한 항거 그것이 과거에 있어서 언론의 생명이요 권위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면과 아울러 언론은 인류사회 국가민족의 정당한 발전의 최대의 협조자이다. 또 추진력이다. 비판과 계몽 협조와 지도 이것이 또 언론의 성격이요 의무이다.... 엄정한 언론 이것은 결코 흑도 백도 아닌 중립적 입장에서 경온적 중간 사상에서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단순한 시시비비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회 그 시대 그 국가 그 민족 그 인류 전체와의 복지이해관계를 전제로 한 엄정이다.... 정치가 어떤 개인이나 하나의 정당의 이익이나 그 ○○○○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민의 복지와 행복을 위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언론은 어디까지나 사회 국가민족의 발전을 위한 진정한 여론을 사실대로 반영시키는 책무를 완수하는데 그 사명이 있다 하겠다”(김홍수, 1952, 102, 105쪽).

이상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전쟁을 치르고 전후 복구의 과정에 있었던 1950년대 초·중반의 시기에 신문은 사회적 공기로서, 사회의 거울로서, 사회의 목탁으로서 혼탁하고 무질서했던 당시 사회를 정화하고 교화하는 역할이 강력하게 요구되었다. 그래서 당시 신문기자들은 불의와 맞서 정의를 지켜내고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저항적 이미지가 강했으며, 이를 통해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및 민족과 국가의 앞날을 걱정하는 지사로서 자신들을 정체화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신문(인)에 요구되었던 이러한 특징들, 즉 불의와 맞서는 강한 의지, 용기, 정의, 지도자 등은 남성성을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들이며 이것들이 공적 주체로서의 신문이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상정됨으로써, 상냥함, 겸손, 보살핌 등으로 말해지는 여성성의 특징들은 공적 영역에 어울리지 않는, 그래서 공적 영역의 중요한 구성 요소들에서 상대적으로 멀어지고 있다. 따라서 당시 신문(인)에게 요구되었던, ‘불의와 억압에 대한 항거’에 몸 바치고 ‘사회정화’를 이끌어내는 시대의 지도자 역할은 신문(인)의 공적 주체를 가부장적 정체성으로 구성하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가부장적 공적 주체로서의 신문은 앞서 언급한 남성성을 발휘함으로써 이와 연관된 전형적 특성들인 목표지향적(‘사회정화’)이며 단언적(신념적 언론)이고 독립적인(무관의 제왕) 신문을 사회적 공기의 중요 조건으로 드러내고 있다.

2) 지사적 신문 경영

당시 사회적 공기로서 신문의 지사적 역할을 강조하던 시대적 분위기는 신문경영에 대한 논의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다시 말해 신문 경영을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일환으로 사고하기보다는 일반 제조 상품을 생산해내는 경영과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신문을 경영하고자 하는 이들은 이러한 신문 경영의 특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서는 곤란하다는 논의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논의들은 전후 복구의 50년대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의 전환이 가동되려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인식이 아직 미성숙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신문은 사회의 공기요 기자는 사회의 목탁이라고 존엄한 대명사로 불리워져 오고 있으나 이것을 영위하는 업체는 틀림없는 영리기관인 것이며 이 기

관에 종사하는 기자는 또한 틀림없는 직업인인 것이다. 영리기관이면서도 사회의 공기라고 존경을 받게 되는 연유는 오로지 그 출발의도가 경제적 조건에만 목적인 것이 아니고 지상목적이 사회의 정화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교화라는 고상하고 숭고한 사명이 부가되어 있기 때문에 영리가 전시되기 전에 그러한 존칭대명사를 얻게 되었던 것이다.... 역사가 거짓을 말해서는 아니되는 만큼 신문이 거짓을 일삼아서는 아니되는 것이며 신문이 범하는 거짓의 과오는 역사의 기록이 범하는 거짓의 해독이상으로 현실적으로 대중에게 해독을 끼치는 것은 다시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귀중하고 신성한 사명을 가진 상품을 만들어 내는 신문경영에 있어서 어떠한 특수성이 있는 것이며 경영자 또한 사회적으로 어떠한 제약하에 놓여져 있는가 하는 문제의 구명은 신문의 성격이나 정의를 규정짓는데 중요한 과제의 하나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신문은 경제적 가치에 그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 가치, 문화적 가치에 보다 더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 조건과 병행내지는 선행하는 대중의 정신문화적 조건이 신문생산을 좌우한다는 것이다”(한경수, 1952, 96~97쪽).

위의 논의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신문기자들에게 요구했던 ‘무관의 제왕’, ‘사회의 목탁’이라는 정체성이 신문 경영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당시 신문의 가치가 경제적인 것에 선행하여 정신적인 것에 보다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확고한 근거 하에, 신문을 경영하는 것은 그 사회의 선구자적인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함으로써 신문 경영주들에게도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은 한편으론 당시 신문을 경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신문의 사회적 공기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신문사업에 뛰어들었음을 반증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50년대 초·중반 신문사가 우후죽순으로 생겨 적자경영에 허덕이는 신문사가 태반이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폐해 또한 심각하여 언론인 내부에서도 신문정비론이 대두되기도 했다.

“더구나 신문 경영자 중에는 일생을 신문인으로서 혹은 신문기업가로서 종신하려는 굳은 결심도 없이 하나의 방편으로 이에 진출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인다. 이러한 경영자의 부업적 기업체인 신문사에 종사하고 있는 기자들이야말로 생각하면 하나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하나의 구체적인 성산도 없이 최소한도의 적자경영을 처음부터 자인하고 적자경영을 계속한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빈약한 신문을 이끌고 나가는 것으로써 자랑으로 삼는 사람도 있다. 이것은 자기 만족은 될지 모르겠으나 신문계 전체를 위해서는 확실히 하나의 마이너스팩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최준, 1955, 122쪽).

따라서 당시는 신문의 경영을 통한 이윤추구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부정적 견해가 팽배하였다. 하지만 신문의 적자경영이 오히려 사회적 부정을 양산하여 불의에 맞서 사회정의를 실현해야하는 신문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꼴이 돼 버려 당시 신문경영의 일천함을 문제제기하며 50년대 중반에는 신문의 건전한 영리주의를 주장하는 논의들이 대두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목소리는 당시 언론 자본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이전이어서 주변화 되고 말았다.

“미국의 자본주의가 제아무리 발달했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이 나라의 신문 주식이 월가의 주식시장에 등장하였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였으며 미국의 개인주의가 제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사회도위에 입각한 공중심이 저바려져 있지 않을뿐더러 민주주의 실천에 이상향을 개척 양양하고 있다는 사실은 웅변이 이 나라의 신문언론이 걸어가고 있는 건전성을 말하는 것으로 계시 되는바 적지 않은 바이다. 이러한 미국의 신문자본 신문경영자의 엄연한 특수성은 결국 신문이 일반경제상품이 아니라는 것과 신문경영자가 일반 이윤 추구만을 목적인 기업주가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말해 주는 것으로 우리들의 좋은 참고가 되는 것이다”(한경수, 1952, 100쪽).

위의 논의에서 우리는 당시 신문이 적자경영을 메우기 위해 부정·부패와 각종 비리에 연루되는 악순환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신문을 단순히 기업활동으로 여겨서는 곤란하다는 주장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한국일보>가 54년도 창간될 때, ‘상업주의’를 표방하고 나선 것은 단순히 선정적이고 재미있는 보도로 이윤을 남겨 주식시장에 등장하고자 했던 취지보다는 사회

적 부정을 양산하는 그런 적자경영에서 탈피하여, 건전한 기업 경영을 통해 신문의 사회적 공기를 충실히 지켜내고자 한 취지에 더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아래의 글도 오히려 흑자경영이 신문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으리라는 그 시대로서는 드문 논의였다.

“우리나라에는 신문의 영리주의를 옹지 못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인사들도 적지않은 것 같은데, 이것은 건전한 영리주의 엄격한 독립재산제의 채택이야말로 신문자본의 축적과 그 독립적 주체성을 확립해주고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쉼리즘의 레벨을 높이는 방도라는 것을 잘 모르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한다”(신상초⁴⁷⁾, 1955, 117쪽).

따라서 당시 신문 경영에 대한 인식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었지만 이것은 자본주의적 신문 생산체제에 대한 인식이라기보다는 신문이라는 것이 일반 제조상품과는 다르게 단순히 이윤만을 추구해서는 성공할 수 없는 특수한 성질의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신문경영의 특수성을 인식하는 신문(인)은 불의와 억압에 더욱 더 맹렬히 저항함으로써 품격과 위신으로 상징되는 지사적 경영인상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 세계사조의 발달은 국가에 폭군적인 제왕의 정치가가 필요치 않게 되었을 뿐더러 용납할 여지가 없듯이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무시하고 그 진정한 발전을 조해하는 신문이 용납될 수는 없는 것이다. 금일의 민주주의 정치가 민주주의적인 사회, 민주주의적인 경제, 민주주의적인 문화를 토대로 하고 그 기반위에서만 올바르게 수행되고 발전될 수 있는 만치 대중과 사회의 이익을 저버린 신문이 사회의 공기될 수는 없을 것이며 그러한 신문 기자가 또한 사회의 묵탁 이후 무관의 제왕 될 리도 만무한 것이다.

신문은 항상 어려운 것을 극복하고 부정과 싸워서 이기는데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권세이나 금력에 아부하여 부정을 옹호하고 약자를 억압함으로써 만용의 기세를 올리는 따위가 용납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데서 신문

47) 당시 서울대 강사

의 사명은 신문경영자의 정의심을 요청하게 되는 것이니 그는 항상 사회의 부정과 싸울 줄 아는 의와 이러한 고통스러운 일을 극복할 수는 있는 지성의 소유자이어야만 할 것이다”(한경수, 1952, 99쪽).

당시 신문 경영에 대한 위와 같은 논의들은 신문을 ‘신성하고 귀중한 사명을 가진 상품’으로 설정함으로써, 신문 경영자에게도 ‘지사적 신문(인)’의 이미지를 투영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의 등장 배경은 당시 사회적 공기로서의 신문의 지사적 역할을 중요하게 내세우면서, 신문 경영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신문의 사회적 영향력 및 의미를 부각시키고 이를 통해 가부장적 공적 주체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자 하는 당시 신문인들의 열망이 과잉으로 대표(over-representation)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2. 가부장적 국가의 지사적 주체

1) 지사주의 : 전투적 남성성의 발현

50년대 신문기자들은 일제시대의 민족적 지사의 정체성을 계승, 강화하고자 하였다. 구한말 국사적 기자로 분류되던 신문기자들은 논설이나 탐방 기사를 막론하고 지도성이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이들은 신문제작을 하나의 애국운동으로 인식했으며 몸소 현실 정치에 뛰어들어 민권운동과 애국운동을 실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최준, 1977, 159쪽). 50년대 중반에도 지사로서의 기자에 대한 호명은 일제 식민지 시대를 평가하는 가운데 다시 소환되고 있다. 당시 신문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서 일제 시대의 기자를 ‘민족적 지사’로 다시 소환하는 까닭은 신문의 사회적 역할을 지사로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함인데, 이러한 과정에서 당

시 신문의 지사적 역할이 위기에 처해 있음과 신문과 정치의 호환성 및 상호침투성이 매우 높음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날의 우리나라 신문과 신문기자의 행적을 살펴볼때에 그 어느것 하나도 빠짐없이 당당하였다. 신문이 민중의 절대지지를 받았고 기자역시 민중의 존경을 받았다. 한제국당시부터 일제 식민지때까지의 신문기자는 일종의 민족적 지사이었다. 따라서 ‘사회의 목탁’이라든가 ‘무관의 제왕’이라는 이름까지 들었었다. 이에는 이유가 있었다. 월급을 반년 내지 1년씩 받지 못하고 동절에 외투도 입지 못했어도 민족을 위한다는 하나의 굳은 신념과 긍지를 가졌던 때문이요, 또 하나는 기자로서의 고상한 기개와 품격을 굳게 몸에 지녔던 때문이었다”(최준, 1955, 122쪽).

‘사회적 목탁’, ‘무관의 제왕’, ‘춘추의 필법’ 등으로 상징화된 신문기자들은 당시 한국사회의 화두였던 민주주의를 위해 정치적 공간으로 뛰어들었다. 여기서 ‘무관의 제왕’으로 호명되는 지사적 신문인에 대한 논의는 남성적인 ‘전투력’의 상징이라 볼 수 있다. 손에 펜을 쥐고 권위주의 권력에 저항하며 민주주의와 자유를 방어하고, 이를 위해 때로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걸 수 있는 기개와 지조는 남성의 준비태세와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또한 당시 자발적이며 헌신적인 지사적 신문인의 전투적인 남성성을 함축하고 있기도 하다.

이렇듯 당시의 기자들에게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기초적 작업으로 정치적 권력에 대한 감시 및 비판이 요구되었다. 이들은 스스로를 국민의 지도자로 위치 지우며, 당시 정치 사안의 핵심이었던 정부 정책, 선거 및 제반 입법추진 등에 깊숙이 개입하여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임으로써(이종극, 1956b, 홍종인, 1960), 혼돈에 처한 민족과 국가를 구하고자 정치 권력에 저항하고 비판하는 지사적 이미지를 강화시켰다.

“가난과 무식이라 하는 한국사회의 최대의 ‘악’을 퇴치하기 위한 정치와 교

육이 앞서 지적인 바와 같이 그 본래의 사명과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점차 비민주화해온 데 대하여 우리 사회의 반발, 항쟁은 과연 어떠한가?....국민의 기본권리를 보장해야 할 대의민주정치가 독재적 경향으로 흘러도리어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데 대한 이른바 ‘민주투쟁’은 다음과 같은 두 기관에 의하여 최근 과감하게 전개되어 왔다. 첫째로 야당의 입장에 선 언론기관 특히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은 보도와 논평 기타 신문의 전 기능을 총동원하여 공무원의 부정과 비행을 적발하고 위정자의 행동을 감시하고 일반 시설의 비민주적 경향을 지적, 비판하여 왔다. 이 중에서도 소위 불온문서사건, 김성주 살해사건, 개헌파동, 중요국영기업체불하사건, 야당의원 데모사건, 선거간섭부정투표사건 등은 아직도 우리의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것이다. 야당계 언론기관의 그와 같은 민주투쟁이 얼마나 국민대중의 환영을 받았느냐는 이 두 신문의 발행부수(독자수)가 최근 1년 동안에 두배 내지 세배로 약진한 것을 보아도 가히 알 수 있다. 사실말이지, 만약에 위와 같은 언론기관의 적발보도와 공격논평이 없었거나 미지근했다라면 관권의 행패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만큼 우심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사회악을 막아내는데 있어서 언론기관의 사명이 큼에 새삼스럽게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소이이다”(이종국⁴⁸⁾, 1956b, 276~277쪽).

위의 논의에서 드러나는 것은, 당시 지사적 신문으로서의 기개와 품격이 무엇으로 드러나는가이다. 이는 민주주의를 실현하지 못하고 독재적 경향으로 흐르는 가부장적 국가 권력에 저항과 비판으로 당시 신문의 지사주의를 달성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신문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참여했던 지식인들은 권력에 굴복하거나 혹은 권세에 아부하는 언론은 민중과는 항상 유리되는 법이고 민주국가를 건설하는데 있어 걸림돌이 된다고 봄으로써, 신문의 권위를 ‘권력도 권세도 두려워할 줄 모르며 오로지 대중을 위한 정론만을 부르짖을 때’ 달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신문의 권위는 대중의 신뢰감으로 가늠할 수 있으며(최준, 1955, 121쪽), 이는 신문의 발행부수로 증명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당시 신문들은 이윤을 남기기 위한 상업적 목적에 의해서가 아니라 ‘권위있는 신문’의 증거로 발행부수를

48) 당시 중앙대학 법학과 교수

평가했으며, 이는 당시 신문을 더욱더 정치와 관련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앞선 장에서 사회적 공기로서 가부장적 공적 주체가 정체화되었던 신문은 지사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이 가부장적 국가권력에 저항과 비판으로 설정됨으로써, 신문과 정치권력과의 관계 설정이 적대적이고, 경합하는 갈등의 관계로 만들어 나갔다.

이와 같이 당시 신문이 민중을 등에 업고 ‘대중을 위한 정론’을 자처하고 나선 것의 가장 큰 동기는, 겉으로는 권력에 대한 저항을 통해, 구한말 이래 내려오는 지사적 신문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것이었지만 이는 결국 정치적 논쟁의 한 가운데서 정당으로부터 취재원을 확보하고 신문을 많이 팔고자 하는 정치적 선정주의가 깔려있다. 그래서 이 당시 신문의 상업성은 바로 정론성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당시 신문에 대한 논의에서 드러나는 것은 신문이 권력과 권세의 앞제비가 되는 것의 단호함을 보여주기 보다는 오히려 반대적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다. 앞서 신문정비론에서도 나왔듯이 당시의 신문은 권력에 저항하기보다는 쉽게 굴복하며 경합과 갈등의 관계이기보다는 공모의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정치권력과의 연계를 통해 동시에 권력화되는 남성성을 발휘한다.

구한말과 일제시대의 역사적 경험 속에서 신문인은 민족적 지사로 상징화되었으며, 이러한 지사적 이미지는 대중들로부터 상당히 호의적인 태도를 형성케 하였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한국전쟁 이후 혼란하고 무질서한 사회적 조건 속에서 신문은 더욱더 지사적 전통을 계승하고자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새로운 국가건설, 사회건설의 과제가 주어진 정치적·경제적 혼란기에 신문은 여전히 사회의 공기로서 공적 영역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경제적 자립도 모색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할 때에만 공적 영역의 주도자로서, 공적 영역의 또 다른 주도자였던 정부에 대해 자기 정당성을 갖고 민족적 지사로서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 하에 당시 권력에 대한 저항과 정의로움이 신문의 생명으로 등장하였는데, 이는 뒤집어보면 그만큼 신문의 정치권력화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발현되었을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다. 즉 권력을 비판하면서 권력화되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당시 신문이 특정 정당의 기관지 역할을 하여 또다른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된 배경은 이런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2) ‘기자정신’ : 유교적 남성성의 구성

사회의 모든 불의와 폭력에 저항하여 정의를 지켜내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한 사회적 책임이 주어진 당시의 기자들에게 우선적 요구되는 것은 경제적 실리에 연연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청렴의 자세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는 일에 매진하고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는 이들이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연연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중을 속이지 않는 민주발전의 투사로서, 오직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양심에 의해 판단하’ 청렴한 기자를 지사적 신문인의 주요한 구성 요소로 담론화 하였다.

“양심없이 반성을 할 수 없는 까닭으로 양심으로 살고 양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만이 겨레와 국가를 위해서 유용할 것임으로 비양심적인 어떠한 행동이건 있을 수 없고 혹 이로 말미암아 민중을 일시 미혹하는 일이 있다 손 치드라도 그것은 곧 최악이며 국가에 대한 반역이다. ‘나물 먹고 물 마시고.....’ 이것은 현대경제를 무시한 것이요 생존경쟁의 낙오자라고 지탄하는 자가 있을지 모르나 양식을 밥삼고 국민을 식구요 반려로 생각한다면 펜의 힘은 총포의 그것과 비교도 안될 것이다....승리의 민주발전의 제2선 투사로 자처하는 신문인만이 남보다 잘 살고 잘 입고 잘 먹는다면 그것은 국가적으로 치욕이요 비위다. 이것을 추구하는 관계자가 있다면 단연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동양적 윤리관에서 뿐 아니라 서구 문명우방의 그 계급에 있어서도 청빈을 감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민재정⁴⁹⁾,

49) 당시 경향신문 편집국장

1952, 12쪽).

위의 논의에서 볼 수 있듯이, 비양심적인 기사를 질책하면서 양심을 지키고 기자로 하여금 청렴결백을 요구하는 당시의 논의는 일정 정도 기자의 정체성을 전통적 유교사회의 남성성(선비)으로 구성하는 작업이라 볼 수 있다. 글쓴이도 이를 의식했는지, 청렴결백을 요구하는 것은 동양적 윤리관에서 뿐 아니라 우리가 꿈꾸는 미국에서도 그러함을 글 말미에 던지시 넣고 있다. 예로부터 선비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른말을 할 수 있는 기개와 생활의 궁핍에 초연할 수 있는 의연함이 필수적 덕목으로 요구되었다. 이러한 유교 사회의 대표적인 남성인 선비의 이미지는 50년대 지사적 신문인의 이미지에 겹쳐지고 있다.

“신문인은 ‘국민의 양심의 대리인’인 동시에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충복’이어야 한다. 특히 논설면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해야만 하는 것이니 집필자의 의견을 기탄없이 논술하거나 국민 대다수의 물의 즉, 여론이 그 어떠한 방향으로 쏠릴 때엔 주저없이 그 선에 쫓아 비판하는 것이 언론인에게 지워진 유일한 의무다. 이것을 고의로 앓거나, 또는 어떠한 압력으로 못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우상적이고 사물화한 소수층 특종엔 필요한 듯 하면서도 다수 대중층에겐 긴요치 않은 존재다”(우승규, 1952, 182쪽).

위의 논의에서는 언론인은 오직 국민의 뜻에 의한 글만 쓰기를 주장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대다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는데, 그러한 능력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생략되어 있다. 이것으로 봐서 언론인은 이미 그런 능력은 갖추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사실 국민의 대변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다수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이 우선적으로 중요해진다. 따라서 기자의 시선이나 위치가 누구의 것인가를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내가 어느 집단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고 있는가를 체크하는 자기 성찰적 자세가 필요하다. 하지만

당시의 논의들 속에서 지사적 신문인이 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직업적 조건을 제시한다든가 공공의 충족이 되기 위한 전제로서 기자들 자신의 사회적 위치에 대해 점검을 한다든지 하는 작업들은 대체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래의 글은 당시로서는 예외적으로 ‘언론인들의 정신적 태도’에 관해 논의하고 있는 글이다.

“....상술의 사회개조와 언론의 관계를 참고할진대 언론인에게 부가된 임무가 중대함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오인은 언론인의 가질 태도 급 활동에 대한 몇 가지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언론인은 어디까지든지 학구적이어야 한다. 언론인의 정신적 태도는 어디까지나 편파성을 이탈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그것이어야 된다....그러므로 언론인의 임무를 충실히 하기 위하여는 사회실상을 파악하기 위한 재료조사 수집 특별히 통계적 집계 자기의 과학적 충실성을 다하여야 한다. 현실의 파악이 없는 사회문제에 대한 결론 즉 해결책이란 것은 몽상론이 아니면 혼란, 선동, 파괴의 장본밖에 안될 것이다. 이렇게 충실히 집적된 사회적 사실을 예리엄정한 분류 급 해석의 비판적 과정을 통하여 내린 결론이라야 과학적 타당성을 띤 것이요, 따라서 실현될 수 있는 제 정책으로 채택될 수 있을 것이다. 언론인의 정신적 태도에 대한 상기의 원칙은 광의의 언론인 즉 신문잡지에 종사하는 평론가 급 기자들의 활동에도 충실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평론가 급 신문인들은 사회 내에 일어나는 사실을 허위와 왜곡이 없이 사실 그대로 사회에 보도하여야 한다. 선동적이고 허위의 평론 급 보도는 오히려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공정한 여론형성에 대하여 악영향을 줄 뿐이다. 언론인은 특별히 인사의 논평에 있어서 공평을 기해야 한다”(조병옥, 1952, 13쪽).

전쟁 이후 분단이 고착화되고 국가권력은 점점 비대해지는 과정에서 언론은 무엇보다도 이러한 권위주의적이고 독재적인 국가권력에 맞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겨레와 민족의 앞날의 등불이 되는 지사적 임무가 주어졌다. 하지만 당시의 혼란한 사회상은 언론의 정치적 과잉을 초래하여 지사를 실현하는 방식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그래서 50년대는 정론지의 시대라 하지

만 이때의 신문의 정론성은 “공갈신문, 모략신문, 사기신문” 등으로 “정치소아병, 권력 이용물”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는 일천한 수준이었으며(오소백, 1952, 145 쪽), 이는 신문의 정치적 선정주의를 낳았다. 위의 글은 그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구체적으로 언론인이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를 ‘언론인의 정신적 태도’로 서술하고 있다. 당시 지사적 언론인이 되기 위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는 과학적 충실성이었다. 자신의 주장 및 논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과학적 타당성이 입증된 증거들을 제시하라는 주문이다. 이를 통해 당시의 신문의 보도 내용이 정확한 사실보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당시 지배적 담론으로 자리 잡았던 지사적 신문의 현실적 구현이 정치적 선정주의와 뒤섞임으로 해서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신문계의 현실은 50년대 중반 이후 한국 신문에 대한 새로운 기운들을 요구하게 되는 근거로 작용하였다.

50년대 언론에 대한 국가권력의 권위주의적이고 직접적인 물리적 통제방식은 한국 기자 집단의 성격을 더욱 저항정신으로 무장하는 계기를 제공하여 민주주의 제도의 수호자로서 스스로를 정체화 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러한 저항정신은 역사적으로 내려오던 지사적 전통과 결합하여 이후 정의를 신봉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지식인 남성의 이미지로 한국 신문을 상징화 하였다.

한편, 50년대의 이러한 지사적 신문인에 대한 희구는 60년대 중반 쯤 언론계에 ‘세대교체’ 논의가 불거지면서 주춤거리기 시작한다. 50년 중반에 제도화된 기자공채제도를 통해 신문계에 입문한 이들이 60년대 중반 쯤 언론계의 간부가 되어 공채 견습기자를 뽑는 일에 관여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은 지사형 신문 혹은 지사형 신문기자를 하나의 이상으로 삼고 활동하면서 그러한 신념을 가진 지원자를 뽑으려고 했지만 막상 기자공채제도에 응시하는 60년대 중반의 지원자들에게 신문은 그저 평범한 하나의 직업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으면서 이에 대한 유감을 토로하고 있다(강영수⁵⁰⁾, 1965; 송건호⁵¹⁾, 1965). 또한 기자공채제

도를 통해 지원하는 대학졸업자들은 기자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강한 위계의식이 희박하여 선배기자들을 깎듯이 모셔야하는데 그렇지 못함을 문제제기하고 있기도 했다(조풍연⁵⁰⁾, 1965).

이러한 논의 속에 드러나는 50년대 기자의 이미지는 근대화 과정 이후 드러난 현대적 '남성다움'과는 차이를 보인다. 한국의 6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가족부양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의 자부심은 한국 남성들로 하여금 조직에 순응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경제구조를 안정시키는 주요한 토대가 되었다. 근대화프로젝트를 거치면서 이후 등장한 '남성다운 남성'의 표준형은 서구 영화에서 그려왔던 책임, 결단, 독립성, 성취주의, 힘 그리고 합리성을 갖춘 인간상에 근접해 있었다. 이러한 현대적 남성성은 전통사회에서 내세운 문사적이고 균형잡힌 인간상과는 크게 내용을 달리한다(조혜정, 1988, 250~251쪽).

그런데 지사적 신문인에서 보여지는 남성성은 현대적인 남성다움보다는 전통적 남성다움에 더 가깝다. 전통사회의 이상적 남성성은 유교의 영향으로 명분주의적이고 이상주의적이며 정과 의리를 매우 중시하는 사회성 높은 남성이었음을 고려할 때 신문의 지사적 이미지는 이와 일맥상통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적 유교의 남성다움은 현실 생활에서는 상당히 나약하고 상호의존적인 인간으로 드러나는데 당시 궁핍한 생활로 대별되지만 기개를 잃지 않아야 하는 '기자정신'으로 대변되는 신문인의 자세는 유교적 남성성의 은유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당시 기자라는 신분으로 부정·부패를 일삼고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기자의 품격과 위신을 떨어뜨리던 사이비 기자들은 명분을 지키지 못하고 기자정신을 버렸기 때문에, 품격과 기개를 잃지 않는 유교적 선비의 이미지와 맞닿아 있지 못했으며 이는 당시 지사적 신문인이 추구하던 유교적 남성성과는 거리가

50) 당시 대한일보사 주필 겸 전무

51) 당시 경향신문사 논설위원

52) 당시 소년한국일보사 주간 겸 한국일보사 기획심의위원

떨었다. 그래서 당시 지사적 신문인을 열망하던 이들은 이러한 유교적 남성성의 실현 여부를 근거로, 끊임없이 사이비 기자들과 자신들을 구별하고 있다.

따라서 ‘지사적 신문’으로 당시 신문을 정체화한 이러한 작업들은 신문계 내부의 기자들을 구분하고 위계짓는 사회적 담론 생산의 일환이었으며 이는 더 나아가 신문계를 자격을 갖춘 남성들과 자격을 갖추지 못한 남성들끼리의 경쟁 지역으로 상정하는 효과를 낳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작업들은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국가 권력에 저항하는 신문을 공적 주체 및 지사적 주체로 구성해면서 유교적 남성성의 특징들을 부여하고 있다. 50년대를 통해 이러한 사회적 논의들이 지속적으로 강조되면서 신문은 젠더화된 방식으로 정체화되고 있었다.

3. 논객으로서의 정치적 주체

1) 신문의 정치성을 통한 남성화 전략

당시 한국 사회의 최대 이슈는 민주주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회 곳곳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특히 정치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돼있던 당시는 정치적 민주주의에 대한 사회적 논의들이 많았다. 신문의 정치성은 이러한 맥락과 관련지어 설명될 수 있다. 즉 당시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치권력의 감시자로 신문의 과도한 정치성을 정당화하고 있었으며 나아가 언론자유에 대한 사회적 요구 또한 민주정치의 전제조건(신도성⁵³⁾, 1952, 154쪽)으로 컸다 중요성을 획득하고 있었다.

당시 사회의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는 정치적 부문에 집중되었는데, 이는 ‘대의정치, 책임정치, 대중정치’로 이름 붙여졌다. ‘대중정치’는 대중의 여론에 지배

53) 당시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동아일보 논설위원

되거나 여론에 따라 자기반성을 하고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는 정치로 말해지면
서, 민주정치는 기본적으로 대중정치와 여론정치를 요구할 수밖에 없음이 제시되
었다(이종극, 1956a).

이른바 대중매체는 이러한 대중의 여론을 전달하고 지도하는 매개수단이 된
다는 점에서 중요한 소임이 부여되었으며, 그중에서 신문은 특히 사회의 목탁으
로서 여론의 형성, 전달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이 중요하게 부각되었다(이종
극, 1956a, 186쪽).

“정치는 언론을 통하여서 모든 대중적인 의사소통방법을 구사하여서 정치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요 또 언론의 발양으로써 정치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과 상호존경이란 것을 충분히 정치에 반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인간성의 진실한 탐구에 의한 정치는 즉 민주정치의 요체이고 이러
한 정치적 기능은 진정한 언론과 유기적 관계를 맺고 언론의 동향을 주시하
고 언론의 존엄성을 인식함으로써만 기대되는 바이다. 정치가 가장 혼란하
였을 때 정치가 모색의 과정에서 고뇌할 때 정치가 지향하는 바 목표에 대
하여 크나큰 시련을 받았을 때 이것을 부액하고 시사하고 격려하고 편달하
는 것은 언론이요 그 언론은 민중이나 국민의 대변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김홍수, 1952, 106~107쪽).

“우리 한국사회에서 현재 여론이 그 제대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으로서는 대중의 지성도가 선진제국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낮다는 사실
외에 다음의 세 사실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소위 대통령중심제의 정
치기구가 우리나라에서는 여론의 기능발휘를 현저히 조해하고 있다는 사실
을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바이다. 우리의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으로서 강
대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행사의 결과에 관하여 국회
또는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입법권과 행정부 감시권을 가진 국
회도 또한 그 임기 4년 동안 국민에 대하여 하등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기로
되어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무책임주의의 정치제도는 대중이 그 여론을 통
하여 국회를 움직이고 정부의 시정을 좌우함으로써 여론 본래의 힘을 발휘
케 하자 하는 책임정치, 여론정치의 기본적 요구와는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므로 조속히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이종극, 1956a, 187쪽, 193쪽).

위의 논의는, 당시 사회가 언론에게 정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역할을 부여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 민주정치의 실현기제로, 사회의 대변자로 그 역할이 주어진 신문은, 자신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와 관련성을 맺을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신문은 앞선 장의 지사적 신문의 실천 기제로서 언론의 정론성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올바른 정론지는 결국 신문의 권위를 높이고 신문인의 품격을 높이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었다. 이것은 주지하다시피 구한말 및 일제 식민지 때 한국 신문이 민족적 지사로서 조선의 독립을 위해 정치운동을 병행한 것에 연원한다. 해방 이후 미군정기 역시 좌·우익의 대립이 극심하였고 신문 역시 좌익지와 우익지로 대별되었다.

그렇다면 당시 신문기자들은 왜 정치운동에 뛰어들었을까? 이는 구한말 및 일제 식민지 시기 기자들이 정치운동을 병행한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지사적 신문을 지배적인 담론으로 형성하면서 스스로를 정체화한 50년대 한국 신문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정치운동을 병행한 이전의 민족적 지사와는 다른 역사적 맥락임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의 신문이 지사적 정체성을 띠게 된 것은 식민지 시대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시기 기자들이 민족적 지사로서 조선의 독립을 위해 정치운동을 병행한 것은, 민족과 제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공간이 신문이었던 이유가 강했다. 그러므로 이런 민족적 지사로서의 신문기자가 나라의 독립을 달성한, 해방된 국가 속에서 계속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충원될 수 없었음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50년대는 무엇보다 근대적 국민국가의 형식 속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당시 기자들의 정치운동은 이러한 역사적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한국 전쟁을 통해 사회 전 부문이 파괴되어 재건의 상태에 있는 있었음도 주지해야 한다. 경제적, 산업적 여건이 열악한 당시의 상황은 정치를 공적 영역의 핵심으로 자리잡게 했으며, 권력 또한 정치부문으로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신문은 정치 영역과 새로운 관계를 설정해야만 했다. 따라서 당시 사회적 논의들은 정치권력 집중에 대한 감시자로서 신문을 위치

지웠으며, 이는 앞서 살펴본대로 신문을 사회적 공기로, 지사적 신문으로서 공적 주체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신문은 권력에 대한 유일한 감시자였으며, 따라서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국가권력에 대한 감시자요, 저항자로서 그리고 국민의 대표자로 위치 지워졌다. 이를 통해 신문은 근대적 국민국가를 건설하는 정치적 주체로 호명되었으며, 동시에 정치 영역의 가장 중심적인 주체인 국가, 정부, 정당 등과 경합, 갈등, 공모하는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신문과 정치와의 상호 침투적 관계는 정치 권력의 연계화(networking)를 통해 파벌을 형성하여 경쟁하는 남성성을 발휘하고 있다. 따라서 신문의 정치성을 통한 지사적 신문의 정체화 과정은 신문을 남성적인 공간으로 설정하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또한 정치적인 것을 공적인 동시에 남성적인 것으로 구성해 내면서, 정치적이지만 않은 것들을 공적이지 않으면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타자화 시키고 있다.

신문을 민주주의의 실현 기제로서, 정치권력의 감시자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부여했던 당시의 논의들은 한국 신문을 과도하게 정치적 싸움에 집중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신문과 정치, 정치와 남성을 연결짓는 고리는 결국 신문을 남성적인 영역으로 할당하고 여성적인 이슈나 논제 혹은 여성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신문의 주요 기사거리로 등장하지 못하게 배제시키는 역할을 일정 정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적 영역을 주도하는 이들 지식인 남성들의 주요 관심사가 당시 신문의 핵심적 사안이었으며, 여성과 관련된 논의들은 그것이 그들에게 위협적이거나 기존의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는 한 신문의 지면을 차지하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맥락 하에 한국전쟁 이후 심각한 사회문제였던 전쟁 미망인에 대한 논의는 신문 지면에서 민주주의와 국가 재건을 외치던 기자들로부터 상대적으로 축소되었으며, 다루어지더라도 그 논의 방식은 남성 중심성을 드러내며 당시 일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녀들을 멸시하고 도덕적으로 단죄하거나 성침탈의 대상으로 전락시킴으로써 전쟁 피해자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모면하고자 했다(이임하, 2002; 2003b). 이후 오랫동안 한국 신문에서는 여성에 관한

논의는 주변화 되었으며, 신문에 실리는 내용들은 철저하게 발화자인 남성의 시각으로 그려졌다. 때문에 이후 한국 신문의 여기자들은 조직에 적응하기 위해 이러한 공적 발화자로서의 남성성을 체득해야만 했으며 이는 결국 여기자들의 이중적 정체성으로 나타났다⁵⁴⁾(유선영, 2004).

이러한 사실들은 여성발행인이 등장하고 여성관련 신문들이 등장했던 미군정기(박용규, 2002)와 비교할 때, 여성주의 관점에서는 진전이라기보다는 퇴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한국전쟁 이후 새로운 현모양처론이 지배적 사회담론으로 대두되고⁵⁵⁾ 반공주의가 사회의 핵심적 이데올로기로 등장하면서 여성차별에 대한 진보적 목소리는 오히려 잦아들고 여성단체들은 반공주의의 우산 밑으로 들어가 정치권력의 보조수단으로 전락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신영숙, 2000).

2) '정치적 선정주의' : 영웅적 남성의 출현

당시 지사적 신문에 대한 요구는 크게 독립지와 정론지로 나누어졌다. 하지만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야당정신에 입각해 권력을 비판하고, 명론탁설로써 불의에 맞서 정의를 지켜내고자 했던 신문의 정론지적 요구는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이는 무엇보다 당시 신문들이 지나치게 정치 현안에 집중했고 신문인들 역시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데카당스한 남성적 삶을 마치 지사적 면모인 양 인식하는 경향도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시 신문의

54) 이러한 과정은 50년대 여기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당시 여기자들은 한 여성잡지의 좌담회를 통해, 발로 뛰어 취재하는 인터뷰보다는 원고 청탁이 더 즐겁고, 전문지식을 가진 기자로 성장하고 싶지만 지금 당장 외근기자로 나서는 것은 자신 없다는 고백을 하고 있다(<여원>, 1958.12, 152-163쪽). 이러한 여기자들의 목소리는 당시 신문과 정치성의 연결고리가 조직 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여성들을 배제하며 남성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55) 대동신문에 24시간 근무하고 여사장에게 인사하기 싫어 익일 퇴사했다는 얘기는, 물론 이 기자의 개인적 특성으로 인한 얘기일 수 있으나 이 또한 시대의 분위기를 일면 전달하는 측면도 있다(오소백, 1952, 144쪽).

무분별한 발행 역시 과도한 정치성에서 비롯된 남성적 행위로 설명할 수 있겠다.

“오월의 정치과동을 전후하여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온 신문사의 배경은 거의 다 정치적 의욕에서 출발한 것이라 해도 망언이 아니다. 따라서 그 신문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편집의 태도를 지속치 않을 수 없고 그렇게 된다면 그야말로 편집인은 순수한 기계에 불과하다. 활자를 배치하는 기계적 존재라는 불명예스러운 자리에 있어야함에도 그 사건을 슬퍼할 줄 모르는 두뇌의 소유자가 즉 편집인이다. 이와는 반대로 진정한 편집인이 자기의 비판으로 저울질한 기사가 산산이 삭제되었던 사실을 예로 든다면 확실히 지성과 맹목의 양극단을 걸어야하는 것이 이 나라 편집인의 위치일 것이다. 이러한 결과 내지 현상을 초래케 된 이유는 국내의 거센 정치바람 때문이다.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보려는 경향이 농후해가고 있는 이 마당에 신문편집마저 정치적 주관을 가지고 기사를 취급한다면 독자에 주는 영향은 사회선보다 사회혼란만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김기영, 1952, 127쪽).

또한 신문의 과도한 정치성과 언론인의 일관성 없는 태도는 신문에 있어 논설과 보도의 방향이 불일치하는 편집의 비일관성을 보였으며, 신문 독자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만들었으며, 이는 결국 신문의 정론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태도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논설과 편집은 반드시 똑같은 방침 밑에 지도되어야하며 양자간에 적절균형의 관계가 성립되어 있어야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양자는 늘 정당한 관계에 놓여있는가? 이점 상당히 우수하다는 평을 받는 신문을 보아도 가끔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을 때가 있다. 그날의 편집기사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글이 사설로서 실려 있는가 하면 양자가 똑같은 문제를 취급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논설의 주장과 기사의 해설이 서로 방향을 달리하고 제멋대로 놀 때가 있어 독자로 하여금 갈피를 잡지 못하게 하는 때도 있다. 또 같은 신문의 논설을 매일같이 읽어보면 어제는 A방향에의 주장을 내세우다가 오늘은 그와 정반대되는 B방향에의 주장을 내세우는 따위의 일이 한두번이 아니어서 신문사로서의 주장이 도대체 무엇인지 독자로 하여금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적지 않다”(신상초, 1956, 119쪽).

당시 신문의 정치성이 공정한 논평을 통해 올바르게 표출되지 못하고 정부 기관지 또는 정당기관지 역할을 노정함으로써 이는 한국의 정치적 후진성 및 신문의 시대적 한계로 담론화되면서, 신문에 대한 새로운 요구들을 불러오는 계기를 형성하였다.

“여당이건 야당이건 간에 정치세력에서 독립한 썬리즘의 입장에서 잘 하는 것을 잘 한다고 추어주고 못하는 것은 못한다고 깎아내리는 춘추의 율법을 신문이 가질 수 없는 것이라면 그런 신문은 벌써 공정성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적어도 신문이라면 사회의 정치적 대립 갈등에 대하여 엄정중립의 입장에서 메스를 가하여야만 되는 것인데 이 점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전도요원한 감이 있다. 물론 신문 편집에 있어서 일정한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지면 전체를 관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지면제작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한 일이겠지만 어떤 정치적 집단과 정치적 이념을 같이 한다고 하여 지나치게 동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에 대해주거나 다른 어떤 정치적 집단과는 정치이념을 달리 한다고 하여 반감적인 태도를 취해서는 벌써 신문답지 못하다는 것이다”(신상초, 1956, 117~118쪽).

이상우는 이승만 정권 치하의 신문들이 정론성을 전면에 내세울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첫째, 상업주의의 출발이 일천했기 때문이며, 둘째 한국 신문의 정론성이 뿌리깊은 전통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셋째, 권력이 이미 국민으로부터 유리되어 대중의 관심과 기호가 반정부에 있었다는 점을 들면서, 이 무렵 신문의 강한 정론성은 그대로 독자에 영합할 수 있었고 이것은 또다른 의미에서의 상업성과 일치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김해식, 1994, 74쪽). 이는 곧 당시 신문의 판매부수가 도시중심으로 한정되어 있었고, 당시 자본주의 성장이 미천하여 신문의 광고수입 비중이 미미했다는 지적과도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당시 한국 신문계에 있어 ‘잘 팔리는 신문’이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치고 때려야 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았으며, 이는 앞서 얘기한 ‘정치적 선정주의’로 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신문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

났던 ‘정치논평에 있어 독자적인 주체성’을 요구하는 논의(신상초, 1956, 117쪽).
 들은 당시 신문이 정치적 선정주의에 지배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신문의 이러한 ‘정치적 선정주의’는 데카당스한 남성적 삶을 마치 지사
 인양 영웅화했으며, 이는 신문을 정당과 연계하여 권력화하는 정치권력의 네트워
 크화를 초래하였다. 이 과정에서 신문은 여성적인 것들이 주변화되는 공간으로
 설정되었다.

그러므로 50년대 초·중반, 기관지적 역할에 머문 신문의 과도한 정치성은
 이후 <관훈클럽>을 중심으로 한 일단의 젊은 엘리트 기자들을 중심으로 신문의
 “전문직업주의”를 요구하게 되는 근거로 작용하였다. 또한 지사적 신문을 넘어서
 서, 신문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유능지사’를 요구하게 되는 계기
 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곽복산⁵⁶⁾,1960, 부완혁⁵⁷⁾,1960, 이관구⁵⁸⁾,1960, 선우
 휘⁵⁹⁾,1960, 송건호⁶⁰⁾,1960). 그래서 50년대 후반부로 갈수록 신문의 무당파성 및
 중립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당시 한국 신문의 과도한 정치성은 정치의 남성성과 신문의 남성성을 연결
 지어 기존의 젠더를 자연스럽게 재생산하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정치성이 발휘
 되는 방식 또한 남성적이며 민주적이지 못한 봉건적인 형태를 노정하고 있었다.
 당시 신문의 사회적 역할로 가장 부각되는 것이 신문의 계몽과 지도 역할이었다.
 이러한 계몽과 지도가 절실히 필요한 지역은 도시보다는 농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 당시의 신문은 도시중심의 신문이었다. 그리고 지도와 계몽이 필요한 계층을
 위해 신문 기사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쓰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외신을 그대로
 번역해서 싣는다는가 혹은 난해한 한문체 문장을 구사하여 정작 읽어야 할

56) 당시 신문학 교수

57) 당시 조선일보 논설위원

58) 당시 경향신문 주필

59) 당시 한국일보 논설위원

60) 송건호는 자신을 ‘사회평론가’로 적고 있다

사람들은 신문을 어려워 멀리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그래서 당시 신문은 글깨나 읽고 한문깨나 쓰는 사람들 즉 대부분의 신문이 지식인 남성을 위한 신문이었다(신상초, 1956, 118~119쪽).

당시 70%이상의 국민들은 농민이었으며 이들은 어려운 한문체 문장보다는 국문을 선호했다. 하지만 정작 국문 보도기사도 음만 국문으로 표시될 뿐 그 뜻은 난해한 한문 고사성어가 많았다. 아래의 글에서는 신문의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지령 1만호를 크게 장식해 낸 신문에 동아 조선 양 일간지가 있고 종교재단을 기반으로 한 경향, 개인기업주에 의한 상업주의를 표방한 신흥지 <한국> 이밖에 <평화> <연합> <서울> 등이 있어 한국의 대표신문으로 지칭되고 있다하나 그 내용과 질에 있어 전인구의 7할을 점하는 농민의 신문으로서 자처될 만한 것은 아직 눈에 띄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지방을 터로 삼고 있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주 충주의 수많은 신문도 농민을 위한 농민을 위한 농민을 독자로 하는 농민신문의 성격을 뚜렷이 한 것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 또한 흥미깊은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여기서 살살이 나타난 사실을 들어 증거로 내세우는 번잡을 피하기로 하고, 우선 한두가지 경향을 들면 전국적인 규모를 중앙의 신문은 모든 국내 소식 중 지방도읍이나 농촌의 대소사건을 취급함에 있어 서울지방의 그것과를 지나치게 차별함으로써 지방 뉴스를 묵살케하는 경우가 상습인데다가 지방신문은 또한 향토에서 일어난 뉴스에 충실하기는 커녕 중앙신문의 제작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여 UN총회를 논평하고 구라과 정세를 평하는 사설과 통신이 제공하는 미영수녀의 길다란 연설문 같은 것으로 전 지면의 3분의 2정도를 채우고 있는 형편이니 중앙신문과 지방신문은 다같이 내고장의 뉴스 취급을 천대하고 있다 할 것이다”(이목우⁶¹⁾, 1956, 60쪽).

그러므로 당시 신문인들이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민주주의의 확산과 신문의 여론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신문이 사회의 정치적 현안에 개입하

61) 당시 한국일보 기자

는 것을 정당화한 논리가 이 부분과 충돌하게 된다. 다시 말해 당시 신문 관련자 및 지식인들이 내세우던 신문의 지도성 및 정치성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당시 신문의 정치성이 강력하게 주장될 수 있었던 근거는 신문을 통해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확산된다는 언론의 여론 담당 기능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여론을 제대로 파악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신문의 정치성이 가장 잘 작동되는 것이다. 이러한 신문의 정치성은 당시 미국식 저널리즘의 직업주의와 만나 신문 지면에서는 정확한 사실보도와 공정한 논평이라는 이름으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당시 신문에서 여러 사회 현안들을 다루는 보도방식은 사실 확인작업 없이 기사를 쓰는 왜곡, 오보가 난무했으며 기사의 전달방식 또한 한문식 문장이어서 한글 사용 권장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한국을 방문한 외국 신문학자는 한글이 유식층의 푸대접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owland⁶²⁾, 1958/1959). 그래서 한편에서는 신문 지면구성의 이러한 유교적 관행들을 개선하기 위해 무엇보다 언론인의 질적 향상이 요구되며, 기자들을 재교육시킬 수 있는 신문학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Rowland, 1958/1959, 67~71쪽).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신문의 정치성을 내세웠지만, 정작 이의 발현 양식은 지면 구성의 측면에서 보자면 지식인 남성에 의한, 지식인 남성을 위한 남성적 방식으로 구현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는 지사적 신문을 통해 근대적 국민 국가를 건설하는 공적 주체로 신문을 정체화하면서 당시 공적 영역의 가장 중심적인 주체인 정치 영역과 갈등하고 저항하는 경합적 관계뿐만 아니라 공모적 관계 또한 형성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1950년 초·중반, 신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당시 신문(인)

62) 당시 미국 서부의 텍사스크리스찬대학 신문학과 과장으로, 1957년에 약 3개월간 한국에 체류하면서 각지의 신문사를 방문하고 돌아왔다. 그리고 'Journalism Quarterly'(1958년 가을호)에 이에 관한 글을 실었는데, 당시 <관훈클럽> 회원인 진철수가 이를 번역하여 <신문연구>(59년 실었다. 진철수는 제1차 미국무성 초청 언론인 연수자였으며, 당시 AP통신 기자였다.

에 대한 지배적 담론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다.

지사의 사전적 의미는 크고 높은 뜻을 가진 사람으로 국가, 민족, 사회를 위해 자기 몸을 바쳐 일하려는 포부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러한 지사 개념이 50년대 기자한테 적용될 때 그것은 정보를 전달해 주는 역할보다는 부정을 깨고 불의를 고발함으로써 사회를 바로잡는 사명이 강조되었다. 신문의 이미지가 지사로 상징된다는 것은 당시 신문이 어떠한 주체로 등장하고 있는지를 알게 해준다. 지사적 이미지로서의 신문은 당시 혼란한 한국 사회를 바로잡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역할이 사회적으로 부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사적 신문은 조국을 구하는 영웅적 이미지의 남성으로 상징화되면서(Thomas Kühne et al., 1996/2001, 101쪽) ‘청렴과 양심’으로 대변되는 유교적 선비의 이미지도 동시에 내재화하고 있다.

기자는 글자 뜻 그대로 ‘글 쓰는 자’이고, 글을 쓰지 않고는 기자일 수 없으므로 기자는 글로써 모든 것을 표현한다. 문제는 글을 쓰되 어떻게 쓰는가 하는 것이다. 50년대 한국 사회에서 기자에게 요구되는 글쓰기는 분석력과 뛰어난 논리 전개보다는 기개가 넘치는 힘찬 글이었다. 그래서 당시의 기자는 서구식 칼럼니스트보다는 논객에서 그 이상형을 찾았다. 역사적으로 논객으로서의 기자는 언론인이면서 우국지사였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권력과 부딪쳐도 꺾이지 않고 소신을 굽히지 않고 붓으로 악을 처단하는 정의감을 요구하였다(정진석, 1995, 479쪽). 이러한 논객의 정신은 이후 오랫동안 한국 신문 기자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반이 되었다. 따라서 당시 논객⁶³⁾이라 함은 권력에 굴복하지 않으면서 대중의 인기에도 영합하지 않는 사람들로 미문의 글재주가 아니라 기개와 혼이 들어있는 글을 쓰는 사람들을 지칭하였다(정진석, 1995, 478쪽). 여기서 지사적 언론인의 이상형인 논객의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문장력을 요구되었다는 점은 우리에게 당

63) 정진석은 당시의 대표적 논객으로 이관구, 오종식, 최석채, 천관우, 선우휘, 안재홍, 함석헌, 송건호, 홍승면, 홍종인 등을 꼽는다(정진석, 1995, 483~500쪽).

시 사회가 신문기자들한테 어떤 부분을 기대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당시 는 정확하게 사실을 보도하는 중계자로서의 기사를 요구하기보다는 그것을 넘어서서 사실에 대한 해석 작업을 통해 사회를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는 힘찬 글을 쓸 수있는 기개있는 기사를 요구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논객은 불의와 타협 하지 않고 권세와 권력에 아부하지 않으면서 고소대처에서 명론탁설로써 세상의 정의를 지켜냄으로써 기개와 지조로 이어진다. 여기서 지조는 전통적으로 곧은 뜻을 굽히지 않는 선비의 이미지와 맞닿아 있다. 그래서 예부터 ‘지조높은 선비’는 쌍으로 붙어다니곤 했다. 또한 선비는 한국사회 유교적 남성성의 상징물이기 때문에 지조높은 선비의 이미지와 겹쳐지는 논객 또한 유교적 남성성의 이미지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그래서 언제나 개인의 이해보다는 국가, 사회, 민족의 앞날을 걱정하는 것이 우선 순위가 되고, 경제적 이해관계보다는 명분과 도덕과 의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당시 신문인에게 요구되었다.

한국 사회의 기자들이 서구적 의미의 전문적이고 기능적인 지식의 보유자로 확립되기보다는 사회적·도덕적 사명을 갖춘 지사적 이미지로 구축된 것은 한국 사회의 역사적 특수성 때문이다. 그런데 이른바 기자의 행위를 지사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고 그에 맞는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자유주의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유교적인 전통이다. 말하자면 지사적 전통은 한국적 정서에 맞는 ‘유기적 지식인’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유교적 가부장성을 기반으로 지사적 담론을 형성한 당시의 논의는, 반지사적인 언론인을 ‘간홀하고 요사한 인첩’과 ‘양심의 매춘’에 비유함으로써(우승규, 1952), 젠더화된 정체성 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정체성 구성의 젠더화과정은 지사적 언론인과 반지사적 언론인을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으로 구분함으로써 젠더의 위계를 자연스럽게 만들어 내고 있다. 또한 당시 지사적 신문의 유교적 가부장성은 일부 신문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국부로 호명한 것에서도 드러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당시 신문은 공적 영역의 대표주자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했을 뿐 아니라 공적 영역에다 남성중심적 가치

체계를 결합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만들었다.

제 4 장. 서구화를 통한 선진화 : 근대적 남성성

53년 7월 휴전 협정이 체결된 후 남한은 본격적인 전쟁 복구가 시작되고 신문계 또한 한국 사회의 공적 영역의 대표주자로서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한 가시적인 작업이 미국무성 초청의 언론인 연수 프로그램이었다. 이들 연수 언론인들은 일어에 능통한 중견 언론인들에 비해 정규 대학교육을 받은 엘리트들로서 영어사용에 익숙한 젊은 언론인들이었다. 미국의 대학 및 신문사에서 신문교육 및 신문 제작의 실습한 이들 젊은 신문인들은 한국에 돌아와 본격적으로 한국 신문계의 변화를 주도하면서 신문계의 새로운 변화를 일으켰다.

본 장은 이들을 중심으로 한국 신문계에 불기 시작한 새로운 기운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는 지사적 신문을 어떠한 방식으로 위치변화를 시키고 있는지를 당시의 사회적 논의를 통해 추적하고자 한다. 그리고 만약 위치가 변화되었다면 그 변화된 위치 속에서 스스로를 정체화하기 위한 어떠한 모색들과 장치들을 등장시키며 발전시키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어떠한 논리와 자원들을 동원하게 되는지를 통해 신문의 젠더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1. “직업주의(professionalism)”의 실현 : 시민적 공적 주체

한국 신문계에서 “직업주의(professionalism)”는 50년대 후반 들어 일기 시작했다. 이는 한국 전쟁이 휴전협정으로 막을 내린 50년대 중후반 사이비 신문과 사이비 기자의 문제가 신문계의 중요 이슈로 부각된 것과도 관련성을 가진다. 당시 사이비 신문에 대한 논의는 신문을 사업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했던 경영주의

부실경영으로, 사이비 기자의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공갈, 사기를 감행하는 기자들의 윤리문제로 집약되었다. 따라서 사이비 신문과 사이비 기자에 대한 당시의 사회적 논란은, 언론 내부의 자율적 조직들이 만들어지고 내부 윤리 시스템을 제도화하는 “직업주의”를 실현하는 근거들을 제공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당시 한국 신문계에 논의되기 시작한 “직업주의”는 경제의 논리나 시장의 상업의 논리라기보다는 신문의 서구화·선진화를 요구하는 개혁의 논리에 더 가까웠다(이종숙, 2004).

이러한 “직업주의” 논의는 1956년에 설립된 <관훈클럽>이 클럽의 목표로 “직업주의(professionalism)”를 내세우고 중요하게 달성해야 할 사명으로 제시한 것에서 시작되었다(관훈클럽, 1957, 1~2쪽).

<관훈클럽>에서 만든 <회지>는 당시 <사상계>나 <새벽> 등의 잡지를 통해 드러난 신문에 대한 논의와는 차별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점은, 신문사 조직 내부의 제반 개선사항 및 보도·취재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그들이 <회지> 권두언에서 밝혔듯이 직업주의 혹은 신문의 전문화를 위한 조직 내의 질적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이들을 주축으로 한 당시 언론 내 지식인들이 신문의 서구화 및 선진화를 요구하던 목소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이러한 요구들이 신문의 성격을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해나갔는가를 밝혀보도록 하겠다.

1) 개인의 자율성 보호와 신문윤리의 등장

50년대 중반 한국 신문에 대한 논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개인의 인권 및 사생활보장과 관련된 명예훼손의 문제였다. 당시 편협은 조직의 결성과 함께 신문주간을 설정하고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하였다. 그 중 신문주간 토론회

도 개최하였는데 토론회 주제는 신문법제와 신문문장이었다. 신문법제와 관련해서 “보도의 책임과 명예훼손”이라는 주제가 발표되었고 많은 청중들로 성황을 이루었다는 보도(<편협보>, 1호, 3면)로 미루어 당시 명예훼손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의 대상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박경목은 미국무성 초청 2차 연수를 다녀온 후 미국 신문의 ‘보도준칙’을 소개하면서 세계 각국 신문들이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사생활을 침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음에 느낀 바 있어 그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한다고 밝히고 있다(박경목⁶⁴), 1957, 16~19쪽).

당시 한국 신문에서는 개인의 사생활 폭로를 경쟁적으로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비판이 많았으나 이를 인권침해나 명예훼손의 관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지는 못했다. 하지만 해외 언론 연수 참가자들은 미국 각지에 흩어져 여러 규모의 신문사에서 실습을 하면서 언론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는 점과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이 법적인 제재를 받는 것을 목격한 후(<편협보>, 1호 8면), 한국에 돌아와 이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한편 이주호는 보도상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법률적으로 다루고 있는 미 대학의 신문학 전공 교수의 논문을 저널에서 찾아 소개하고 있다(이주호⁶⁵), 1959, 28~31쪽). 당시 신문학과장이었던 시버트(F. S. Siebert)는 이 논문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련한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광고와 오락물은 프라이버시를 인정하지만 뉴스는 프라이버시가 적용되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이주호는 외국 저널에 실린 논문을 번역해 한국 신문계에 소개하여 당시 신문의 강력한 요구였던 보도의 자유를 사적비밀보존권(privacy)과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하지만 당시 한국의 신문은 정부 당국과의 정치적 공방을 통해 언론 자유의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밑거름으로서의 언론자

64) 당시 합동통신 근무

65) 당시 <관훈클럽> 회원

유를 독자 대중들에게 인식시켜야 한다는 계몽적 성격이 강했다. 때문에 신문인들의 사명은 독자대중을 지도해야 한다는 엘리트주의적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또한 당시 신문이 정치 현안에 과도하게 집중하면서 정치적 입장이 다른 상대방 정치인들을 원색적이고 선정적인 방식으로 비난하는 것에서도 개인의 사생활 보호나 명예훼손의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당시 신문에 대한 주요 관심은 독자편에서 신문을 어떤 식으로 구성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논의하기보다는 지식이 일천한 독자들에게 신문인이 어떤 지도력을 발휘할 것인가를 중요하게 다루었다. 그러므로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라는 개념이 정립되기가 어려웠다. 즉 당시는 개인의 사생활이나 인권의 문제보다는 정치적 선정주의를 통해, 신문이 공적 영역의 담론을 주도하는 남성적 계몽인의 위치를 구축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문제였던 것이다.

신문보도에 있어 인권침해나 명예훼손과 관련된 문제들은 당시 전후 한국사회의 시대적 분위기와 이에 상응하는 집단적 무의식과도 관련이 있다(권명아 전후 파시즘의 문제). 당시 한국은 전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였지만 한편에서는 지나친 소비와 향락이 신흥자본계급들을 중심으로 향유되고 있었으며, 소위 '사바사바'로 말해지는 부정부패가 사회 모든 영역에 만연하고 있었고, 신문도 예외가 아니었다. 특히 신문은 지도적 입장임을 강조하면서 취재원에 대한 보호라든가 보도에 있어 명예훼손과 같은 문제는 전혀 고려되고 있지 못했다(우승규, 1954).

“송(지영)=잡지와 달라서 신문의 까닭란에는 그런 것이 적을 것이예요. 대개 사회란의 기사가 그럴 것이예요. 까닭란은 개인의 명예에 관한 것이 적을 것이예요. 그러나 사회면 기사는 그런 일도 많이 당해요. 옳지 않다고 와서 항의도 하고 정정해달라고도 얘기하고 그래서 또 조사해 보면 사실 옳지 않다는 것이 있고, 그런 것이 많이 있는 이유로는 해방 후에 사회가 불안한 속에서 역시 신문기자도 사람인데 그 사람도 기사 쓸 때는 그 쓰는 원칙에

의해서 자기가 확실한 쏘스를 뱉아가지고서 확실히 알아가지고 해야 할 텐데 그렇지 않고 그저 얘기 듣고 어름어름 하는 수도 있고 또 누가 쓰다가 주는 것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한 두어줄 보고 쓰는 것이 있고 그런 것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이것이 사회 전체가 안정되지 않은 무엇인지 모르게 추잡한 것, 조잡스러운 것, 이런 데서 오는 것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을 것이예요”(〈사상계〉, 1960, 108쪽).

당시 미국의 자유주의, 개인주의 외연들만 급속히 들어오면서 개인의 사생활이나 개인의 인권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논의하거나 고민하지 못했다. 심지어 사실이 아닌 사실을 보도했을 때, 이를 곧 시정해 줘야 하며 이와 같은 기사의 정정보도는 신문의 도의적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는 신문은 독자에게 ‘친절한 신문’이라는 말하는 경우도 있었다(최홍조⁶⁶), 1956).

당시 신문은 ‘신문도가 찍어빠져’ 민중으로부터 모멸을 당하는 것이 다반사였고 신문기자는 무죄한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성인기⁶⁷), 1958). 심지어 신문기자를 경찰과 세무사와 함께 사회에서 “버림받은 존재”로 지칭하는가 하면 “문둥이떼”라고 혹평을 내리기도 했다(〈편집보〉 2호, 2면). 아래의 글은 그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한은출입기자가 은행의 부정부패 사건 기사를 써왔다. 이 기사는 4단 제목을 달아 크게 취급되었다. 석간신문에는 이 기사가 두들어지게 나올 것을 기대했으나 편집국장의 특권으로 삭제된 채 곰보 신문이 되어서 나왔다. 취재기자가 신문이 나오기 전에 ‘젤러(인쇄판쪽지)’를 가지고 한은에 가서 협박을 했던 것이다. 그는 당연한 협박대가를 받고는 국장에게 사정했던 것이다. 허수아비 국장은 그대로 기자의 말을 듣고 돌아가는 운전기를 멈춘 후에 기사 전문을 꺾었던 것이다. 기자가 출입처에 ‘젤러’를 가지고 간다는 건 가장 졸렬한 것이 아닌가. 편집국 회의를 요청하고 기사삭제의 경위로 논박이 시작됐다. 흥분한 나머지 나는 내 책상을 주먹으로 때려 부수고 전화통을 깨

66) 당시 신문의 신문 사장

67) 당시 조선일보 편집국장

부시고 말았다”(오소백⁶⁸), 1958, 105쪽).

신문(기자)과 관련한 이러한 문제는 첫째, 허위보도, 추측보도, 날조기사, 보도기사에 주관이 삽입되어 보도와 논평의 엄격한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둘째, 개인의 사사, 사행을 폭로하기 좋아하는 것, 셋째, 인터뷰기사 혹은 방문기사의 허위보도, 넷째, 명예훼손의 문제, 다섯째, 광고란에서 약품광고의 과장과 영화광고의 선정성 그리고 성명전에서의 인신공격과 정당·단체 간의 욕설 광고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었다(우승규, 1954, 117~126쪽). 이 중 신문기사로서 제일 오보를 하기 쉽고, 또 그 기사에 등장된 당사자로부터 종종 비난을 받았던 것이 ‘인터뷰’ 즉 방문기사였다(우승규, 1954, 123~124쪽).

당시는 신문윤리가 취재과정에서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취재원이나 기자 모두 취재·보도과정에 있어서 자율적 규제의식을 발휘해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신문인의 직업윤리를 확립하고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들은 5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다(우승규, 1952; 조병옥, 1952; 우승규, 1954; 강영수, 1954,). 하지만 미국무성 초청 언론인 연수가 시작된 50년대 중반부터는 이들을 주축으로 한,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민병훈, 1954; 최홍조, 1956; 박경목, 1957; 이주호, 1959). 이들은 미국 신문의 보도준칙을 통해, 명예훼손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는가 하면, 보도상의 개인의 비밀보지권(privacy) 문제를 법률적으로 고찰하기도 했다.

“사실 아닌 사실을 보도했을 경우 이는 곧 시정해 줘야하며 이와 같은 기사의 정정보도를 독자는 독자에게 친절이라고 말해오지만 이것은 독자에게의 친절이 아니라 신문의 도의적 의무인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범람하는 수많은 신문은 ‘언론의 자유’라는 그늘 밑에서 허다한 횡포를 자행하고 있다. 오보되었을 경우 신문의 위선이니 기자의 체면이니 해가면서 이를 정정

68) 당시 오소백은 여러 신문사의 사회부장 및 취재부장을 하다 파면당하고 다시 입사하고를 반복하다 대학의 신문학과 강사를 5년째 하고 있었다.

보도 하지 않기 때문에 개개인 혹은 어떤 집단에 적지 않은 해를 주게 된다. 이와 같은 실례는 허다하며 이와 같은 경우 법적으로 ‘명예훼손’ 죄가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결국 좋은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허다한 오보의 원인을 살펴보면 의식적인 경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일례를 들어 A와 B에 관계되는 기사를 보도함에 있어 A의 말만 듣고 상대방인 B의 의견을 취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일방적인 기사로서 오보가 되기 쉬운 것이다....이와 같은 실례를 보더라도 언론의 자유에는 반드시 자율적인 의무와 책임이 따라야하는 것이다. 하나의 기사를 취재한다거나 기사화할 때에는 반드시 기자자신의 자율적인 의무와 권리를 머리 위에 명심해야 한다”(최홍조, 1956, 54~55쪽).

위와 같은 논의는 당시의 보도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함을 짐작케 해준다. 당시 신문의 후진성을 극복하는 서구화·선진화의 과제 중에 뉴스 객관성 개념이 새롭게 제시되면서, 보도와 논평의 분리와 함께 ‘사실보도 제일주의’가 슬로건으로 등장한 것은 위와 같은 당시의 상황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사실에 대한 정확한 보도는 일차적으로 사실 확인 작업부터 이루어져야하는데, 당시는 사실 확인 작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정확한’ 사실보도가 중요한 과제로 그리고 ‘사실보도 제일주의’가 신문이 지켜야 할 가치로 등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사이비 신문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이유를 일각에서는 제대로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신문기자로 활동한 것으로 보기도 했다. 여기서 자질을 갖추었다는 것은 구한말이나 일제시대처럼 정의와 진실을 위하여 젊은 정열을 쏟아보겠다는 의지를 말하는 것으로 논의되었다. 하지만 기자직을 얻기가 용이하고, 자유롭게 행동하면서 수입이 좋다는 비정상적인 사고에서 출발한, 한마디로 타산적인 정신의 소유자들이 기초 훈련과정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신문기자로 행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출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편협보> 2호, 2면).

하지만 사이비 신문과 사이비 기자의 출현을 신문의 부실 경영과 연결짓기

도 하였다. 당시 사이비 신문기자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특히 국민들의 원성이 지방 하급 단위로 내려갈수록 심해지자 정부 당국은 지국기자를 공갈사기, 명예 훼손 등의 명의로 대량 구속하여 사회적 경종을 울리려고 시도하기도 하였지만 사이비 신문(기자)의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아래는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이다.

“....이리하여 구속 기소된 12명은 9월 17일 첫 공판에 회부되리라는 바 이 같은 사건들이 표면화하기까지는 지방 각지의 실정과 대동소이하게 전주 시에도 각종신문 통시의 기사 지국이 약 30개소(중앙일간지 지국 12개소)로서 여기에 소속된 기자 수는 165명이며 이 중 유급기자는 9%남짓한 62명에 불과하다는 만큼 기자임을 빙자한 불미한 일도 평소에 없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일부에서는 전주시내의 기자 수를 약 300명으로 추산한다고 할 만큼 사이비 기자도 없지 않은 모양으로서 이러한 저류가 이번의 각 사건을 계기로 들어났다고 알려지고 있다”(〈편협보〉 1957.9.13, 1면).

이에 대해 당시 언론인들은 신문 경영을 부업이나 자기 사업의 방비로 아는 경영주들의 비합리적 경영의 모순이 지국으로 전가되고 그것이 지국기자의 부패를 필연화했음을 지적하고 있다(최병우⁶⁹⁾, 1957). 이러한 논의들 속에는 당시 일선기자들이 주장하던 신문경영의 특수성을 경영주들이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것까지도 좋다고 가정하자. 이 신문경영주 밑에서 일하는 기자들의 실정을 본다면 2개월 3개월씩 월급이 밀려서 기아선상에서 헤매는 것이다. 경영주는 그래도 근기있게 신문을 잘 끌어왔다. 그것은 신문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영리 기업체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서 신문을 노예처럼 끌고 온 것이다. 신문이 선전 뼈라가 되든 광대가 되든 그건 문제가 아니다. 신문의 발행부수도 문제가 아니다. 그저 다치지 말고 말썽없이 매일 매일 흰 종이에다 먹칠만해서 인쇄물만 나오면 목적은 달성된다. 사회악이나 정치악을 공격할 겨를이 없는가하면 흥미도 없다. 그저 자기네 기업체의

69) 당시 코리아타임스 편집국장

방패노릇만 해낸다면 신문의 사명은 다한 것이 된다. 신문경영주들은 매우 지능적이다. 그들은 신문이라는 무기가 어떤 사업을 하는 앞제비로서는 백%의 효과를 가진 물건이라고 생각한다”(오소백, 1958, 109쪽).

따라서 당시 일선기자들은 적은 월급을 메우기 위해 출입처를 통해 생활을 유지해나가기로 해 출입처가 생활의존의 근거지라는 소리도 나왔다. 이러한 상황은 출입처 기자들과 출입처를 더욱 음성적으로 연결해 사실상의 공정한 취재는 불가능했다(김경래⁷⁰⁾, 1960). 그러므로 사이비 신문에 관한 당시 논의는 신문경영의 문제와 함께 일선기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나왔다. 때문에 57년 편협의 창립과 함께 제정한 신문윤리강령은 언론인 스스로의 자율적 규제를 통해 사이비 신문과 기자들을 통제하려는 “직업주의” 정신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다.

2) 서구식 기사 스타일과 신문 개혁

신문에 대한 당시의 사회적 논의 중에서 두드러지는 것이 한국 신문의 구시대적 관행을 깨야한다는 논의였다. 젊은 기자들과 지식인을 중심으로 당시 한국 신문의 구시대적 관행에 대해 여러 방면에서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신문문장과 제반 형식의 불일치였다.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신문기사 스타일 및 편집의 일관성을 위해 스타일 북 제정의 필요성을 제창하였다.

이시호는 당시의 신문 문장 스타일이 전혀 독자에 대한 배려없이 쓰여지고 있음을 반성하면서 잠재 독자까지 포함한 대다수 독자를 위한 친절하고, 알기 쉽고, 간결한 기사를 쓰기 위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역피라미드 기사구성, 문장 스타일에 있어 만연체·수동태·장문의 지양, 간결하고 쉬운 용어의 선택”을 사례를 통해 제안하고 있다(이시호⁷¹⁾, 1957, 3~13쪽). 여기서

70) 당시 경향신문 사회부차장

71) 당시 <관훈클럽> 회원

이시호는 객관보도의 형식인 역피라미드식 기사구성을 미국의 책에서 직접 인용해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자가 보기에 이러한 역피라미드 기사구성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객관보도에 대한 확고한 지향이라기보다는 당시 한국 신문기사가 구성이 산만하고 잘 짜여지지 않아 독자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할 뿐 아니라 편집에 있어서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객관보도의 실현방편으로 역피라미드 기사구성 방식이 제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스타일이 확립되지 않은 당시 신문의 스타일의 통일을 모색하고 있다. 적어도 같은 신문에선 형식과 용법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며 데스크북 제작의 필요성을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이시호, 1959, 1~6쪽). 한편, 신문문장의 구독법에 관한 논의도 등장했는데, 당시 지면마다 통일되지 않았던 끝맺음(.), 사이점(.), 마디점(.), 물음표(?), 느낌표(!) 등에 대한 시안을 제시함으로써 독자의 시각적 이해를 북돋우고 신문 제작에 있어서도 실제적인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임방현, 1957, 13~15쪽).

당시 신문기사나 신문문장에 관한 논의들을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제기되는 것이 한자남용에 관한 것이다(이경성, 1959; <편협보>, 1957; Rowland, 1958/1959). 신문기사가 일상생활 주변에서 통할 수 있는 쉬운 낱말로 독자들이 알기 쉽고 읽기 쉽게 알려줘야 하는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까다로운 한자를 나열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외래어를 남용한다든가 하는 관행들을 보여 신문이 당시 가장 크게 생각했던 사회적 책임을 망기하고 있었다.

“신문문장이 어떠한 작품이 될 수 없을 바에는 보고 듣고 느낀 사실 그대로를 읽기 쉽고 알기 쉽게 간추려 독자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이와 같은 신문문장의 절약성은 독자대중의 요망이기 전에 먼저 신문을 만드는 사람들의 절실한 책임이기도 하다. 그러면서도 정치나 경제면 기사 같은 것은 아직도 구태를 탈피하지 못한 채 까다롭고 딱딱한 한자

의 나열로 말미암아 독자대중과 별로 친해지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우리나라 언어부터가 그러했지만 우리나라의 모든 문헌이 한자에서 비롯하였기 때문에 한자를 당장 없앤다는 것은 좀 어렵지만 그래도 논어나 중용맹자 대학에서 만이 볼 수 있는 어려운 글귀는 일반신문문장에서 쓰지 말아야겠다. 한자를 덜 쓰자는 문제는 사설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기왕 신문이 활발한 마스 콤의 한 가지 수단일 바에는 기사 한 토막 한 토막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읽혀야 한다”(이경성⁷²⁾, 1959, 36쪽).

위의 논의에서도 드러나듯이 당시 신문인들이 누구의 위치에서 어디를 향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지가 분명해진다. 난해한 한자성어를 알고, 까다롭게 쓰여진 정치·경제 기사를 읽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들, 그들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었다. 그래서 당시 신문은 신문문장이나 기사양식만을 본다면 국민의 충족이 기보다는 ‘그들만의 소통의 공간’을 꾸려나가고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따라서 당시 미국 언론연수를 다녀온 젊은 기자들 중심으로 이들은 일제시대의 구시대적 관행이라 할 수 있는 한자남용, 일본식 기사스타일, 신문 문장 등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신문을 개혁하고자 했다. 물론 그러한 개혁작업은 서구식 저널리즘 체계를 갖추는 것이었고 이는 미국식 저널리스트들의 직업주의를 통해 당시 신문을 선진화하고자 하는 작업으로 이어졌다. 새로운 기사스타일이나 데스크북 제정의 필요성은 이러한 차원에서 제기된 논의들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좀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작업과정을 통해 신문의 후진성을 극복하라는 언론 안팎의 목소리들은 당시 신문의 직업주의를 실현하고자 했던 신진 기자들의 위와 같은 열망과 맞닿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에서 볼 때, 1950년대 한국 신문은 서구화·선진화를 통해,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는 세계 사조를 따라잡으려고 했으며, 이 때 가장 시급한 것이 신문의 후진성을 극복하는 문제였다.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무분별한 명예훼손 및 사이버 신문(기자)의 난립, 구시대적 기사 스타일 등이 이러한 후진적 신

72) 당시 자유신문 기자

문의 대표적 양상으로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당시 새롭게 등장한 미국식 저널리즘의 개혁방향의 일차적 과제가 개인의 사생활 및 인권 보호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직업주의”의 실현으로 발현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었는지도 모른다. 물론 신문 보도와 취재에 있어서의 개인의 인권보호 및 사생활 보호와 같은 근대적 개념 및 인식들은 60년대까지도 전혀 지켜지지 않는 원칙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들의 방향이 50년대 중반에 서서히 잡혀가기 시작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한편 신문의 서구화를 통한 신문의 이러한 개혁 작업은 근대적 학력과 근대적 지식을 갖춘, 미국무성 초청 신문연수를 다녀온 이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이러한 논의과정을 통해, 당시 신문은 개인의 사생활, 자율과 책임 등을 신문의 윤리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당시 신문의 성격을, 공적 영역을 근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새롭게 구축해나가는 시민적 주체로 구성해내고 있다.

2. 중립적 관찰자 : 근대적 지식인 주체

1) 사실보도 제일주의 : 중계자적 위치를 통한 남성적 연대

뉴스는 사실지향적(fact-oriented) 뉴스와 의견중심의(opinion-oriented) 뉴스로 나뉠 수 있다. 전자에는 스트레이트 뉴스, 단신, 스케치, 통계자료, 성명서와 판결문, 여론조사 결과 등이 있고, 후자에는 칼럼, 뉴스해설, 좌담, 방담, 기획취재 등이 있다. 세계 언론사에서 있어 정론지 시대 이후 상업주의 신문이 보편화된 이래, 사실과 의견의 구분은 보다 ‘근대적’ 편집의 관행으로 생각되어왔다. 정

보지향적 기사에서 기자는 현실의 관찰자로서 자신의 견해와 평가를 절제하고, 현실로부터 떨어져 있음으로써 ‘사실로 하여금 말하게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의견지향적 기사에서 기자는 사건의 의미를 부여하고, 평가함으로써 현실에 개입한다(강명구, 1989, 125쪽).

1950년대 한국 신문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진 것은 정확한 사실보도에 대한 요구였다(관훈클럽, 1957; 이활, 1957; 최준, 1957). 이는 당시 신문에서 사실에 기반한 기사보다는 허위보도와 왜곡보도가 난무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신문사 내부의 취재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못한 것에도 그 원인이 있겠지만 당시의 신문이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다보니 고의에 의한 허위·왜곡 보도가 난무했다.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 소문에 대한 정확한 확인절차 없이 그냥 기사화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었다.

“우리 사회의 일간지는 정당지의 입장을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일정한 정론을 내세우기 위한 신문을 만들어 파는 감이 있고 인테리층에서도 이것을 조금도 기묘하게 생각지 않는 정도로 습성하여 버린 이들이 적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신문이란 끝끝내 사실정보에 치중하여야 하는 것이지 정론에 치중하여 뉴우스의 신속한 전달이란 그 고유의 사명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신상초, 1955, 118쪽).

“필자로서 요망하는 바는 통신이나 신문에 있어서 보도의 신속을 기하는 동시에 사실의 정확을 힘써주었으면 한다. 신속과 정확은 양립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을는지 모르나, 신속보다는 정확에 더 주력해야할 것이 아닌가 한다. 가령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적에, 각 신문에 발표된 기사를 비교하여 보면 엉뚱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때에는 서로 상반되는 보도가 나타나는 일도 있다. 어쨌든 우리 현실은 외국신문보다 과학적인 정확성이 부족한 것만은 가릴 수 없는 사실이라 하겠다. 신문기사의 정확여부가 사회에 주는 영향은 결코 적지 않을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이희승⁷³, 1957.10.29, 1면).

한국의 신문은 독특한 역사적 경험 속에서 뉴스(사실보도)가 주가 되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논평의 비중이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일제시대와 미군정기를 거치면서 신문의 계몽적 역할과 함께 한국 신문의 지사적 전통이 강했기 때문이었다(류광열⁷⁴⁾, 1958, 161쪽). 이렇듯 한국 신문은 전통적으로 소식을 전하는 사실 보도보다는 지도성을 내세운 논평의 비중이 강해 사실보도에도 의견이 함께 개입되는 등 평론기사와의 구별이 모호한 경향이 있었다(최준, 1957, 95쪽). 따라서 당시 신문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서 드러나는 신문의 일차적 기능은 정확한 사실을 독자에게 제공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사실과 의견을 분리하고 ‘그날그날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도’한다는 사실지향적 언론개념이 사회적으로 대두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래는 이와 같은 사례를 잘 보여주는 글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우리나라 대다수의 신문들이 견고 있는 현상이 옳당 그래야 할 것이라고 긍정할 수는 없겠다. 왜냐하면 신문의 사명은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 그 제1주의이며 또 신문사로서 사회여론을 형성하고 또 이를 이끌고 나가는데 있어 하나의 뚜렷한 의견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우에는 어느 정당의 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할 수가 있으며 또한 그래야 할 것이다. 물론 이것은 보도기사로서가 아니고 논설로서의 말이다. 그러나 정당의 기관지를 꽤 차고 나와서는 아니 될 것이다. 개중에 하나 둘의 소수의 신문이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 모르되 대다수의 신문들이 기관지 아닌 기관지가 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최준, 1957, 92~93쪽).

유선영과 김창남은 한국 신문이 50년대의 정론지 시대 이후 60년대 중반부터는 진리의 담론이 사실의 담론으로 대체되는 역사적 변천과정을 겪었다고 보고있다. 그래서 60년대 중반 이후 한국 신문이 본격적인 객관주의 저널리즘으로 선회하였다고 진단하고 있다(유선영·김창남, 1995). 이러한 논의에 비추어 본다면

73) 당시 서울대학교 문리대학장

74) 당시 한국일보 논설위원

50년대의 과도한 신문의 정파성은 한편에서는 사실담론의 목소리를 표출하도록 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50년대 중반 이후 정론지에 대한 비판 및 사실지향적 신문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면서 결국 60년대 중반부터는 진리의 담론이 사실의 담론으로 대체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사실과 의견을 분리하고 ‘그날그날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도’한다는 사실지향적 신문개념의 확산은 신문이 하나의 화자로서가 아니라 사회내의 여러 화자들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내지는 중계하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신문이 구체적인 사상의 공개시장 그 자체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이며 흔히 ‘여론의 광장’이라는 말로 비유된다. 공개시장 혹은 중계자 개념으로서의 신문이란 사회내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신문을 그들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의미이지 신문 스스로가 화자로서 어떤 표현을 자유롭게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유종원, 1995, 145~146쪽). 지도성에서 필요성으로의 신문의 이러한 정체성 전환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기 위해 중립적인 전달자가 요구되며 이 과정에서 신문의 정확한 사실보도를 위한 객관보도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이러한 정확한 사실보도는 보도와 논설의 엄중한 분리로 이어진다. 왜냐하면 사실에 대한 정확한 보도를 저해하는 요인이 보도기사의 표제나 내용에 주관을 삽입하여 독자에게 명령적이며 유동적인 문구를 나열하여 반감을 사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아래의 글에서 이런 점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뉴우스에 기자의 의견이 혼입되면 정확한 보도로 되기 곤란하다. 따라서 어디까지가 객관적인 사실 보도이고 어디가 그것에 대한 논평인가 하는 계선이 명확하여야 한다. 이 원칙을 공개적으로 위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비록 뉴우스의 요리에 주관과 형식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소극적·간접적이다. 그 대신에 신문사 자체의 적극적인 의견 발표와 주장은 명확히 구획된 논평란(협의의 사실 외에 단평, 까쉴, 시사만화까지를 포함)에

묶어진다”(박동운⁷⁵⁾, 1960, 61쪽).

또한 당시 신문이 지니는 사실왜곡, 편파보도의 문제점을 신문의 정론지적 성격으로 귀착시키는 논리는 당시 정론지에 대한 광범위한 비판을 불러 일으켰다(곽복산⁷⁶⁾, 1959; 신상초, 1955; 최준, 1955, 1957). 당시의 논의들에서 공통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점은, 대중성을 표방하는 일간지가 정론지로 존재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정론지가 된다는 것은 정치논평에 있어 저널리즘의 독자적인 주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권력의 앞재비가 되기 때문에 이는 신문의 권위 상실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연 정론지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권력의 앞재비나 정당의 앞재비가 되는 것인가라고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 오히려 현실의 어떠한 권력에도 휘둘리지 않으려면 신문 자체의 입장이 명확해야 하고, 그러한 입장에서 현존하는 권력을 감시할 때 신문의 정론지적 성격이 더욱 더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당시 신문에 대한 논의에서 사실에 대한 왜곡·편파보도가 신문의 정론지적 성향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진단한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정치논평에 있어 신문이 독자적인 주체성을 확립하는 것과 정론지를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신문의 독자적인 주체성은 다음 장에서 논의될 공정성과 엄정중립으로 귀결된다.

한편, 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보도에 대한 강조는 취재를 위해 ‘발로 뛰는’ 외근기자를 편집국 내에 있는 내근기자보다 우위에 위치시킨다. 모름지기 기자는 발로 뛰어야만 진정 기자라는 것이다. 이러한 은유는 사건현장을 다니면서 사실의 정확한 보도를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사건현장의 여기저기를 종횡무진으로 누비는 취재기자를 기자의 중심에 위치시키며 이는 기자집단의 대표성을 갖게하

75) 당시 홍익대 신문학과 교수 및 새벽사 편집기획위원

76) 당시 신문학 부교수 및 서울신문학원 원장

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사건의 진실을 캐기 위해 살캥이처럼 코를 벌렁거리며 예리한 눈빛으로 여
기저기를 종횡무진 발로 뛰는 취재 기자의 이미지는 남성적이다. 뿐만 아니라 사
회부 사건기자가 주로 다루는 내용은 범죄, 사고, 사태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이
러한 현장을 뛰어다니며 사건의 진실을 캐기 위해 때로는 협박도 해야 하는 기
자는 저돌적이며 공격적이고 역동적이어서 이는 적극성으로 대표되는 남성성의
상징과 연결된다. 그래서 당시 발로 뛰는 취재 기자가 기자집단을 대표하는 것은
기자과 남성성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기자라는 직업을 여성의 영역으로 생각하
지 못하게 하는 젠더 이분법을 형성하였다.

당시 기자사회에서는 정치부와 사회부 기사를 중심으로 주도권이 형성되어
있었고 견습과정의 출입처 훈련은 경찰출입으로 시작했다. 따라서 견습기자들에
게 주입되는 것은 좁게 보자면 기자 중에서도 전형적인 사회부 기자 집단의 문
화라 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기자사회에서 기자 직업의 전형과 이상을 사회부
기자 직종에 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후 기자들의 경력관리 면에서 사회부
출신 혹은 이와 기질적으로 유사한 정치부 등의 부서 출신이 우대받는 풍토가
묵시적으로 정착된 것도 기자사회의 이러한 직업 가치관을 암시해 주고 있는 징
후로 볼 수 있다. 즉 “사회부 기자”의 이미지는 기자 사회에서 이상화되는 기질
과 취향의 선호도 차원에 그치지 않고, 조직 내에서 실제적인 권력배분 관계로까
지 구체화되었으며(임영호, 1998, 170쪽), 이는 결국 외근기자 남성기자, 내근기자
여성기자라는 짝패를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이후 신문사 조직의 수평적 분화를
정착시키는데 작용하였다.

한편 사회부·정치부의 취재 기자로서 대표되는 신문기자가 정보를 수집하
고, 그것을 취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적 영역이 형성되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취재의 대상이 되고, 뉴스 가치가 높은 보도가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유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새롭게 등장한 정치영역은 신문의 집중적 취재 및 보도 대

상이 되고, 이는 결국 남성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또한 남성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공적 담론이 생산되는 과정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등장하는 것이 사실보도 제일주의였다. 사실보도 제일주의는 기자의 중계자적 위치를 강조함으로써 신문이 남성적 연대를 구축하는 것을 은폐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신문이 사회 내의 여러 화자들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 내지는 중계할 수 있다는 이러한 논의들은 어떤 담론의 그물망에도 걸리지 않고 추상적이고 완전한 주체로 존재 가능함을 상정하는 지극히 근대적인 자아개념으로 남근이성주의에 기반하고 있다(유선영, 1999).

2) 뉴스객관성 : 엄정중립의 당파성

50년대 중반 신문의 객관성을 실현시키는 중요한 요소로서 집중적으로 강조된 것은 공정한 논평이었다. 이는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시시비비와 흑백을 정확하게 가리는 신문이 요구되었음을 말한다. 여기서 어느 한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공평한 신문의 태도는 불편부당으로, 옳고 그른 것을 엄정한 중립적 입장에서 가려내는 것은 시시비비로 신문의 사명이 거론되고 있다(이활⁷⁷⁾, 1957, 58쪽).

먼저 불편부당은 “객관적 입장에서 물리적 중간에 서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편파적이지 않다는 것은 절차상의 공정함을 뜻한다. 그리고 옳고 그른 것을 가리는 시시비비 또한 신문의 중립적 위치가 전제되기 때문에 이는 당시 신문의 객관성이 물리적 중립성과 혼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리적 중립성은 양비론에서 보듯이 언론이 독자적 관점을 포기하는 것이며 의견, 논평기능을 최소화하고 정보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관행을 초래하는 것이다(유선영, 1995, 112~113쪽). 그렇다면 여기서 논의되는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이나 사실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고 사건의 진실에 가장 가까워지는 방

77) 당시 자유당 사회부장.

법이기보다는 물리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가치판단을 유보함으로써 오히려 독자들이 알고자하는 진실과 멀어지는 것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해 객관성이 비판적 태도와 윤리적 의무감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중립성 개념으로 치환되므로써 오히려 사회적 공기성을 강조하던 신문의 역할이 퇴색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당시 신문은 그 사회적 공기성으로 인해 독자들을 위한 신문이 되어야 했고 그런 의미에서 신문은 신문사주의 사적인 소유물이 아닌 ‘국민의 것’이었다. 그러므로 공정한 보도는 불편부당과 엄정중립을 준수해야만 했다. 그런데 만약 불편부당, 엄정중립을 내세워 약자를 보호하지 않고 당시의 여성차별적 현실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편파적인게 아닐까. 왜냐하면 그것은 기존의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비판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은폐하거나 여성억압의 역사를 당연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편부당이나 중립성이 역사성의 측면에서 보면 진실에 가깝기보다는 편파적이거나 당파적일 수 있다.

실제로 신문들의 이러한 보도자세는 오랫동안 차별과 억압을 경험한 여성들의 이야기가 불편부당, 중립성이라는 객관성의 관행을 통해서 오히려 은폐되거나 발현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예를 들어 성폭력 사건의 보도에 있어서 가해자 남성의 이야기와 피해자 여성의 이야기를 중립적 입장에서 가치판단을 배제하고 절차상의 공정함을 내세워 치우침없이 동일한 비율로 보도한다는 것은 기존의 가부장적 가치 체계를 재생산하는데 공모할 뿐이다.

하지만 당시는 불편부당과 중립성에 숨어있는 이데올로기적 전략을 드러내거나 이것이 신문이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공기를 실현하는 길을 차단할 수 있는 위험성을 지적하는 것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당시의 신문들이 정치적 지향을 합리적인 방식으로 드러내지 못하면서 신문의 정론지적 성격을 제대로 구현해내고 있지 못한데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김규환은 50년대의 신문의 이러한 특징을 ‘정치적 선정주의’라 이름 붙였다(김규환, 1961).

“.....이와 같은 민중의 절대적인 여망을 받은 신문은 ‘진정한 지도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정당하게 그리고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였다. 즉, ‘상당한 언론의 자유’가 허용되었던 이정권하에서 신문은 민중에게 정확한 지식과 적절한 문제의식을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판단과 확고한 견해를 가지게 하는 노력이 부족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신문이 독재타도와 대중에 영합하는 데에 더욱 많은 정력을 기울인 나머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이 발휘해야 할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기능을 검토수행하기 위한 정신적 여유와 진지한 사려가 결핍되고 있었다고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한국의 저널리즘은 정치적 불안과 민중의 불만, 그리고 저항정신에 최대한으로 편승, 영합하는 ‘정치적 켄켄이서날리즘’을 상업주의를 위한 유력한 방법으로 삼아왔다고 말할 수 없을까.....”(김규환⁷⁸⁾, 1961, 81쪽).

당시 식자들의 신문에 대한 비판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신문이 수단시되어, 진실한 보도와 공정한 비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정치에 관심을 갖는 계층이 민주주의에 새롭게 눈을 뜬 청년층이 다수이며, 이들은 젊은 혈기로써 새로운 것이 나타나기를 막연한 기분으로 원하고 있었기에 이것과 정당지적 성격이 결합해 온통 비판을 위한 비판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당시의 신문은 덮어 놓고 치고 때리기를 좋아하여 공격만 잘하면 마치 ‘논객’처럼 평가받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었다(이활, 1957, 55~57쪽).

‘덮어놓고 치고 때리기’는 불편부당의 입장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신문의 사명을 망각하고 정쟁의 도구로서 신문이 이용되고 있음을 은유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대부분의 식자들은 신문의 정론지적 성격이 최소한의 권위있는 신문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라고 진단하면서 신문은 권력의 앞재비가 되어서는 안되는 동시에 정당의 앞재비가 되어서도 안됨을 역설했다(신상초, 1955, 117쪽).

정당의 기관지라면 모르거니와 대중성을 표방하는 일간지가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세력의 등불을 들고 다닌다는 것은 비판적 신문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

78) 당시 동양통신사 편집부국장

이다. 당시 신문을 여당지 혹은 야당지로 분류하는 것은 신문이 한국 사회에서 독립적 주체로서 공정한 평론을 하는 정론지적 성격이 형성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당시 신문은 새로운 뉴스만을 전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확한 보도로써 실태를 잘 파악하여 대중들에게 알려야 하며 정의의 대도로써 대중을 지도 계몽해 나가는 것 또한 중요한 임무로 제기되었다.

“대체로 쓸데없는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걸 저만의 생각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도의를 바로잡는데 앞장을 선다던가 민족의 이익을 주장한 다던가 하는데 더 힘을 써주었으면 좋겠는데 정당싸움 같은 것은 크게 다루면서 지난번에 미군의 양민사살사건 같은 것에는 좀 더 적극성을 갖고 신문이 날카로운 필봉을 들고 국민을 올바르게 대변해 줄 수는 없는가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편파성이 없이 사회의 진정하고 공정한 대변인이 되어 말하는 것입니다”(〈편집보〉, 1957.10.15, 4면).

위의 논의에서 당시 공정한 신문에 대한 의미가 이중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신문의 공정성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불편부당과 시시비비다. 불편부당은 말 그대로 어느 한쪽으로 기울거나 치우치지 않는 보도자세를 말하기 때문에 공정성, 균형성으로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불편부당은 편파성, 당파성을 지양하기 때문에 이는 물리적 중립성으로 이어진다. 불편부당보다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 시시비비이다. 시시비비는 옳은 것을 옳다고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말할 수 있는 것으로 이는 옳고 그름의 가치판단과 결부시켜 인식하는 태도이다. 또한 시시비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독립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따라서 1950년대 한국 신문에서 말하는 공정성은 절차의 공정함과 옳고 그름의 가치판단을 내려주는 공정함 두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이중적 의미이다. 절차의 공정함은 물리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균형성 및 불편부당으로, 옳고 그

름의 가치판단은 시시비비로 얘기되는 공정함이다. 옳고 그름의 가치판단이 개입된 공정함, 이는 한국인의 인식틀에 기인한 공정성에 대한 의미구성으로 이것은 절차상의 공정성만을 얘기하는 서구적 의미와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다(유종원, 1995, 161쪽). 이러한 서구와의 차이는 한국의 유교적 가부장적 문화전통의 남성적 이미지가 언론에 투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사적이며 균형잡힌 인간상을 지향하는 유교사회의 가부장으로 대표되는 남성성은 실리보다 명분을 중시하는 이상주의자로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가르는 자였다. 당시의 신문 또한 내가 말하고 싶은 바, 좋아하는 것을 자유롭게 드러내는 서구 자유주의적 지향보다는 기본적으로 ‘옳은 것’을 드러내는 공간이었다. 이런 점에서 당시 공정성 논의의 유교적 가부장성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50년대 서구 특히 미국식 자유주의 언론관이 유입되고 그 과정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와 형식이 서구적으로 변신하였지만 이를 채우는 내용과 의미는 이와는 전혀 다른 한국의 전통적 유교적 가부장성을 형상화하는 이중적 성격을 띠는 과정이었다.

당시 신문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던 권력은 국가권력이었다. 따라서 신문은 정부와의 관계선정에 있어서 신문의 권력에 대한 반항과 비판 정신을 앞세우고 있다.

“우리나라의 신문사의 발자취를 보더라도 사대사상에 반기를 들고 나온 것이 신문이었고 또 그 후에는 일본 군국주의에 항쟁해 나왔던 것이 역시 신문이었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시야를 넓혀 볼 때 세계의 각국 신문사 역시 그러하였다. 즉 신문은 항상 정부의 행동을 감시하며 사회의 부정을 적발하는 기관으로서 발전해왔다. 따라서 그 근저에 흐르고 있는 것은 야당정신, 다시 말하면 권력에 대한 반항과 비판의 정신, 그것이었다. 야당정신-이것은 반드시 어느 정당 하나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든 지 간에 항상 변함없이 비판과 권력남용을 감시하는 말하자면 어느 한 편과 한 편에 쏠리지 않는 엄연중정의 정신을 가리키는 것이다”(최준⁷⁹), 1957,

93쪽).

신문의 정부에 대한 비판은 야당정신에 기반하여 권력남용에 대한 감시의 시선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문의 생명’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엄정중립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아래의 논의에서도 보도와 논설의 엄중한 분리 및 사실 보도를 당시 신문의 제일주의로 여기는 태도를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 정책이나 정당의 정책에 대해서 지지 또는 비판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지나쳐 마치 정부기관이나 정당기관지로 비취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최준, 1957, 92~93쪽). 이러한 논의들을 통해서 당시 신문들이 정론지를 표방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질적 수준을 담보하고 있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볼 때 신문의 사회적 비판 기능을 결코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신문의 논평과 논조가 반드시 엄정한 중립을 신조로 하여 활발히 움직였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 그 시대적 평가이다. 그리고 당시의 신문계의 동태를 볼 때,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거나 간에 정당의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편달하는 면에 노력을 경주하는 면은 약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당시 신문업계 종사자들의 가장 강력한 문제제기는 신문제작에 있어서의 평론과 보도기사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뉴스와 평론의 분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이것이 독자들이 사회인식을 올바르게 형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신문이 독자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하고 계몽하지 못하는 상황, 이러한 상황을 탈출하고자 당시의 지식인들은 뉴스의 객관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러한 긍정적인 비판과 객관적인 보도가 실린 신문의 존재는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올바른 정치적 인식과 관심을 갖게 하여 국내 정치의 민주주의 실현을 앞당길 수 있다

79) 당시 홍익대 신문학과 교수

는 것이다(이활, 1957).

당시 한국사회에서 신문의 중요성은 정치의 올바른 방향을 지도하는 동시에 국민 대중들의 정치적 관심을 올바르게 양양시키는데 이바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무 때문에 모두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았다. 정치 중심의 사회는 그 당시 신문으로 하여금 정치일변도의 기사와 논평을 요구하였다. 그래서 오히려 신문의 과도한 정치성이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편집보>, 1957.10.15, 4면).

이와 같은 논의들이 합의하는 바는 정치를 공적 영역의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위치시키며, 그러한 정치에 대해 자유롭게 논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신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문은 근대적 학력과 지식체계를 습득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지식인 남성들에 의해 객관적으로 보도되어야만 했다. 이러한 지점은 당시 신문이 어떠한 주체로 위치를 변화시켜야하는 가를 보여준다.

한편 공정한 보도가 당시 신문의 공기성을 실현하는 사회적 화두였고 이것이 정치권력 중심의 정론지적 신문에 대한 비판과 반성으로 이어졌지만 한편에서는 정론지가 공정한 언론에 반드시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당시 객관성 논의를 한 차원 끌어 올렸지만 무엇보다도 이러한 논의는 다수의 의견으로 자리잡지 못했다(이종극⁸⁰), 1957).

흔히들 객관보도라는 양식을 취재보도과정에서 요구되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일정한 방향으로 체계화된 지식형태로 얘기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객관보도라는 양식은 어떠한 역사적 맥락에서 등장한 것일까?

외국의 논의에서는 “독립적인 사건의 해석자”로서의 언론인이 신문의 기업화에 따른 객관보도의 등장과 함께 독립성을 상실하고 뉴스전달과정의 기술적인 부분이 되었으며, 이러한 상업성에 기초한 보도전략에 따라 직업적 규범과 직업이념이 형성되었음을 지적한다(Carey, 1979, p.32). 또한 쉼러(Schiller)는 기자직의 정립과 함께 보도의 객관성이 이들의 직업이념으로 정착되는 과정은 바로

80) 당시 동아일보 논설위원

상업주의적인 신문이 발전하는 과정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었다고 지적한다 (Schiller, 1979, pp.32~52). 특히 선진 서구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언론의 객관보도라는 보도양식은 언론 경영진으로부터, 정치적 권력으로부터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 압력으로부터 의사 결정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직 이데올로기로 성립된 것이었다(강명구, 1993, 164쪽).

하지만 외국의 경우와 달리 한국에서의 객관보도의 정립과정은 신문기업의 자본주의화 혹은 상업화에 기인하기보다는 지사형 언론인 상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측면이 크다. 지사적 언론은 현실 개입적 측면이 강한데, 만약 이것이 편파적이라면 지사적 언론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객관보도라는 장치를 통해 편파적이지 않으면서 현실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지사형 언론의 상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결국 50년대 중후반의 언론인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논의들은 한국 사회에서 신문의 전통으로 자리잡은 지사형 언론인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보완, 강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한국사회에서 언론인은 87년 민주화운동 이전까지 노동자보다는 지식인으로 규정되었던 측면이 컸다.

한국 신문을 시대별로 구분해 보자면 1950년대를 흔히들 정론지(政論紙) 시대라 한다. 그렇다면 후세에 이러한 평가가 내려진 50년대 당시 신문의 정론지적 성격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어떠했을까? 연구자는 1950년대 신문의 객관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것은 당시 신문의 정론지적 성격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 측면과도 관련성이 크다고 본다. 50년대 뉴스 객관성 혹은 신문의 객관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것은 당시 신문의 후진성에 대한 자각에서 비롯되었는데, 이때 등장하는 신문의 후진성은 신문 내부의 체계적인 시스템의 결여와 함께 정론지적 성격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논의로 압축된다(성인기, 1958; 이종극, 1957; 이활, 1957; 최준, 1957).

조세형은 1960년대 중반 신문기사가 객관적이어야 하는가, 주관적이거나 해

설적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명제가 한국 신문으로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절박한 문제로 대두되었다면서 이에 대한 해답이 도출되어야만 신문제작의 막심한 혼란과 진통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피력하고 있다(조세형⁸¹), 1965, 19~22쪽). 또한 최종수는 언론들의 시사분석을 통해 신문의 정치, 경제적 타협의 산물로서 객관주의가 1960년대 중반 이후 두드러지게 강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최종수, 1986).

이와 같은 논의들과 본 연구자의 분석을 함께 고려해 볼 때, 객관주의 보도양식이 한국 신문에서 본격적인 보도관행으로 정착한 것은 60년대 중반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1950년대 신문에 대한 논의에서, 당시를 정론지 시대라고 지칭하는 것과 비례하여 이러한 정론지적 성격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는 정론지적 성격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한 논의에서부터 정론지적 지향을 벗어나고자 하는 논의까지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당시의 이러한 논의들은 ‘객관보도’ 혹은 ‘객관성’이라는 구체적인 용어를 쓰고 있지는 않지만, 상당수의 논의는 저널리즘의 객관성에 관한 논의였다. 그렇다면 1950년대의 객관성 논의에서 중요하게 부각되는 요소들은 무엇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젠더정치학은 어떻게 개입되어 있었을까?

서구 신문의 역사를 볼 때, 객관성 개념은 그것이 논의되던 초기에는 중립성 및 가치와 의견으로부터 사실의 분리를 중심으로 내세우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균형성, 공정성, 정확성, 공평성 등이 객관성의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은 신문 보도에 있어 기자의 위치를 삭제시키며 기자의 관점을 분리시켰다. 그래서 기자는 사실의 공평한 중계자로서 설정되며 신문의 객관성 실현은 가치가 배제된 사실성(value-free facticity)으로 모아졌다(Meenakshi Gigi Durhan, 1998, pp.118~119).

그런데 1950년대 한국 신문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순차적으로 드러난다기

81) 당시 경향신문 편집부국장

보다는 한꺼번에 혼재되어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으며 가치가 배제된 사실보도와 함께 '야당정신에 입각한 공정한 논평'도 동시에 강조되고 있었다(최준, 1957). 이것은 아마도 당시가 미국식 저널리즘의 영향이 언론관행이나 조직의 개혁에 한꺼번에 수용되는 과정에 있었기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50년 중반 이후 객관성에 대한 요구가 사회적으로 높아지기 시작했는데 이는 공정성으로 집약되었다. 공정한 보도, 공정한 논평이 당시 지식인들의 입을 통해 나온 신문의 사명이었다. 여기서 공정한 보도는 지사적 전통으로 인한 논평 중심의 당시 신문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소리였다. 그래서 공정한 보도는 무엇보다도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보도가 공정한 보도로 이어졌다. 나아가 보도와 평론을 신문지면에서 엄격히 구분하여 사실기사에는 기자의 입장이 배제되기를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한편, 공정한 논평은 당시의 신문의 정치성이 비체계적이고 정당하지 못한 방식으로 지면에 드러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반성이라고 볼 수 있다. 신문의 정치적 지향이 우선시되다보니깐 사실에 대한 확인 없이 추측기사가 난무하는 등 왜곡·편파보도가 일상적이었고 오보 또한 다반사였다. 그래서 이러한 신문의 비합리적인 관행들을 개선하고자 일단 사실에 대한 정확한 보도가 선행되고 나아가 논평 또한 정당의 기관지 경향에서 벗어난 중립적 입장의 공정한 논평이 요구되었다.

서구 저널리즘의 역사를 볼 때 저널리즘의 객관성은 관행화된 의례(ritual)로 남아있거나(Tuchman, 1972), 수량적 측정이 비교적 쉬운 '균형성(balance)'으로 대체되었다. 또한 비판적 태도와 윤리적 의무감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중립성'의 개념으로 치환되거나 오보의 반대 개념인 '정확성'의 개념으로 축소되었다(김영욱, 2002, 116~117쪽). 하지만 한국의 50년대 중반에 객관성을 보장하는 요소는 공정성과 정확한 사실보도였다.

가부장적 사회 혹은 남성 중심적 사회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객관성, 이성,

정신은 남성적인 것으로 주관성, 감정, 자연은 여성적인 것으로 위치시켜 이에 대한 위계적 이분법이 작동하는 공간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한국 신문이 역사적으로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객관보도를 하나의 이상적 언론관행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은 신문의 남성성 획득 과정에 다름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해방 이후의 정파성은 정치적 문제에 관한 한 가치의 배제를 어렵게 했으며 60년대 이후 가치의 배제는 불편부당성을 표방하는 것으로 공식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은 서구 객관주의 인식의 본체, 즉 세계의 객관화(인간합리성에 대한 신념), 현실의 정확한 반영(보도의 다양성), 경험적 관찰보도(직접적 탐사 취재) 등은 간과되고 중립적 언어의 사용이나 보도의 형식주의 즉 객관주의 기술적 요소들만이 채택, 발전해 왔다(유선영, 1995).

연구자는 객관보도의 이러한 선택과 배제의 과정이 당시 한국사회의 가부장성이 언론의 제도화 과정에 개입된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해 서구식 자유주의적 요소가 강한 저널리즘의 이상들을 남성 중심적인 당시의 한국사회의 신문에 적용하고자 했을 때, 객관보도 중 가부장성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들은 배척하고 가부장성과 잘 결합할 수 있는 것들만 선택적으로 차용한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 합리성과 가부장성은 충돌할 수 밖에 없으며, 현실의 정확한 반영 즉 남녀차별적 현실에 대한 다양한 보도들은 당시의 가부장적 신문과 갈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신문의 객관성을 당시 취재관행의 변화를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사람들 즉 객관주의 담론 생산의 주체들이 남성 지식인이었던 것을 통해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문제다.

3. 언론자유 : 민주주의 실현의 정치적 주체

1) 언론자유와 남성적 구현 : 근대적 남성성

흔히들 1950년대는 혼돈과 역동의 시기로 지칭하는데, 당시 한국 사회는 빈곤과 혼란, 무질서와 부패, 타락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한편 50년대는 정치권력, 지식인, 일반대중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치열한 각축전을 벌였다. 다시 말해 이시기 민주주의는 추상적 이념으로 자리잡고 있었던 게 아니라 현실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가능한 대상으로 논의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한국전쟁이 종료된 50년대 후반, 민주주의는 민족주의를 압도했다. 이에 대한 단적인 증거는 한국전쟁을 동족상잔의 비극이라는 민족적 의미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공산주의에 대한 민주주의의 수호라는 점에서 의의를 두고 있었던 것에도 알 수 있다(김경일, 2003, 129쪽). 그래서 한국의 근대에서 1950년대는 민주주의의 시대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이 시기에 활발하게 진행됐다거나 또는 그것이 획기적으로 발전했다는 의미에서라기보다는, 이 시기에 그것이 처음으로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차원에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체제에서 미국의 헤게모니 국가로의 부상, 특히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전 세계적 파급력과 영향력을 가진 지배이념이자 정치모델로 제시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냉전체제 성립을 배경으로 미국식의 자유민주주의는 한국 사회에서 지배적 이념이자 정치적 수사로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일종의 유행이 됐다(김경일, 2003, 167쪽). 이러한 유행은 신문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한국의 1950년대 후반 신문인들이 가장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는 그 당시 가부장적 관계와 어떤 식으로 만나고 있는가? 가부장적 관계를 전도시키고 있는가 아니면 가부장적 관계를 밑바탕으로 해서

작동되면서 이를 은폐, 강화시키고 있는가? 또한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와 쌍벽을 이루며 제시되었던 언론자유에 대한 논의는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었는가? 이에 대한 설명은 당시 신문인들이 주요 이슈로 제기하였던 민주주의와 언론자유 관련성 및 그러한 논의의 구체적 내용을 분석하는 것을 통해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후의 반공주의에 맞서는 다른 한 이데올로기는 점점 증대되는 자유주의로서 둘 사이의 충돌은 자유주의의 성장에 힘입어 점차 심화되어갔다. 자유주의의 발달은 민주주의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었으며, 둘 사이의 연결이 분명해지면서 전쟁이 낳은 반공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의 역사적 연계고리를 끊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반공과 민주주의의 동일시 고리를 끊는 것만으로도 자유주의의 역할은 엄청난 것이었다.

그러나 1950년대 한국의 자유주의는 사회적 토대와 조건을 갖지 못한 자유주의였다. 무엇보다도 1950년대 한국은 산업화의 지연으로 인해 자유주의를 추동할 중심 계층인 부르주아가 형성되지 못했다. 도시지역과 지식인들, 대학을 중심으로 형성된 자유주의는 반공주의의 완강한 틀을 수정하는 자유주의를 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1950년대의 자유주의는 지식인의 자유주의였다(박명림, 1998, 83쪽).

이러한 지식인의 자유주의는 당시 신문의 언론자유 논의에 일정정도 영향을 미쳤음을 추론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시 신문과 관련된 담론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당대의 지식인 계층이었다. 50년대 중반부터 60년대 초반까지의 신문의 주요 이슈는 언론자유였다. 이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정치권력과의 갈등 속에서 신문의 사회적 역할이 승인되고, 민주주의를 일궈내는 토대로서 언론자유를 정당화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당시 신문에 관한 주요 이슈 중의 하나였던 언론자유 논의의 형성과정 및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남성 중심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950년대의 한국사회는 무엇보다도 미국식 민주주의를 도입하여 새로운 국가건설에 매진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정치영역에 집중하여 민주정치 실현을 위한 목소리를 드높였다. 또한 민주정치를 여론정치로 규정하고 여론정치의 기반이 언론자유로부터 획득됨을 주장했다. 왜냐하면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정치의 토대가 되는 공정한 선거 및 민의를 반영한 공정한 여론이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박권상⁸²⁾, 1959b, 1959c).

“민주국가의 생명은 언론자유에 있다. 언론자유가 성행되고 못되는데 따라 그 나라의 민주화의 정도를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국가의 언론기관 및 보도기관은 어디까지나 언론과 보도의 자유를 확보하여야 한다. 권력에 굴복하거나 혹은 권세에 아부하는 언론은 민중과는 항상 유리되는 법이라 민주국가에는 하나의 쯤밖엔 아니된다”(최준, 1955, 121쪽).

“다 아는바와 정치권력의 압박이나 간섭이 있는 사회에서는 진정한 썬리즘이란 성립할 수 없다. 정치권력이 국민생활의 여러 분야에 걸쳐 통제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어, 따라서 썬리즘 역시 그 다소의 지배 밑에 놓였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지만 최소한 자신에 찬 공정한 권력이라면 신문이 뉴우스를 마음대로 취재하고 사실대로 보도하여 아무 거리낌없이 자기 생각대로 논평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주어야 한다”(신상초, 1955, 119~120쪽).

여기서 언론자유는 ‘국가 권력기관으로부터의 자유’로 한정되어 논의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자유 또한 언론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기구가 그러한 자유를 시혜를 베푸는 차원에서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언론의 이러한 자유보장에 대한 정당성은 신문이 정상적인 신문도를 지켜나가면서 데모크라시의 수호자로서 사명을 다할 때 가능한 것이지만, 이에

82) 당시 세계통신 기자

대한 점검은 드러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에 대한 언론 스스로의 점검이 약하다는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를 내부로 끌어들이 신문사 조직의 민주화나 비민주성에 대한 논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외부의 민주주의에 대한 목소리만 높이고 이를 자신의 위치를 성찰하는 것으로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관권이 거센 당시의 언론자유를 지켜내는 일은 신문인 스스로의 자력에 의해서 관의 부당한 간섭에 저항하는 필봉의 동조밖에는 별다른 도리가 없다는 식의 논의도 제기되었다. 즉 신문인 스스로 대동단결하여 각자 양심에 호소하여 자주적인 방위책을 강구하자는 결론으로 이어졌다(신상초, 1955).

“언론자유란 결코 법으로서만 보장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국민이 실제로 향유하고 있는 자유 사이에는 운니의 차가 있을 수 있다. 무엇을 어떻게 주장하다가 공사생활 양면에 있어서 어떤 손해를 입지 않겠느냐 하는 잠재적 피해공포의식은 법적구속보다 더 언론자유를 제한한다. 이런 피해공포에서의 완전한 해방이 있어야만 실제적인 언론 자유가 확립될 수 있다. 이 해방은 정치권력의 양심적이고 이해있는 협조, 언론에 종사하는 이들의 철저한 용기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신상초, 1955, 120쪽).

위의 논의에서 드러나듯이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조직적 차원의 대안을 찾기보다는 언론자유를 억압하는 쪽에다 협조를 구하고 언론인들은 대동단결하여 용기를 잃지 말자는 식의, 언론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내부 조직에 대한 점검이 엿보이지 않는다. 즉, 당시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신문인들의 목소리에 비해 실천적 의지는 약했다고 볼 수 있다.

50년대 한국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민주주의였으며 이러한 민주주의는 정치영역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가시화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위한 기본 토대로서 요구되어진 면이 컸다(신상초, 1959).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당시 신문의 민주주의의 공적 수호자로서의 역할과 이미지는 신문의 정치성을 강화시키면서, 신문을 근대 지식인 남성의 영역으로 간주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근대 민주주의 정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시민주체는 남성으로, 이는 이후 남성과 여성을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담당자로 분리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Young, 1987), 결국 근대 시민사회는 형제들(fraternity)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사회였다(Pateman, 1988/2001). 그래서 여성이 공적 영역으로 진출하게 되는 경우, 그녀들에겐 ‘이등시민’의 자격이 주어졌다.

“내 경우에 있어서는 <코리아타임스>에 있을 때나 지금 동아일보나 여기자는 내내 한사람 뿐이었으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좀 특수하게 취급당하기 쉽지요. 그것은 무엇이나 하면 일에 있어서도 항상 자기분야만 맡아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다른 남성기자와 알뜰이나 마찰은 느껴보지 않았어요. 다만 조용한 시간에 여기자는 하나의 농담상대로 삼는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여원』, 1957.12, 156쪽).

미군정과 한국전쟁 이후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지만 당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은 대부분 ‘생계유지형’ 노동에 집중되어 있었으며(이임하, 2003a), 전쟁 이후의 여성의 사회적 진출은 양가적⁸³⁾이었을 뿐 아니라 신문과 같은 전문직에서 진출하는 여성은 극히 드물었다⁸⁴⁾. 따라서 근대적이며 남성적인

83) 한국전쟁과 남성의 동원은 자의든 타의든 여성들의 가정과 사회에서의 역할을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많은 여성들은 전쟁과 동원으로 인하여 남편과 아들과 아버지를 잃었고 일부 여성들은 전쟁의 후유증으로 노동력을 상실한 남편과 아들과 아버지를 갖게 되었다. 따라서 수많은 여성들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동에 나서야 했고, 남편과 아버지를 대신하여 자녀들의 교육을 담당해야 했으며 또한 가족의 대표자가 되어 사회와 접촉해야만 했다. 그러나 새롭게 여성들에게 주어진 이러한 역할은 계층에 관계없이 여성들에게 혹독한 시련이었지만 또한 여성의 지위를 새롭게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었다(이임하, 2003a, 252쪽). 하지만 여성에 대한 정조의 유지와 가족의 유지라는 지만 여성 노동에 대한 성적 분할은 여성에게 짐지운 생존의 무게를 더욱 무겁게 했다.

84) 당시 대학생이었던 공채출신 여기자는 감히 신문기자가 되겠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는데 신문사가 여기자도 뽑는다는 공고를 내서 졸업 후에는 도저히 취직이 안될 것 같고 여기자를 뽑는 기회가 더 이상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막연한 심정으로 지원했다고 인터뷰에

영역에 진출한 몇 안되는 여기자들은 스스로를 ‘특수한 직업’으로 명명하고, 남성적인 공간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신문이 가지는 근대적인 면모들을 갖춰 전문분야를 개척할 것을 제안하였다(『여원』, 1957.12, 152~163쪽).

이러한 전통적 유교적 성별분업 이데올로기와 신문의 근대적 성격이 민주주의의 공적 수호자로서 신문을 상징화시킴과 동시에 글로써 민중을 지도·계몽하는 기자의 지도적 이미지는 유교적 선비와 맞닿아 있어 신문을 남성적 영역으로 위치시켜 성별분업 이데올로기를 강화, 재생산하는 순환고리를 만들어냈다.

1957년 4월 8일 <독립신문> 61주년 기념식장에서 행한 개회사에서 <한국신문편집인협회>의 대표인 이관구 회장은 <독립신문>을 민주언론의 선봉으로 우리 언론기관의 전통을 창립한 것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이런 정신을 이어받아 민주언론의 목표를 성취하지 못한 오늘의 현실을 반성하면서 이에 매진하자고 제안했다(<편집보>, 1957.8.13, 2면). 즉 61년 전의 정세와 오늘의 정세를 비교해볼 때 시대적인 차이는 뚜렷하지만 언론의 민주화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 오십보백보라는 것이다. 조국의 독립 앞에 민주를 덧붙여 ‘독립신문의 정신’으로 규정하는 것은 당시 민주언론의 이해와 요구가 신문인들 사이에 높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당시 이관구 회장의 개회사를 보면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것은 공산주의를 극복하는 길이며 이는 통일로 나아가는 길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을 이루는 과정은 바로 민주언론 창달에 있다. 이러한 민주언론에 대한 요구에서 신문인을 포함한 50년대 지식인들의 냉전의식도 엿볼 수 있다. 당시 신문인을 포함한 지식인들은 중립진영에 포함되는 신생국에 있어서 독재라는 반민주적 요소와 공산주의의 침투를 불가분의 관계로 보고 있었다. 따라서 신생국들이 처한 공산주의 침투의 위기에 대처하는 방안은 ‘민주주의’가 갖는 보편적 원리를 개화시키는 것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졌다(남궁 곤, 1991, 144쪽).

서 밝히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당시 사회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는 냉전의식 속에서 체제우월성을 점검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위치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당시 '민주주의'나 '자유'라는 단어들의 전면적 대두를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의 실현기제로서 '신문의 자유'를, 공산진영에 대한 우위를 보장하는 반공 이데올로기의 실현 기제로서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들이 작동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당시 민주언론의 창달을 위한 노력은 신문 내부의 구체적 개혁에 집중하기 보다는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신문의 선도적인 지위를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당시 한국 사회에서 신문의 선도적인 지위를 요구하는 것은 공적 영역에서 가장 권위있는 지위가 신문인에게 부여되는 것이며, 민주 언론의 달성은 한국 사회의 정치를 옳은 방향으로 이끄는 사회의 지침이 되는 것이었다(<편집보>, 1957.8.13, 3면).

언론 자유가 사회 민주주의의 중요한 전제라면, 그러한 언론의 자유는 언론이 정치, 경제적 외압으로부터 독립, 자율적일 뿐 아니라 조직 내의 비민주적인 관료적 통제로부터도 독립, 자율적인 일련의 과정을 포함해야 한다(강상현, 1994, 126쪽). 하지만 당시 민주언론에 대한 요구는 신문계 내부의 구체적인 개선책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외부 정치 영역과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추상적 요구로서 이후 이에 대한 실천적 요구들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런 방식의 논의는 전형적으로 지식생산의 남성적인 방식으로 얘기되는 지점이다. 지배계급에 속한 남자들의 활동에 의해 생산된 지식은 추상성과 비인격성으로 특징 지워진다. 남성들은 일상적인 삶의 필수적인 것들을 생산해내고 재생산해내는 일로부터 자유로운 위치에 있다는 사실이 그들의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에 반영된다는 것이다. 반면 여성들은 물질적인 것과 더 많은 상호작용을 하며,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구체적인 일상 속에서 일하기 때문에 구체성을 띠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이상화, 1995, 57쪽).

50년대 중·후반 신문에 대한 기자들의 논의들을 살펴보면,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한 일환으로서의 언론자유에 대한 열망이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다. 하지만 신문인들을 포함한 당시의 지식인들이 요구한, 언론자유를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는 실질적 민주주의보다는 절차적 민주주의에 치중하였다⁸⁵⁾. 그래서 기자들은 신문사 사주의 지배와 통제에 대항하여 그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경제투쟁보다는 오히려 그에 앞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적 과업을 수행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언론자유의 실천이라는 정치투쟁에 치우쳐 있었다.

경제투쟁에 앞선 정치투쟁, 다시 말해 자신의 밥그릇을 챙기기보다는 언론에 대한 내외의 간섭, 규제, 통제를 배격하고 언론자유를 실천함으로써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치투쟁은 당시 신문을 지사적 이미지로 고정시켰으며 한발 더 나아가 공적 영역에서의 핵심적 지위를 신문에게 부과했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지사적 이미지가 갖고 있는 유교적 남성성의 이미지와 공적 영역의 수호자로서 신문이 가지는 근대적 남성성과의 결합을 부추겼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신문의 제도화는 당시 사회 전체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신문계 외부에 존재하는 가부장적 사회질서와의 관계 속에서 제도화가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가부장적 사회질서가 무엇이 현실인가를 구성하기 때문에 신문의 제도화 과정은 필연적으로 가부장성과 관련성을 맺게 된다.

당시의 언론자유에 대한 요구는 영미의 자유주의 사상의 세례를 받았는데, 자유주의는 개인을 이성적이며 자율조정의 능력을 가진 존재로 간주하고 개별성의 독립과 이에 대한 존중을 주장한 사상이다. 이러한 자유주의를 사상적 기반으

85) 슈미터-오도넬에 따르면 민주주의의 실현은 두 개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즉, 선거와 정당 간의 경쟁과 같은 민주적 경쟁의 규칙과 실천을 제도화하는 ‘절차적 민주주의’와 이를 방법으로 하여 또는 이러한 조건 하에서 시민의 사회경제적 권리를 실현하는 ‘실질적 민주주의’가 그것이다(O'Donnel & Schmitter, 1986, pp.47, 68. 최장집, 1994, 52쪽에서 재인용).

로 하는 언론자유는 크게 사상의 공개시장과 자율조정과정을 핵심적 사안으로 가진다. 사상의 공개시장은 ‘공개성’으로, 이성적 존재인 개인들의 자율조정과정은 ‘토론과 논쟁의 일상화’로 얘기할 수 있다(임상원, 1994).

하지만 앞서도 논의했다시피, 언론자유에 대한 당시의 구체적인 논의는 50년대 후반, 미국무성 초청으로 미국에서 언론연수를 받고 돌아 온 소위 미국식 저널리즘의 세례를 받은 젊은 기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 대표적인 이가 박권상이었다. 박권상은 당시 지식인들이 가장 많이 본 <사상계>와 <관훈클럽>이 만든 언론전문지인 <신문연구>에 선진국에서의 언론자유 의 이론과 실재를 소개함으로써 언론자유 의 개념을 확립하고, 신문의 자유 조건을 당시 한국 신문계가 만족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다(박권상, 1959c).

“본고의 의도는 이러한 논쟁에 개입해서 시비찬부를 따지려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이러한 논쟁에 어떤 기준을 제시하여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의 도출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즉, 우리에게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자유언론의 개념 확립이라 하겠다. 언론·출판의 자유란 도대체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인가? 어찌하여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꼭 필요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용되는 것인가? 즉 언론의 자유와 국가안전보장의 관계는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으며 다른 사회적 제 가치와 어떻게 타협할 것인가? 이러한 몇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지도함으로써 언론·출판의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 또는 있다면 어느 정도 있느냐 하는데 대한 판단의 기준을 잡으려는 것이 필자의 의도⁸⁶⁾이다”(박권상, 1959c, 1쪽).

한편 IPI⁸⁷⁾는 1959년 4월 중순에 ‘독재국가의 신문’이라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 보고서는 제 8차 총회에서 ‘언론의 자유’에 관한 토론의 기초자료가 되었던 중요 문헌이었다. 이 책자는 공산·비공산을 막론한 독재국가에서의 신문

86) 박권상이 이러한 논의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1959년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서독 베르린에서 열린 제8차 IPI 총회에서 한국의 국가단위 가입이 보류된 사건 때문이다(박권상, 1959b, 233~234쪽).

87) 국제신문협회(International Press Institute)

통제를 설명하고 있는데 극동의 독재국가로는 ‘중공, 북한괴뢰, 자유중국, 월남 등과 함께 한국’이 포함되어 있었다.

IPI 사무국장 E.J.B.로스씨는 ‘남한의 편집인들이 여러해 동안 IPI 가입을 신청하여 왔기에 사무국의 광범한 조사 결과 한국엔 몇몇 강력하고 독립적 야당지들이 있어 과거에 상당한 자유를 향유하여 왔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이대통령 정부는 신문을 위협하는 법률을 제기하였고 한 유력한 신문에 대한 탄압과 그 신문사원의 구속 등을 포함한 최근 조치는 미래가 확실치 않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사회는 남한의 신문인들의 개별적인 가입을 결정하였으나 한국 정부가 신문의 자유를 존중하게 되었다고 이사회가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국내위원회 구성을 인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하였다(박권상, 1959b, 234쪽).

당시 한국의 정치·사회 영역의 반민주화, 봉건성, 가부장성은 자유주의 사상에 기대어 언론자유에 대한 개념을 확립하고 미국식 저널리즘의 영향력을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는 한편, 신문의 지사적 성격을 강화시키는 계기도 되었다. 다시 말해 한국 신문의 남성 문화화는 정치 사회 영역의 비민주적이고 봉건적이고 가부장적인 요소들에 의해 구조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박권상은 신문의 자유가 무엇인지가 먼저 얘기되어야 한국에는 신문의 자유가 없다고 판단한 IPI의 결정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음을 제기하면서, IPI 헌장을 인용하여 신문의 자유를 뉴스취재의 자유, 뉴스보도의 자유, 신문발행의 자유, 의사발표의 자유 등 네가지 구성요소로 제시하고 있다(박권상, 1959b, 235쪽).

박권상은 이상의 네가지 자유 가운데 신문발행의 자유를 제외한 세가지 자유는 만족할만한 것은 아니었으나, 상당한 정도로 한국 신문이 과거 10여 년간 향유해왔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신문발행의 자유’에 관해서는 그렇지 못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왜냐하면 당시 한국 신문은 신문발행에 앞서 공보실

장으로부터 발행허가를 얻어야 하며, 공보당국은 약 2년 전부터 일체 일간신문의 발행을 허가치 않고 있었고, 공보실장의 이름으로 신문을 폐·정간시켰고 또 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다(박권상, 1959b, 235쪽). 나아가 박권상은 신문의 자유를 이야기할 때 발행의 자유가 결정적인 비중을 갖는다는 것은 신문의 자유나 신문법에 관해서 다소의 지식이 있는 이라면 누구나 수긍하는 일이며 IPI 측에서 한국의 발행허가제도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 하며, 당시 한국 사회의 발행허가제를 폐지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박권상, 1959b, 236쪽).

당시 박권상의 이러한 논의는 한국 신문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는 수많은 목소리들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어떤 요소가 한국 신문계에서 부족한가를 드러냄과 동시에 신문발행의 허가제를 폐지할 것 등을 통해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언론자유에 대한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자유언론은 가장 먼저 사전억제와 검열에서 벗어나야 됨을 강조하면서 자유언론이 국가의 안위와 관련되었을 때 특히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의 경향’이 드러날 때에만 언론자유가 제약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⁸⁸⁾(박권상, 1959c).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당시 언론자유の内容은 정부간섭으로부터의 독립, 이를 좀 더 구체화시키면 검열과 허가제에 대한 반대로 모아진다. 하지만 당시 박권상이 기대고 있었던 영미의 자유주의 사상가들이 검열과 허가제에 대한 반대만 주장했던 것이 아니다. 일례로 밀턴의 언론자유 논의는 사상의 자유시장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기반한 허가제 및 검열제 반대, 관용에 의한 다원주의를 포함하고 있다(문종대, 2004).

당시 한국의 신문환경은 강력한 반공이데올로기의 스펙트럼 하에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언론자유 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사상의 자유시장이 보

88) 박권상은 선진국에서의 언론자유에 대한 논의를 존 밀턴, 존 스튜어트 밀, 토마스 어스킨, 토마스 제퍼슨의 자유주의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다.

장되고 있지 않았으며, 또한 토론과 논쟁의 일상화 속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교환되는 관용과 다원주의가 실현되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도 당시 한국사회 신문에 관한 논의를 주도하고 있던 관훈클럽 및 지식인들은 언론자유에다 이러한 논의를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다. 당시 언론자유는 오직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신문의 자율성을 획득하기 위해 외부적 통제를 배격하려고 하는 측면에만 맞춰져 있었다. 때문에 언론자유를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당시 민주언론의 내적 미성숙에 대해서는 성찰의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다.

따라서 당시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에 치중하는 이른바 소극적 언론자유 투쟁은 결국 내부 언론조직의 자율성 및 남녀차별적인 가부장적 비민주적 요소들을 문제화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논의들이 등장하지 못하도록 방패막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당시의 논의가 남성 중심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2) 소극적 언론자유 : 위축된 근대 남성성

당시 언론의 자유는 앞서도 지적했듯이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유인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지름길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당시 언론자유에 대한 주장과 요구 이면에는 언론자유가 제한되는 조건이 늘 명시되어 있었다. 특히 언론자유가 그 사회 또는 국가를 근본적으로 뒤집어 공포정치를 세우려 할 때, 다시 말해 국가제도를 근본적으로 뒤집으려는 반국가적 행위로 연결될 때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류광렬, 1953, 46쪽). 하지만 당시의 지배적 논의는 반정부적 언론과 반국가적 언론은 구분해야 하고, 비상시의 보도관제와 언론제한을 뒤섞는 착오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기에 한가지 재연히 구분하여야 할 것이 있으니 당해정부의 과오를 지적하는 것은 반정부적은 될지언정 반국가적(즉 민주국가)은 아니다. 이

것을 혼동하여서는 않된다. 도로혀 민주국가에서는 그것이 민주주의방식에 의하는 것이라면 반정부적 언론이라도 활발히 전개하여 당해정부의 과오를 시정개조함이 참으로 ‘국민의 손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가 되는 길이 될 것이다”(류광렬, 1953, 47쪽).

한편 당시 일각에서는 언론자유와 한계를 정부비판의 한계성으로 등치하여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 논쟁은 <서울신문>이 1955년 1월 11일자 조간에 “정부비판의 한계성”이란 사설을 실은 이후 벌어진 것으로, 10여일을 서울의 일간지들이 언론 자유의 한계성에 대해 열띤 논쟁을 벌였다⁸⁹⁾(이관구, 1955).

당시 논쟁의 과정에서 지배적인 의견은 ‘언론의 억압은 어느 경우에는 이론이 있을 것이며 그에 상응하는 환경이 있을 것이나 결국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었다(<한국일보>, 1955.1.17, 1면). 정부의 기능은 질서 유지와 공공복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인권의 보장에도 있기 때문에 만약 언론의 자유에 한계가 있어야 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선의와 보호의 입장에서 설정되어야 할 것이지 정부권력의 제한여부를 먼저 염두에 두고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언론의 자유는 비단 국민의 권리면에서만 아니라 권력 기구로서의 정부를 위해서도 불가결하다는 것이다. 전제적인 독선적인 방향을 시정하기 위하여서는 국민의 광범한 의견과 비판을 듣지 않을 수 없는데, 당시의 신문은 바로 이러한 국민의 광범한 의견과 비판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신문의 자유는 제한받을 수 없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89) 논쟁과정은 다음과 같다.

1955년 1월 11일 <서울신문> 조간 사설, “정부비판의 한계성”,
1월 12일 <경향신문> 1면 기사, <한국일보> 사설, “정부비판의 한계성”
1월 13일 <경향신문> 사설, “언론제한의 역행방향을 완봉하자”,
1월 14일 <동아일보> ‘형설수설’, <서울신문> 사설, “언론의 도의를 위하여”
1월 16일 <조선일보>사설, “민주정치와 언론자유와 가치”, <서울신문>사설, “민주언론의 확립”
1월 17일 <한국일보> 사설, “언론자유와 한계는 무엇인가”, <서울신문> 사설, “자유와 고된”
1월 20일 <서울신문> 사설, “정부비판의 도의성”

하지만 과연 신문이 국민의 광범한 의견과 비판의 목소리를 누구의 시선도 아닌 제3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그려낸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그보다 앞서 당시의 신문이 국민의 광범한 의견에 귀를 기울였는가를 질문해볼 수 있다. 50년대 한국사회는 국민의 70% 이상이 농민이었는데, 신문은 온통 중앙의 정치 갈등만 연일 보도하면서 한국 국민의 절반을 훨씬 상회하는 농민의 이해와 요구를 담아내고 있지 못했다(이목우, 1956). 때문에 신문인의 목소리가 누구의 목소리인가를 반성적으로 고민해야 했는데, 당시 이에 대한 논의들은 희박하다. 그리고 당시 신문에서 가장 강하게 보여지는 것들은 엘리트 지식인 남성의 시선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권력의 출현이었다.

또한 당시 논의에서는 신문이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다는 전제를 깔고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당시의 사람 어느 누구도 이러한 전제에 대한 진지한 문제제기가 없다는 것은 신문인 스스로 자신들의 지위를 어떠한 현실의 그물망에도 걸리지 않는 무색 투명한 완전무결한 존재로 상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시의 논의에서 신문의 선진화, 서구화, 자율화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면서도 그것이 신문 내부의 제반 사항에 대한 성찰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에서도 엿볼 수 있다.

<서울신문>의 사설로 촉발된 언론자유에 한계성에 대한 논쟁의 추이를 보면, 신문의 비판기능은 현행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일체 간섭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⁹⁰⁾. 정부에 대한 비판기능은 정부가 하는 일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지도편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절대 약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비판은 어디까지나 사실에 기반한 사실보도 및 비판이어야 함을 규범화하고 있다.

이러한 논쟁과정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언론자유에 대한 사회의 생

90) 따라서 당시에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법률제정의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모든 언론인과 지식인들이 일치 단결하여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이관구, 1955, 1958)

각들은 하나로 모아지기보다도 끊임없이 갈등하고 협상하고 논쟁 중이어서 어느 한 시점도 언론자유에 대한 통일된 지점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50년대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는 실질적 민주주의보다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때 절차적 민주주의 실현 과정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집단이 언론인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전제로서 ‘언론자유’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당시 신문인들은 당당하게 공적 영역의 대표적 발화자로 나설 수 있었다.

하지만 민주주의 실현의 공적기제로서 신문에 자기 정당성을 부여한 당시의 사회적 논의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민주주의라는 근대적 이데올로기를 지켜내는 일등 시민으로서 남성 기자들을 호명하였다. 당시의 ‘민주주의’는 국가 정치 차원에 한정되어 있었으며, 언론사 내부의 즉 작업장 정치차원에서의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그래서 당시의 사회적 논의에서 민주언론을 위한 내부 개혁적 요소를 제기하는 논의는 드물었다.

당시 언론자유논의 중에서 가장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즉 정부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 가능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열망이었다. 당시 이러한 논의를 펼친 이들은 50년대가 언론자유가 억압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후 한국 신문의 역사를 볼 때 그 당시만큼 자유롭게 정부를 비판하고 정치권력과 경쟁, 갈등한 시기는 없었다. 오히려 신문의 사회적 책임을 구실로 각종 행정권력의 통제, 규제에 익숙해 진 이후 세대에겐 그 시대의 언론자유가 지나치거나 편파적이었다는 느낌을 받았을 정도다.

당시 언론자유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신문 스스로 민주주의의 일부가 되기보다는 민주주의 실현의 통로로 인식해서 소극적인 언론자유를 요구했다는 점이다. 당시 언론자유를 제한하고자 했던 시도들은 정부의 법적 제도적 장치였지만 대부분 정부의 뜻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반대 여론이 높았다. 하지만 이러한 논쟁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국민에 대한 선의와 보호의

입장'에서 언론을 제약하는 것 이외엔 어떤 것도 용인될 수 없다는 주장 이면에는 교육받은 소수의 남성 지식인 엘리트들의 발언의 자유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50년대 신문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서 젠더는 중요한 변수로 고려되고 있지 않았다. 이는 달리 말하면 신문과 여성을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도 논의했다시피 50년대 신문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서 중요한 문제는 정치권력과 갈등 속에서 언론의 자유를 어떻게 획득할 것인가 혹은 신문이 새롭게 자리매김하기 위해 즉 전통적 지사의 이미지에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지사의 이미지를 확립하기 위해 어떤 전문적 요소를 보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 집중했었다. 이러한 과정은 기존 전통적 권위주의 국가에 대항한 지식인 남성들의 집결지인 신문의 자기 정체성 찾기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이는 전통적 남성성과 새롭게 부상하는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근대적 남성성 간의 대립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는 기존의 가부장적 요소를 문제제기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은폐한 채로 새로운 남성성을 구현하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50년대 한국 신문은 서구적 의미의 신문의 제도화를 피하면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신문 제도를 구축하고자 하는 가운데, 새로운 신문(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과정은 신문의 서구화·선진화로 대변되는 일련의 운동들을 이끌어내는데, 프로페셔널리즘, 공정한 신문, 객관주의 신문, 언론자유 등이 그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은 신문인이 되기 위한 새로운 조건들로써, 그러한 조건들이 남성들 특히나 '미국화'의 세례를 받은 지식인 남성들의 경험에 기반함으로써, 여성들은 그러한 조건에 맞추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는 신문의 현대화는 이것이 더욱 공고화되면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았고, 이후 생물학적 여성들이 신문계에 꾸준히 진입하지만, 그들은 준남성이 되는 과정을 겪어야만 생존할 수 있게 되었다.

제 5 장. 한국 신문의 젠더성 : 남성적 재공간화

50년대 한국 신문에 대한 사회적 담론들이 당시 신문이 새롭게 제도화되는 과정에 어떻게 결합하고 있는가를 앞선 두 개의 장에서 분석하였다. 신문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크게 지배적 담론과 부상하는 담론으로 구분되는데, 지배적 담론에서는 신문의 사회적 역할과 공기로서의 성격을 당시 시대상황과 결부시켜 한층 더 강조하면서 ‘기자정신’으로 대변되는 지사적 신문을 통해 당시 신문인들을 가부장적 국가의 지사적 주체로 호명하고 있었다.

한편 휴전협정이 체결되고 미국의 원조로 전쟁복구가 진행된 50년대 중반, 신문에 대해서도 새로운 기운들이 감지되는데 이러한 기운의 한가운데 ‘미국’이 자리잡고 있었다. 당시 ‘미국화’의 바람은 신문계 뿐 아니라 사회의 전 영역에 걸친 현상이었으나, 특히 신문계는 신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근대적 성격과 ‘미국화’가 결합하면서 ‘선진화’의 이름으로 새로운 시스템들을 구축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부상하는 담론으로 자리잡았다.

이렇게 50년대의 지배적 담론과 부상하는 담론은 언뜻 보기에는 대척의 지점에서 서로 대결의 전선을 펼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젠더라는 분석 범주를 적용시켜 보면 남성성 구축과정의 공통성을 지니고 있었다. 즉 1950년대 한국 신문의 새로운 기운들은 ‘신문의 젠더화’와 맞물려 있었다. 물론 각각의 담론들이 담아내고 있는 남성성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다. 지배적 담론인 ‘지사적 신문’은 유교적 남성성을 구현하고 있고, ‘선진화된 신문’이라는 부상하는 담론은 근대적 남성성을 구현하고 있었다. 하지만, 두 경합하는 담론이 궁극적으로 여성(성)을 타자화하고 나아가 신문이라는 제도 자체를 남성적 시스템으로 형성하여 한국 신문을 남성적 공간으로 구축한 점은, 대척의 지점보다는 연장선상에서 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본 장에서 다루어야 하는 분석은, 당시 지배적 담론과 부상하는 담론의 경합이 신문의 실제 취재과정이나 새롭게 등장하는 한국 신문의 제도적 측면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는지를 추적하는 작업이다. 다시 말해 당시 신문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통해 남성성의 정체성을 획득한 신문(인)이 이러한 신문의 젠더성을 실제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고 강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지배적 담론과 부상하는 담론의 경합 결과가 무엇이며, 이는 50년대 한국 신문의 구체적 실천 양상들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제도화라는 것은 지속성과 반복성을 통해, 관행이나 관습 같은 방식으로 우리 삶에서 구현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에 비추어 본다면 신문이 제도화되었다고 한다면 신문관행이 기자들의 작업영역에서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드러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50년대 중반이 한국 사회에서 신문이 새롭게 제도화된 시기라면 이 시기를 통해 새롭게 형성된 언론관행이나 관습은 무엇일까요 중요한 질문으로 대두된다. 그리고 이러한 관행이나 직업의식은 당시 신문에 대한 지배적 담론 및 부상하는 담론과 어떤 관련성을 맺고 있는가도 중요해진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이전 장에서 논의했던 50년대 한국 신문의 담론적 이상형이 현실에서 구현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행들을 만들어 냈는지를 추적하고 분석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신문의 이상이 현실에서 실행되는 과정에 '지사적 신문'의 유교적 남성성과 '선진화된 신문'의 근대적 남성성이 어떻게 개입, 경합을 벌이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제도화의 움직임이 기존 지사적 전통의 유교적 가부장적 관행과 어떻게 상호 관련되어 가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신문의 젠더성을 드러내고자 한다.

1. 제도적 실천의 미흡 : 기자공체제도 및 견습기자 교육의 남성 중심성

일반 대중들이 사회생활을 하다 기자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직접 접하게 되는 계기는 주로 사건·사고 현장이거나 관공서를 드나들면서일 것이다. 다시 말해 일반 대중들은 주로 외근기자를 통해 기자에 대한 이미지를 일반화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 외근 기자는 주로 출입처 기자단을 중심으로 활동한 기자들이었다.

당시 신문에 대한 사회적 논의과정을 통해 바람직한 신문기자상은 사실보도와 논평 및 해설 기사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보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사실보도는 신문의 보도성을 대표하는 기능이고 논평 및 해설기는 뉴스로서 전달된 사실을 놓고 분석, 평가하는 기능이 우선시 되었다. 그래서 사실보도가 객관적이고 정확성을 생명으로 한다면 논평기사는 공정하고 독립적이기를 요구했다. 논평은 그 시점에서의 사회의 공론을 대변하는 것이며 해설기사는 균형잡힌 뉴스감각의 바탕위에서 사건의 의미를 굴절없이 평가하는 기능을 요구한다. 따라서 논평기사는 중립적인 관점이 요구되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당시 신문의 견습기자 교육과정은 신문이 이상형으로 상정한 기사를 길러내는 과정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은, 견습기자 교육과정에서 이러한 당시의 신문에 대한 이념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만약 신문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서 회구된 이상적 신문기자가 현실의 훈련과정에서 구현되지 못했다면 이러한 굴절에 중요하게 작동한 요소가 무엇이었는지도 한번 문제제기 해 봐야 한다.

한편 해방 후 신문기자들은 좌우 이념대립의 와중에서 각자의 이데올로기적 편향에 따라 신문 활동을 펼쳤다. 하지만 미군정 3년을 거치면서 진보적 계열의

좌익성향의 신문들이 도태됨으로써 이데올로기적 대결 대신에 보수우익 신문들 사이의 경쟁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미국식 저널리즘이 한국 신문계에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신문의 직업주의, 전문직으로서의 기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대두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자 선발의 과정을 공채로 전환하여 인재들을 선발하는 과정을 제도화 시키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러한 취지 하에 1950년대는 신문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젊고 유능한 인재들 신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이전의 충원방식이던 스카웃과 추천 외에 새로운 충원방식인 공채제도를 도입, 이를 이후 한국 신문의 기자 충원방식으로 정착시킨 시기이다.

공개 채용을 통해 신문기자가 된 이들은 대부분 대학 졸업 수준의 지식과 능력을 갖춘 젊은이들이었다. 따라서 이들을 어떻게 교육시켜 기자로 양성하는가 하는 문제는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었다. 그 이전 시기의 신문기자는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태어나는 것'이라고들 했는데, 50년대 중반 이후부터 기자공채제도를 통해 선발된 견습기자들의 수습훈련은 길러지는 과정의 시발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떤 과정을 통해 길러지는 가는 중요한 분석 대상이 된다.

각 신문사는 새로운 인력이 선발되면, 자사의 근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관행을 교육시킨다. 이는 해당 신문사의 제도화된 인식 틀을 전수하는 과정이다. 여러 신문이 비슷한 작업 관행을 유지한다면, 그러한 사실은 해당 사회의 언론계가 공통적으로 발전시켜 온 관행으로 이해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이재경·김진미, 2001, 174쪽). 따라서 처음 신문사 조직에 발을 들여놓는 견습기자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는가는 당시 신문사 조직문화를 이해하는데 핵심이 될 듯하다.

여러 학자들이 지적하는 전문직의 특성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점들 중의 하나로, 사회가 공인하는 제도화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직업적 자질을

갖추고 사회적 승인을 받는 것을 들 수 있는데(유재천, 1988, 257쪽) 이에 비추어 본다면 50년대 중반에 새롭게 등장한 기자공채제도는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신문기자 공채제도가 정착된 것은 1950년대의 일이다. <서울신문>이 1953년 견습기자 1기를 공개 채용했으며, <한국일보>는 창간 초기인 1954년에, <경향신문>은 1958년에 견습기자 공개채용제도를 도입하였다⁹¹⁾.

최초로 견습기자를 공개모집한 <서울신문>은 당시 편집국장 고제경이 “유능한 기사를 길러내자면 공개시험을 통해서 널리 인재를 구해야 하고 정식수련을 쌓게 하여 전문기자를 양성해야 한다”고 제안해 53년 8월부터 견습기자를 공개모집 하였다. 응모자격은 대졸이상, 만 21세 이상의 남녀에 한했다. 견습 1기생은 견습과정을 따로 밟지 않고 실무에 임하다가 3개월쯤 후에 정식기자로 임명되었다.

<서울신문>은 53년에 이어 54년에도 견습기자를 공개모집 했는데 당시의 응모자격은 대학졸업 또는 동등이상으로, 연령은 만 25세 이상의 남녀로 제한하였으나 연령의 상한선은 두지 않았다. 시험과목은 국어·영어(회화와 번역)·논문·상식 및 구술이었고 그 후 이와 같은 시험과목은 거의 정착되었다⁹²⁾. 제2기 견습기자 모집시험에는 161명이 응시하였다. 그때만 해도 기자 지망자 중 교원이나 대학 재학 중인 자가 많았고 구술시험에는 이구동성으로 ‘아르바이트의 한방식’으로 견습기자가 되려고 한다’고 실토한 것으로 봐서 기자라는 전문직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그만큼 미흡했었다고 볼 수 있다.

91) 50년대 당시 견습기자 채용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서울신문> 53년 1기(2명), 54년 2기(3명), 57년 4기(4명), 58년 5기(4명), 59년 6기(6명)

<한국일보> 54년 1기(6명), 이후 매년 2차례씩, <조선일보> 54년 1기(8명), 59년 2기(9명)

<동아일보> 59년 1기(9명), <경향신문> 58년 1기(5명), 59년 2기(5명)

<연합신문> 57년 겨울(?명), <세계일보> 59년 겨울(?명)

92) 1957년 <서울신문> 4기 공채출신인 신우식은 그때 이미 견습기자 시험과목은 틀이 잡혀있었고 국어, 영어, 논문, 상식이었으며 영어가 당락을 결정짓는 열쇠였다고 회고하고 있다(신우식, 1986, 90쪽).

<서울신문>의 제2기 견습기자 공채에는 3명이 합격했으며 이들부터 비로소 6개월간의 견습기간을 두고 사내에서 선배기자들의 지도를 받았는데 지금과 같은 본격적인 기자수습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귀로 익히는 글자 그대로의 견습이었다. 경우에 따라 한해 걸러 모집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56년부터는 거의 매년 공채를 실시, 견습공채제도는 차츰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서울신문사, 1985, 273~274쪽).

<한국일보>는 창간 당시 장기영 사장이 직접 발로 뛰어 다니면서 함께 일할 사람들을 스카웃을 통해 충원하였다. 하지만 신생 신문사라 일은 계속 늘어나 스카웃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 때 최병우가 견습기자 모집을 건의했다. 대학을 갓 나온 사람을 뽑으면 당장은 크게 쓸모가 없겠지만 얼마 안가서 신문이 뭔지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 기성기자보다 정의의 칼을 휘둘러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또 당시 젊은 엘리트들이 은행과 관공서와 함께 신문기자직에 흥미를 갖고 있었다. 따라서 젊은 엘리트들 뽑아 쓰면 나중에 취재원 접근에도 크게 유리할 것으로 보았다(한국일보사, 1994, 142쪽).

<한국일보>는 54년 7월에 견습기자 모집 광고를 냈고, 시험과목은 논문, 시사상식, 모의취재, 영어, 구두신문이고 자격은 전문대학 졸업자로 만 23세만 이상 27세 미만의 남녀였다. 이후 <한국일보>는 제1기 공채를 시작으로 매년 거의 두 차례씩 시험을 치러, 한국 신문의 공채를 제도화하는데 기여했으며 기자사관학교라는 명칭을 얻었다.

하지만 각 신문사는 기자들을 공개채용 한 이후의 교육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질 못했다. 유능한 인재를 뽑아 전문기자를 양성하겠다는 애초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거의가 도제식 방식에 의존하여 선배기자들을 따라다니며 기자의 직을 몸으로 익히는 것이 고작이었다고 할 수 있다. 도제식은 중세 때 길드에서 수공업자가 후계자를 양성하던 방식에서 유래된 것으로, 철저하게 멘토멘 방식이다. 따라서 가르침을 받는 제자는 가르침을 제공하는 스승에게 절대 복종

이 요구된다. 그리고 몸으로 익히는 ‘기자되기’는 선배기자와 거의 시간을 함께 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은 합리적이고 공정하기보다는 거칠고 험난하며, 대부분의 선배가 남성기자들이기 때문에, 선배들에 의존한 도제식 기자교육은 선배 남성기자에서 후배 남성기자로 연결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기자들은 자연스럽게 배제되었다. 그래서 당시 여성 기자들에게 편집국의 내근 기자직은 여성성과 신문의 남성성이 최소한으로 충돌하게 하는 장치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기자공채제도가 시행됐다고 해서 그 당시 기자들이 모두 이 방식으로 충원된 것은 아니다. 여전히 개인적 친분과 사회적 연결망으로 취재기자나 간부급 기사를 스카웃하는 관행도 지속되고 있었다. 다음의 사례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54년 5월 부산시절부터 알게 된 서양사학자 이보형 교수로부터 신문사로 가서 일해 보는데 어떻겠느냐는 권유를 받았다. 한국일보가 6월에 창간하기 위한 준비에 한창인데, 자기의 경기중학 동창인 최병우가 장기영 사주의 측근으로 외신부장을 하고 있다며 소개시켜 주겠노라는 것이었다.... 만나기로 약속이 돼서 신문사로 최병우를 찾아 갔다. 그는 나를 보자, 대뜸 “애기가 되어 있으니 감시다”하고 코리아 타임스 편집국장한테로 데리고 갔다. 박수창이 국장인데 알고 보니 신흥우가 하던 유니언 데모크래시의 편집장을 하던 분이였다. 그는 나에 관한 얘기는 들었다면서 신문을 건네주며 머리기사를 영어기사로 만들어 보라고 했다. 곧 타자를 쳐서 주었더니 훑어보고 나서 바로 내일부터 출근하라고 했다. 그래서 코리아 타임스에 입사하게 되었다”(김용구, 2001, 59~61쪽).

당시 공채제도가 정착되기 전의 신문사의 기자 충원방식은 이와 같이 사회적 친분과 연줄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때의 친분은 주로 학연이었는데, 당시는 교육이 가장 중요한 사회적 자원중의 하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시 사회적 엘리트는 고등교육을 받은 이들이었는데 이의 대부분은 남성들이었기 때문에 당시 기자사회는 남성 지식인들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한 추천 및 스카웃이

충원의 대부분을 이루었다. 그래서 당시 여성들은 ‘기자자라는 직업은 멋있지만 그것은 자신들처럼 여자들이 감히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었다고 전한다. 그래서 낮은 비율이지만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에게 공채를 통해 기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은 그 사실만으로 볼 때는 남녀평등에 한차원 가깝게 간 것이라고 볼 수 있다⁹³⁾. 하지만 비록 모집 공고는 남녀 기사를 동시에 모집한다고 냈지만, 당시 신문사는 여성기자를 선호하지 않았다. 그래서 50년대 시작된 각 사들의 공개채용 제도를 통해 여성이 기자가 된 사례는 53년부터 59년까지 서울 일간지의 경우는 3명 뿐이었다⁹⁴⁾(정진석, 1995, 310쪽).

기자공채제도를 통해 명문대 출신의 남성들이 대거 언론사로 진출함으로써 이후 이들은 한국 신문계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한국 전쟁을 겪은 50년대 중반 이후에 언론계에서 문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은 직업적 언론인들이 출현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전까지는 기자채용의 기준이 필력을 위주로 하는 것이었으나 수습기자의 공채제도가 정착되면서 학력 위주의 엘리트 기사를 뽑는데 중점을 둬으로써 문인들의 언론계 진출이 점점 어려워졌다. 따라서 문인 출신 언론인들은 주로 문화부에만 남게 되었다(정진석, 1992, 37쪽).

각 신문사가 처음 견습기자를 모집하기 시작하던 50년대 중반은 취업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대학졸업자가 시험을 통해 들어갈 수 있는 직장은 은행과 관공서 외에는 거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견습기자 모집은 취업을 갈망하던 인재들에게 더 없이 좋은 기회였다. 프라이드와 자유분방한 분위기가 넘치는 화려한 직장이기에 경영주는 능력있는 인재를 얼마든지 골라 쓸 수 있었

93) 인터뷰에 응한 K씨는 당시 모여자대학 3학년에 재학중이었는데 대학졸업 후에도 취직이 너무 막연할 것같아 기회가 왔길래(당시 한국일보의 고졸이상만 되면 지원가능했다한다) 그냥 한번 응시했으며, 사학을 전공한 자신한테 유리한 논술문제가 나와 학교에서 배운 바를 열심히 썼을 뿐이며, 당시 기자가 뭐 하는 건지도 모르고 여성도 뽑아준다니깐 얼른 응시했다고 밝혔다.

94) 1957년 <서울신문> 김혜숙, 1958년 <한국일보> 고광애, 1959년 <동아일보> 권영자.

다. 따라서 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에 걸치는 기간은 수습기자의 전성기였다.

견습기자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은 대체로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전공분야는 각양각색이어서 언론계 실무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대학에 신문학과가 없었던 1950년대 견습기자의 대부분이 비전공자들이었고 문자 그대로 이들 신참자들을 위해서 각사에서는 2-3주 동안의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 기간에 주로 실시하는 것은 신문사란 무엇이며, 편집이란 무엇이며, 취재는 어떻게 하는가 하는 문제들이었다. 강사는 주로 사내의 간부들이어서 강의 내용은 학술적이라기보다는 실무적인 경험담이었다. 이러한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끝내고 나면, 대체로 6개월 동안 여러 가지 부서에서 순회식인 실무훈련을 거친 후에 고정적인 위치에 배속되는 것이 견습기자교육의 전부였다(최종수, 1977, 224~225쪽).

50년대 중반 각사의 견습기자 교육과정은 제각각이었다. 하지만 그 대략적인 과정들을 살펴보면, 견습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이었고 주로 사내 간부 한사람의 지도하에 견습과정이 이루어졌다. 사의 간부들이 교육을 맡았던 각사의 공통된 교육내용은 신문기자론, 대기자들의 비화, 기자의 품격, 통신의 제작 방향, 언론의 책임, 관계회사견학, 각부별 기사취재의 실제 등이었다. 원론적인 수준의 간부들의 강의교육이 끝나면 다음으로 편집국 부서를 돌면서 각부의 분위기를 익혔다. 각 부서에서 다루는 내용이나 제작 메카니즘을 알기 위해 배치되는 것이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견습기자에게 뭘 시키지도 않고 그렇다고 바쁜 선배기자들이 자상하게 가르쳐주지도 않았다. 단지 각사의 데스크가 기사작성법에서부터 단편적으로 가르쳤다. 하지만 견습기자 훈련과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기사문장을 확실하게 터득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50년대 견습기자 훈련과정은 여전히 논객 혹은 지사로서 문장력이 뛰어난 기자를 길러내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아래의 글은 60년대 견습기자들에 대한 간부기자의 유감을 표현한 글이다. 기자공채제도가 시작된 지 1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여전히 기자는

‘글’을 따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변하는 걸 보더라도, 50년대 견습기간 동안 당시 데스크들이 어디다 중점을 두고 기자들을 교육시켰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1백대 1의 관문을 뚫고 들어온 요즘의 ‘기자후보’ 선생들은 어떠한가. 진실의 추구보다는 ‘봉급’을 따지는 사람이 훨씬 많아졌다는 느낌이 든다. 신문의 구석구석을 뜯어보고 어떤 기사가 잘되었는지를 따져볼 생각은 않고-견습이 끝난 뒤 자기가 앉을 자리에 더 신경을 쓰고 ‘봉급외’의 그 무엇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부터 부지런히 따져보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무책임한 얘기이긴 하나 한국의 기자사회는 아직 ‘돈’을 따지기보다는 ‘글’을 따져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끔 가져본다...정신적 뇌물조차 거부하는 의연한 금도와 진실추구에의 식을 줄 모르는 정열을 갖지 못하는 한 아무리 우수한 견습기자 출신이라도 대기자가 되기를 바라기는 어려울 것이다”(김경환, 1966, 154, 156쪽).

50년대는 신문과 통신이 지배적이어서, 외국어 실력이 중요하고 또한 여전한 문장력이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하지만 기자가 문장력을 향상시키는 훈련은 소속 부장의 개인 책임 하에 맡겨 둔 채 체계적 지도가 없었다. 그래서 문장력은 궁극적으로 기자 스스로 터득해가는 것으로 얘기되었다.

한편 50년대 중·후반에 새롭게 제기되는 신문에 대한 사회적 담론은 사실 보도와 평론에 대한 엄격한 구분이었다. 그리고 당시 신문의 과도한 정치성으로 인한 논평의 과잉에 대해 정확한 사실보도를 강력하게 주장하게 된다. 그렇다면 견습기간 동안 중요하게 신입기자들이 배워야 하는 것은 문장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이전에 정확한 사실보도를 위해 정보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를 체계적으로 훈련받는 것이 보다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견습기자 교육은 이후 6개월간의 교육으로 정착되었다. 한 달 가량 회사 오리엔테이션, 한 달 가량의 부 순회 교육, 넉달 가량의 사회부 경찰출입 교육으로 채워졌다. 그중 오리엔테이션이나 부 순회는 특별하게 비중을 두지 않고 사회부 경찰출입생활이 본격적인 기자교육의 장이 되었다. 당시 신문사에서는 체계적인

교육과정 없이 자신의 직업적 능력을 몸으로 체득하는 것을 전통으로 지키면서 은근한 자랑으로 간주하기까지 했다.

각 신문사의 견습기자 훈련이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확립된 것은 60년대 중반 이후이다⁹⁵⁾. 50년대 중반부터 60년대 중반까지 각 사의 계획에 의해 훈련을 실시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하나의 교육이라기보다는 견습기자 자신이 스스로 체험하고 익혀서 배우는 형태인 말 그대로의 견습이었다.

견습기자 때의 교육에서 기자는 초소를 지키는 병사 혹은 기합을 받는 이등병으로 비유되었다. 언제 어느 때 돌발사태가 일어날지 모르는 신문사 조직이기 때문에 긴장과 위계로 철저한 도제식 교육을 받았음을 뜻하는 용어였다. 그리고 신문기자로써 가장 중시되는 자질은 과학자의 재질과 맞먹는 진실추구예의 정열과 불의와 부정을 용납 않는 불타는 정의감이라고 교육받았다(조풍연, 1965).

한 수습기자가 수습기간 선배기자들을 보며 느낀 점을 적은 글에서 보여지듯이 수습기자들이 생각하고 있던 당시 기자상은 “자! 나는 신념대로 살았고 부정과 타협하지 않았고 비굴하지도 않았다. 나를 따르라” 하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이동규, 1965). 이것은 앞서 논의한 한국 신문의 정체성을 지사형 신문으로 상정한 것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당시의 기자는 단순히 밥벌이하는 직업이 아니라 적어도 사회의 정의를 옹호하고 민족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면서 공공생활을 정화하는 ‘지사’라는 것이다.

신문사 견습기자로 채용되기 전 대학시절 때 동경한 신문은 ‘사회의 거울’이며 ‘언론은 제4부’라는 함축성 있는 말로 상징되었다. 그래서 신문에 보도되는 기사에 거의 절대적 신뢰를 두었고 그것에 실리는 각종 해설이나 사설은 우리의 오늘을 보고 내일을 생각하는 판단의 다시없는 근거가 되었다(최시중, 1965, 45

95) 수습기자 훈련이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확립된 것은 1965년 5월 <한국신문연구소>가 국내의 각 신문·통신사와 IPI 국내위원회의 협조를 얻어 1개월간 수습기자 훈련을 시작한 것을 들 수 있다. 비록 1개월, 그것도 매일 오후 2시-5시의 3시간을 이용하는 방법이었지만 강의·토론·실습으로 짜여진 이 계획은 수습사원의 언론에 대한 지식을 높여주는데 적지 않은 공헌을 했다(<신문평론>, 1976, 25쪽).

쪽).

하지만 막상 수습기간동안 받은 인상은 한국적 모순과 혼란을 상징적으로 집약시킨 곳이 언론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회적으로 이상화된 신문과 현실의 신문은 차이가 있었다. 수습기자 눈에 비친 기자실은 부수수입을 위한 공동투쟁기구였으며, 선배 기자들은 늘 포카나 내기 바둑을 두느라 정신이 없고, 그래서 출입기자단은 '복마전'이라는 말도 듣게 되었다. 무엇보다 신문사는 자유로운 것이 아닌 위계의식이 상당한 곳이었고 기자실은 연령이 낮아 경륜과 지혜가 녹아나는 노장 기자를 볼 수 없었다(이동규, 1965).

그리고 한국 언론이 그 권위를 남용하여 횡포화 되는가 하면 매너리즘에 빠져 공인으로서의 문제의식을 상실하고 불필요한 경쟁을 하는데서 선량한 독자들이 거의 전폭적인 신뢰를 주고 있는 기사가 적당한 추측과 얼버무리임이나 목적있는 왜곡에서 작성되고 있는 일이 많았다. 정부의 특혜를 규탄하면서 언론기관 스스로는 각종 특혜를 누리고 있으며 심지어는 그 특혜를 은폐하는 기능마저 있으며 사회의 부패 부정을 고발하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적당히 처리하는 명수가 되는가 하면 인권과 노동자의 권익을 제창하는 선봉인 듯한데 언론인들의 권익을 위한 경영자 측의 배려나 언론인 스스로의 투쟁은 엄두도 못내고 있는 형편이었다.

견습기자 공채제도를 통해 선발한 이들을 기수별로 견습훈련을 시키는 것의 긍정적 측면은 첫째로 우수한 인재를 공정하게 선발하여 이들을 함께 교육시킴으로써 집단의식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입사한 사람들은 개별로 일체감이 있고, 위계질서가 분명하며, 승진 승급 등의 인사에 있어서도 공정을 기할 수 있는 것이다. 견습기자들은 사내에서 입사 기별로도 결속이 강화되었다. 1970년대 초반의 언론자유수호운동도 이들 견습기자출신 기별 움직임이 가져온 결속력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측면은 양가적이었다. 기별 결속력이 지나쳐서 배타적

인 경향을 띠기도 하고 개성을 발휘하는 능력개발에 장애요소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인사에 있어서도 기별 입사연도에 따른 서열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능력에 의한 적재적소의 배치가 어려웠다(정진석, 1992, 48쪽).

또한 공채제도로 기사를 집단으로 고용하고 동기생들은 모두 함께 진급하며 비슷한 시기에 부장이 되고 부국장이 되는 인사제도 때문에 구조적으로 개인주의적 바탕에 가치를 둔 언론의 자유를 향유하기 어렵다. 기자공채제도는 입사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동기생들끼리의 단합이 용이한 점 등으로 외부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에 집단적으로 대응을 하기에 효과적으로 기능한 점도 있었다. 그러나 개인의 능력이 기준이 아니라 다음 기수에게 데스크 자리를 넘겨줘야 하기 때문에 순환적인 인사이동이 실시되는 현실을 낳게 된다(이재경, 2003, 73쪽).

50년대와 60년대까지는 신문사 간의 인사교류가 비교적 자유로웠으나 70년대로 넘어올 무렵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이는 각 신문사별로 수습기자 중심의 인사서열이 확립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이상에서 볼 때 기자공채제도의 역사적 의미는 입사제도의 민주적 관리 하에 신참자 신분으로 다같이 평등하게 복종한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사회의 민주주의 요구가 언론의 제도적 장치로 정착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실상을 살펴보면 권위주의적 실천이 드러난다. 다시 말해 기자 공채제도는 신문사 조직문화를 기수별로 순열화 함으로써 앞서 신문의 이념형으로 줄곧 주창됐던 언론 자유의 기본 토대가 되는 개인의 자유로운 취재활동 및 자율적인 행위를 구조적으로 가로막았다. 또한 기자공채제도와 맞물려 연동되는 것이 이들에 대한 견습교육과정인데, 견습기자 교육 과정 또한 그 실행 과정에서 가부장성과 남성중심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달리 말하면 신문기자의 취재 보도과정에 당시 신문에 대한 이상형이 구체적으로 개입하여 기존 관행의 가부장성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새롭게 등장한 민주주의 방식의 실현과정이 가부장성에 포섭되고 말았다고 볼 수 있다.

2. 출입처 기자단 : 배타적 위계성의 남성적 공간

출입처 기자단의 당초 설립 목적은 취재편의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였다. 그리고 기자단은 각사의 외근기자가 출입처를 단위로 대개 구성되었다. 1957년 당시 출입처 기자단은 15-6명으로, 외신계약이 있고 중앙 종합일간지 5사 이상과 계약된 5개 통신사 및 특수지를 제외한 10개 일간지로 구성되었다(<편협보>, 3호, 2면).

원칙적으로 기자단이란 어떠한 특별한 결속 목적이 있을 때, 즉 유사시 결성했다가 그 일이 끝났을 때는 바로 해체되는 것이다. 국가원수의 외국방문, 대규모 군사훈련, 올림픽, 대규모의 국내외행사, 대내적인 사건 사고 등을 취재하기 위해 각 신문사가 취재요원을 파견했을 때 취재원 내지 국내외 관계자들로부터 취재의 편의를 얻기 위해 기자단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아니고 평상시 기자단을 구성, 운영하는 일은 다소 모순이 있으며 그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갖가지 잡음이 생긴다. 또한 취재편의에 대해서도 그 편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편의인지를 질문해볼 필요가 있다. 아래의 글은 이와 관련된 글이다.

“기자단의 구성목적은 취재활동에 있어서의 상호 협조와 기자들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자는 데에 있다. 취재활동에 있어서의 상호협조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는 개념적으로 알 수 있겠으나 실제면에 있어서 그것이 얼마만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인지 종잡기 곤란하다. 흔히 목도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각 사 기자들의 상호협조란 형식적인 것이며 프린트(성명서 담화 따위)의 전달이나 상위(국회의 경우)의 개최여부 등을 알리는 것이 고작이다. 뉴스 쟁탈이 격심하고 특종을 뽑아내는 것을 기자된 긍지로 아는 신문계에서 전기한 협조 이상의 것을 바란다는 것은 오히려 어리석은 노릇이라 할 수 있겠다. 동일 출입처 기자들의 친목도모도 따지고 보면 기자단 구성을 위한 하나의 구실에 불과하다. 기자단의 유무에 따라 상호간의 친밀도나 교제의 심천이 좌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한명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기자단의 구성목적은 대개의 각 출입처 기자단이 그 정관 제 1조에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취재활동에 있어서의 상호협조나 가입 기자들의 친목도모에 있는 것이 아니며 또 사실상 그 점에 있어서는 그다지 큰 효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편협보〉, 3호, 2면).

또한 출입처 기자실은 기자신분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출입이 가능해야 하고 하등의 차별대우를 받아서도 안된다. 어떠한 매체이건 간에 취재를 목적으로 하는 기자들에게 어떤 구실을 붙여 기자실 출입을 막아서는 안되는 것이다. ‘회원 외 출입을 삼가 주시오’라는 팻말을 붙여놓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이는 언론의 자유, 취재의 자유 그리고 기자 상호간의 유대에도 동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자단이 기득권을 가진 특정 이권단체라는 수식어가 붙게 되었다.

“그 표면상 목적이 기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하나 그렇다고 출입하는 기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닌 모양이어서 한 출입처에 대체로 15-6명 내외로 구성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에서만도 33개의 월간 통신 및 신문과 96종의 주간이 발간되고 있는데 이렇게 가입이 제한되고 있는 것을 보면 기자단이란 단순히 친목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도 나올 법 하다. 일부에서는 기자단이 실질적으로는 후생사업을 위주로 한다는 비난을 하고 있으며 사실 기자단과 관련된 불미스런 일들이 가끔 표면화 하고 있다. 물론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영향도 있겠지만 6·25 전까지만 해도 기자단이 후생을 위해 움직인다는 일은 찾아볼 수 없었던 것으로 그만큼 언론인의 질이 높아졌다는 것이라면 유감된 일이다”(〈편협보〉, 3호, 2면).

따라서 당시 기자단에 대한 논쟁들이 있었는데, 특히 견습기자들은 견습을 거치는 동안 기자단이 생태적으로 선의의 경쟁을 가로막고 충실하고 알찬 취재를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지, 출입처가 제공하는 자료만으로 기사화해버림으로써 기자들이 문제의식을 망각하지는 않는지, 다수의 횡포로 소수기자의 진실된 주장이 묵살되지 않는지, 사소한 이익 또는 설득에 넘어가 공익에 위배되는 중

대한 사실을 덮어버리는 일은 없는지를 질문하고 있다. 기자실이 풀하는 곳, 쉬는 곳, 잡담하는 곳 등 안일하게 기자생활을 해나가게 하는 곳으로 전략하여 혈기왕성한 기자 초년병들을 조로케하는 온상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당시 기자실이 곧바로 취재원이 되지는 않는지도 질문하고 있다. 따라서 당시 출입처기자단의 생존근거는 취재편의와 친목도모였지만 사실 이는 명분만 제공했지 실제적 도움을 주지 못했다.

“사회=그리고 이런 예가 있다고 합니다. 일류지의 기자들이 출입처에 가서 (손으로 동그라미를 그리면서)이러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송=그것이 지금에 뿐만 아니라 일제 때에도 있었습니다....일제에는 자기 자신이 가서 추잡스럽게 내라고 하지 못했는데 요새는 일류지도 그럴 것입니다. 모르기는 몰라도 월급을 받아서는 힘들고 누가 자꾸 찾아와서 장관 도장하나 찍도록 해주면 얼마 주겠다 하면 사람이 돈을 보면 마음이 흔들리는데 장관한테 말해서 도장 하나 찍어주면 금방 돈이 생기는데 그것도 한 두 번 하면 자꾸 맛이 생기니까 왜 못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자꾸 하다보면 일류지사 기자기리 결탁해서 우리 돈벌이 하자 그렇게 되면 되는 것이지 별 도리 없습니다”(〈사상계〉, 1960, 109쪽).

그래서 1950년대 후반에는 ‘기자의 음성수입’, ‘좋은 출입처’, ‘경제기자라면 생활은 넉넉하겠군’하는 등등의 불미한 말이 유포되었을 뿐 아니라 기자단 해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무성하였다. 그래서 어떤 중앙 일간지에서는 기자대우를 상대적으로 후하게 하는 동시에 출입처의 기자단(기자구락부)으로부터 탈퇴하라는 지시를 내린 일도 있었다(박동운, 1960, 57쪽).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출입처 기자단의 존재가 오히려 취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보다는 이를 저해하는데 일조했다는 점이다. 아래의 두 글에서 당시 출입처 기자들의 횡포를 읽을 수 있다.

“기자=이것도 일종의 가기사계에 속하지만 집단적으로 행동하니까 약간 다

르다. 정부각부처를 출입하는 소위 'XX부출입기자단'하는 그것이다. 하나의 친목단체로서 시작된 이것이 이 정권 전성기에서 몰락직전까지 대단한 행패를 부려왔었다. 물론 예외는 있었다. 장관 하나가 신임되면 우선 이 출입기자단에게 세금을 바친다. 그 첫 납입액의 다과로서 그에 대한 감정의 척도를 삼는 수도 있었다. 재직 중 이 '귀찮은 집단'에게 얼마나 많은 국고금을 털어 바치는지 모른다. 그러니 집단구결단은 납세국민의 등을 간접적으로 쳐서 연명해보겠다는 기묘한 조직체인 것이다. 총회비라고 불리우는 기자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간사로 선출된 청년들은 농촌 세리들의 몇 배나 더한 월권적인 강압책을 수립해야 했다. 이 총회비는 출입기자들이 택일하여 친목을 위한 연회같은 데 소비하는 것이 아니다. 수금즉시로 분배착복 해버리는 것이다. 출입처에 따라서 분배량에도 차이가 있다. 경제부처나 사무관청은 법조나 보사부같은 곳의 배 이상이 보통이었다. 간사의 활동여하로 이권의 공동청부도 맡아 그 가치를 분배한다. 한가지 결식기자단의 미덕은 엄정 분배 완전착복 비밀보지.....이런 곳에 있다”(김경래, 1960, 121쪽).

한편, 신문사는 그 외양과는 달리 군사문화가 광범위하게 잔존해 있는 곳이다. 이른바 구학이라고 불리는 구세대의 편집국 문화는 '대외에는 절대 독립, 대내에는 절대 복종'의 기자철학을 체득할 것을 강조한다. 내부적으로는 합리를 거추장스럽게 생각하는 선후배 관계가 형성된다. 실제로 2진 생활을 하면서 1진 선배기자의 옥설을 받기도 하고 격려를 받기도 하다보면 어느새 선배기자가 하늘로 보이고 아버지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기자실은 정보의 집결지이고 2진 기자가 발로 뛰어서 하나를 알 때 1진 기자는 기자실에 앉아서 둘을 알았던 것이다.

한국과 같은 동양 문화권에서 기자사회의 작업장 문화는 사회전반에 스며있는 유교문화권의 전통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 비록 언론기업의 노동조직화 방식은 서구 산업사회에서 유입된 것이긴 하지만, 국가별로 다른 문화적 맥락이라는 스크린을 통해 여과되어 독특한 형태로 정착하게 된다.

한국 사회는 사회적 연줄에 의해 치밀하게 짜인 위계와 구성원 간의 동질성 및 화합을 강조하는 유교문화의 맥락에서 산업화가 진행되었다. 유교적 전통은

한편으로는 조직 위계 내의 권위에 대한 충성과 상호융화를 강조하는 가부장적인 사회구조를 발전시켰다.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전통적인 사회관계의 토대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같은 이익집단 역시 전통적인 사회집단의 이미지를 따 “가족”적인 사회관계의 요소를 조직문화에 접목시키려 했다. 또 한편으로는 권위에 대한 충성, 상호간의 협동성과 융화를 강조하는 유교전통은 서구 사회에서 불가침의 원칙으로 존중되는 개인주의 원칙의 발전을 억제시켰다(최장집, 1997, 37~39쪽, 임영호, 1998, 168~169에서 재인용).

이같이 유교문화에 내재하는 권위주의적 요소는 신문사 조직 문화에서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기자집단 내부의 관계에서 선후배 사이의 강한 위계 의식은 이러한 유교문화의 가부장적 요소가 발휘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다른 세계는 몰라도 신문계에서는 선후배의 관념은 매우 두터운 것을 나는 경험해 왔다. 모셔본 일이 없는 이라도 이 방면에 진출이 앞섰음이 뚜렷하면, 우리는 선배로 깎듯이 대접하고 지금도 그러하다. 더군다나 한술의 밥을 먹는 직장의 선배에 대하여 또는 그 직위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의 양식이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대가 가까울수록 이 관념은 희박하여가는 것 같다”(조풍연, 1965, 17쪽).

신문사 작업장의 유교적 전통을 바탕으로 형성된 강한 위계의식은 기자사회를 종종 군대에 비유하는 데서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상호간의 협동성과 융화를 강조하는 조직문화는 외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기자들이 높일지라도 이러한 비판의 기준을 자신의 조직 내부로 끌어들여 조직 문화의 비민주성이나 권위 의식을 타파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한편 당시는 기자실 운영비나 유지비를 각사가 공동으로 엄출해서 부담하지 않고 해당 기자실 관청이 부담했는데 이에 대한 기자들의 자기반성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신문의 자유, 신문의 독립을 외치지만 현실의 실행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당시 출입처 기자단에 대한 시시비비가 붙었다. 그 예를 들자면 기자가 사건을 추적하고 취재하여 거기에 자기의 사명감을 충분히 발휘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하나의 출입기자단이란 조직에 얽매여 ‘이 기사는 쓰지 말자든가 또는 이 기사는 쓰면 곤란하다거나 이 기사는 정보원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안된다’는 등등의 측면이 있어 오히려 자유로운 취재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정보원의 협조가 너무 지나쳐 정말 써야 되고 국민이 알아야 될 문제를 간과해 버린다거나 외부로부터의 유형무형의 압력이나 청탁이 개입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결과적으로 기자들의 눈과 귀를 흐리게 하는 촉매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자단의 의의가 당초의 설립목적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편집보> 3호, 2면).

기자 개인으로 보서는 낙종을 면할 수 있는 장치가 기자단이다. 담합에 의해 기사를 기자단에서 한번 여과시켜 내보내거나 방향을 결정하는 행위 그리고 출입처로부터의 물질적 편의를 입어 사익을 취하는 행위 등이 폐단이라 할 수 있다. 이럼으로써 언론의 권력 감시기능은 이상으로만 존재할 뿐 현실에서 제대로 구현되고 있지 못했다.

말하자면 각 출입처가 기자단과의 관계를 대신문인과의 관계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집안 식구, 내 직장의 나를 도와주기위해 나온 사람이란 식으로 아전인수적인 해석을 해서 완전히 자기의 수하와 같은 인상을 갖고 있거나 또 그런 인습에 오랫동안 젖다보니 기자들 자신도 마치 출입하는 부처의 대변자격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래서 신문사가 지시한 내용의 이해관계-경제적인 것이 아닌 해석상의 문제-와 기자가 기자단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양해하는 이해의 문제가 다를 때 기자는 전혀 주저없이 신문사의 해석에 기계적으로 동조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기자가 자기의 소속관념을 신문사보다는 기자단쪽에다 두고 있는 경향이 강했다고 볼 수 있다.

기자가 자기대로 소신껏 기사를 썼는데 그것이 보도됨으로써 출입처가 난처한 입장에 빠지는 경우가 생기게 될 때 기자단 간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보도의 자제를 요청하거나 또 어떤 사의 기자가 열심히 취재를 해서 송고를 하려고 할 때 낙종을 한 경쟁사의 기자들이 항의를 한다거나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기자가 기사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공동으로 취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자단이 한사람의 대표를 내세워 취재를 하고 그것을 곧 기자단의 기사로 송고하는 일과 기자가 풀기사만을 받아 송고하는 취재관행은 그날그날의 건수만 채움으로써 스스로의 나태를 드러낼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다양한 뉴스를 보도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부응해야 한다는 기자본위의 사명에 어긋나며 동시에 신문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기자단에 소속된 기자가 풀을 거부하고, 단독취재로 특종을 하는 경우, 다른 성원들로부터 질시를 당하거나 심지어 공동기자단의 일원에서 소외되는 일도 있다는 점은 기자단의 성찰을 요구한다.

당시 신문계의 풍토는 관청이라는 창구나 공인된 기관을 통해 나온 기사가 일단 기자단이라는 필터를 거치지 않으면 권위가 없는 것으로 되고 만다. 관청만을 대상으로 해서 관청 것 이외에는 기사가 안된다는 잠재적인 신문자체의 제한은 통해 무엇보다 신문사는 다양한 뉴스소스를 가지지 못하고 이것은 신문의 정보원사용 관행에 있어 단일 정보원에 주로 의존하고 경쟁하는 다양한 의견들을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공정하게 보도한다는 공정성 원칙에 위배되고 있다.

한편, 기자단과 출입처간의 지나친 밀착관계는 신문의 중립성을 주장하는 시대의 이념에도 맞지 않아 당시 출입처 기자단 폐쇄 문제까지 불거졌다. 만약 중립성을 지키려고 한다면 신문은 출입처에서 제공하는 어떠한 호의나 혜택도 사실 거부해야 하는데 당시 출입처 관행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럼 신문기자들은 2·3만원의 급료를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사는가.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신문기자들은 거미줄과 거피만 마시고 사는 줄 알런지 모르

지만 그건 천만의 말이다. 신문기자들에게도 겉으로 안보이는 수입이 있다. 이걸 음성수입이라고 해도 좋다. 이 음성수입을 전문용어로는 ‘총회비’라고 한다. 기자구락부의 총회나 임시총회를 할때마다 염출해 오는 비용이다. 이 총회비의 염출은 기자들이 드나드는 각 출입처 단위로 되어있다. 춘추의 총회를 비롯해서 제때제때에 이와 유사한 방법은 적절히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요새 출입기자단은 대부분 그 존재가치가 이 총회비라든가 다른 잡수입이라는 항목에 있는 인상을 준다. 6·25 전만해도 이런 총회비 전술은 없었다. 6·25 이후 현재에 이르러서는 총회비라는 명목은 아무런 꺼리낌없이 하나의 치외법권적인 행위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6·25 전에는 되리혀 신문사가 기자에게 총회비를 지불했다. 기자들은 출입처에 의존한다는 말이 정의처럼 되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생활의 바탕이 출입관청으로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신문사에서는 기자들의 생활에 대해 아무런 보장도 없기 때문이다. 신문기자가 출입관청을 싸움의 광장으로 생각해야하거늘 반대로 밥주머니의 본거지가 되어 버렸다는 사실은 얼마나 슬픈 일인가. 기자의 약점은 여기에 있다”(오소백, 1958, 112~113쪽).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올바른 신문기자상은 ‘목이 달아나도 바른말을 해내야하는 것’이었는데, 기자들의 밥줄이(경제적 문제가) 출입관청에 매달려 있어 신문의 독립 혹은 자유가 제대로 실현될 수 없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한 공정한 사실보도, 시시비비를 가리는 논평이나 해설 기사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려웠다. 사회의 제반 부정이나 사회악 그리고 관료의 부패와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고 목소리 높여 외치지만 정작 신문기자들은 출입처 기자단을 통해 준공무원처럼 해당 관청의 혜택을 받지 못하면 생활이 안되는 심각한 현실이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잊혀지지 않는 것이 봄철의 가든파티다. 해마다 봄이 되면 전업단이 상공부기자단을 우이동 골짜기의 별장에 초청했다... 이날이 되면 전기3사-그러니까 조선전업과 경전 그리고 남전의 부장급 이상의 임직원들이 손에손에 라이카 카메라를 들고 우리와 같이 그 별장에서 봄의 향연을 같이 즐겼으며 갖가지의 철쭃꽃이 만발한 넓은 정원에는 울긋불긋 곱게 단장한 기생들이 짝을 지어 거니는 모습이 한층 가든 파티를 흥겹게 했다. 이 모임은 상공부기자단이 다른 기자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가장 고

상(?)한 연례행사의 하나였다. 요리집이 아니기 때문에 폭음을 하지 않아도 되고 대낮의 가든 파티이고보니 군데군데 서너사람씩 모여 봄을 즐길수 있으며....한때 일류 요정의 매담이 모르는 기자는 대기자로 행세하기 어려운 때가 있었기 때문이다. 기생과 처사들간의 인기가 곧 기자들의 명성의 척도이었기 때문이다...저마다 나름대로의 밤의 생활이 있었던 것이다. 청운각을 으뜸으로 대하, 대원각, 선운각 등 어느덧 주류는 시대의 변천과 함께 권력의 이동과 주체의 변동을 쫓아 영고성쇠가 무상함을 새롭게 하고 있다”(문형선, 1986, 83~84쪽).

당시는 신문의 면간의 벽, 부간의 벽, 기자단의 벽이 너무 견고하여 이들 간의 경계를 허물기가 쉽지 않았다. 이는 취재할 사안이 생겼을 때 관련 부서 기자들이 출입증을 만들어 취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못하고 1사 1인제, 1개 부처 1개사로서 출입처 담당 기자 이외엔 취재허용이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며 동시에 출입처 기자단 중심의 취재관행의 지나친 폐쇄성을 엿볼 수 있다. 그래서 면간의 벽 즉 부간의 벽과 기자단의 벽을 허물지 못해 종합편집이나 종합취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결국 독자들에게 깊이 있고 사건의 본질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차단하는 작업으로 취재편의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기자단 애초의 결성목적에도 위배되었다.

“기자단원은 모두 스물서너명이 아니었던가 기억된다. 그 가운데에는 경제부장들도 너댓분이나 있었다. 그때만해도 데스크가 외근한다는 것은 결코 흥이 될 수 없고 오히려 갖나간 나에게서 몹시 부럽기까지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무리 다른 회사의 부장일지라도 까마득한 선배임에 틀림없다보니 매사에 언동이 조심스럽기만하여 말이 같은 단원이자 실은 연공서열의 무거운 질서가 기자실을 지배하고 있는 느낌이었다...그러나...젊은 기자들에게는 회사 못지않게 기자들을 키워주는 요람이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 사실 나는 회사에서 배운 것 못지않게 이곳에서 많은 것을 보고 들었다”(문형선, 1986, 82쪽).

신문제작은 그 생명주기가 24시간으로 신문의 내용은 하루를 단위로 생산되기 때문에 조직 자체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신문생산에 차질을 빚기가 쉽다. 그래서 흔히 신문사를 군대조직과 유사한 것으로 얘기하기도 한다. 신문제작은 경우에 따라 작전이며, 전쟁이기도 하므로 각 부서장들은 사령관이기도 하고 부대장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기자들이 가진 각자의 개성은 공동작전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발휘되어야만 한다. 분산되고 중심에서 이탈된 개성의 발휘는 조직의 일사분란함을 위해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의 조성은 신문기자들 스스로 선배가 후배를 지도하고 후배는 무조건 선배를 따르는 기풍을 만들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출입처 기자단의 선후배들은 끈끈하면서도 의리를 중시하는 관계로 발전한다. 당시 50년대는 신문사간 이동이 빈번했는데, 이럴 때 간부기자가 일선 후배기자 여럿을 한꺼번에 데리고 이동하는 것이 관례였다. 이는 기자들이 도제적 체계를 통해 가부장적 의식을 철저히 내면화했기 때문이다.

선후배 기자들간의 이러한 남성적 유대는 남성이 자신의 동성에 대해 지니는 비성적 선호에 기반한 것으로 남성들이 조직 내의 자원에 대한 통제력을 지닌 상황에서 남성들은 서로를 생산적이고 매력적인 존재로 평가하면서 상호 동일시의 경향을 강화하게 된다. 정체성 형성과정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화되고 구성되는 지속적이고 관계적인 과정이라면, 남성적 유대에 기반한 이러한 상호작용과정은 조직 내에서 남성들의 우위와 자존감을 형성해주는 주요한 기제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역으로 조직 내에서 여성들과 남성들간의 차이가 확대되고 여성을 상대적으로 열등한 존재로 인식할 뿐 아니라, 여성들의 입장에서 조직의 중심집단인 남성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모순의 과정이기도 하다(정영애, 1996, 310쪽).

객관보도가 불편부당을 이론적으로 지향하면서도, 현실의 취재관행에서 보여

지는 출입처제도라는 것은 객관보도를 보장해 주는 것보다는 지배층의 시각을 대변하는 쪽으로 기울기 쉽다. 출입처 기자단의 결성 초기의 목적은 취재편의였다. 여기서의 취재편의란 당시 정치부, 사회부 중심의 신문기자들의 정보원에 대한 원활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당시 신문의 정보원은 각 정부 부서의 출입처가 된다. 한국 신문 보도에서 정보원 문제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논의된 바와 같이, 정부기관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이원락, 1991; 임영호 · 이현주, 2001; 이재경 · 김진미, 2000). 왜냐하면 스트레이트 기사에서는 의견이 배제된 단순한 사실 뿐 아니라 정보원의 주관적 의견인 인용문도 객관적 사실로 간주되기 때문에 정보원은 언론의 보도관행에서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정보원 의존 관행은 언론이 현실을 묘사하는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뉴스에 등장하는 정보원은 어떤 문제에 관해 깊은 지식을 갖추고 발언할 만한 권위가 있는 사람으로 간주되며 언론보도를 통해 그 권위는 더욱 강화된다(임영호 · 이현주, 2001, 301쪽).

그런데 1950년대는 신문의 취재, 보도가 거의 전적으로 출입처 기자단에 의존함으로써 정부 공식기관에 대한 정보원 의존도가 심하였다. 공정한 보도를 위한 언론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전제로서 기자 개인의 자율적이고 독립된 취재활동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출입처 기자단의 폐쇄성 및 내부 담합에 가까운 기사쓰기는 이를 담보해 주지 못했다.

“.....경제기획원이 생기기 전, 재무부에서 예산도 쥐고 있었고 기자단도 금융단 전매청 국세청 등으로 세분되지 않은 터라 이 분야 모두를 혼자 카버해야만 했다. 민간부문 경제가 형편없던 무렵이어서 정부와 공공부문을 주로 취재 보도하게 마련이었는데 이러한 관행은 시대가 바뀌고 경제활동의 주체가 달라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용케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기자들의 행동반경이 출입관청 중심이 되어 업계와 시장 그리고 유통과 소비쪽은 소홀히 될밖에 없었다...이건 비단 경제기사의 경우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나치게 출입처 중심의 평면적인 취재체제로 온존하고 있는 셈이다”(서기

원, 1985, 114쪽).

출입처 기자단을 통해 본 신문사 조직 내의 문화는 한국사회의 집단주의 문화의 폐쇄성과 기자 개인의 자율성과 능력에 기반한 사건 취재보다는 동기생이나 동급 집단의 형평성 등을 먼저 고려하는 가부장성 및 남성들의 우정을 보여준다. 그리고 출입처 기자단을 통한 기자훈련 과정은 신문기자 스스로 자유로워야 한다는 인식을 키우기보다는 기자단 회원 중심의 연대 및 폐쇄성을 확산시켜 출입처 기자단은 남성 동맹의 상징이 되었다.

50년대 중반의 출입처 기자단의 취재관행을 살펴보면, 당시 신문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핵심이었던 신문의 독립을 위한 언론자유가 사회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철학적 기반 및 문화적, 제도적 지원이 현실적으로 마련되지 못했으며 그러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움직임 및 단초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이후 출입처 기자단 중심의 취재 시스템은 오랫동안 한국 신문계에서 문제가 되었다.

3. 기자와 술문화 : 우애(fraternity) 동맹

50년대 중반 새롭게 등장한 신문의 인적관리 시스템은 기자공채제도였으며 그 이전부터 한국 신문의 취재관행으로 자리잡고 있던 제도는 출입처 기자단으로 대변되는 출입처별 취재 시스템이었다. 자료에 대한 분석작업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새로운 제도건 기존의 제도건 공히 기자들은 술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수습기간을 통한 기자훈련의 과정에서, 그리고 출입처 기자단을 중심으로 선·후배 관계의 위계의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매개수단은 술이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술을 통한 관계맺기가 유독 기자사회에서 강하게 통용되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이것이 남성적 방식으로 작동되던 점을 찾아내고

자 한다.

사실 기자는 ‘무관의 제왕’, ‘춘추의 필법’ 등에서 보여지듯이 글로써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글쟁이’, ‘펜잡이’, ‘펜대를 굴리는 사람’ 등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글을 다루는 선비의 이미지는 남성으로 상징되지만 또다른 측면에서 칼을 쓰는 무인 남성과 비교했을 때는 약한 남성성의 상징이 되는 양면성을 지닌다.

이런 기자들에게 술이 늘 따라다니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기자와 술문화는 강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연구자는 기자와 술문화의 관련성에서 기자집단의 남성적 문화를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과도한 알코올 소비는 육체적 힘과 결합되는 동시에 한계를 극복하는 자기통제 속에서 영웅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는 남성성의 이미지와 맞닿아 있다. 따라서 술문화는 여성보다는 남성과의 유착관계가 강하다. 따라서 남성들끼리의 술문화는 남성 상호간의 경계짓기라기보다는 남성과 여성의 경계를 공고히 하며 남성들끼리의 연대 및 우정을 확인하는 자리로 연결된다. 술은 육체에 표식적으로 흔적을 남기지는 않지만 결국 육체적 강인함과 결부된다.

“애주가인 서부장에게서 배운 ‘병풍을 넘지 말라’는 말은 지금도 나에게서 소중한 주도이다. 언제나 해가 진 다음에 술집(주로 조선일보 뒤 납작집)에서 회의를 했다. 나는 즐거웠다. 그러나 술을 못마시는 이서령씨는 몇 달 안가 사표를 내고야 말았다. ‘대낮에는 회의도 기획도 의논 안하고 밤에만 회의를 하고 아이디어와 의견을 교환하니 술에 건널 수 없다’는 것이 사직 이유였다”(신우식, 1986, 92~93쪽).

이처럼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기자는 일단 신문사 조직 내에서 유능한 기자가 되기가 힘들었다. 왜냐하면 기자집단의 술은 단순한 술마시기가 아니라 업무의 연장이라는 의식이 강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 자체는 술을 잘 마시지 못

하는 사람들을 타자화시키는 과정이었고, 당시 술과 더더욱 친화력이 없었던 여성들은 신문사 조직에서 늘 주변에 남을 수 밖에 없었다. 기자집단을 술문화와 연결시키는 이러한 논의들은 술과 친화력이 있는 남성들의 집단으로 기자집단을 보편화시킴으로써 남성과 여성의 직업 영역의 경계를 공고히 하여 여성들로 하여금 '감히 기자가 되겠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만들었다.

또한 당시의 전반적인 사회적 부패와도 기자들의 과도한 술마시는 것은 관련이 있다. 당시 기자들은 출입처를 중심으로 포카가 유행이어서 걸핏하면 기자실에서 밤샘을 했고 가끔 호텔방으로 원정을 가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의 신문사 월급 가지고는 이런 생활을 도저히 흉내조차 낼 수 없었다. 외근기자의 경우 수입의 상당부분이 회사 아닌 곳 즉 출입처 기자단에서 생기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다. 이런 현상은 다른 분야에서도 엇비슷한 실정이었으므로 심리적 부담 및 도덕적 자책감은 별로 없었다(서기원, 1985, 115쪽).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 가시지 않는 것이 걸려 있었을 것이다. 그런 돈을 차곡차곡 간수해서 재산을 불리는 데 이용한 기자들은 별로 없었다. 그래서 출입처를 통해 받은 돈은 대개 술마시고 노는 데 일회적 유흥비로 나갔었고 출입처가 부수수입의 원천이었던 50년대 기자들의 술마시는 것은 이전보다 한층 심해졌다.

한편 기자집단이 다른 조직보다 과도하게 술과 친밀한 이유를 신문의 생산 주기와 관련지어 생각해볼 수도 있다. 즉, 신문은 24시간을 단위로 새롭게 태어나야 하기 때문에 다른 조직보다 부담과 긴장감이 크다. 하지만 특종과 낙종에 대한 기쁨과 스트레스는 그날에 풀고 잊어버려야 다음날 또다른 뉴스나 정보를 취재하거나 보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문기자를 종종 하루살이 인생에 비유하곤 한다. 당시는 신문사마다 경쟁적으로 증면과 양간제가 실시되어⁹⁶⁾ 과도한

96) 56년 5월 15일 정·부통령 선거 결과 대통령엔 이승만, 부통령엔 민주주의 장면 후보가 당선. 신문계는 이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발행부수가 크게 늘어났다. <조선일보>는 선거 유세기간 중인 4월 1일부터 종래의 조간 4면체로부터 조석간 6면체(조간 4면, 석간 2면)를 단행하였다. 이는 다른 신문들에도 영향을 미쳐 57년부터 59년에 걸쳐 일제히 중앙 일간 신문들이 조석간제 발행에 뛰어 들었다(송건호, 1990).

취재경쟁 및 업무부담에 시달렸고 석간신문 작업을 끝낸 기자들의 낮술문화가 유행하였다.

기자들은 자영업자가 아니고 월급을 받는 셀러리맨들이고 기자취재 및 작업이 하루주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빨리 마시고 빨리 취하는 이른바 전투적 술마시기가 그들의 술문화이다. 이른바 술자리에서도 보여지는 이러한 전투적 자세는 남성성의 주요한 특징이며 술자리에서의 누가 술을 잘 먹는가를 은근히 견주는 작업은 일종의 간접적 결투로 이는 모두 남성적 방식의 술문화라 할 수 있다.

한편 술 잘마시는 기자가 능력있는 기자로 비유되는 것은 당시 정치부 중심의 신문사 조직 구조에서 정보원들로부터 고급 정보를 빼내기 위해 술자리를 함께 해야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당시의 정보원은 주로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었고 이들이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자료만으로는 특종을 하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술자리의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고급 정보를 정보원으로부터 취재(?)해 오는 기자가 당시에 있어서는 최고의 기자였다. 한편 기사 취재를 위해 정보원과 술자리를 할 때에는 끝까지 버텨서 이른바 취중 고급정보를 수집해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이 약해 기자가 정보원보다 먼저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그 자리는 헛수고가 돼버리고 마는 것이었다. 이 때 기자는 술에 강한 면모를 가져야 유능한 기자가 되는 것이다. 사실 술을 잘 마시는 것은 육체적 강인함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지만 술마시기가 종종 내기로까지 가는 것은 술을 잘 마시는 것이 육체적 강인함으로 상징화되는 남성적 영웅성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견습기자들한테 강제로 술을 마시도록 하여 이러한 술자리를 통해 조직의 위계에 순응하게 만드는 과정은 전형적으로 남성적 문화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

“동화통신 1기생으로 견습을 시작했는데 학교가 상대인 관계로 경제부에 배치되었다. 부장은... 안정모씨였다. 나는 그분 밑에서 술자리와 포카와 취재

하는 방법을 배웠다..두달남짓 견습을 하고 재무부를 담당하게 되었다. 당시 재무부 기자단은 속칭 재우회라 했는데...만만치않은 단체임을 알 수 있다... 모든 것이 백지상태인 필자에겐 기자라는 존재에 경탄을 금치 못했다. 도무지 무서운 상대가 없다. 무서운 사람은 부장, 국장 등 상사와 존경하는 선배, 그러고는 이승만대통령 정도였으니까. 필자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선배들이 그랬다는 얘기지만 차차 배우게 되었으니까, 이 역시 한 시대의 기풍이었을 것이다”(서기원, 1985, 113~114쪽).

전통적으로 술을 잘 마시는 것은 남성성의 상징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술은 남성들의 전유물이었으며 술자리를 통한 관계 맺기는 남성들간의 연대 및 우정을 획득, 재생산하는 과정이었으며, 이러한 술자리에서 좌중을 압도할 수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술을 잘 마실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그래서 술을 잘 마시는 남성은 강한 남성성을 획득할 수 있었다. 그런데 술이 가진 이 남성성의 요소에는 폭력성이 들어간다. 그래서 술자리도 내부적 차이를 통해 위계화가 생기는데, 폭력과 욕설이 함께하는 술자리와 점잖은 선비들의 술자리 사이의 구별이 그것이다. 이는 거친 혹은 야만적 남성성과 세련된 지식인 남성성의 구분인데 기자 사회의 술자리는 후자로 상징화된다. 즉 나름의 의식과 규칙이 있는 기자 사회의 과도한 알코올 소비는 주정뱅이들의 의식이 아니라 위대한 이념의 상징이 되었다. 술자리 문화를 통해 시대를 이끌어간다고 자처하는 남성 지식인들의 엘리티시즘을 낭만화함으로써 그들은 스스로를 위로하고 다시금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재생산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여기자들의 좌담회자리에서 사회를 맡은 선배 여기자가 술과 담배에 대한 의견을 묻자, 좀 하고 싶지만 생리적으로 받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고 술 마시는 여기자들한테 술 마시라고 권해 놓고서는 막상 뒤돌아서서는 욕을 하기 때문에 선뜻 마시기도 어렵다는 애길 덧붙이고 있다. 이에 대해 선배 여기자는 “후배 여기자들은 생리도 이상하고 직업도 이상하게 가졌다고”고 답하면서 다른 나라에서는 논의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여전히 붙들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여원>, 1958.12). 이러한 선배 여기자의 얘기 속에는 당시 여기자라는 직업이 첨단을 걷고 있다고 여겨지지만 여전히 술로 땀어지는 남성 기자들의 연대 속에서 여기자들이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남성적 유대와 문화가 중심이 되는 조직 내에서 여성들에 대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배제와 저평가는 결국 여성들에게 ‘여기는 내자리가 아니다’라는 느낌을 갖게 만들며,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본질화하고 위계화한다(정영애, 1996, 313쪽). 따라서 남성이 다수인 조직 내에서 예외적 존재인 여성은 조직 내에서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처신하기가 어려우며 그 결과 스스로를 위축시키게 된다.

기자집단의 조직문화가 남성중심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주의적인 대안적 가치의 수용이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말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성으로 말해지는 여성주의적인 대안적 가치가 기자들의 인식체계에 영향을 주거나 이러한 가치가 확산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신문은 남성성으로 상징화되는 대신 당시 잡지는 여성성으로 위치 지워지면서, 신문은 남성적 방식으로 잡지는 여성적 방식으로 운용되는 측면이 컸다. 이는 젠더 위계가 신문과 잡지라는 매체를 사이를 두고 형성되면서 저널리즘 내부의 위계를 통해 신문의 남성적 공간화를 더욱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4. 1950년대 한국 신문의 젠더성

1950년대 한국 사회는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절대적인 후원 아래 자유민주주의, 반공주의, 친미주의를 지배적 이념으로 새로운 근대국민국가를 건설하는 국가 재건의 과제가 주어졌다. 하지만 당시 자생적 성장보다는 외부적 힘의 개입으로 시작된 국가 재건은 이승만 대통령의 1인 권위주의 정치체제 속에서 새로

운 기운들과 기존의 전통적인 사상들이 충돌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혼란은 전후 빈곤과 사회적 적대의 강화로 인해 국가권력이 과대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정치사회의 미성숙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전후 미국의 원조 경제 및 문화적 이식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가치들에 눈을 뜬 당시 지식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체제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요구하였다. 그러므로 50년대는 새로운 것과 전통적인 것이 충돌하고 경합하는 역동적 공간이었다. 이러한 당시의 시대적 조건들은 한국 신문계에도 구조적으로 영향을 미쳐, 미국식 저널리즘으로 새롭게 개혁하고자 하는 일단의 움직임과 민족과 나라를 구하는 사회적 공기로서의 신문의 오랜 전통을 강조하는 논의들이 공존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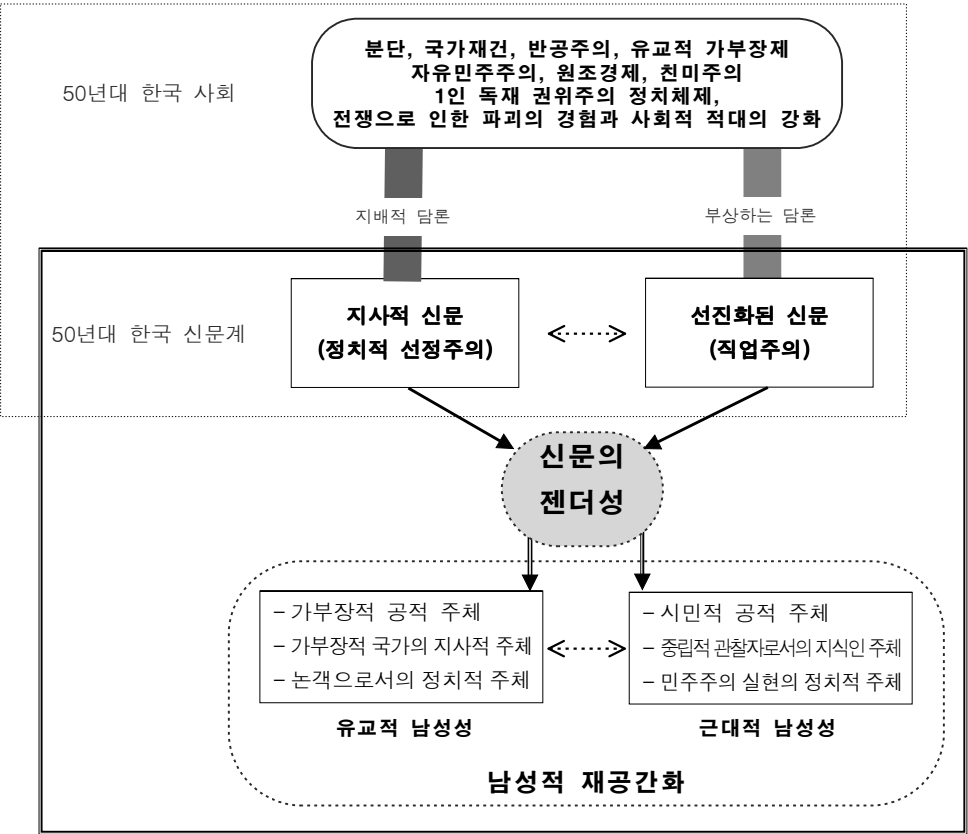
1950년대 한국 신문에 대한 사회적 논의들을 추적하면서 당시의 담론들을 분석한 결과, 50년대의 지배적 담론은 ‘지사적 신문’임이 드러났다. 물론 전쟁 후 세계 냉전체제의 동북아 교두보로서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미국의 전폭적인 원조를 등에 업고 서구식(미국식) 가치와 규범, 사상들이 유입되어 당시 사회는 자유와 평등, 개인, 민주주의 등이 난무하면서 빈곤과 사치와 향락이 공존하는 혼돈의 공간이었다. 하지만 미국화 전략의 일환으로 사회 엘리트들에 대한 교육 원조가 시행되었고 이 가운데 미 국무성 초청 언론인 연수가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근대적 교육을 받고 영어에 능숙한 젊은 엘리트 남성기자들을 중심으로 미국의 언론을 시찰하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들은 미국의 언론 시스템을 직접 관찰하고 그곳에서 실습까지 할 수 있었다. 이들은 돌아와, 당시 일본식 신문의 관행들을 구시대적 후진성으로 명명하고, 미국식 자유주의 언론 시스템으로 개혁하고자 신문의 서구화를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그래서 당시 신문의 서구화는 선진화된 신문으로 이어지는 부상하는 담론을 형성하고, 이는 한국 신문이 새롭게 근대적 언론체제로 제도화하는 과정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연구자의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지사적 신문’으로 설정되

는 지배적 담론과 '선진화된 신문'으로 설정되는 부상하는 담론은 일견 전통적인 것과 근대적인 것의 대립으로 보일 수 있지만, 담론의 형성과정을 통해 당시 신문에 어떤 정체성이 사회적으로 주어졌는가를 볼 때, 신문의 젠더성을 찾아낼 수 있었다. '지사적 신문'이라는 지배적 담론을 통해, 당시 신문이 가부장적 공적 주체, 가부장적 국가의 지사적 주체, 논객으로서의 정치적 주체로 호명되는 과정에서 유교적 남성성으로 정체화되는 반면, '선진화된 신문'이라는 부상하는 담론을 통해서도 시민적 공적 주체, 중립적 관찰자로서의 지식인 주체, 민주주의 실현의 정치적 주체로서, 신문의 성격이 근대적 남성성으로 구성되는 과정임이 분석에서 드러났다. 그러므로 50년대 한국 신문에 새로운 기운으로 등장한 '신문의 서구화'는 기존의 유교적 가부장성을 넘어설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제들과 장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대적 남성성으로 구성됨으로써 신문의 젠더성을 드러내고 있었다. 당시 지배적 담론인 지사적 신문은 신문의 선진화된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 안으면서 기개와 품격뿐만 아니라 기자로서의 전문직업의식까지 투철한 '유능한 지사'가 됨으로써 당시 한국 사회의 공적 영역의 주도적 주체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유능한 지사로서의 정체성이 현실에서 구체적인 관행과 제도로써 발휘되는 과정은 앞선 논의에서 드러나듯이 여전히 남성적 방식으로 발현되면서 50년대 한국 신문은 남성적인 공간으로 위치 지워졌다.

3장과 4장과 5장의 분석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5-1> 분석결과



제 6 장. 결 론

1. 연구의 요약

본 논문은, 한국 언론의 남성 중심성을 비판하며 많은 여성주의 언론학 연구들이 언론이 생산해내는 콘텐츠에 주목하여 매체 비평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언론을 통해 드러나는 여성 이미지들은 변함없이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음에 주목했다. 그렇다면 문제는 가시적 결과물인 텍스트 이전의, 그러한 텍스트 생산의 기반이 되는 조직이나 제도의 남성 중심성을 의심해 봐야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언론학 연구에서 여성주의 작업들에 주목하게 했는데, 다양한 데이터와 인터뷰 등을 통해 언론 조직의 남성중심성의 기제들을 밝혀 놓은 몇몇의 연구들이 눈에 띄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부분은 그러한 언론 조직의 남성 중심적 정체성이나 기제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다시 말해 역사적 형성 과정의 많은 부분이 생략된 채로 남성 중심성을 증명하는데 집중한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연구자는 한국 언론 조직의 남성 중심성의 역사적 과정에 주목하게 되었다.

한편 한국 언론사에 있어서 1950년대는 일제시기, 미군정기, 박정희 집권 시기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고 있지 못하지만, 50년대는 한국전쟁 후, 미국의 다양한 방식의 원조 아래, 한국 사회가 새롭게 재편되는 과정에서 언론 또한 새로운 제도화를 과정을 통해 이른바 현대적 면모를 갖추고자 변신을 꿈꾸던 시점이었기에 결코 소홀하게 취급할 수 없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연구자는 1950년대 한국 사회의 지배적 언론이었던 신문에 주목하여, 이러한 제도화 과정에서 젠더가 어떻게 개입되어 있는지

를 분석해 내고자 하였다. 따라서 당시 신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신문의 사회적 지위와 정체성을 추적하고 이러한 정체성 형성과정을 젠더라는 렌즈를 통해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 신문이 한국의 주요 사회적 제도로 자리잡아 가는 과정에서 남성성을 어떻게 획득하고 있는지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50년대 중후반 미국의 대미원조는 한국의 신문계에도 여지없이 드러나, 영어에 능숙한 젊은 엘리트 기자들을 선발하여 미국 신문계를 시찰하고 연수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언론인 연수는 미공보원의 '교환교육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의 여론지도자층을 미국에 우호적인 진영으로 포섭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이러한 미국무성 초청 언론인 연수에 참가한 젊은 엘리트 기자들을 중심으로 50년대 중후반 한국 신문계는 새로운 제도화의 길을 걷게 되는데, 이는 새로운 언론관련 조직들의 출현과 언론 윤리의 정립, 기사 스타일의 변화, 프로페셔널리즘의 등장, 신문의 공정성 및 객관성 요구 등으로 나타났다.

신문에 대한 사회적 담론들을 분석한 결과, 50년대 신문에 대한 지배적인 담론은 '지사적 신문'이었으며 50년대 중후반에 등장한 신문에 대한 새로운 요구들은 부상하는 담론으로서 이는 '신문의 선진화'로 압축할 수 있었다. 그런데 50년대 한국 신문의 지배적 담론과 부상하는 담론은 얼핏 보기엔 서로 대척점에 존재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연구자의 접근 방법인 젠더사(gender history)를 통해 볼 때, 이는 한국 신문의 남성적 공간화라는 공통성을 갖고 있다. 물론 지배적 담론이었던 '지사적 신문' 속에서 드러나는 남성성과 부상하는 담론이 만들어진 '서구적으로 근대화된 신문' 속에서 드러나는 남성성은 그 역사적 조건 속에서 내용적 차별성을 지닌다. 즉 '지사적 신문'은 유교적 남성성을 지향하고 있었으며, '서구적으로 근대화된 신문'은 근대적 남성성을 지향하고 있었다.

'지사적 신문'이 드러내는 유교적 남성성은 명분과 위신과 품격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기개와 품격을 잃은 당시의 기자들을 '지조잃은 선비'에 비유하는 것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또한 이름하여 '기자정신'으로 대변되는 당시의 지사적

신문인은 가난과 빈곤에 허덕이면서도 신문 경영의 합리화를 요구하기보다는 신문 경영의 특수성을 내세우면서, 신문의 적자 경영에 대해 입을 여는 것을 지사적 신문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여겼다. 즉 사회 불의에 맞서고 국가권력에 항거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적자 경영은 감수해야한다는 사고가 팽배했던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 당시 신문의 과도한 정치성으로 나타났는데, 당시 신문인들에게는 데카당스한 남성적 삶을 마치 지사적 면모인 양 인식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신문의 과도한 정치성은 '정치적 선정주의'를 낳았다.

한편 50년대 중후반은 신문의 정치적 선정주의를 비판하고 신문 내부의 시스템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일련의 움직임들이 엘리트 교육을 받은 젊은 신문인들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이들은 직업윤리를 확립하고 신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조직과 강령을 만들고 신문 기사 스타일의 새로운 양식들을 제안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의 범람 속에서 언론 자유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들의 이러한 새로운 기획들은 '사실보도 제일주의' 및 엄정 중립의 공정성, 민주주의 실현의 공적 기제로서 언론 자유를 내세우지만, 이것들이 남성들의 경험에 기반함으로써, 당시 신문이라는 매체를, 근대 지식인 남성들의 형제애에 기반한 동맹관계의 장소로 위치지우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적인 경험 및 여성성은 체계적으로 배제됨으로써 50년대 한국 신문은 남성적 공간화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연구의 한계 및 제언

1950년대 한국 언론의 역사적 특수성에 주목하고 특히 한국 신문의 가부장

적 특성을 역사적으로 추적하고 있는 본 연구는 1950년대 언론관행과 제도, 실천을 젠더사적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한국 신문의 역사를 여성주의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있다. 특히 신문의 제도화가 정초되기 시작한 시기를 1950년대로 설정하고, 이제까지의 논의들과는 다르게, 신문의 제도화가 국민국가의 형성과 맞물리면서, 어떻게 정치/ 공적/ 근대의 담론을 정론화 하는 공적·정치적·지사적 주체로 신문을 위치 지웠는가를 추적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신문이 공적 영역의 남성 주체의 담론의 장이 되는가를 드러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신문의 남성 젠더화를 다루는 본 연구는 자못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신문의 젠더정치를 부각하기 위해 당시 언론에서 다루어지는 여성들에 대한 재현의 정치학을 다루었어야만 했는데, 이 부분이 제시되지 못해 본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이는 여성에 대한 기사 혹은 담론이 어떠한 지시체계 혹은 의미체계와 맞닿아 있는지, 여성의 현실이 아니라 여성을 통해 어떠한 현실을 드러내고자 하는지 등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한국 신문의 남성적 공간화가 무엇을 타자화 시키고 배제시키고 있는가를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향후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 강상현 (1989). 한국 신문의 조직구조 변화에 관한 비판적 고찰. 『연세사회과학연구』, 제1권 1호, 1~23.
- 강명구 (1993). 『한국 언론전문직의 사회학』. 서울: 나남.
- 강명구 (1994). 『한국 저널리즘 이론』. 서울: 나남.
- 강인철 (1999). 한국전쟁과 사회의식 및 문화의 변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전쟁과 사회구조의 변화』. 서울: 백산서당.
- 강준만 (2004). 『한국 현대사 산책 1950년대편 1권』. 서울: 인물과사상사.
- 강준만 (2004). 『한국 현대사 산책 1950년대편 2권』. 서울: 인물과사상사.
- 강준만 (2004). 『한국 현대사 산책 1950년대편 3권』. 서울: 인물과사상사.
-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엮음 (2000). 『한국전쟁과 한국자본주의』. 서울: 한울 아카데미.
- 고미라 (1996). 양성성과 여성성. 『여성과 사회』, 7권, 127~137.
- 谷浦孝雄 (1981). 해방 후 한국 상업자본의 형성과 발전. 진덕규 외. 『1950년대의 인식』 (297~331쪽). 서울: 한길사.
- 관훈클럽 (1997). 『관훈클럽 40년사: 1957-1997』. 서울: 관훈클럽.
- 권명아 (2005). 『역사적 파시즘: 제국의 판타지와 젠더 정치』. 서울: 책세상.
- 권인숙 (2005). 『대한민국은 군대다』. 서울: 청년사.
- 김경일 (2003). 『한국의 근대와 근대성』. 서울: 백산서당.
- 김경희 (1986). 여성 언론인의 역사. 『또 하나의 문화』, 2권, 127~147.
- 김경희 (1998). 뉴스생산과정에서의 여성소외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학』, 제14권 1호, 145~183.
- 김균 (1999). 저널리즘과 모더니티. 『한국언론학연구』, 창간호, 87~103.
- 김균 (2000). 미국의 대외문화정책을 통해 본 미군정 문화정책. 『한국언론학연구』

- 구』, 제44권 3호, 40~75.
- 김기봉 (1998). 역사서술의 문화학적 전환과 신문화사. 안병직 외, 『오늘의 역사학』 (133-198쪽). 서울: 한겨레신문사.
- 김대환 (1981). 1950년대 한국경제의 연구. 진덕규 외. 『1950년대의 인식』 (157~255쪽). 서울: 한길사.
- 김민환 (1982). 한국신문사 시대구분시론. 『커뮤니케이션 과학』, 제6권, 3~19.
- 김민환 (2002). 『한국언론사』. 서울: 나남출판.
- 김영모 (1981). 해방 후 대자본가의 사회이동에 관한 연구. 진덕규 외, 『1950년대의 인식』 (257~275쪽). 파주: 한길사.
- 김영욱 (2002). 『저널리즘 객관성 연구』. 서울: 한국언론재단
- 김영찬 (2002). 음악케이블 TV에 대한 문화사적 접근 - MTV를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10권 2호, 144~183.
- 김영희 (2003). 제1공화국시기 수용자의 매체 접촉 경향. 『한국언론학보』, 44권 6호, 306~423.
- 김영희 (2005). 한국의 커뮤니케이션사 연구동향과 과제: 1990년 이후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이론』, 1권 1호, 94~125.
- 김은실 (1994). 민족담론과 여성. 『한국여성학』, 10권, 18~52.
- 김은실 (1996a). 대중문화와 성적 주체로서의 여성의 재현. 『한국여성학』, 12권 2호, 119~153.
- 김은실 (1996b). 공사영역에 대한 여성인류학의 문제제기. 『여성학논집』, 제13집, 379~404.
- 김은실 (2000). 인권, 문화, 여성. 『철학과 현실』, 44권, 191~211.
- 김은실 (2003). 식민지 근대성과 여성의 근대 체험: 여성 경험의 구술과 해석에 관한 방법론적 모색. 『한국의 근대성과 가부장제의 변형』 (40~101쪽). 서울: 이화여대 출판부.

- 김지명 (1975). 『자유당 정부(1948-60)의 언론관과 당시의 언론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김창남 (2003). 한국 대중문화의 정체성과 미국 문화: 대중음악을 중심으로. 학술단체협의회 위임, 『우리 학문 속의 미국』 (237~263쪽). 서울: 한울아카데미.
- 김해식 (1994). 『한국언론의 사회학』. 파주: 나남.
- 김혜수 (2000). 1950년대 한국 여성의 지위와 현모양처론. 『외대사학』, 제12집, 434~351.
- 김혜숙 (1998). 여성주의 인식론과 한국 여성 철학의 전망. 『현대 비평과 이론』, 16호, 110~128.
- 김혜숙 (1999a). 아시아적 가치와 여성주의: 책임의 도덕과 권리의 정치학. 『철학연구』, 44권, 61~75.
- 김혜숙 (1999b). 음양 존재론과 여성주의 인식론적 함축. 『한국여성학』, 15권 2호, 5~26.
- 김혜순 (1993). 경기변동과 독점화진전에 따른 여성잡지 내용분석: 1970년의 여성 중앙분석. 『한국언론학보』, 제29권, 145~171.
- 김혜순 (1996). 국내 페미니스트 언론연구의 동향과 과제. 『한국언론학보』, 제38권 가을, 159~202.
- 남궁곤 (1991). 1950년대 지식인들의 냉전의식. 『1950년대 한국사회와 4.19 혁명』. (126-173쪽). 서울: 태암.
- 노영희 (1997). 한국 최초의 여기자, 최은희의 혁신적 삶에 대한 고찰: 실천적 자세와 여성사연구를 중심으로. 『비교문학』, 22권, 193~212.
- 대한언론인회 (2001). 김용구. 『녹취 언론사』 (51-72쪽). 서울: 대한언론인회.
- 마동훈 (2004). 초기 라디오와 근대적 일상: 한 농촌에서의 민속지학적 연구. 『언론과 사회』, 제12권 1호, 56~91.
- 문종대 (2004). 존 밀턴(John Milton)의 언론 자유 사상- 이성과 자유의지, 그리고

- 관용. 『한국언론학보』, 제48권 1호, 337~361.
- 문지영 (2002). 『한국에서의 자유주의: 정부수립 후 1970년대까지의 그 양면적 전개와 성격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명림 (1998). 1950년대 한국의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역사문제연구소, 『1950년대 남북한의 선택과 굴절』. (72~127쪽). 서울: 역사비평사.
- 박소라·전경란 (2003) 미디어 조직과 성. 한은경·이동후 (편), 『미디어의 성과상』. (191~212쪽). 서울: 나남.
- 박완서 (1991). 1950년대- '미제문화'와 '비로도'가 판치던 거리. 『역사비평』, 제13호, 106~112.
- 박용규 (1997). 일제하 여기자의 직업의식과 언론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통권 41호 여름, 5~40.
- 박용규 (2000). 한국 통신사의 구조적 특성의 형성과정. 『한국언론학보』, 제14권, 150~181.
- 박용규 (2002). 미군정기의 여성신문과 여성운동.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19호 가을, 125~153.
- 송건호 (1990). 『한국현대언론사』. 서울: 삼민사.
- 신영숙 (2000). 해방 이후 1950년대의 여성단체와 여성운동. 『여성연구논총』, 제15권, 113~138.
- 아세아재단 (1964). 『아세아재단 한국지부』. 서울: 아세아재단.
- 안병찬 (1999). 『신문발행인의 권력과 리더십』. 서울: 나남.
- 양현아 (1999). 한국적 정체성의 어두운 기반: 가부장제와 식민성. 『창작과 비평』, 106호(겨울호), 48~65.
- 양현아 (2000). 호주제도의 젠더정치. 『한국여성학』, 16권 1호, 65~93.
- 원용진 외(편). (1993). 『대중매체와 페미니즘』. 서울: 한나래.
- 원용진 (1998). 정체성의 정치학. 정재철 편, 『문화연구이론』. (179~202쪽). 서

울: 한나래.

유선영 (1993). 대중적 읽을거리의 근대적 구성과정. 『언론과 사회』, 제2권, 48~80.

유선영 (1995). 객관주의 100년의 형식화 과정. 『언론과 사회』, 10호, 86~128.

유선영 (1997). 황색 식민지의 문화정체성. 『언론과 사회』, 통권 18호, 81~122.

유선영 (1998). 홀눈 정체성의 역사. 『한국언론학보』, 제 43-2호, 427~467.

유선영 (1999). 객관주의의 사악한 시선: 남근중심주의. 『언론과 사회』, 25호, 7~54.

유선영 (2002a). 식민지 대중가요의 잡종화 - 민족주의 기획의 탈식민성과 식민성. 『언론과 사회』, 10권 4호, 7~57.

유선영 (2002b). 『여성과 언론: 여성보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언론재단.

유선영 (2003). 『미디어 조직과 성차별: 여성언론인 주류화 방안』 (연구서 2003-02). 서울: 한국언론재단.

유선영 (2004). 초기 영화의 문화적 수용과 관객성 : 근대적 시각문화의 변조와 재배치. 『언론과 사회』, 12권 1호, 9~55.

유선영 · 김창남 (1995). 『광복50주년 기념논문집- 5. 문화 · 언론』. 서울: 한국학술진흥재단.

유재천 (1986). 『한국의 언론과 언론문화』. 서울: 나남.

유종원 (1995). 『한국신문에 나타난 언론자유의 이념적 성격』,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이경숙 (1999). 1930-40년대 '디즈니'와 만화영화의 수용과정. 『언론과 사회』, 제 26권, 44~76.

이광재 (1983). 매스컴사 연구방법에 관한 고찰. 『사회과학연구』. 경희대.

이남희 (1994). 서구 여성사 연구의 형성과 전개. 『한국사시민강좌』, 제15권, 205~224.

- 이배용 (2003). 한국 여성생활과 의식변화에 대한 현대사적 고찰-1948-197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제 25집, 597~637.
- 이상길 (2001). 유성기의 활용과 사적 영역의 형성. 『언론과 사회』, 9권 4호, 49-95.
- 이상길 (2005).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사’를 위하여: 연구방법론에 관한 성찰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이론』, 1권 2호, 106~161.
- 이상화 (1995). 여성주의 인식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 여성철학연구모임 엮음, 『한국여성철학』 (41~78쪽). 서울: 한울아카데미.
- 이수자 (1997, 2월). 성별분업의 문화분석적 연구에 있어서의 개념 규정에 관한 소론: 특히 가부장제와 가부장주의 개념의 적용에 관하여. 『성평등연구 1』, 133~154.
- 이수자 (1997). 한국의 산업화와 유교적 가부장주의. 『한독사회과학논총』, 제7호, 261~281.
- 이우경 (1996). 『한국영화에 나타난 여성의 성역할 변화 연구: 1970년대 이후 흥행작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윤진 (2002). 한국 텔레비전 드라마의 주술성 - 텔레비전의 주술양식과 이야기. 『언론과 사회』, 10권 3호, 117~152.
- 이원락 (1991). 『한국신문의 ‘관급보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영희 · 임현영 (2005). 『대화: 한 지식인의 삶과 사상』. 파주: 한길사.
- 이재경 · 김진미 (2000). 한국 신문 기사의 취재원 사용 관행 연구. 『한국언론학연구』 제 2권, 160~181.
- 이재경 · 정미영 · 송미재 · 고지운 (2001). 한국 신문의 역피라미드형 기사 도입과 정착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 46권 1호, 413~440.
- 이재경 (2003). 언론인 인식을 통한 한국사회와 언론 자유의 조건 연구. 『한국언

- 론학보』, 제 47권 2호, 54~77.
- 이종숙 (2004). 『한국 신문의 전문화』,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창신 (1999). 미국 여성과 여성사: 성, 젠더, 그리고 차이의 역사학. 『미국사연구』, 제 10권, 55~83.
- 이호재 (1996). 한국 가부장제와 여성. 『여성과 사회』, 제 7호, 160~176.
- 임대식 (1998). 1950년대 미국의 교육원조와 친미 엘리트의 형성. 『1950년대 남북한의 선택과 굴절』 (128~183쪽). 서울: 역사비평사.
- 임상원 (1994). 언론의 자유와 자유주의. 『언론과 사회』, 제 6권, 5~39.
- 임영호 (1998). 한국의 언론노동운동과 생산의 정치. 『저널리즘비평』, 제25권 1호, 16~24.
- 임영호 · 이현주 (2001). 신문기사에 나타난 정보원의 권력 분포: 1949-1999년 <동아일보> 기사의 내용분석. 『언론과학연구』, 제 1권 1호, 300~330.
- 임종수 (2004). 텔레비전 안방문화와 근대적 가정에서 생활하기: 공유와 차이. 『언론과 사회』, 제 12권 1호, 92~135.
- 장필화 (1996). 아시아의 가부장제와 공적 영역 연구의 의미. 『여성학논집』, 제13집, 321~331.
- 장하진 (1985). 『1950년대 한국사회구조에 대한 계급론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정범모 (1967). 교육교환에 의한 미국 문화의 영향. 『아세아연구』, 통권 26호, 109~119.
- 정영애 (1996). 조직내 생산중심성과 남성중심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여성학논집』, 제 12집, 295~319.
- 정일준 (2003). 미국의 냉전문화정치와 한국인 '친구 만들기': 1950, 60년대 미공보원(USIS)의 조직과 활동을 중심으로. 학술단체협의회 위임, 『우리 학문 속의 미국』 (21~50쪽). 서울: 한울아카데미.

- 정진석 (1985). 『한국 현대언론사론』. 서울: 전예원.
- 정진석 (1992, 4). 50년대 중반부터 공채 보편화 한국일보 최다, 수습 830명 배출. 『신문과방송』, 42~52.
- 정진석 (1995). 『인물한국언론사』. 서울: 나남
- 정현백 (1994). 역사연구에서의 '문화'의 역할. 『역사교육』, 제56집, 121~60.
- 정현백 (1996). 새로운 여성사, 새로운 역사학. 『역사학보』, 150호, 1~39.
- 조돈문 (1996). 50년대 노동계급의 계급해체. 『경제와 사회』, 제29권, 160~198.
- 조순경 (1998, 여름). '민주적 시장경제'와 유교적 가부장제. 『경제와 사회』, 통권 38호, 169~188.
- 조순경 (2001). 유가 사상과 성별 분업. 『여성학논집』, 제18권 1호, 177~193.
- 조 은 (1997). 모성 · 성 · 신분제: 「조선왕조실록」 '재가금지' 담론의 재조명. 『사회와 역사』, 제51집, 109~141.
- 조 은 (1999). 모성의 사회적 · 역사적 구성 - 조선전기 가부장적 지배구조의 형성과 '아들의 어머니'-. 『사회와 역사』, 제55집, 73~101.
- 조 은 (2003). 『침묵으로 지은 집: 조은 소설』. 서울: 문학동네.
- 조한욱 (2000). 『문화로 보면 역사가 달라진다』. 서울: 책세상.
- 조항제 (2005). 한국방송의 근대적 드라마의 기원에 관한 연구 - <청실홍실>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13권 1호, 6~45.
- 조혜정 (1988). 한국의 가부장제에 관한 해석적 분석. 『한국의 여성과 남성』 (59~60쪽). 서울: 문학과지성사.
- 주명철 (1993). 프랑스 역사학의 새 경향-사회문화사 연구방법. 『역사비평』, 23, 315~332.
- 최선열 (1999). 여성주의 저널리즘 왜 필요한가. 『21세기 여성미디어 네트워크 1 차 월례논단 세미나 자료집』. 4~12.
- 최선열 (2000). 페미니즘이 언론학에 미친 영향. 『여성학 논집』, 17, 115~165.

- 최영석 (1988). 『1950년대 한국 신문의 구조적 성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장집 (1985). 『한국자본주의와 국가』. 서울: 한울.
- 최장집 (1994). 한국 민주주의와 언론. 『언론과 사회』, 통권 제6호. 40~64.
- 최장집 · 임현진 (1997). 『한국사회와 민주주의: 한국민주화 10년의 평가와 반성』. 서울: 나남.
- 최종수 (1977). 비정규교육의 어제와 오늘. 차배근 (공편), 『한국신문학사』 (223~236쪽). 서울: 정음사.
- 최준 (1965). 신문사설조사분석, 『서울대학교신문연구소학보』, 2집, 77~120.
- 최준 (1977). 『한국신문사』. 서울: 일조각.
- 커뮤니케이션발전연구회 (1987), 한국언론의 자본주의적 발전, 『자본주의와 한국 언론』. 서울: 한울
- 한국신문편집인협회 (1967). 『편집10년』. 서울: 한국신문편집인협회.
- 한국언론연구원 (1991). 『90년 신문경영- 경영관리』. 서울: 한국언론연구원.
- 한국일보사 (1994). 『한국일보 50년사: 1954-2004』. 서울: 한국일보사.
- 한배호 (1981). 「경향신문」 폐간결정에 대한 연구. 진덕규 외, 『1950년대의 인식』 (125~154쪽). 서울: 한길사.
- 허라금 (1996). 서구 정치 사상에서의 공적 개념과 가부장적 성차별성. 『여성학논집』, 제13집, 333~357.
- 허은 (2003, 9). 1950년대 '주한 미공보원'(USIS)의 역할과 문화전파 지향. 『한국사학보』, 15호, 227~259.
- 황정미 (1999). 민주주의와 페미니스트 정치. 『문화과학』, 18호, 90~121.
- 우에노치즈코 (1999). 『내셔널리즘과 젠더』. 이선이 역. 서울: 박종철출판사.
- Allan, S. (1998). (En)gendering the truth politics of news discourse. C. Carter

- & G. Branston & S. Allan (Eds.), *News, gender and power* (pp. 121~139). London and New York, NY: Routledge.
- Beasley, M. (2001). Recent directions for the study of women's history in american journalism. *Journalism Studies*, 2(2), 207~220.
- Burke, P. (Ed.). (1992). *New perspectives on historical writing*. PA: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23.
- Carey, J. W. (1974). The Problem of Journalism History, *Journalism History*, 1,1.
- _____ (1979). The communications revolution and the professional communicator. *The Sociological Review Monographs*, 13, 32.
- Covert, C. L. (1981, Spring). Journalism history and women's experience: A problem in conceptual change. *Journalism history*, 8(1), pp~.
- Davis, N. (1991). Printing and the people. C. Mukerji & M. Schudson (eds.) *Rethinking Popular Culture: Contemporary Perspectives in Cultural Studies*, Oxford: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65~96.
- Davis, N. (1996). 'Women's History' in transitionL The Eoropean Case. *Feminism and History*. NY: Oxford University Press, 79~104.
- Davis, N. (1983). *(The) Return of Martin Guerre*. 양희영 역(2000). 『마르탱 게르의 귀향』. 서울: 지식의 풍경.
- Dervin, B. (1987, Autumn). The Potential Contribution of Feminist Scholarship to the field of communication. *Journal of Communication*, 39(4), 107~121.
- Durhan, M. G. (1998). On the Relevance of Standpoint Epistemology to the Practice of Journalism: The Case for "Strong Objectivity". *Communication Theory*, 8(2), 117~140.
- Han, J. & Ling, L.H.M. (1998). Authoritarianism in the hypermasculinized

- state: **hybridity**, **patriarchy**, and **capitalism** in **korea**.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2, 53~78.
- Hershatter, G. (1999). *Dangerous Pleasure*. London &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enry, S. (1989) **Changing media history through women's history**. In P. J. Creedon (Ed.), *Women in mass communication* (pp. 34~57). Newbury Park, CA: Sage.
- Jenkins. Keith (1991). *Re-thinking History*. 최용찬 역(1999). 『누구를 위한 역사인가』. 서울: 헤안.
- Keller, A. (1995). Disseminations of MODernity: Representation and Consumer Desire in Early Mail-Drder Catalogs, L. Charney & V. R. Schwartz (eds.) *Cinema and Invention of Modern Life*.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56~182.
- Kitch, C. (1999, Spring). Rethinking objectivity in journalism and history: what can we learn from feminist theory and practice?. *American Journalism*, 16, 113~120.
- Kühne, Thomas et al., (1996) *Mannergeschichte-Geschlechtergeschichte*. 조경식 · 박은주 옮김(2001). 『남성의 역사』. 서울: 솔.
- Lerner, Gerda (1997), *Why History Matters*, *Why History Matters*, NY: Oxford University Press, 199~211.
- McLaughlin. L. (1998). Gender, privacy and publicity in 'media event space. C. Carter & G. Branston & S. Allan (Eds.). *News, gender and power* (71~90). London and New York, NY: Routledge.
- Marzolf (1975). Operationalizing Carey - An Approach to the Cultural History of Journalism. *Journalism History*, 2(2).

- Pateman, Carole (1998). *The sexual contract*. 이충훈 · 유영근 공역(2001). 『남과 여, 은폐된 성적 계약』.서울: 이후.
- Rappaport, E. D. (1995). A New Era of Shopping: The Promotion of Women's Pleasure in London's West End, 1909-1914, in L. Charney & V. R. Schwartz (eds.) *Cinema and Invention of Modern Life*,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30~155.
- Scott, A., Evans, S., Cahn, S., & Faue, E. (1999, spring). Women's History in the New Millennium: A Three 'Generations': Part 1. *Journal of Women's History*, (vol. 11, No.1).
- Scott, A., Evans, S., Cahn, S., & Faue, E. (1999, spring). (1999, summer), Women's History in the New Millennium: A Three 'Generations': Part 2. *Journal of Women's History*, (vol. 11, No.2).
- Scott, J. W. (1988). Women's history. *Gender and the politics of history*. NY: Columbia Univ. Press, 15~27.
- Scott, J. W. (1992). Women's history. *New Perspectives on Historical Writing*. London: Oxford, Polity Press, 42~66.
- Scott, J. W. (1996). Introduction. *Feminism and History*. NY: Oxford University Press, 1~13.
- Scott, J. W. (1996). Gender: A Useful Category of Historical Analysis. *Feminism and History*, NY: Oxford University Press, 152~182.
- Scott, J. W. (2001). 젠더와 정치에 대한 몇 가지 성찰. 배은경 역. 『여성과 사회』, 13, 201~249.
- Schiller, D. (1979, Autumn). An historical approach to objectivity and professionalism in american news reporting. *Journal of Communication*, 52~53.

- Singer, B. (1995). Modernity, Hyperstimulus, and the Rise of Popular Sensationalism. in L. Charney & V. R. Schwartz (eds.) *Cinema and Invention of Modern Life*,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72~99.
- Spigel, L. (1992). *Make Room for TV: Television and the Family Ideal in Postwar America*.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oloski, J. (1989). News Reporting and Professionalism: Some Constraints on the reporting of the News. *Media Culture and Society*, 11. CA: Sage, 207~228.
- Southgate, B. (1996). What and Why? The future of history. *History: What and Why?*. London: Routledge, 108~137.
- Steiner, L. (1989). Feminist Theorizing and Communication Ethics. *Communication*, 12, 157~173.
- Steiner, L. (1998). Newsroom accounts of power at work. C. Carter & G. Branston & S. Allan (Eds.), *News, gender and power* (pp. 145~159). London and New York, NY: Routledge.
- Thomson, J. (1996). Communication and Social Context. in *The Media and Modernity: A Social Theory of the Media* (pp. 10~43) Cambridge: Polity Press.
- Tuchman (1972).
- Young, Iris. (1987). Impartiality and the Civic Public: Some Implications of Feminist Critiques of Moral and Political Theory. Seyla Benhabib & Drucilla Cornell (Eds.), *Feminism as Critique* (57~76). Oxford, UK: Polity Press .
- Zoonen, L. (1998). One of the girls?: The changing gender of journalism. C. Carter & G. Branston & S. Allan (Eds.). *News, gender and power* (33~46).

London and New York, NY: Routledge.

<분석논문, 1차 자료>

강영수 (1956, 3). 신문기자의 질은 과연 완벽한가, 정의와 신의에서 살아야 하건만. 『신태양』. 58~60.

강영수 (1965, 2). 수습기자로의 길- 기자로서의 적성을 강조하고 싶다. 『신문평론』, 18~19.

고재욱 (1956, 2). 언론자유는 보장되어 있는가?. 『신세계』.

고제경 (1957, 11). 신문은 누구를 위하여. 『사상계』. 130~132.

곽복산 (1955, 7월). 신문 주필, 국장의 자리이동과 기업주의 맹성. 『새벽』, 46.

곽복산 (1959, 2). 한국신문의 구조와 과제. 『사상계』, 105~113..

관훈클럽 (1957). 『회지』, 제1호.

관훈클럽 (1959a). 『회지』, 제2호.

관훈클럽 (1959b). 관훈클럽소사. 『신문연구』 1권 2호, 89~93.

관훈클럽 (1961). 『신문연구』,

김경환 (1966, 12). 견습기자. 『신동아』 28, 153~156.

김규환 (1960, 11). 민주사회와 신문의 책임- 언론자유와 확보의 발전을 위하여. 『사상계』 제 8호, 233~240.

김규환 (1961a, 2). 신문의 중립성과 불편부당; 오늘의 언론계를 바라보며. 『재정』.

김규환 (1961b, 11). 한국 저널리즘의 금석- 후진성과 기형성을 탈각치 못한 한국의 저널리즘. 『사상계』 제 9호, 76~83.

- 김기영 (1952, 12). 편집인의 당면과제, 가열한 현실에 평범한 입장에서.
『자유세계』. 123~129.
- 김동사 (1958, 2). 사설과 단평을 쓰는 사람들, 도하각지의 사설을 검토하
는 신문사설 이면 이야기. 『신태양』, 65권. 246~249.
- 김영진 (1959, 12).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어 있다. 『자유공론』. 33~39.
- 김창집 (1955, 1). 파국의 타개책. 『새벽』, 61~62.
- 김창호 (1956, 12). 부패와 악덕과 싸우는 신문. 『신태양』.
- 김팔봉 (1957, 1). 서울신문과 집필거부와 나. 『신세계』.
- 김팔봉 (1957, 12). 무엇을 할 것인가. 『사상계』.
- 김팔봉 (1959, 6). 한국신문수난사. 『사상계』.
- 김홍수 (1952, 12). 언론과 정치. 『자유세계』. 101~107.
- 나절로 (1956, 7). 언론창달의 길-민주주의의 활로는 여기부터, 『신세계』.
59~63.
- 류광렬 (1953, 6). 언론자유와 한계. 『신천지』, 44~48.
- 류광렬 (1955, 5). 한국 언론계가 걸어온 길. 『신태양』.
- 문관식 (1956, 6). 정부통령선거전에서 본 신문의 공죄. 『신문계』.
- 문형선 (1986a, 3). 제 15회 나의 일선기자 시절. 『신문과 방송』, 81~84.
- 문형선 (1986b, 4). 제 16회 나의 일선기자 시절. 『신문과 방송』, 95~98.
- 민병훈 (1954, 3).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 『신천지』. 34~41.
- 민재정 (1953, 4). 전쟁과 언론인의 반성. 『전선문학』, 1권. 11~12.
- 박권상 (1959, 2). 미국의 신문교육. 『회지』, 제2호. 19~27.
- 박권상 (1959, 9). 한국의 언론과 I.P.I. 『사상계』, 132. 232~237.
- 박권상 (1959.겨울). 언론, 출판의 자유-선진국에서의 이론과 실제. 『신문 연구』,
통권1호. 1~13.
- 박동운 (1960a, 4). 신문의 생태. 『새벽』. 55~62.

- 박동운 (1960b, 4). 언론자유문제와 윤리강령- 동북아 3개국의 특수조건에 대한 연구. 『신문학보』, 1권.
- 박성환 (1954, 2). 광고면을 통해서 본 사회표현. 『신천지』, 56-.
- 박성환 (1956, 9, 10, 11). 신문쾌쾌록. 『삼천리』.
- 백대진 (1960, 4). 신문과 아관삼제. 『신문학보』, 1권.
- 부완혁 (1960, 5). 언론인의 절규. 『새벽』, 7권.
- 서울신문사 (1985). 『서울신문 사십년사』, 서울신문사
- 선우휘 (1960, 2). 언론인의 투지. 『새벽』, 7권.
- 설의식 (1956, 3). 신문편집과 인권의 기본, 자유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신태양』. 56~58.
- 성인기 (1958, 4). 공정 정확 책임, 신문기자는 이래야 한다. 『현대』.
- 송건호 (1960, 7). 지성의 방향; 아카데미즘과 저널리즘을 비교하여. 『세계』.
- 송건호 (1965, 2). 젊은 세대는 사색형에서 감각형으로 흐르고 있다- 견습 기자 채용시험에 관여하고. 『신문평론』, 20~21.
- 신도성 (1952, 12). 인권보장과 언론자유. 『자유세계』. 154~168.
- 신상초 (1955, 1). 한국신문계의 후진성. 『새벽』, 117~120.
- 신상초 (1959a, 3). 한국과 한국인. 『사상계』.
- 신상초 (1959b, 6). 군정법령 88호의 유령- 자유언론은 죽지 않는다. 『사상계』.
- 신우식 (1986a, 9). 제 20회 나의 일선기자 시절, 『신문과 방송』, 89~93.
- 신우식 (1986b, 10). 제 21회 나의 일선기자 시절, 『신문과 방송』, 93~97.
- 신천지편집부 (1954, 2). 요약 한국신문사. 『신천지』.
- 언커크 보고서(1957), “대한민국의 언론”. (1957. 10.29). 『편협보』, 2.
- 오소백 (1952, 12). 신문가도의 점경, 어떤 기자의 방랑기. 『자유세계』.

136~145.

- 오소백 (1954, 2~8). 올챙이 기자 방랑기. 『신태양』 .
- 오소백 (1958, 8). 신문계의 반역아. 『신태양』 , 71권. 102~116.
- 오종식 (1954a, 4). 전후파 신문기자생활 편력기. 『신태양』 . 54~56.
- 오종식 (1954b, 9). 생활개선의 기본방향. 『신천지』 , 130.
- 우승규 (1952, 12). 신문도의 재음미. 『자유세계』 . 180~192.
- 우승규 (1954, 12). 신문윤리에 대한 단상. 『사상계』 , 117~126.
- 우승규 (1955b, 9). 신문편집의 제문제. 『신태양』 .
- 우승규 (1956, 9). 언론출판의 자유와 진상. 『신세계』 .
- 유병서 (1958, 11). 생활주변산책. 『사상계』 .
- 이건혁 (1950, 2). 신문의 나갈 길. 『민족문화』 , 2권.
- 이건혁 (1954a, 6). 6. 25와 신문. 『정보』 . 40~43.
- 이건혁 (1954b, 11). 자유와 민족문화, 언론의 방향과 그 사명을 주제로.
『채신문화』 , 26권. 4~7.
- 이관구 (1958a, 2). 언론제한 반대 투쟁의 경위. 『사상계』 , 220~226.
- 이관구 (1958b, 10, 11). 신문, 해방 13년. 『한국평론』 .
- 이관구 (1960, 1). 노기자는 살아있다; 묵은 해의 액막이로 출판물허가제의
망령을 쫓아버리자. 『새벽』 , 7권.
- 이동규 (1965, 11). 어느 수습기자의 고발 : 선배기자들에게 대들고 싶은 심정.
『신문평론』 , 54~55.
- 이목우 (1956, 3). 중앙신문과 지방신문의 실태. 『신태양』 . 60~62.
- 이시호 (1957). 독자를 위한 신문기사-새로운 신문기사를 위한 몇가지.
『회지』 , 제1호. 3~13.
- 이시호 (1959). 스타일북 소고. 『회지』 , 제2호. 1~6.
- 이종극 (1956a, 8). 대중, 여론. 『사상계』 , 182~187, 193.

- 이종극 (1956b, 10). 우리는 사회악에 항쟁한다. 『사상계』 . 271~278.
- 이종극 (1957, 2). 이성의 빈곤. 『사상계』 . 264~273.
- 이 활 (1957, 3). 신문의 정치적 사명. 『자유춘추』 . 55~61.
- 정광모 (1973, 12). 한국의 여성 언론가, 한국여성운동사<특집>. 『수도사대』 , 6권.
- 정등운 (1954, 2). 전쟁승리와 언론. 『신천지』 , 72-.
- 정인량 (1955, 3). 제한외국기자들의 활동상. 『신태양』 .
- 조병옥 (1952, 12). 자유와 언론, 민주와 언론의 창달과 자유의 존엄성을 위하여. 『자유세계』 .
- 조세형 (1957). 취재권 문제- 본격론을 위한 의견으로서. 『회지』 , 제2호. 20~28.
- 조소양 (1950, 5). 민주정치와 언론자유. 『웅변』 , 1권. 7~12.
- 조용만 (1953, 6). 한국에 있어서의 언론자유. 『신천지』 . 38~43.
- 조풍연 (1965, 2). 견습기자 시험에 나타난 응시자들의 동향- 학식보다도 양식과 인격이 문제이다. 『신문평론』 , 16~17.
- 최시중 (1965, 4). 견습기자의 눈에 비친 언론계. 『신문평론』 , 12. 45~47.
- 최 준 (1955, 1). 신문정비의 방법론. 『새벽』 , 121~124.
- 최 준 (1957, 2). 신문과 정치. 『자유춘추』 . 91~96.
- 최 준 (1958, 8). 문장변천- 신문을 주로 한 하나의 자료. 『신문예』 , 2권.
- 최 준 (1960, 11). Press law에 관한 고찰; 영국과 한국의 경우. 『법정논총 (중앙대)』 .
- 최홍조 (1956, 3). 신문은 독자에게 친절한가, 오보의 책임여부를 중심으로. 『신태양』 . 54~56.
- 한국신문편집인협회 (1981). 『편집인협회보』 축쇄판
- 한태연 (1959, 2).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위기. 『사상계』 . 16~25.

한경수 (1952, 12). 신문경영자론. 『자유세계』 . 96~100.

한경수 (1956, 3). 도하신문을 채점한다. 『신태양』 . 62~64.

홍종인 (1956, 1). 언론자유와 정의의 옹호. 『전망』 .

홍종인 (1960, 5). 사람은 거짓으로 살 수 없다. 『새벽』 , 109~110.

홍종인 (1960, 8). 신문엔 혁명이 없을 것인가. 『새벽』 , 124~128.

외국자료

그레고리 헨더슨 (1958, 9). 한국문화에 대한 기대. 『사상계』 . 116~123.

데모인즈 데지스터 (1959년, 3). 남한에서의 언론 자유제약. 『사상계』 , 170~171.

헨리, F. 아놀드 (1959). 한국에 있어서의 미국공보원. 『국제평론』 , 2권, 80.